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국 가 보 훈 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2025. 8.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붙 임> 참조 ····· 6
Ⅳ. 대체토론 요지 ····· 7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8
Ⅵ. 심사결과 ····· 10
Ⅶ. 소수의견 요지 ····· 11
Ⅷ. 시정요구사항 ····· 12

【붙임 1】 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 13
【붙임 2】 2024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 135

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8.

정무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가보훈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세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보훈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출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4. 금융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2.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라. 금융위원회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Ⅲ.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요지: <붙 임> 참조

【붙임 2】 2024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최기도)

Ⅳ. 대체토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없　음)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없　음)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없　음)

4. 금융위원회 소관

(없　음)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없　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없　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에 대하여 6건의 시정, 19건의 주의, 29건의 제도개선 등 총 51건의 시정요구(중복 3건) 및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하여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 등 총 52건의 시정요구 및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3건의 시정, 6건의 주의, 20건의 제도개선 등 총 28건의 시정요구(중복 1건)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2건의 시정, 15건의 주의, 27건의 제도개선 등 총 38건의 시정요구(중복 6건) 및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11건의 주의, 6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 및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5건의 주의, 6건의 제도개선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중복 1건)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Ⅵ.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4. 금융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Ⅶ.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붙임 1】 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붙임 1】

202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5. 8.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96건(결산 · 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가보훈부	-	-	6	19	29	3	5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	-	5	11	36	-	52
공정거래위원회	-	-	3	6	20	1	28
금융위원회	-	-	2	15	27	6	38
국민권익위원회	-	-	-	11	6	-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5	6	1	10
합계	-	-	16	67	124	11	196

※ 부대의견 18건(국가보훈부 6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2건, 금융위원회 7건, 국민권익위원회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첨부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가보훈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 (56-56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과태료는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20% 미만이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도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년 수준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세입에 계상할 것		
2	**보훈특별고용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 (56-56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환경 악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부터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고, 취업지원 대상 중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으며,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법령의 규범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0억 900만원에 달하며, 수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38.0% 미수납액은 3억 3,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 - 2025년은 8월 기준 13.5%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국회는 수 차례 과오급금 수납실적에 대해 지적하였고, 국가보훈부는 여러 수납실적 제고 방안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개선은 없는 상황임. - 국가보훈부가 국회 지적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과오급금 분할납부제, 납부기피자 연체금 징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연계,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등의 후속 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방식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상금(1132-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매년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계오차로 인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추계오차) 지급 예상인원: 191,448명 / 실제 지급인원: 189,065명
<보상금 집행잔액 및 이·전용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집행잔액</td><td>3,026</td><td>24,575</td><td>70,014</td><td>67,158</td><td>71,275</td></tr>
<tr><td>이·전용</td><td>3,020</td><td>24,565</td><td>35,153</td><td>64,247</td><td>71,183</td></tr>
<tr><td>불용</td><td>6</td><td>10</td><td>35,311</td><td>2,911</td><td>6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 현황, 제도 시행 시점, 지급인원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 개선을 통하여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문제를 최소화할 것</td></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생계지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적과
대상자 특성
반영</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생활조정수당(1133-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과거 집행실적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119억 5,800만원)의 약 31%(36억 9,800만원)가 불용되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불가피한 사정변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부주의한 인원 추계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 노력</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6·25자녀수당(1133-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6·25자녀수당 대상 유형은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되는데, 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와 신규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 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 (승계자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25 자녀수당 단가>
<table><tr><th>대상</th><th>2023년도</th><th>2024년도</th></tr><tr><td>제적자녀</td><td>월 1,536천원</td><td>월 1,613천원</td></tr><tr><td>승계자녀</td><td>월 1,307천원</td><td>월 1,372천원</td></tr><tr><td>신규승계자녀</td><td>월 439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114천원</td><td>월 516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114천원</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 계획 수립 및 보고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에는 정부 비상 상황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산으로 심사 기준 정립과 무관한 전쟁기념관 방문 및 무기체계 관람 등을 실시하는데 약 1,300만원을 사용함. - 이는, 보훈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활동으로, 심사 전문성 제고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와 무관한 외부 관람 활동에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편성을 할 것		
9	**재정 소요 관리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우편요금 사업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 수검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인원(47,189명)이 과다추계(실제 발송인원 10,527명)되어 집행이 저조(집행률 22%)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상인원을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추가 재정 소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은 2024년 36만매 교체 발급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34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계획매수 대비 42% 수준인 15만 1,747매를 발급하는데 그쳐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였음. ※ 교체사업 전체 기간(2023년 6월~2024년 12월)의 계획 대비 발급률: 33.1%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홍보 강화, 대상자 안내 등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단계에서 계획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인력 부족에 따른 검진 지연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고엽제환자검진(1143-36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부담 가중으로, 고엽제환자 검진의 주요 검사 항목의 시행건수는 5,322건으로 전년 대비 4,108건 감소(43.6%)하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48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정원</th><th colspan="3">24년</th></tr>
<tr><th>인원(6월)</th><th>인원(9월)</th><th>인원(12월)</th></tr>
<tr><td>서울중앙보훈병원</td><td>110</td><td>9</td><td>9</td><td>9</td></tr>
<tr><td>부산보훈병원</td><td>26</td><td>6</td><td>5</td><td>5</td></tr>
<tr><td>대전보훈병원</td><td>12</td><td>-</td><td>-</td><td>-</td></tr>
<tr><td>대구보훈병원</td><td>12</td><td>1</td><td>1</td><td>1</td></tr>
<tr><td>광주보훈병원</td><td>23</td><td>3</td><td>2</td><td>2</td></tr>
</table>
<단일 질환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table>
<tr><th>구분</th><th>'16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r>
<tr><td rowspan="2">검진
소요기간*</td><td>39.8일</td><td>39.3일</td><td>39.0일</td><td>39.8일</td><td>54.2일</td><td>42.3일</td><td>43.6일</td><td>43.1일</td><td>48일</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4">(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td><td></td></tr>
</table>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고엽제환자 검진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외부병원 정밀검사 인정 범위 확대 및 고엽제검진 전담인력 추가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2024년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정수준 감축할 것” 판정을 받은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세부사업 ‘참전유공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인 6·25참전유공자회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사업 보조금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액하여 편성하고, 예산 확정 이후 동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한 보조사업을 예산 확정 이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건립(1238-32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2~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업선정 시 추진가능성 철저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가 지적되었음에도, 2024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2024년 계획된 사업 13개소 중 2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고, 3개소는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월되었음. 이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 기회 상실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함.
<2024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본예산</th><th>교부현액(A)</th><th>실집행액(B)</th><th>실집행률(=B/A)</th><th>불용</th><th>이월</th><th>특이사항</th></tr>
<tr><td>안동시</td><td>250</td><td>250</td><td>34</td><td>13.6</td><td>-</td><td>216</td><td>사업 지연(연약 지반 보강공사)</td></tr>
<tr><td>진안군</td><td>250</td><td>250</td><td>91</td><td>36.6</td><td>-</td><td>159</td><td>사업 지연(위치 변경으로 재설계)</td></tr>
<tr><td>대구달서구</td><td>250</td><td>250</td><td>-</td><td>-</td><td>-</td><td>250</td><td>사업 지연(BF인증 지연 등)</td></tr>
<tr><td>서울송파구</td><td>250</td><td>-</td><td>-</td><td>-</td><td>250</td><td>-</td><td>사업 포기(지방비 미확보)</td></tr>
<tr><td>대구동구</td><td>250</td><td>250</td><td>-</td><td>-</td><td>250</td><td>-</td><td>사업 포기(사업계획 변경)</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로 보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교통시설이용지원” 중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사업수행자에게 보훈대상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대납액을 모두 정산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지급이 미루어진 바, 이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2024년 지급 대상액 171억 500만원 중 99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사업의 사전 절차 신속 이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은 운송업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의 88.8%가 이월되어 개발 및 시스템 적용이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6	소송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서울교통공사가 운송기관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소송에 대한 체계적 법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보훈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의정갈등으로 인해 보훈병원 전공의 인력이 2023년 130명에서 2024년 17명으로 급감하면서 보훈병원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문의 당직 전환과 대체 인력 채용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두 차례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 - 그 이후 전공의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재정 소요를 각 보훈병원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공의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8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사전·사후통제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보상금 또는 수당에서 이용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추계 또한 잘못한 것임. -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553억 1,200만원 이용 -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등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368억 1,900만원 이용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철구 지급(2150-3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은 2023년 집행률 24.8%, 2024년 집행률 38.9%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바, 이는 예산 편성 시 1인당 단가를 1,500만원으로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임.
- 2023년 및 2024년 모두 평균 지원금액은 300만원을 하회함.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기준 및 집행내역>
<table><tr><th>연도</th><th>예산 편성기준</th><th>실제 집행내역</th></tr><tr><td>2023</td><td>17명×1,500만원</td><td>21명(1인당 평균 295만원)</td></tr><tr><td>2024</td><td>12명×1,500만원</td><td>27명(1인당 평균 250만원)</td></tr><tr><td>2025(6월말)</td><td>12명×1,500만원</td><td>15명(1인당 평균 98만원)</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매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부족분을 이·전용으로 충당해왔으나, 2024년은 이·전용 충당 없이 예산액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실제 진료비 발생액 51억 5,200만원 중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은 2026년 예산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		
21	**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비 우선 집행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국비와 자기부담금 비율은 70:30인데, 2024년 설계비 집행 과정에서 국비는 모두 집행된 반면, 자기부담금은 11.9%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이월됨. - 이는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및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시교체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2020년 제외) 8년 중 7개 연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함 - 2024년 : 예산현액 32억 3,800만원 중 9억 3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7.9%)하고 나머지 2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 성과지표는 2022년부터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정량적 사항인 관람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과의 질적 평가가 누락되어 온전한 평가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전시교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23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 재정립**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장에게 2024년에 48,492,000의 급여와 4,384,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에 지급되는 급여와 경상비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를 재정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독립기념관 전시 편성 상황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5년, 광복 80주년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현 관장의 발언이 사회적·국민적 논란이 된 사례가 발생함 - 제7관의 전시물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의 독립운동의 의의가 축소되고, 연합국 원조 활동의 측면 위주로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 「연합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이 현 관장 취임 후인 2024년도에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하는 방향으로 달라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제7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독립운동 역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편성 상황을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이미 집행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2024회계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가 25년 2월 6일 내지는 7일로 되어 있으나, 결정서 내 교부 현황에 따르면 교부는 2024년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 등 사업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존재함 - 강원동부지청 등 4곳에서는 2024년에 정상적으로 교부를 결정한 반면, 이외 나머지 지방청에서는 모두 절차를 위반함 ○ (보조율 위반 문제) 일부 사업(100곳 중 9곳)이 100% 국비 지원으로 집행됨. - 100%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재난 등 특수한 국가책무 사업 등이어야 하나, 이 사업은 일반 청소년 문화활동 성격으로, 원칙에 어긋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100% 국비 지원을 받은 곳들 중 보고사업 실적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곳(국제조리고등학교, 통진고등학교, 마리아회고등학교)들도 확인됨 ○ (예산 급증) 동 내역사업 예산은 2020년 6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8억 7,800만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함. 급격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와 집행 관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교부결정 절차 위반, 국고보조 시 자부담 원칙 위반,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 및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율 적용 및 교부결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보훈교육연구원과 국가보훈부의 유사사업 재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부 자체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국가보훈부 자체 사업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검토할 것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7	**교육 콘텐츠 사전·사후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라이브 온 보훈’ 강의 교안에서 ‘3대 독립운동가’를 설명하면서, 김구·안창호와 함께 이승만을 포함함.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독단적 활동 및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탄핵된 인물로, 자주독립 노선과 배치되는 행적을 보인 이승만을 ‘3대 독립운동가’로 교육하는 것은 역사적 균형성 결여 -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보훈부 교육 예산이 역사적으로 논란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규정·교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보훈에 대한 이해, 공감 증대로 쓰고 있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존재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라이브 인 보훈’ 콘텐츠에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제시한 부분을 즉각 수정·삭제하고, 이미 교육을 받은 수강생에게는 정정 안내를 하며, 향후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학계검증 및 자문 절차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사업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창원시 포항시 경우 예산액 전액이 이월,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훈문화관 건립 지연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 재검토를 고려할 것		
29	**독립기념관 전시 기획 방향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중복성)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발전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중복된 전시임. ○ (정체성 혼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해야 할 공간이 산업화, 민주화, 문화강국 서사까지 다 담으면 독립운동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음. - 독립운동사라는 본래의 주제가 현대 국가발전 서사에 덮여, 관람객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된 채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 ○ 독립운동 기념이라는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상관 없는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발전사를 다루는 전시관 연구용역은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독립운동사와 그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기획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 (3146-405)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에 걸쳐 편성함. 그러나 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해 서울시의 공유재산 심의가 2025년 3월에 의결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현재까지도 독립의 전당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과정에서 설계안이 대폭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기존 119억원에서 상당 규모 증액이 불가피함.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발생함. -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충시설건립 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 (3146-40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몽골이태준열사 기념관은 전체 금액의 97%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부는 이 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실적 보고서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있는지도 확인 못한 상황임. - 보훈부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세부적인 결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기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현충시설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수령의무를 해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 (3146-40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국의 현충시설 1,001곳 중 436곳이 사유지인데, 정부가 현충시설로 지정하면 관리는 소유자가 맡음. 그러나, 젊은 후손은 도시로 떠나고 남아 있는 후손은 고령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신경쓰지 못하는 실정임. -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과 관리를 후손들에만 맡겨둬서는 안됨.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독립투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관리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전수 점검을 통해 노후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3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 (3146-40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AI기반 디지털 휴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배포·활용 채널 부재로 실사용이 저조하고 집행 부진 및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AI 디지털 휴먼 활용 시나리오·상시 서비스모델·교육 커리큘럼·저작권/2차 활용 방안을 문서로 확정·제출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문체부·교육부·지자체 유사 콘텐츠와 기능 매핑표를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 내역변경 지양 및 기념식별 구체적인 계획 또는 매뉴얼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기념행사 (3147-41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도에 2·28민주운동기념행사 등 11개의 정부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초 본예산 29억 6,700만원 대비 6.6% 수준인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함. ○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으나,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항목에 "해당없음"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 ○ 국가보훈부는 제출 자료에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편향적 활동 단체 지원 제외 기준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등 특정 정치·이념 성향의 조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등 헌법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이어온 단체임. - 해당 사업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는 주장을 하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하야가 곧 민주주의를 지킨 행위라고 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체는 최근 3년간 총 8,500만원의 보훈 예산을 지원받아 주로 기념식·추모식·행사성 사업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단체에 예산 지원은 부적절함. -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식에 300만원,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59주기 추모식에 5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민간단체 지원 평가기준(공통·신규·유지/확대·축소/제외)에 따라, 헌법 가치 위반·역사적 사실 왜곡 등 편향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훈부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 ○ 향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같이 역사적 사실 왜곡·편향적 활동이 논란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훈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할 것		
36	**의전단 처우 개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대전현충원(3250-35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대전현충원에서 운영 중인 의전단(35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고, 의전단과 실무원의 통합 논의도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의전단과 실무원 통합을 포함한 의전단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국립신암선열공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시정,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4년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의 내내역사업으로 “경비실 신축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선행 절차인 공원조성계획 및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당시부터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전액(1억 8,500만원) 집행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공원조성사업 계획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누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립묘지의 신규 공사 추진 등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선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신규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관리 강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립묘지조성(3250-36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중 횡성호국원은 주민 반대에 따른 협의 절차로 설계가 지연되었고, 장흥호국원은 총사업비 조정 소요로 기본설계 착수 자체가 지연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4년 설계비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음.

<국립묘지조성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table>
<tr><th rowspan="2">사업</th><th colspan="3">계획 대비 이행 현황</th><th rowspan="2">비고</th></tr>
<tr><th>구분</th><th>계획</th><th>이행</th></tr>
<tr><td rowspan="3">횡성
호국원
조성</td><td>기본설계</td><td>'23. 4. ~ '24. 2.</td><td>'23. 4. ~ '24. 12.</td><td></td></tr>
<tr><td>실시설계</td><td>'24. 2. ~ '25. 10.</td><td>(2025년 내 추진 예정)</td><td>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25.8. 종료 예정)</td></tr>
<tr><td>준공</td><td>'28. 12.</td><td></td><td></td></tr>
<tr><td rowspan="3">장흥
호국원
조성</td><td>기본설계</td><td>'23. 11. ~ '24. 9.</td><td rowspan="2">-
(사업타당성 평가 이행)
('23. 7. ~ '24. 7.)</td><td rowspan="2">총사업비 조정 협의
('25.8. 종료 예정)</td></tr>
<tr><td>실시설계</td><td>'24. 10. ~ '25. 12.</td></tr>
<tr><td>준공</td><td>'29. 12.</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신규 국립묘지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 국립묘지 건립 시에는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묘역관리 예산 편성 추계 정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안·이장 신청이 급증하게 되는 국립묘지 개원 초기(2022년) 신청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안·이장에 소요되는 “묘역관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이 부진(집행률 63.9%)하게 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안·이장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과거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안·이장 추세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제대군인 대학교
수업료
지원비율상향
또는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4160-39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제대군인수업료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수업료 집행액은 앞으로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합 계</th><th colspan="3">고등학교 수업료</th><th colspan="3">대학교 수업료</th></tr>
<tr><th>대상
인원</th><th>집행액</th><th>평균
지원금액</th><th>대상
인원</th><th>집행액</th><th>평균
지원금액</th><th>대상
인원</th><th>집행액</th><th>평균
지원금액</th></tr>
<tr><td>2020</td><td>85</td><td>119</td><td>1.40</td><td>58</td><td>85</td><td>1.47</td><td>27</td><td>34</td><td>1.26</td></tr>
<tr><td>2021</td><td>49</td><td>96</td><td>1.96</td><td>14</td><td>53</td><td>3.79</td><td>35</td><td>43</td><td>1.23</td></tr>
<tr><td>2022</td><td>42</td><td>81</td><td>1.93</td><td>11</td><td>45</td><td>4.09</td><td>31</td><td>36</td><td>1.16</td></tr>
<tr><td>2023</td><td>28</td><td>59</td><td>2.11</td><td>7</td><td>32</td><td>4.57</td><td>21</td><td>27</td><td>1.29</td></tr>
<tr><td>2024</td><td>40</td><td>63</td><td>1.58</td><td>4</td><td>15</td><td>3.75</td><td>36</td><td>48</td><td>1.3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집행 저조로 인한 재원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수업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4160-39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및 2023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0년 신청자 수보다 적은 숫자로 계상하여 가장 큰 이·전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2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참전기념행사(4161-420)	시정, 주의,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국가보훈부는 유가족의 고령화, 직계존비속이 없는 등의 문제로 대규모 귀환행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비협조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3년간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도로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폐지를 검토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가 어려울 시 국가보훈부 자체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현실적인 소요 기간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참전기념행사(4161-42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 명비는 당초 계획대로 2개 지역에 2억 3,400만원을, 초중고 명비는 2개교에 계획보다 많은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학교 명비(3개교 대상 각 1억원)는 전액 미집행 :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요구되는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2개월만을 배정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 계획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4161-42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불용액 24억 2,700만원은 사망·불희망 등 제복 미신청(13억 2,700만원), 모자 미제작(9억원), 낙찰차액(2억원) 등으로 구성됨. ○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데, 특히, 불희망자 및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신청률이 저조하고, 국가유공자의 요양원 입소, 병원 장기 입원, 제복의 색상 및 질 등의 불만족으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황임 ○ 행사성 일회성 지출로 지속적 효과가 불명함 ○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89.5%로 발표했으나, 조사대상이 제복 수령자 200인을 표본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한 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가보훈부는 2023년과 2024년 제복증정 사업의 공개 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45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책개발 (7167-42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부진하며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에는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연구용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사업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연구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책개발 (7167-42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응답률 저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진 결과 이월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당초 추진일정은 계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응답률 저조로 실태조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2024년 12월에 체결하고 결과보고서는 2025년 3월에 제출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생활실태조사 시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살리되 응답자에게 너무 민감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모바일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7	**후순위 투찰업체와의 계약 체결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시 국가보훈부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63개의 적격 업체 중 53번째 순위로 응찰한 업체임. - 적격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과업수행의 시급함을 고려해 2일의 기한을 부여하고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회신토록 한 뒤, 해당 기한 내 회신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임. ○ 법령이 정한 경쟁절차 외에 별도의 응모를 재차 요구하면서 회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사정을 이유로 참여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질서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홍보성 행사 지양 및 교육·상담 중심으로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2160-473)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프로그램은 멘토 활동 지원 및 자녀 국제 교류캠프 행사 등 행사·홍보 위주로 운영되는데, 가족 기능 개선, 재이용률, 중장기 건강 지표 변화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고, 멘토 선정 기준 및 행사 기획·운영에 미흡함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홍보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육·상담·생활지원 등 실질적 복지로 전환하는 한편, 유사사업과 중복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		
49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요양원 건립·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부지 매매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 - 2024년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률이 각각 2.3%, 41.0%에 불과 ○ 착공 및 완공 시점이 재차 연기되고 있어, 증가하는 보훈요양시설 이용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증가 우려까지 초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전절차 이행 점검 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민간요양시설 보조금 지급 인원 산정의 합리성 제고**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민간요양시설 이용 보조금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 편성으로 인해 매년 자체변경을 통한 재원 조달이 반복되고 있음. - 매년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적이 아닌 전년도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감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자체변경 내역: '20년(391백만원) → '21년(502백만원) → '22년(974백만원) → '23년(593백만원) → '24년(869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 및 대상자 분류별 지원 예상 인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을 추산할 것		
51	**보훈원 · 복지타운 입주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원과 복지타운의 입소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가가 무의탁 고령 유공자에게 양질의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7011-200)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집행하지 않고 기본경비의 전용을 통하여 확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나 다른 예산의 전용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2	**국정과제 점검회의 방식 조속히 확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7031-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사업 및 비목에서 기존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전용·조정 등을 거쳐 1억 2,000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주체 및 행사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평가 결과 중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에 대해서만 발표하기로 결정함. 또한,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급 및 성과연봉 등 반영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함. *국세청은 평가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영비율이 각각 4.48%, 7.2%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결과를 보수체계에 충분히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관련 평가내용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으로 5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거나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 일을 초래한 기관*들을 포상한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려움. *행정안전부(1,425만원), 기획재정부(1,225만원), 법무부(5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500만원), 경찰청(125만원) 등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집행 점검에 부응하도록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대테러활동 홍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대테러센터 운영(7032-303)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대테러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은 4,400만원의 일반용역비를 지출하여 유튜브 영상제작 및 대테러센터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한 것이 유일하며, 해당 영상의 조회 수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6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7032-305)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는 자체 생산 콘텐츠가 거의 없고, 환경부 등 다른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정보제공 역할이 크지 아니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은 국무조정실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것		
7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이후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 400개 세부 개선과제 중 이행완료된 과제는 183개(45.7%)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예산의 과다계상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은 2023년 23.1%, 2024년 31.5%였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은 2023년 54.9%, 2024년 29.5%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	**조직 신설 시 유사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 사전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은 기능상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민간전문가 전원을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조직 신설 시 기존에 존재하는 유사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근인력보다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탄력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선급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통하여 제5차 및 제6차 회의를 완료한 2024년 2월 이후 시점인 3월에 계약금액의 80%(1억 2,200만원)의 선급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으나, 선급금 지급 시점에 추가회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추가 과업이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급금 지급 요건(계약 착수에 필요한 자금)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계약 잔여 이행분이 불확실한 경우 선급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이 ① 임차료 예산으로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장 대관료를 장소 제공자가 아닌 행사 용역업체에 지급하여 지출관으로 하여금 채권자 계좌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점, ② 제7차 회의 관련 용역계약 입찰공고시의 과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방의 과업내용을 축소하고, 축소된 과업은 분리하여 별도 건으로 하여 그 대가를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지급한 점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위반, 공정성 시비, 과도한 사업내용 변경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12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비 과다지급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ODA)(7035-306)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ODA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하였는데,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법률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수정 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ODA)(7035-306)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1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사·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동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초에 국회에 보고되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ODA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14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 정기감사 적정 수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비로 집행(2024년 20억 7,200만원)하였는데,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승인 받은 사무편람의 내용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갖추도록 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의 정기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실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청년인재DB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인재DB를 통해 청년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위원 선임 실적이 저조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 *중앙행정기관 347명, 위원회 136명, 지방자치단체 97명(이 중 34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인재DB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1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법적 기한 제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로, 1기 위원 임기 종료(2024년 10월) 후 2기 위원 선임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지연되어 2025년 2월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1기 위원이 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며 회의 등이 서면으로 대체 및 축소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중 4억 4,600만원이 불용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업의 정책 공백과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정 기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법적 근거 없는 지원단 운영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7035-320)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 기구 설치 근거를 두면서 존속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법률에서 정한 효력이 만료되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지원단 상설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근거 법률 개정 및 지원단 폐지 등의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지원단이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8	**신규 위원회 편성 시 성과지표의 사전설정 및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정성적인 요소(회의 개최, 계획 수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유사한 신규 위원회를 편성하는 경우 성과지표(정책 반영 건수, 국제협력 성과 등)를 사전에 설정·보고할 필요가 있음.		
19	**임시조직 운영 시 기존 회의장 우선 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임기 1년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별도의 서울 회의실을 9개월(2023.7.1.~2024.4.30.)간 임차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 회의실 임차료 및 공사비, 원상복구비로 총 1억 4,300만원을 집행함. ○ 활동기간이 짧은 임시조직 운영 시 별도의 상설회의장을 신규 임차·공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세종회의장 또는 유관기관 시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이 2024년도에 1차로 구축하여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초 국무조정실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함. 당초 연간 접속자가 28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적은 7개월 간 100만명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운영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에 따라 2025년도의 운영실적과 미비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		
21	**신규 정보화사업 편성 시 중복 여부 확인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기존 온라인 청년 플랫폼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신규 편성·집행하여 중복·과다계상 우려가 있고, 성과지표 역시 '시스템 구축·운영' 수준에 그쳐 실효적인 청년정책 성과와 연결성이 미흡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신규 정보화 사업 편성 시 전체 구축 계획·로드맵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고, 유사 플랫폼·센터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것		
22	**청년인턴 지원정책의 적극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7036-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2024년도 이 사업 내에 편성된 청년인턴 지원 예산 8억 9,600만원 중 2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활동지원 회수도 축소되면서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인턴 지원정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청년들이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반복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부패예방추진단은 2014년 8월 최초 설치된 이후 7차례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2027. 12. 31. 까지)하고 있으나, 임시조직의 활동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는 것임. -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2년 이내(훈령 이상 법령에 근거 시 2년 이상)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까지 조직 당국과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더 이상 훈령을 통한 활동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것		
24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동 사업에는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여비를 편성(2024년 1억 3,000만원)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 사업 내의 다른 비목으로부터 조정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2022년 2,400만원, 2023년 4,800만원, 2024년 3,800만원을 일반수용비 등으로부터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을 전제로,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시민사회 소통 관련 제도개선 명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회-정당-시민사회 간 소통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2년간 시민사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실제 예산집행도 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비서관실 주재 일회성 간담회 위주로 집행되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와의 불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명확히 하여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일회성 간담회만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민사회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 체계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26	**조세심판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2024년도에 처리대상 건수 1만 3,356건 중 1만 17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 64.7%에 해당하는 6,582건이 법정 처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담인력 확충, 전자심판제도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조세심판 후 불복 소송 제기 건 철저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조세심판원장이 통보받아야 하나, 지방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소송 사건자료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불복 소송의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세심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받고는 있으나, 일부 소송사건이 누락되거나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건이 포함되는 등 관련 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및 완결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행정소송 처리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음으로써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28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심판청구서 접수 외 대부분의 절차가 비전자적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연구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연구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監事)는 폐지(2020년)한 것에 반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감사(監事)를 두고 있음. - 통합감사조직은 감사의 전문성 축적과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 임명 지연에 따른 자체감사의 효능성 저하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연구기관 운용의 정합성과 통일성,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기관운영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처럼 감사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수의계약 비중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시정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들이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함.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축소할 것		
3	**수의계약 규정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연구원(R&D)(1535-301), 한국노동연구원(R&D)(1543-301)	시정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규정을 통해 국가계약법보다 수의계약의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수의계약의 요건이 국가계약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4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노동연구원(R&D)(1543-301)	시정	한국노동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에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결산잉여금
축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1541-301),
한국교통연구원(R&D)(154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R&D)(1548-3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1550-3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1551-3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경제연구원(R&D)(15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수탁용역수입은 계획에 비해 실제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함.
<결산잉여금의 주요 재원>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구기관</th><th rowspan="2">결산잉여금</th><th colspan="5">재원</th></tr>
<tr><th>수탁용역수입</th><th>정부대행사업수입</th><th>이자수입</th><th>기타수입</th><th>정부출연금</th></tr>
<tr><td>한국교육과정평가원</td><td>25,883</td><td>22,928</td><td>2,928</td><td>422</td><td>269</td><td>△735</td></tr>
<tr><td>한국교통연구원</td><td>7,198</td><td>7,553</td><td>△433</td><td>137</td><td>101</td><td>△303</td></tr>
<tr><td>육아정책연구소</td><td>6,586</td><td>6,688</td><td>-</td><td>32</td><td>-</td><td>△134</td></tr>
<tr><td>한국해양수산개발원</td><td>4,187</td><td>4,662</td><td>△121</td><td>197</td><td>124</td><td>△679</td></tr>
<tr><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4,106</td><td>1,708</td><td>-</td><td>119</td><td>5,057</td><td>△2,777</td></tr>
<tr><td>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td><td>2,896</td><td>2,973</td><td>-</td><td>5</td><td>△2</td><td>△80</td></tr>
<tr><td>에너지경제연구원</td><td>2,363</td><td>994</td><td>1,774</td><td>114</td><td>143</td><td>△583</td></tr>
<tr><td>한국개발연구원(KDI)</td><td>2,336</td><td>4,036</td><td>-</td><td>329</td><td>66</td><td>△2,12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8개 기관은 예산 편성 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간접비 과다계상 방지를 통한 결산잉여금 축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한국교통연구원(R&D)(1542-3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1551-3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에너지경제연구원(R&D)(15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부 기관은 수탁용역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간접비 초과분에서 발생하였는데, 간접비의 증가는 직접비의 감소를 초래함.
<간접비 초과분이 과다한 기관>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구기관</th><th rowspan="2">결산잉여금</th><th colspan="3">수탁용역 수입</th></tr>
<tr><th>합계</th><th>직접비(비율)</th><th>간접비(비율)</th></tr>
<tr><td>한국교통연구원</td><td>7,198</td><td>7,553</td><td>1,714(22.7%)</td><td>5,839(77.3%)</td></tr>
<tr><td>한국해양수산개발원</td><td>4,187</td><td>4,662</td><td>1,690(36.3%)</td><td>2,972(63.7%)</td></tr>
<tr><td>에너지경제연구원</td><td>2,363</td><td>994</td><td>△55(△5.5%)</td><td>1,049(105.5%)</td></tr>
<tr><td>한국개발연구원</td><td>2,336</td><td>4,036</td><td>1,510(37.4%)</td><td>2,526(62.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간접비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7개 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7개 기관만이 우선고용 비율을 준수하였고, 20개 기관은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음. 또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미준수 기관이 20개 내외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17개 기관*은 5년 연속으로 우선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DI,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특히 정부 출연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연구과제 미배정 등으로 인한 수시연구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은 전체 예산현액 37억 9,400만원 중 28억 5,200만원을 집행(75.2%)하고 6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18.2%)하였으며, 2억 5,200만원을 불용(6.6%)하였음. -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 2억 8,400만원은 수시연구사업비를 연구과제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수시연구의 적정한 사업·예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행률(20%) 저조 - 한국개발연구원: 수시연구사업 예산 중 일부를 기본연구사업비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24.7%) 저조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에서 수시연구사업비로 조정한 금액의 78%를 다음연도로 이월		
		시정요구사항	○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함과 함께 수시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3.43%), 에너지경제연구원(3.17%), 한국개발연구원(3.68%), 한국노동연구원(1.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3.7%), 한국행정연구원(2.9%) ○ 또한, 다수의 연구기관은 장애인근로자를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근로자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5곳(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시정요구사항	○ 연구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10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 비목 통일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각 연구기관의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국내교육 및 외국의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방문을 통하여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런데,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다른 예산 비목에서 집행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9개 기관은 국외여비로,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교육훈련비로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직원 해외연수의 예산을 각 연구기관이 동일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국가연구산업정책 지원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연구산업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연구기관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미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381억 9,400만원(2023) → 187억 7,700만원(2024) → 221억 2,200만원(2025)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산업정책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12	**연구개발적립금의 중장기 연구과제 투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되는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이내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음(178개 중 2건만 중·장기 연구)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적립금이 중장기 연구과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13	**연구개발적립금 운용 개선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현행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자체연구사업에 40% 이상 집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금액은 기관발전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편법적 증액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산업연구원(47.9%), 정보통신정책연구원(58.8%), 한국교육개발원(100%)은 연구개발적립금의 상당 금액을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지원·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비율을 정하는 등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연구원(R&D)(1535-301)	제도개선	산업연구원
		지적사항	○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예산집행율이 저조(실집행율 14.9%)하며, 인도네시아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인도네시아 파견인력도 당초 예정인력과 다른 인적구성을 보임. * 인도네시아 연락사무소의 개소가 2025년에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사업은 2025년 6월에 실시함. * 당초 파견 계획인력(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공무원 각 1인, 산업연구원 직원 1인) * 실제 파견인력(산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상의 직원 각 1인)	
		시정요구사항	○ 산업연구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과다한 상품권 구입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제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회계연도에만 42차례에 걸쳐 약 1억 59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개발연구원은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것		
16	**과다한 기념품 제작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R&D)(1539-301)	제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지적사항	○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4년 한해에만 69종, 약 8,700만원의 기념품을 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10종 미만의 기념품을 소액 제작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향후 적정한 규모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능률성과급 체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교육개발원(R&D)(1540-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1550-3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D)(1553-301),
한국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은 5개 등급 미만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배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B등급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고, 최상·최하 등급간 차등지급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최상·최하등급 간 차등지급률에 차이가 거의 없음.

<5개 기관 2024년도 지급 능률성과급 체계>
<table><tr><th>기관</th><th>등급 체계</th><th>B등급 분포 비율</th><th>최상·최하 차등지급률</th></tr><tr><td>한국교육개발원</td><td>3개</td><td>82.1%</td><td>1.22</td></tr><tr><td>한국보건사회연구원</td><td>3개</td><td>73.8%</td><td>1.99</td></tr><tr><td>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td><td>4개</td><td>70.0%</td><td>* 수탁기여도에 비례</td></tr><tr><td>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td><td>3개</td><td>76.4%</td><td>1.02</td></tr><tr><td>한국육아정책연구소</td><td>3개</td><td>95.4%</td><td>1.1</td></tr></table>*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예산운용지침」 및「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지급률은 최상·최하 등급 간 차이가 2배 이상 되어야 하고 업적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하며,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이상으로 배분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은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1541-301)	제도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적사항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년 근속자 8명에게 30만원씩 총 240만원, 20년 근속자 4명에게 40만원씩 총 16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급하여 포상금으로 총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검정 자격 심사 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1541-301)	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적사항	○ 한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07년 출판된 문제집을 2022년 출판물처럼 허위 출판 실적을 제출하였고, 검정 신청 교과서에 헌법 정신과 객관적 역사 서술 등의 검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2024년에 검정을 통과하였음. 그러나 2025년 감사원 지적으로 검정이 취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은폐·방치 의혹이 있음.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자격 심사 및 내용 심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신청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서류 검증 시스템 정비, 심사위원 운영 개선 등의 시정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국회로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1546-301)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지적사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직·인사·예산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별도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임. *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소장은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며, 관계부처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적 권한을 보유하고, 직원의 모든 인사 및 직제 규정은 소장의 권한이며, 별도의 회계 및 사업 관리를 함. * 2024회계연도 육아정책연구소 예산현액 83억 1,800만원(정원 61인) ○ 연구기관이 정관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부설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통제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부설연구기관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조직 설립의 입법례처럼 부설기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1547-301)	제도개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2025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해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1억 3,700만원임. 그러나 이를 위해 기관고유사업인 28개 내역사업에 편성된 2024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예산 1억 3,700만원을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됨.		
		시정요구(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R&D)(1549-301)	제도개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에 연구개발적립금 교육훈련사업 예산 6,800만원 중 퇴직 예정자 6인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 귀산촌 임업후계자 과정, 목공 전문 과정 등에 797만원을 집행하였음.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안)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		
2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행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환경연구원(R&D)(1554-301)	제도개선	한국환경연구원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와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성과평가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환경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714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전액 정규직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하였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우수한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액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환경정책교육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환경연구원(R&D)(1554-301)	제도개선	한국환경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분야의 지식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최근 4년간 환경정책교육원의 과정별 일반시민의 신청 및 수료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환경정책교육원의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일반시민은 2024년 신청인원과 수료인원이 각각 17,969명, 12,971명으로 2021년 29,069명, 18,339명 대비 각각 38.2%(△11,100명), 29.3%(△5,368명)가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교육원 운영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의 참여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의 교육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수납률)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저조함.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추이〉

(단위: %)
<table><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과태료</td><td>67.5</td><td>52.9</td><td>53.7</td><td>45.3</td></tr><tr><td>과징금</td><td>59.8</td><td>55.7</td><td>65.9</td><td>23.1</td></tr><tr><td>가산금</td><td>1.9</td><td>6.1</td><td>3.2</td><td>2.7</td></tr></table>
○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임.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고, 과징금은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전체 미수납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 등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연구개발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사업(1231-310),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사익편취 행태개선(1261-340), 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동반 성장시책 추진(1331-40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공개함.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개발결과물 공개 추이>
(단위: 건,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건수</th><th colspan="3">해당연도 과제 완료</th><th colspan="2">총 예산</th></tr>
<tr><th>공개(비율)</th><th>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비율)</th><th>합계(비율)</th><th>예산</th><th>집행</th></tr>
<tr><td>2020</td><td>22</td><td>10(45)</td><td>12(55)</td><td>22(100)</td><td>1,009</td><td>992</td></tr>
<tr><td>2021</td><td>29</td><td>8(28)</td><td>21(72)</td><td>29(100)</td><td>1,305</td><td>1,245</td></tr>
<tr><td>2022</td><td>31</td><td>5(16)</td><td>26(84)</td><td>31(100)</td><td>1,463</td><td>1,429</td></tr>
<tr><td>2023</td><td>29</td><td>6(21)</td><td>23(79)</td><td>29(100)</td><td>1,711</td><td>1,339</td></tr>
<tr><td>2024</td><td>25</td><td>4(16)</td><td>17(71)</td><td>25(100)</td><td>945</td><td>931</td></tr>
</table>
❍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태조사도 비공개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비공개비율이 높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공개 비율을 높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직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격년에 1인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함.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전공, 관련 자격증, 근무경력 및 평정, 포렌식부서 경력 등 고려
(훈련 후 보직) 디지털포렌식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

○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2인의 경우 포렌식 부서 경력이 없었고,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부서배치 현황>
<table><tr><th>구분</th><th>2021~2022년 위탁교육</th><th>2023~2024년 위탁교육</th></tr><tr><td>교육 이전 재직부서</td><td>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td><td>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8.1.~2023.12.)</td></tr><tr><td>전체 재직기간 중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부서 경력</td><td>-</td><td>-</td></tr><tr><td>교육 이후 재직부서</td><td>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td><td>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3.12.~현재)</td></tr></table>
*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 디지털포렌식 TF(2010.4.~2017.9.), 디지털조사분석과(2017.9.~2023.4.), 조사총괄담당관실(2023.4..~현재)</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함양한 내부전문가가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후 보직배치에 유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자율규제 정책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배달앱 업체들은 자율규제 항목을 모두 ‘이행 중’이라고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체계를 보강하고 근본적으로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독과점 행태 규율과 공정한 갑을 관계를 위하여 자율규제 정책을 시정할 것</td></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 rowspan="3">주의,
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고포상금 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47.1%로 저조함(15억 8,500만원 불용).
<신고포상금 운영 실적>
(단위: 건, 천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지급건수</td><td>55</td><td>31</td><td>43</td><td>67</td><td>37</td></tr>
<tr><td>지급액</td><td>868,655</td><td>2,353,500</td><td>3,157,982</td><td>3,361,515</td><td>1,414,595</td></tr>
<tr><td>예산액</td><td>1,038,000</td><td>2,130,000</td><td>3,130,000</td><td>3,350,000</td><td>3,000,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사건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수탁연구사업 예산편성 ·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적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수탁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2024년 예산 2,000만원 중 819만원(40.9%)을 집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연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근거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가 없음에도 타 기관의 위탁용역 사업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탁연구를 출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행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타 기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수탁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기타 수입으로 수납하는 등 연구용역 위탁기관과의 예산 중복편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7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적사항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낙찰차액 2,700만원을 활용하여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 용역 등을 신규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사업출연금 예산사업인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일부(1월, 2월, 11월분의 용역 대금 1,920만원)를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출연금을 사업출연금 사업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간담회 및 교육 실적은 8회에 불과함. 산업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을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발표회 1회, 연동제 설명회 4회, 간담회 3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설명회(2회), 지역별 현장 설명회(2회, 호남, 영남), 건설업계 간담회(1회), 분쟁조정 간담회(1회), 부산지역 현장 간담회(1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및 실질적 제도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 횟수를 확대하고, 제도 실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국회 결산 및 감사원 지적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에 일반용역비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시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국회 2020회계연도 결산) 지식기반 조사·연구 성격의 실태조사 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것 (감사원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예산을 일반연구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이행평가 결과
개선 방안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비지수기업의 협약체결 실적은 2개 기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3년 동안 이행평가 실적은 전무함.

<가맹분야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협약체결 실적</th><th colspan="5">협약평가 실적</th></tr><tr><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지수기업</td><td>11</td><td>11</td><td>11</td><td>10</td><td>12</td><td>10</td><td>11</td><td>11</td><td>10</td><td>12</td></tr><tr><td>비지수기업</td><td>6</td><td>6</td><td>6</td><td>6</td><td>2</td><td>2</td><td>2</td><td>-</td><td>-</td><td>-</td></tr><tr><td>합 계</td><td>17</td><td>17</td><td>17</td><td>16</td><td>14</td><td>12</td><td>13</td><td>11</td><td>10</td><td>12</td></tr></table>
○ 한편, 유통분야의 이행평가 결과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8개(33.3%)로,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가맹분야 83.3%, 대리점분야 62.5%, 하도급분야 51.9%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단위: 개)
<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최우수</td><td>0</td><td>2</td><td>3</td><td>1</td><td>4</td></tr><tr><td>우수</td><td>2</td><td>2</td><td>2</td><td>3</td><td>2</td></tr><tr><td>양호</td><td>5</td><td>3</td><td>2</td><td>1</td><td>2</td></tr><tr><td>등급외</td><td>17</td><td>17</td><td>18</td><td>19</td><td>16</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와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평가의 투명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의 일부인 매우 우수사례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소비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12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용역비의 적정 비목으로 편성 및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용역은 일반연구임에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임.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현재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상 분쟁 조정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있어 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특히 조정 불성립 시 추가적인 후속조치나 별도의 구제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구제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률 제고방안과 함께 불성립 이후 후속조치 마련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		
14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당 정산 지연 문제 반복 발생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티몬·위메프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 상담 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단체가 수행한 상담 수당 일부를 연내에 정산하지 못하고,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2024년도 미지급분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발생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수당 정산지연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소비자단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의 수의계약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7호)」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및 정보시스템 운영위탁을 각각 (사)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운영위탁 협약서'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수행 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연례적인
수입결손 발생
해소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소비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계획액은 34억 1,700만원이나 수납액은 27억 2,200만원으로 6억 9,5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2024년에도 자체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자체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021</th><th colspan="3">2022</th><th colspan="3">2023</th><th colspan="3">2024</th></tr>
<tr><th>예산
(A)</th><th>수납
(B)</th><th>결손
(B-A)</th><th>예산
(C)</th><th>수납
(D)</th><th>결손
(D-C)</th><th>예산
(E)</th><th>수납
(F)</th><th>결손
(F-E)</th><th>예산
(H)</th><th>수납
(I)</th><th>결손
(I-H)</th></tr>
<tr><td>전년도이월금</td><td>1,040</td><td>676</td><td>△364</td><td>1,040</td><td>226</td><td>△814</td><td>952</td><td>506</td><td>△446</td><td>952</td><td>607</td><td>△345</td></tr>
<tr><td>수탁용역사업</td><td>2,741</td><td>1,751</td><td>△990</td><td>2,318</td><td>1,333</td><td>△985</td><td>1,660</td><td>1,366</td><td>△294</td><td>1,660</td><td>1,397</td><td>△263</td></tr>
<tr><td>교육연수수입</td><td>40</td><td>9</td><td>△31</td><td>40</td><td>3</td><td>△37</td><td>40</td><td>4</td><td>△36</td><td>40</td><td>1</td><td>△39</td></tr>
<tr><td>이자수입</td><td>125</td><td>70</td><td>△55</td><td>125</td><td>164</td><td>39</td><td>125</td><td>247</td><td>122</td><td>164</td><td>275</td><td>111</td></tr>
<tr><td>기타수입</td><td>601</td><td>127</td><td>△474</td><td>601</td><td>108</td><td>△493</td><td>601</td><td>144</td><td>△457</td><td>601</td><td>442</td><td>△159</td></tr>
<tr><td>합 계</td><td>4,547</td><td>2,633</td><td>△1,914</td><td>4,124</td><td>1,834</td><td>△2,290</td><td>3,378</td><td>2,267</td><td>△1,111</td><td>3,417</td><td>2,722</td><td>△69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과거 수입 실적의 추이와 실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예산을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결손을 해소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정보화사업 집행 관련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비는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10억 5,800만원 중 8,800만원을 분쟁조정 사업의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		
18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사업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제품 차단 등 신유형·신기술 제품과 국민 밀접 이용 시설의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도 국민 밀접 이용 시설 안전 실태조사 중 위해제품 조사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 선정 과정이 전수적 조사라기보다는 임의적 부분적 선별에 가깝고,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등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보편적인 과학적 근거보다는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적 여지를 둘 수 있는 기준에 가까워 피조치 사업자의 이의 제기가 유발됐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제품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하는 한편, 조사 절차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는 확대하고, 평가 기준은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과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제기되었고 그 조정 결과 환급 결정에도 일부 판매사와 결제대행사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강화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집단분쟁조정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 신속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 급증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시스템 증설공사를 위해 2025년에 3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을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할 것		
21	**소비자 소송지원 예산 운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저조한 소비자 소송지원 실적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소송지원 관련 본예산은 5,800만원, 수정예산은 4,800만원임. (항)분쟁조정-(세항)피해구제 항목 안에서 소비자 상담, 소송지원, 피해구제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운용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불성립 소비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와 운영계획을 명확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일반사건의 조정 불성립 건수 대비 소송지원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현재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는 한국소비자원의 내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2022년 9%, 2023년 14%, 2024년 13%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공정거래지원-공정거래정책 알리기(7031-300),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1), 전산운영경비(7031-302),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7),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4),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지침에 따라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카르텔환경개선(1241-32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동일한 목적의 국외 출장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성 예산을 혼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2024회계연도 동일 목적의 국외 출장 집행 내역>
(단위: 천원)
<table>
<tr><th>출장목적</th><th>세부사업명</th><th>집행액</th><th>출장지</th></tr>
<tr><td>OECD 경쟁위원회 오픈데이 및 백투백 워크숍</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td><td>6,478</td><td rowspan="3">프랑스</td></tr>
<tr><td>OECD 경쟁위원회
2024년 6월 정기회의</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56,205</td></tr>
<tr><td>OECD 경쟁위원회
2024년 12월 정기회의</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카르텔환경개선(1241-320)</td><td>40,616</td></tr>
<tr><td>경쟁주창 관련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td><td>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td><td>15,638</td><td>스페인</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국외업무 여비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정거래지원(7031-3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① 인지면담 과정과 ②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인지면담 과정은 일부 강사에게 수업이 집중된 측면이 있으며 교육 시기도 연말에 집중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6	**취소 결정된 과징금의 조속한 환급절차 완료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 (7031-301)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업무도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을 초과(47건 중 15건)하고 있음. * 2024년 과징금 수납액 3,016억원, 환급액 1,319억원(환급율 43.8%) * 과징금 환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지급한 가산금 14억 7,8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에 앞서 신중한 법리검토와 분석을 선행하고, 취소 결정된 과징금은 조속히 환급절차를 완료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변호사 선임료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 (70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변호사 선임료 비용이 초과하여 배상금 및 기타운영비 예산에서 1억 800만원을 이·전용하여 사용하였음(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이·전용 발생).
<최근 3년 변호사 선임료 예산 및 집행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7월</th></tr><tr><td>예산(집행)</td><td>2,875(2,944)</td><td>2,875(2,921)</td><td>2,875(3,003)</td><td>3,475(1,872)</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이·전용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것</td></tr>
<tr><td rowspan="3">28</td><td rowspan="3">G-클라우드
전환 사업
집행부진 유의</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보화기반확충(7032-5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후화된 대표누리집을 행정안전부 G-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하여 G-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수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업무 협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사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상당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잔존함.
* G-클라우드 전환 예산 5억 8,400만원 중 1억 5,500만원 이월</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라. 금융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2024년부터 동 사업 중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수행 주체가 변경되지 않아 이러한 분할공모 방식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		
2	**컨설팅 용역 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는 용역사업자가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저하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핀테크 온라인 교육 운영 성과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핀테크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핀에듀)은 2024년 23종 강좌에 대해 77회 개설하였으나, 강좌 개설 1회 당 평균 수료 인원은 2.4명, 총 수료인원은 183명에 불과하는 등 운영 성과 관리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예산 하에서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국제 분담금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과 2025년에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부족*하여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함. *2024년과 2025년에 국외업무여비 등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 4,800만원을 전용함. ○ 그 결과 2024년에는 계획한 국외출장 4건 중 1건만 집행되고, 2025년에는 계획된 국외출장이 대부분 집행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국제 분담금의 증가율 및 환율 변동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외출장 등 국제공조 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공급 목표는 2,800억원이었으나, 대위변제율이 예상보다 급증한 결과 실제 보증공급 실적은 1,935억원(목표 대비 69.1%)에 그쳤음. - 동 사업의 예산액은 목표 보증공급액에 사업손실률과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2024년도 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업손실률을 상향(20%→33%)함에 따라 보증공급액이 감소되었다는 설명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것(제도개선)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초기 부실률 예측 실패에 따라 보증공급이 축소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최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6	**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축소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공급 사후 관리에 집중한 결과 6개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15)의 총 대위변제액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고, 서민금융 공급 조절 차원에서 2024년도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2023년 대비 감소(10조 6천억원→9조 3천억원)하였는데, 이는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중인 서민금융상품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주의, 시정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의 경우 2023년도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어 있는 이월잔액이 3,008억원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추가적으로 3,030억원을 출연하였는데, 2024년도말 누적 가입인원이 당초 계획(250만명)에 못 미치는 157만명에 불과하여 동 사업의 연간 집행액이 2,840억원에 그친 결과 2024년도말 진흥원 내 유보잔액이 3,2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 특히 기여금 지원 예산액 총 3,600억원 중 560억 5,000만원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만기 지급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내역변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의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 현황과 가입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은 결과 사업 예산의 약 15%를 타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데 활용하고 수시로 가입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였는데, 초기 정책 설계 실패에 따라 하락한 정책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는 국고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차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사업 교부액 중 미집행잔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시정)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가입유인 제고 등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도해지율) 2023년말 8.2%, 2024년말 14.7%, 2025년 4월 기준 15.3%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구조 조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9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적사항	○ 최근 개편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하여도 정부기여금의 일부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도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본래 정책목표와 반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부분인출서비스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신규사업 도입에 앞서 기존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평가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경우 집행가능성이 없는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월·유보잔액만 증가시키는 등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만기와 과도한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가입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가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전액을 납입하는 비중이 43.6%에 달하는 등 사업의 핵심지원대상인 저소득 청년층보다는 소득여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책 혜택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앞서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적 부진, 높은 중도해지율 및 수도권·고소득 집중 경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중장기적 재원 조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적사항	○ 햇살론15 상품은 2019년 9월 신규 출시 당시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잔액이 고갈됨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정부재정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 햇살론15 사업의 대위변제율이 빠른 상승 추세*에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재정 외에도 현재 서민금융보완계정에 확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출연금(2025년 4월 기준 약 1,296억원 규모) 역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2026년 10월부로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근거가 실효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보증 공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대위변제율)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 2024년 25.5%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15 사업의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되고 금융회사 출연금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현행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 근거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햇살론15 사업 예산 900억원이 전액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당초 계획한 900만원보다 적은 788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지원인원은 당초 예측한 7.2만명보다 많은 8.5만명이었음. 이는 금융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돈을 빌려주는 '쪼개기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햇살론15 사업 수요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지원 실적을 부풀리는 대신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내역사업별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국회 의결 내용에 따른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현액의 50%인 6억 2,800만원만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교부하였고, 공단은 교부받은 금액 중 5억 7,199만원만을 실제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에 집행한바, 2024년도 실집행률은 45.5% 수준에 불과함. -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채무자 본인 외에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 배분을 조정하였으나, 관계인에 대한 지원실적이 연간 총 10건으로 저조함. * 2024년도 채무자(본인) 대리인 선임 총 2,924건, 부수사건 소송대리 총 162건, 관계인 대리인 선임 총 10건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불법추심 등 변화하는 범죄수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서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불용시킨바, 향후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지원 인력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일부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근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리인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1.1%에 그치고, 소송 전 구조건수가 2024년과 2025년 모두 0건으로 파악되는바, 동 제도가 단순 대응단계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채무 종결 여부 및 재추심 발생 여부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율 관리 등 사후관리에 공백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추심 발생 여부를 표준 양식으로 의무 집계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할 것		
15	**혁신성장펀드 재편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혁신성장펀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 유인 부족, 투자대상 중복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기존 정책자금 및 정책펀드와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고,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며, 투자 집행률 관리가 미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의 운용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통합·폐지하고, 그 외의 기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체계를 고려하여 재편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운용방안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선정된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자펀드 결성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여 동일 프로젝트 재선정을 통한 펀드 결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보되어 한정된 정부 재정 투입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지역개발프로젝트의 민간자금 모집 현황 및 사업 시행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펀드 운용방안을 개선할 것		
17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1곳(충북 단양)에 불과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및 배분 취지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지역개발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18	**차별성 있는 지역개발프로젝트 선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케이블카, 어드벤처돔 등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지역개발프로젝트 선정시 타 지역 개발사업과 차별성을 가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성과평가 방식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 성과평가시 연도내 자펀드 결성 실적(0원)이 아니라 일부 프로젝트의 자펀드 결성 예상 규모(3,086억원)를 성과로 산출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의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20	**채권매입 목표 재검토 및 재원 조달 비중 등 재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적사항	○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총 51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 총 33.4조원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시작 이후 33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기준 총 10.4조원의 매입 실적을 보여, 계획 대비 실적은 31.1%에 불과함. 또한, 채권매입비용을 국가재정과 공사가 분담하기로 했는데, 2025년 6월 기준, 국가재정은 계획 대비 65%가 투입된 반면, 공사는 31.4%만 자금을 투입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향후 중장기 매입 수요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총 채권매입 목표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자규모와 재원 조달 비중 등을 재산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채권금융회사
동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2025년 6월까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은 34.2%에 불과함.
< 새출발기금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현황 >
<table><tr><th>2025. 6.까지 동의회신 대상</th><th>동의</th><th>부동의(과반동의계좌 포함)</th></tr><tr><td>425,344계좌
(100%)</td><td>145,512계좌
(34.2%)</td><td>279,832계좌
(65.8%)</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td></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대부업계의
협약가입 등
제도개선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상호금융업권 및 대부업체 채권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새출발기금 협약을 거부하면서 실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 및 대부업계의 협약가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3</td><td rowspan="3">민간투자 확보 및 투자 대상 선정 절차 진행 독려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2432-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제6호펀드와 제4호·제5호펀드의 투자 집행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기존 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재정으로 출자한 재원이 구조조정 수요 기업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고,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될 수 있음.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5호 결성 및 집행 현황(2025.6.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결성 현황 (단위: 억원)</th><th colspan="2">집행 현황 (단위: 억원)</th></tr>
<tr><th>모펀드</th><th>민간자금</th><th>자펀드결성(A)</th><th>투자실적(B)</th><th>집행률(B/A)</th></tr>
<tr><td rowspan="3">4호</td><td>소 계</td><td>5,000</td><td>6,190</td><td>11,190</td><td>4,577</td><td>40.9%</td></tr>
<tr><td>프로젝트</td><td>2,200</td><td>2,800</td><td>5,000*</td><td>2,159</td><td>43.2%</td></tr>
<tr><td>블라인드</td><td>2,800</td><td>3,390</td><td>6,190</td><td>2,418</td><td>39.1%</td></tr>
<tr><td rowspan="3">5호</td><td>소 계</td><td>5,000</td><td>8,367</td><td>13,367</td><td>1,855</td><td>13.9%</td></tr>
<tr><td>프로젝트</td><td>1,650</td><td>1,850</td><td>3,500*</td><td>-</td><td>-</td></tr>
<tr><td>블라인드</td><td>3,350</td><td>6,517</td><td>9,867</td><td>1,855</td><td>18.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확보 및 투자 대상선정 절차진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현황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펀드 운용 방향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특정업무경비 개인별 지급 시 현금 집행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02)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관련 심사분석 및 검사수행을 위한 정보, 조사 및 검사활동비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소속 직원 64명에게 개인별 월정액으로 집행(2024년 1억 3,600만원)하는 과정에서, 2024년 3월까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개인별 계좌 지급 원칙'과 달리 부서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 시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채무상환 완료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적자금상환기금 - 예수원금상환(9111-8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른 재원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
(7월말기준)</th><th>2026
(계획안)</th><th>2027
(계획안)</th></tr>
<tr><td rowspan="2">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내역</td><td>원금</td><td>6,290,225</td><td>6,402,465</td><td>8,345,572</td><td>8,842,338</td><td>4,084,124</td><td>8,718,811</td><td>5,894,626</td></tr>
<tr><td>이자</td><td>799,543</td><td>647,009</td><td>537,709</td><td>484,798</td><td>232,530</td><td>302,592</td><td>60,121</td></tr>
<tr><td rowspan="2">원리금 상환계획</td><td>원금</td><td>6,290,225</td><td>6,402,465</td><td>8,345,572</td><td>9,840,902</td><td>5,997,739</td><td>8,718,811</td><td>5,894,626</td></tr>
<tr><td>이자</td><td>844,790</td><td>703,109</td><td>651,458</td><td>549,755</td><td>438,282</td><td>302,592</td><td>60,121</td></tr>
<tr><td colspan="2">잔액(원금)</td><td>38,648,264</td><td>32,232,982</td><td>28,011,614</td><td>20,611,176</td><td>14,613,437</td><td>5,894,626</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자금 부채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다음 세대 재정에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td></tr>
<tr><td rowspan="3">26</td><td rowspan="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 및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td></tr>
<tr><td>지적사항</td><td>❍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2024년말 기준 17.3배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 출연(2024년 300억원, 2025년 1,500억원)에도 불구하고 2025년말 운용배수는 여전히 16.7배로 전망되므로, 실질적인 건전성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배수 관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순신규보증총량제 정착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 노력 필요 등**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금(2432-680)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에 따른 부실보증의 급증과 대위변제 증가로 인하여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기금 자체변경의 법정상한(30%)에 근접한 26.1%와 28.0%의 자체변경을 하였는데, 이러한 대위변제 증가와 기금운용계획의 반복적 자체변경은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시 대위변제금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8	**여유자금 운영 관련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여유자금운용(9701)	주의, 제도개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88%로, 사업체계가 유사한 신용보증기금(5.73%)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6.21%)의 수익률에 비해 저조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리스크관리팀이 성과평가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인력이 팀장 및 담당자 각각 1명에 불과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기금 여유자금의 관행적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의 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제도개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자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조직의 분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주의)		
29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시정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매년 1:1 비율로 출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기금의 수입(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저축장려금 지급)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9년, 2022년, 2025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를 권고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정부출자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정부출자수입(52-52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정부출자수입” 과목 편성시 매년 ‘출자회사 및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만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의 대부분은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SPC 출자금과 대물주식 배당금’에서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자수입 산정 시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한 SPC 출자금 및 대물주식 배당금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반영하는 등 계획 대비 실적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적정규모 대위변제 계획액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주의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의 2024년 기업규모별 예상 부실률이 실제 부실률에 비해 과다 추계되어, 동 계정에서 대위변제액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2024년 3,048억원 중 2,466억원이, 2023년에는 2,109억원 전액이 각각 불용됨** ○ 이러한 결과는 예상 부실률 산출 시 과거 경험 부실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실 발생으로 대량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 경험 부실률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부실률을 현실화하여 적정 규모의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공사 추진 시 관련 절차 사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업무용건물(2431-305)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광진지점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실제 설계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고, 그 결과 설계·인허가 및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2025년 12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음. *2024년에는 6억 3,700만원만 집행되고 53억 6,200만원을 이월함. ○ 본점 주차타워 공사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5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BF 인증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실제 설계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고, 그 결과 설계 및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2025년 9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음. *BF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24년에는 17억 5,900만원만 집행되고 41억 4,000만원을 이월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향후 업무용건물 관련 공사를 추진할 때 필수적인 인·허가 및 인증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경영지도(2431-307)	주의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비용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음. *계획액 및 집행액: 2024년 (계획액) 36억 6,000만원 (집행액) 15억 1,500만원 2023년 (계획액) 31억 6,400만원 (집행액) 17억 500만원 - 이는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펌뱅킹 방식의 수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수납액) 펌뱅킹: 4,075억원(2020) → 5,834억원(2024), 신용카드: 1,075억원(2020) → 677억원(2024) *신용카드 수수료는 보증료의 평균 2.28%, 펌뱅킹은 건당 최대 200원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료 납부 금액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 리스크 관리 철저 등**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이 일반보증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순자산은 잠식된 상태이고, 현금재원도 부족한 상황임. * (2024) 소상공인 위탁보증 / 일반보증 : (부실률) 16.7% / 3.6%, (대위변제율) 19.7% / 3.2% - 부족한 현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보증 계정에서 2,000억원을 임시 전용(2024년)하고, 소상공인 대환보증 계정에서 예상 잔액 2,000억원을 전용(2025년)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에 일반보증으로부터 임시 전용한 2,000억원에 대한 상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주의)		
			○ 금융위원회는 효과성이 미비한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벗어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제도개선)		
35	**과도한 정부재정 출연 지양**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운용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등 제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공급목표 대비 공급실적이 저조함. - 그 결과 국가재정으로 투입한 7,6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예상 잔여재원 중 2,000억원은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간 조율을 통해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당초 수요에 비해 과도한 정부 재정을 출연받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주택신용보증계정 2631-30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631-30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사항	○ 2024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보증, 반환보증, 사업자보증 및 연금보증 상품 모두에서 전년 대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그리고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비중이 증가하였음. - 또한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6%로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 주신보계정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피보증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잠재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		
37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주택신용보증계정 2631-30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631-30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사항	○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계획 대비 과다해짐에 따라 공사는 2024년도 총 3회에 걸쳐 '대위변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주신보계정 총 30.0%, 주연보계정 총 79.4% 규모의 증액을 실시함.		
		시정요구사항	○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후 연간 기금의 대위변제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한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관련사업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재고자산매각대(73-73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지적사항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므로, 보유 자산을 매각해 기금 청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의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출자금융회사 주식의 매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청산 일정(2027년)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매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 귀속 등 대체방안도 검토할 것		

마. 국민권익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56-563)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16건(76.1%)이 취소됨. - 권익위의 24년 1심 판결 선고 9건 중 패소가 5건임(나머지 승소 2건, 각하 2건) ○ 소송이 제기된 9건 중 패소가 8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잘못된 또는 성급한 법 집행이 미수납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처분 부과 대상자인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및 부담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억 5,1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2024년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89.3%를 차지함. - 권익위가 신고자 보·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50억원을 상회함. ○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공문 발송 횟수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문 출장 또한 연말에 5~7개 기관에 한정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		
3	**총액인건비 제도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대상)(1101-10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사업비의 일용임금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 인건비(대상)”를,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의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을 각각 충당하였는바, 이는 총액인건비 제도 위반임.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고금 관리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고금 관리법령은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의 임차료(210-07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2건(각각 808만원, 533.5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636.8만원) 등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기관 홍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간
집행계획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홍보비 예산은 전체 집행액 중 약 70.7%를 4분기에 집행하였고,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51.7%를 12월에 집행하여, 연말에 홍보 사업이 집중 추진되었음.
- 사업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고, 홍보사업이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2024년 홍보비 예산 월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table>
<tr><th colspan="2">기간</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th></tr>
<tr><td rowspan="3">1분기</td><td>1월</td><td>3,676</td><td rowspan="3">20,078</td><td>0.3</td><td rowspan="3">1.4</td></tr>
<tr><td>2월</td><td>6,511</td><td>0.5</td></tr>
<tr><td>3월</td><td>9,891</td><td>0.7</td></tr>
<tr><td rowspan="3">2분기</td><td>4월</td><td>35,349</td><td rowspan="3">135,674</td><td>2.5</td><td rowspan="3">9.7</td></tr>
<tr><td>5월</td><td>25,533</td><td>1.8</td></tr>
<tr><td>6월</td><td>74,792</td><td>5.4</td></tr>
<tr><td rowspan="3">3분기</td><td>7월</td><td>93,662</td><td rowspan="3">253,251</td><td>6.7</td><td rowspan="3">18.2</td></tr>
<tr><td>8월</td><td>132,736</td><td>9.5</td></tr>
<tr><td>9월</td><td>26,853</td><td>1.9</td></tr>
<tr><td rowspan="3">4분기</td><td>10월</td><td>126,748</td><td rowspan="3">984,540</td><td>9.1</td><td rowspan="3">70.7</td></tr>
<tr><td>11월</td><td>137,499</td><td>9.9</td></tr>
<tr><td>12월</td><td>720,294</td><td>51.7</td></tr>
<tr><td colspan="2">계</td><td>1,393,543</td><td>1,393,543</td><td>100</td><td>100</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분산 집행하여 홍보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 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차년도 구축 사업 착수가 지연(2024년 6월~2025년 6월)되었고 2차년도 고도화 사업 또한 순연되었음. -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97~99%)보다 크게 낮은 85.2%에 그쳤으며, 일반연구비 잔금 및 자산취득비 등 3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 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당초 전 기관 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전체 118개 행정심판기관 중 28개 기관이 불참하여, 2025년 6월 개통 시 90개 기관만이 참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 편의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행정심판 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청렴정책 모니터링’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4,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전액 세목조정하였고, 추가로 일반수용비(210-01) 5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함. ○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 인원·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 성과 등이 상이하며, 특히 국회가 심의 및 확정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를 임의로 세목조정한 것은 부적절함.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업을 임의로 대체하여 세목조정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장기간 미이행
과제의
신속한 이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패·고충제도개선(1134-34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조치기한이 도래한 186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 수는 82개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 수는 17건에 달함.

<2020~2024년 부패·고충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황>
(단위: 건, %)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권고</th><th colspan="3">이행</th><th rowspan="2">이행률
(=B/A)</th></tr><tr><th>부패방지</th><th>고충예방</th><th>합계(A)</th><th>부패방지</th><th>고충예방</th><th>합계(B)</th></tr><tr><td>2020</td><td>12</td><td>36</td><td>48</td><td>10</td><td>26</td><td>36</td><td>75.0</td></tr><tr><td>2021</td><td>18</td><td>18</td><td>36</td><td>12</td><td>10</td><td>22</td><td>61.1</td></tr><tr><td>2022</td><td>12</td><td>25</td><td>37</td><td>7</td><td>8</td><td>15</td><td>42.9</td></tr><tr><td>2023</td><td>7</td><td>25</td><td>32</td><td>2</td><td>7</td><td>9</td><td>36.0</td></tr><tr><td>2024</td><td>4</td><td>29</td><td>33</td><td>-</td><td>-</td><td>-</td><td>-</td></tr><tr><td>계</td><td>53</td><td>133</td><td>186</td><td>31</td><td>51</td><td>82</td><td>44.1</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적 부패 예방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도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민원상담위원의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종합민원상담센터 내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1년으로 하여 위촉하는 위촉직임에도, 고용부담금 비목에서 사회보험료를 집행함. -'고용부담금' 비목은 기타직·상용직·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국가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임.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원상담위원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였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방식이 부합하도록 할 것		
11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증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콜110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지속되고 있고, 2024년의 경우에는 타 사업의 상용임금으로 5억 3,000만원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600만원에 달함. ※ (상담사 인건비 불용액) 21년 6억 4,000만원, 22년 5억 4,300만원, 23년 6억 300만원 ※ (근로조건) 악성민원 등으로 최근 3년간 정원(228명)의 23%(52명) 퇴사 / 다산콜센터에 비해 인건비 31만원 차이(1호봉 기준)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상용임금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 신규 추진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예산액의 2배 이상 집행되었는데, 이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신규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에 주로 기인함. ○ 회계연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다른 비목의 예산을 조정해 당초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이해관계 점검체계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청렴 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점검 및 조기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위험 식별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점검체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업무별 예산 구분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은 신고 사건 처리와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와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15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국회 자료요구 성실 이행 및 예산집행 점검 협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조사의 과정・내역・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을 근거로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예산 집행 점검 절차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지급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1136-368)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4년(2022년~2025년) 보상금 신청인원이 8명에 그쳤고, 그 중 지급 요건을 갖춘 신고사건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 ('22년) 500만원, ('23년) 600만원, ('24년) 600만원 전액 불용 발생 * 2025년 예산 편성시부터 각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보·포상금(부패신고·공익신고·공공재정부정청구 신고·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사업으로 일원화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포상금 관련 비목이 일원화되었으므로, 예산불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행정심판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행정심판운영(1137-37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정 최장 처리기간(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특히,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재정경제, 국토해양, 환경문화 등의 재결사건은 평균 80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보이고 있음.

<2022~2024년 연도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평균 재결기간</th><th colspan="4">재결기간별 건수(비중)</th></tr>
<tr><th>60일 이내</th><th>60일 초과
90일 이내</th><th>90일 초과</th><th>계</th></tr>
<tr><td>2022</td><td>75.83</td><td>13,570(64.1%)</td><td>2,677(12.7%)</td><td>4,912(23.2%)</td><td>21,159(100.0%)</td></tr>
<tr><td>2023</td><td>60.11</td><td>19,616(70.3%)</td><td>3,445(12.4%)</td><td>4,826(17.3%)</td><td>27,887(100.0%)</td></tr>
<tr><td>2024</td><td>55.60</td><td>13,563(70.1%)</td><td>3,019(15.6%)</td><td>2,775(14.3%)</td><td>19,357(100.0%)</td></tr>
</table>

<2024년 소관 과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평균 재결기간</th><th colspan="4">재결기간별 건수(비중)</th></tr>
<tr><th>60일 이내</th><th>60일 초과
90일 이내</th><th>90일 초과</th><th>계</th></tr>
<tr><td>재정경제심판과</td><td>80.0</td><td>466(38.2%)</td><td>322(26.4%)</td><td>432(35.4%)</td><td>1,220(100.0%)</td></tr>
<tr><td>국토해양심판과</td><td>81.3</td><td>464(41.4%)</td><td>248(22.1%)</td><td>410(36.5%)</td><td>1,122(100.0%)</td></tr>
<tr><td>환경문화심판과</td><td>89.1</td><td>406(35.5%)</td><td>231(20.2%)</td><td>507(44.3%)</td><td>1,144(100.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출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금 이자반납액인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를 산출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160.0%로 나타나 예산액이 상당히 과소계상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과 연계되어 있는 출연금 규모 등의 주요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것		
2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자문료 지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연구나 신규제도 설계 등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동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출연사업으로는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고, 법 개정안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은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문료를 집행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개인정보보호 예산 집행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교육'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여 관련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8억 3,500만원 중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4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11억 1,400만원)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5등급(S/A/B/C/D) 중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이 해킹(2025. 6. 6.)되어 약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균등지원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현재 서울 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직접 수행방식(국비 100%), 강원·부산·대전 센터는 국비-지방비 1:1 매칭방식(성과에 따라 일부 차등), 인천·대구·전북 센터는 지방비 100%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운영성과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매칭비율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서울센터의 경우에도 통상 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센터의 운영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검토할 것		
6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가명정보 결합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신규 지정건수가 2021년 이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매년 지정 취소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결합 전문기관 수도 2023년 23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관리의 중요성 확대 및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감소 및 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하위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사업의 집행부진 부적정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주의,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된 결과 제도 시행일(2025년 3월 13일)까지도 전문기관 지정 실적이 전무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도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 역시 상당히 부진하였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개정법률 부칙에서 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을 2024년 3월 13일로 정하였으나 관련 하위법령은 2025년 2월 25일에야 시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신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거 규정 마련을 선행한 후 소요 재원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과 분야,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됨. - 서비스 개발주체에 따른 전송대상정보의 범위, 세부기능 및 고도화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위험 예측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호위원회와 과기부의 사업 과제간 주요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 분야가 아닌 분야(여행)에 대하여도 지원함으로써 과기부 사업과 지원방식이 유사해진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심사·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공공기관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통합 발주시 비목별로 집행실적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1차 시스템 운영(관리용역비, 210-15목)과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일반연구비, 260-01목)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을 통합 발주·계약하였는데, 통합 추진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모두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목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특정 비목에 일괄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예산 소진 목적의 연말 예산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 법무지원(7041-301)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송 수행 관련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송무수행지원' 사업 집행률은 확정예산 기준 79.5%에 불과하였고, 대신 다른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에서 초과집행이 이루어졌음. - 내역사업 '법률서비스이용지원'의 경우, 보호위원회의 법률자문 소요가 반드시 연말에 집중되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료의 75.5%가 12월에 집행되었고,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예년에는 연간 1,300만원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도에는 총 6,000만원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진바, 이는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하여 연말에 법률자문 및 법률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행정처분 관련 소송수행 소요 예산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 없음

4. 부대의견

가.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된 사업 등에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해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보훈부의 시설투자비를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여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훈병원 특성화 등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세부사업 내 워크숍 프로그램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몽골이태준열사기념관 건립사업의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 산업연구원은 한-아세안 정책협력연구센터 사업의 인도네시아 연락사무소 파견인력에 대하여 국회에 그 파견 이유를 설명하고, 파견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를 거쳐, 2026년 예산 심의 시 반영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항목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하는 등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도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5년 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 운영 규모 및 방식을 재검토하여 향후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을 타 기관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예산에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는 적절한 청년인턴 규모 산정과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구조적 문제, 사업목표 과다 설정, 연례적인 집행부진 등 국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설계하고, 신규 상품 출시 전 국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협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충원 방안을 모색한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 비목 신설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예산 집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집행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내기업이 해외자본에 인수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붙임 2】

2024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5. 8.

【 국가보훈부 소관 】

Ⅰ. 총괄

1.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용액 발생

□ 2024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6조 2,561억 9,000만원으로, 이 중 990억 400만원(1.6%)을 이용[1]하였고, 33억 100만원을 전용[2]하였음.

○ 이용액 990억 400만원은 전년 529억 1,500만원 대비 46억 8,900만원이 증가(87.1%)하였는데, 이는 주로 보훈대상자 진료비 및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며, 과다추계된 보상금에서 이용 감 하였음.

< 2024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체	이용	전용					
합 계	**6,256,190**	**21,516**	**9,782**	**±99,004**	**±3,301**	**5,596**	**6,293,084**	**6,248,134**	**10,656**	**34,294**
보훈심사 및 보상	5,025,545	-	-	△96,505	±233	-	4,929,040	4,913,758	18	15,265
보훈단체 지원	38,870	-	-	-	-	-	38,870	38,321	-	549
보훈의료 복지	676,108	-	-	92,131	-	5,596	773,835	772,971	533	331
생활안정 지원	29,002	56	-	-	±323	-	29,058	27,560	-	1,498
보훈문화	98,563	2,437	-	△611	±166	-	100,388	92,190	2,331	5,868

1)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의 상호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

2)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세항, 목간의 상호 융통)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프로그램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체	이용	전용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06,389	17,777	6,766	△514	±1,149	-	130,418	116,581	6,972	6,865
제대군인 지원	59,188	1,077	-	2,909	±882	-	63,174	59,756	386	3,032
보훈행정	129,874	169	3,017	2,590	±549	-	135,649	134,346	416	887
회계기금간 거래	92,651	-	-	-	-	-	92,651	92,651	-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의 이용액 약 990억원(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6%)은 2024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용액 비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이용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매년 연례적으로 수백억원 대의 금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각 세부사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주요 프로그램별 이용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35,074	±26,318	±1,133	±52,915	±99,004
보훈심사 및 보상	△29,497	△26,318	△1,133	△52,915	△96,505
보훈단체지원	△2,404	-	-	-	-
보훈의료복지	34,270 △400	26,318	-	49,815	92,131
생활안정지원	29 △160	-	-	-	-
보훈문화	△1,662	-	-	-	△61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227	-	218	-	△514
제대군인지원	△724	-	915	3,000	2,909
보훈행정	775	-	-	100	2,590
회계기금간 거래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첫째,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 내의 ‘보상금’을 과다추계하여 타 사업의 부족액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3)]

- 2024년 보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월평균 189,065명으로 편성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 사업 예산에서는 71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 중 711억 8,300만원을 ‘보훈병원 진료’(469억원), ‘위탁병원 진료’(200억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42억 8,300만원) 사업에 각 이용하였음.

<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A)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3,197,518	3,325,248	3,468,124
집행액(B)	2,695,588	2,794,347	2,941,338	3,034,761	3,127,504	3,258,090	3,396,849
집행잔액(A-B)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이·전용	**8,150**	**1,202**	**3,020**	**24,565**	**35,153**	**64,247**	**71,183**
불용	40,051	17,575	6	10	35,311	2,911	62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훈의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업의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오고 있음.

- ‘교통시설이용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지원금이 과소 추계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보전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3) P.56 참고

있음.[4]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급이 미루어진 미지급 이월액 99억 2,500만원은 전년도의 이월금액 40억 1,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5][6]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2,365	2,365	910	3,275	3,275	**138.5**	100.0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셋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매년 과소 추계로 인해 과소 편성됨에 따라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지고 있음.[7]

- 이·전용 금액은 2022년 9억 1,500만원, 2023년 30억원, 2024년 49억

4) P.93 참고
5) 2024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금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6) P.106 참고
7) P.169 참고

4,6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2	6,172	6,172	915	7,087	7,087	114.8	100.0
2023	6,172	6,172	3,000	9,172	9,135	148.0	99.6
2024	7,005	7,005	4,946	11,951	11,923	170.2	99.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별 추계를 함에 있어,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인원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편성 단계 이후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안 확정 전 집행 불능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성과보고서

1)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2)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

□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 목표(9개)-성과지표(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V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3) 검토의견

(1) 성과달성률 저조

□ 국가보훈부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7개(70.0%)임.

○ 60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507개 중 415개(81.9%)가 달성되고 92개(18.1%)가 미달성되었음.[8)]

○ 전략목표Ⅱ(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의 경우 성과지표 4개 중 1개(25.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점)', 국가유공자 등 대상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88골프장의 '자기자본 이

8) 전체 부처평균은 81.9%임

익률(%)’과 ‘내장객 수(명)’의 성과지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 전략목표 달성 현황 >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49,266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9,296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1/3
		달성률	25.0%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110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85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4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총 계	62,698	지표 수	10
		달성/미달성	7/3
		달성률	70.0%

자료: 국가보훈부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5.35%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6.35%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전체부처 평균
2024	5	8	10	7	3	75	81.9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평균	5	9	14.50	11.00	3.50	75.35	76.35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정책국(90.43%), 제대군인국(99.90%)은 100%에 미달함.

< 성과지표별·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보상 정책국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100.0	90.4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100.0	84.3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패소율 (%)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호응도(점)	100.5	102.1				117.95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100.4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8.4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대부지원 만족도(점)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91.3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84.4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점)					100.3	101.7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101.0	100.0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17.0	109.3	99.7			104.63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제대 군인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99.90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100.3	100.0	100.6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103.0	100.8		
	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					103.8	

자료: 국가보훈부

(2) 성과계획 분야의 문제점

□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단위산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목표 Ⅲ-1을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로 설정하고 단위사업으로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

우', 세부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 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측정산식) 전체 국립묘지 방문인원 합산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만을 설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세부사업은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단위 : %)'을 성과지표로 설정·운용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 삭제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세부사업 등은 성과지표를 설정·운용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위와 같이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세부사업별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총 31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총 736억 2,300만원임. 이는 전년 대비 계약 건수로 8건, 계약금액으로 239억 7,7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국가보훈부 계약 체결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회계·기금명	2023년		2024년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
일반회계	283	47,720	257	70,49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보훈기금	22	1,142	56	2,377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4	784	4	756
합 계	**309**	**49,646**	**317**	**73,62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9]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종전에는 재량사항이었으나 2023년 11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계약 관련 권한 남용 등에 취약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힘.

---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 >

종전 규정	현행 규정 (2023. 11. 16. 개정, 2024. 5. 17. 시행)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 3. (종전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종전과 같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음에도 개정 후 시행유예 기간(6개월) 내에 동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년 8월까지도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유예기간 내 설치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10]를 받고 있다고 밝힘.[11]

□ 이와 같이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인바, 국가보훈부는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0) 훈령 제정에 통상 45일 정도 소요되는데,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행정규칙 입안 → ② 제·개정안 예비 검토 ③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 ④ 규제영향분석서 작성(③에서 "규제"로 통보 받은 경우만 해당) → ⑤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 대상 여부 안건 상정 → ⑥ 행정예고(20일 이상) 및 의견조회(10일 이상) → ⑦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행정예고 종료 후) → ⑧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⑨ 제·개정안 심사의뢰 및 심사결과 통보 → ⑩ 발령
※ ③ 에서 비규제인 경우(④, ⑦~⑧ 생략)

11) 답변 제출일자: 2025년 8월 4일

Ⅱ. 일반회계

[세입]

1. 과태료[12]: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4년 세입예산액은 8,800만원으로 이 중 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수납률 0.5%)하고, 나머지 8,752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 2024년도 과태료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88	88	-	88	-	-	-	-	88

주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수납액이 ‘-’로 표기
자료: 국가보훈부

12) 세부사업: 과태료(56-563)

2) 검토의견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2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해도 존재함. 2024년 수납률 또한 전년(예산현액 기준 20.9%) 대비 악화된 0.5% 수준에 그침.

○ 과태료의 최근 10년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6,7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2년 7,400만원으로, 2023년에는 8,8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과태료 수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과태료 예산 (A)	과태료 전체 수납액(B)	수납률 (B/A)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그 외 과태료
2015년	24	33	137.5	33	0
2016년	24	113	470.8	113	0
2017년	25	59	236.0	59	0
2018년	49	30	61.2	30	0
2019년	67	95	141.8	95	0
2020년	67	3	4.5	3	0
2021년	67	-	-	0	0
2022년	74	14	18.9	10	4
2023년	88	18	20.5	0	18
2024년	88	-	-	0	0
2025년 7월	88	31	35.2	10	21

자료: 국가보훈부

□ 그간 과태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의 경우 2019년까지는 매년 6,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사실상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0년 이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과태료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과태료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D)	불납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4	수납내역 없음	-	-	-	-	-	-
2023	보훈단체 수익사업 위반 과태료	18	18	100.0	0	0	0
2022	보훈특별고용불이행 과태료	10	10	100.0	0	0	0
	보훈단체 수익사업 위반 과태료	4	4	100.0	0	0	0
2021	수납내역 없음						
2020	차별대우 미시정업체 과태료	3	3	100.0	0	0	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전년 수준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2) 보훈특별고용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 보훈특별고용은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임.[13)]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취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취업지원 실시기관[14)] 중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 보훈특별고용 업무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

구 분		독 립 유공자	국 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 대 군 인*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사망자 자녀	○	전몰·순직 군경자녀	×	×	사망·행불자 자녀	사망·행불자 자녀	×
	상이자 자녀		상이 6급 이상 자녀		장애 중등도 이상의 자녀	장애 11등급 이상의 자녀	상이 6급 이상의 자녀	
손자녀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만 해당,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적용되나, 가점은 미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실태 등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5] 또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게 보훈특별고용을 명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6]

□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60% 초반에 그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민간기업 및 사립학교 또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최근 5년간 의무고용 이행 현황 >

(단위: %)

연 도	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2019	43.4	61.6	82.7	30.6	38.9
2020	42.0	63.9	81.4	29.8	36.8
2021	41.4	64.9	80.2	29.2	36.2
2022	36.6	63.7	77.5	24.6	33.2
2023	36.2	62.5	77.3	24.0	31.8
2024	35.1	59.8	76.7	22.9	30.9

자료: 국가보훈부

< 기관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 >

('25.6.30. 기준, 단위:명, %)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기관·업체 수	16,090	585	2,369	11,869	1,267
의무고용 산출인원	222,554	8,773	43,725	164,818	5,238
실제 고용인원	78,011	5,404	33,621	37,368	1,618
의무고용 이행률	35.1%	61.6%	76.9%	22.7%	30.9%

* 중앙행정기관의 우정직렬 비율이 높아, 우정직렬(집배, 계리직 등) 제외 시 국가기관 전체는 89% 수준, 중앙행정기관은 116% 수준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환경 악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부터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최근 10년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4	-	-	-	-	-	-

연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3	-	-	-	-	-	-
2022	10	10	100.0	-	-	-
2021	-	-	-	-	-	-
2020	-	-	-	-	-	-
2019	95	95	100.0	-	-	-
2018	40	30	75.0	-	-	10
2017	70	55	78.6	-	-	15
2016	115	110	95.7	-	-	5
2015	95	25	26.3	-	-	70

자료: 국가보훈부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 징수 건 포함

□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고, 취업지원 대상 중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으며,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보훈특별고용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취업실적 상향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변경해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고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과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법령의 규범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17]: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에는 예산액 86억 5,200만원 중 82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45억 3,700만원을 수납(수납률 55.1%)하였음.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 이전수입	8,652	8,652	-	8,652	8,233	4,537	3,554	141	8,652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일반회계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2024년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도 수납률이 55.1%에 그침.

17)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7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하였음. 2024년 수납률은 전년(예산액 기준 33.6%, 징수결정액 기준 39.6%)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60% 미만 수준에 그쳤음.

<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징수결정액(B)	6,046	7,859	9,760	11,065	7,131	8,233
수납액(C)	2,509	4,231	3,454	5,430	2,111	4,537
수납률(C/A)	34.3	55.5	44.0	66.6	25.1	52.4
수납률(C/B)	41.5	53.8	35.4	49.1	29.6	55.1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B)	불납결손액(D)	불납결손율(D/B)	미수납액(E)
2024	보훈급여금 과오불	4,100	949	23.1	141	3.4	3,00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963	2,910	98.2	0	-	53
	교육비지원과오불	76	73	95.7	0	-	3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542	206	37.9	0	-	336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51	399	72.4	0	-	152
	계	8,233	4,537	55.1	141	1.7	3,554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B)	불납결손액(D)	불납결손율(D/B)	미수납액(E)
2023	보훈급여금 과오불	4,700	1,167	24.8	207	4.4	3,326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925	875	94.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33	127	95.5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729	206	28.3	0	-	523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644	446	69.3	0	-	198
	계	7,131	2,821	39.6	207	2.9	4,102
2022	보훈급여금 과오불	5,854	1,381	23.6	139	2.4	4,334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93	3,443	98.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00	94	94.0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915	214	23.4	0	-	70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702	297	42.3	17	2.4	388
	계	11,065	5,430	49.1	156	1.4	5,479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20.2	189	3.2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78.9	0	-	445
	교육비지원과오불	153	134	87.6	0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83	206	19.0	0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9.5	4	4	268
	계	9,760	3,454	35.4	194	2.0	6,112
2020	보훈급여금 과오불	3,048	626	20.5	30	1.0	2,39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15	3,284	96.2	0	-	131
	교육비지원과오불	112	106	94.6	0	-	7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31	0	-	0	-	1,03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253	217	85.8	0	-	36
	계	7,859	4,232	53.9	30	0.4	3,598

자료: 국가보훈부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0억 900만원에 달하며, 수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38.0%, 미수납액은 3억 3,600만원에 달함.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3,893	729	760	2,772	361	19.5
2019년	3,506	874	1,031	2,249	226	29.4
2020년	3,048	632	625	2,393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958	500	-	958	-	-
2019년	1,011	54	38	973	-	3.8
2020년	1,031	58	-	1,031	-	-
2021년	1,083	52	206	877	-	19.0
2022년	915	384	214	701	-	23.4
2023년	723	22	206	517		28.4
2024년	543	26	206	336	-	37.9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임의체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한 장기체납액이 상당한 비중(30.3%)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체납된 채권은 불납결손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세입누락으로 인한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18)]

<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임의체납액 체납기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체납기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계
금액	268	27	46	73	125	306	845
비중	31.7	3.2	5.4	8.6	14.8	36.2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회에서 최근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편성근거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19)] 국가보훈부는 매년 '전년 대비 3% 증액'을 편성근거로 제출하고 있음.

- 수납액이 가장 많은 2022년에도 금액은 54억 3,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액은 2019년 73억 1,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86억 5,200만원에 이름.

---

18)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9) 2022~2024년 정무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징수결정액(B)	6,046	7,859	9,760	11,065	7,131	8,233
수납액(C)	2,509	4,231	3,454	5,430	2,111	4,537
수납률(C/A)	34.3	55.5	44.0	66.6	25.1	52.4
수납률(C/B)	41.5	53.8	35.4	49.1	29.6	55.1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체납 감소를 통한 수납실적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항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20] 환수사유는 ① 범죄,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음에도 신상변동신고를 지연·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21] ② 지급제도 변경, 담당자 변경 및 실수로 인하여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③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정정, 범죄경력 통보 등을 누락하여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분류됨.[22]

□ 2024년도 보훈급여금 과오불로 인한 징수결정액 41억원은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발생액은 10억 2,100만원임.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2020년	3,048	632	625	2,393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자료: 국가보훈부

○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규모가 가장 큰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오급금의 징수결정액은 26억 7,000만원으로, 이 중 5억 7,900만원(21.7%)이 수납되었고 74.9%인 20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3. 잘못 지급된 경우

21) 신상변동 사항 신고 지연 및 누락의 경우 4개월 이상에 한함

22)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범죄경력 통보 누락 등, 상이등급 (직권)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동, 3개월 이내 신상변동 사항 등 신고 지연 · 누락

○ 또한, 직원의 실수나 업무 소홀 등 행정 착오 유형의 징수결정액 6억 6,700만원 중 24.4%인 1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행정착오’의 경우 2024년에도 29건(1억 100만원)이나 발생하였음. 이와는 별도로, 보훈급여금은 아니나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나 담당자의 착오로 징계부과금으로 징수결정된 바 있는 ‘징계부과금’의 미수납액 6,874,100원도 존재함.[23)]

< 2024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원인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부정 수급	218	2,670	579	90	2,001
행정 착오	69	667	163	50	454
군기록 정정·기타	143	763	207	1	554
계	**430**	**4,100**	**949**	**141**	**3,009**

자료: 국가보훈부

< 2020~2024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유형별 건수 및 금액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행정착오		군기록 정정·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42	632	55	364	27	164	60	104
2021	254	3,514	87	1,664	41	411	126	1,439
2022	164	2,423	53	688	22	337	89	1,398
2023	312	1,520	225	1,010	36	322	51	188
2024	218	1,021	96	670	29	101	93	250

자료: 국가보훈부

23) 국가보훈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수납 중인 고지건은 수입과목 정정처리가 되지 않아, 수납 완료 후 과목정정 처리 예정이라고 밝힘.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① ‘부정 수급’은 납부의무자가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분 고액[24]인 과오납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확인되어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② ‘행정착오’의 경우 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담당자의 착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③ ‘군기록 정정·기타 소관기관이 통보를 누락한 경우’는 범죄 등과 같은 신상변동사유 발생의 확인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하게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함.

□ 그러나 ‘행정착오’의 경우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체계의 철저한 확립 및 지휘·감독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과목을 착각해서 발생한 징계부과금 미수납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훈부의 자체 교육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군기록 정정·기타 소관기관이 통보를 누락한 경우’의 경우에도 정부통합복지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 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신상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4) 2024년 기준 징수결정 건수(429건) 대비 평균 발생액 약 955만원

□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보훈급여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사기와 명예를 저하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25]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26]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6)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연번	부정수급액	발생경위
1	5,800만원	·유공자의 조카이나, 허위부정 등록 ·2018.11. 경찰서 고발 후 2018.12. 혐의없음 통보
2	7,900만원	·개가 및 이중호적 취득한 유공자의 배우자가 부정수급 ·2018.8. 경찰 수사 의뢰 후 검찰 송치, 2019.7. 징역 1년 6개월 선고
3	8,300만원	·유공자의 배우자 2005.1월 사망 후 자녀가 보상금 부정수급(사망 미신고) ·2018.11. 경찰서 고발 조치 후 2019.9. 징역 1년 선고

자료: 국가보훈부

[세출]

1. 보상금[27]: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집행잔액 규모 및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조 3,969억 4,100만원 중 3조 3,968억 7,900만원(99.9%)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상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상금	3,468,124	3,468,124	-	△71,183	3,396,941	3,396,879	-	62	3,562,819

자료: 국가보훈부

□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본인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의 유족으

27) 세부사업: 보상금(1132-300)

로, 보상금은 월 단위(매월 15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대상·훈격·상이등급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

구분	법률	대상자	지급액 (천원)	비고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법	- 애국지사	1,425~3,026	· 훈격별 차등
독립유공자 유족		-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889~3,185	· 훈격별 차등 · 배우자와 그 외 유족 차등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법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는 인원 포함	608~3,681	· 대상별 차등 ·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
		- 재일학도의용군인	1,612	
	보훈보상대상자법	- 재해부상군경	426~2,577	
유족	국가유공자법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585~1,681	· 대상별 차등 ·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 · 배우자, 부모, 자녀 간 차등
		-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1,906~2,249	
		- 4·19혁명사망자 유족,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585~1,681	
	보훈보상대상자법	- 재해부상군경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	410~1,367	

출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대상 법률 및 시행령

2) 검토의견

□ 보상금 예산은 각 유형별 지급대상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할 보상금 지급액에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지급인원을 추계하여 편성되는데,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도 지급액에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증가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상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지급인원은, 예산 편성 당시 결산 인원에 최근 n개년 지급인원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법·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증감하게 되는 예상인원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보상금의 지급인원을, 22년 결산 인원에 3개년('20~'22)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2024년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신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4개 질병 대상자 2,093명을 가산하여 총 191,448명으로 추계하였고,[28] 이를 기준으로 3조 1,53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29]

< '보상금' 사업 예산 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	각 대상 유형별 보상금 지급액	×	각 대상 유형별 예상 지급인원
2024년도 예산 편성	=	2024년도 지급액 (23년대비 5% 인상)	×	**[22년 결산 인원 × 3개년('20~'22) 평균증감률^2] + 전환 인원(2,093명)**

28) 2024년 법률 개정(2024. 2. 13.)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수당을 받는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함.

29) 세부사업인 '보상금'은 보상금과 부가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부가수당을 제외하고 보상금만을 계산한 금액임.

□ 그런데, 2024년 보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월평균 189,065명으로, 편성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 사업 예산에서는 71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 중 711억 8,300만원을 ‘보훈병원 진료’(469억원), ‘위탁병원 진료’(200억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42억 8,300만원) 사업에 각각 이용하였음.

○ 이처럼, ‘보상금’ 사업에서 대규모 집행잔액 및 이·전용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보상금’ 예산은 당해연도 월별 보상금 지급액과 추계한 예상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월별 보상금 지급액은 사전에 정해지는 인상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의 과다 편성은 예상 지급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었기 때문임.

< 보상금 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 산		집 행		비 고	
	편성인원 (A)	편성금액 (B)	지급인원 (C)	지급금액 (D)	인원 차 (A-C)	금액 차 (D-B)
값	191,448	3,468,124	189,065	3,396,879	2,383	71,245

자료: 국가보훈부

□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대규모 이·전용의 반복은 적절한 재정 운용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의 지급인원 추계는 그 합리성을 제고함

으로써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국회의 지적이 다수 있었으므로,[30]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 그럼에도, 동 사업의 2024년도 집행잔액 및 이·전용 규모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이는 동 사업의 집행잔액 중 최대 규모임.

<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A)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3,197,518	3,325,248	3,468,124
집행액(B)	2,695,588	2,794,347	2,941,338	3,034,761	3,127,504	3,258,090	3,396,849
집행잔액 (A-B)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이·전용	8,150	1,202	3,020	24,565	35,153	64,247	71,183
불용	40,051	17,575	6	10	35,311	2,911	62

자료: 국가보훈부

□ 물론, 보상금 지급대상 인원 증감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지급 대상 인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30) 2020년 국회정무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2년 국회정무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 등.

적어도 2024년도 보상금 지급인원 추계는, 편성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오류를 제거하거나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과다 추계 요인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지급인원 추계에 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보상금' 지급인원 추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이를 고려하여 지급인원 추계를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게 수행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예산안 편성 당시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 설명과 달리, 더 많은 인원이 추계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당초부터 지급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될 요소가 있었음.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2024년도 지급인원 산정방식은 대상별 특성(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을 구분하여 최근 3년('20~'22) 평균증감률 또는 5년('18~'22) 평균증감률 중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3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지급인원을 추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31]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인원의 특성상 기존 등록인원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신규 등록 가능 인원은 등록 요건이 특정 역사적 사건

31) 2024년 국가보훈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p.61.

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 시점에서 다수가 되기 어려워, 별도의 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보상금 지급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고,

- 각 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각 대상 유형별 특성 및 특정 대상에 대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증감 차이에 따라 대상 유형별로 증감 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증감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국가보훈부는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보상금 편성인원 및 지급인원 증감('19~'24)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인원	191,888	192,363	191,866	192,964	190,606	191,448
전년대비 증감	1,008	475	△497	1,098[1]	△2,358	842
지급인원	190,885	191,518	190,226	189,894	189,186	189,065
전년대비 증감[2]	357	633	△1292	△332	△708	△121
인원차 (편성-지급)	1,003	845	1,640	3,070	1,420	3,042
비 고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 가산 +838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 가산 +1832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 가산 +2073

1) 3개년 또는 5개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19년과 20년의 제도 변화로 인한 일시적 증가분이 추세 증가로 반영되어 추계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 집행잔액은 2024년도 제외 최대 규모임.

2) 법·제도 변화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자체의 증가 요인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인원이 증가한 해(19년, 20년)에도 가산된 전환인원을 제외하면 지급인원은 감소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3개년 보상금 지급 인원 추계 방식 설명 >

연도	기준값	산정방식
2022	20년 지급인원	3년(18~20년) 또는 5년(16~20년) 증감률 적용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증감률 적용
2023	21년 지급인원	3년(19~21년) 또는 5년(17~21년) 증감률 적용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증감률 적용
2024	**22년 지급인원**	**3년(20~22년) 또는 5년(18~22년) 증감률 적용 * 보다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증감률 적용**

출처: 각 해당연도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 그런데, 2024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 보상금 지급인원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3년 평균증감률과 5년 평균증감률 중 더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3년 평균증감률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성인원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각 대상 유형을 구분하여 대상 유형별로 3년 또는 5년 평균증감률 중 더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평균증감률을 대상 유형별로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인원에 비하여 더 많은 인원이 추계되는 방식이어서,

결국, 당초 설명하고 있는 방식과 달리, 각 대상 유형별로 다른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추계 자체에 과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3년 또는 5년 평균증감률 동일 적용 시 지급인원 추계 >

(단위: 명)

구분	월 평균 지급인원 추계			비고 (실제 지급인원)
	편성인원 (3년 평균증감률 동일 적용)	추계인원 (5년 평균증감률 동일 적용)	추계인원 (산정방식 적용*)	
계	191,448	193,584	190,625	189,065
독립유공자	5	7	5	6
독립유공자 유족	6,895	7,074	6,888	6,569
상이군경 등	114,590	116,274	114,418	114,985
유족	69,958	70,229	69,314	67,505
실제 지급인원과 차이	2,383	4,519	1,560	-

* 더 적은 인원이 산정되는 평균증감률을 대상 유형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자료: 국가보훈부

- 만약, 당초 산정방식 설명과 같이 각 대상 유형별로 다른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적어도 약 165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편성인원'과 '산정방식 적용 인원' 편성금액 비교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추계		비고 (금액 차이)
	편성인원 기준 (3년 평균증감률 적용)	산정방식 적용 인원 기준	
계	3,153,479,412	3,137,015,004	16,464,408
독립유공자	152,052	152,052	0
독립유공자 유족	130,189,236	129,984,660	204,576
상이군경 등	1,813,842,900	1,810,629,192	3,213,708
유족	1,209,295,224	1,196,249,100	13,046,124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2024년 보상금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이 개정될 경우, 신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시점에 이미 최소 2개월분의 보상금 지급액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음.

○ 정부는 2023. 6. 29.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 중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이 증가할 것이므로,[32] 이에 대한 예상인원 2,073명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액 12개월분을 2024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 그런데, 동 법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기인 2023년 11월까지 개정되지 못하였고, 위 개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단계시점에서 이미 적어도 2개월분의 보상금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확정됨.[33]

---

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

33) 2023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공포까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 시행시기는 2024년 3월이 되므로, 이 경

< 고엽제법 개정 경과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

구분	23.6.29.	23.9.1.	23.11.20.	23.11.24.	23.11.30.	23.12.21.	24.1.25.	24.2.13.	24.5.14.
법 개정 경과	개정안 제안 (정부)				**상임위 의결**		본회의 의결	개정법 공포	법 시행
2024 예산안 심사 일정		예산안 국회 제출	정무위 소위 의결일	예결위 최종 소위일		예산안 의결			

○ 따라서, 예산안 심사 단계 시점에서 이미 집행 불가능이 확정된 부분의 보상금을 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던 약 118억원 중 적어도 약 5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우 같은 해 1~2월분의 보상금의 집행은 불가능함.

< 고엽제후유증 전환 대상인원 및 예산 편성액 >

(단위: 천원)

구분	대상인원	월 지급액	조정 가능액 (2개월분)	실제 집행 불가능액(4개월분)
계	2,073		5,890,654	11,781,308
상이 2급	8	2,955	47,280	94,560
상이3급	128	2,762	707,072	1,414,144
상이 4급	7	2,317	32,438	64,876
상이 5급	278	1,919	1,066,964	2,133,928
상이 6급1항	370	1,751	1,295,740	2,591,480
상이 6급2항	158	1,612	509,392	1,018,784
상이 6급3항	112	1,083	242,592	485,184
상이 7급	128	608	155,648	311,296
1-5급배우자, 6급 상이사망 배우자	349	1,681	1,173,338	2,346,676
6급 비상이사망, 7급상이사망배우자	535	617	660,190	1,320,380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편성 단계 이후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안 확정 전 집행 불능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집행잔액 규모를 최소화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조정수당[34]: 지급실적과 대상자 특성을 추계에 반영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19억 5,800만원으로 이 중 82억 6,000만원(69.1%)이 집행되고, 36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생활조정수당	89,526	89,526	-	-	89,526	82,171	-	7,355	84,574
생계지원금	11,958	11,958	-	-	11,958	8,260	-	3,698	4,242

자료: 국가보훈부

□ ‘생계지원금’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

34)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중 80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

구분	대상	요건		
		연령	생활수준	상이 정도 요부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0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경도장애 이상 (고도, 중등도, 경도)
참전 유공자법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법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장해등급(1~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만 해당
특수임무 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상이등급(1~7급) ※특수임무부상자만 해당

□ 한편, 생계지원금은 지급 요건으로 '수급권자에게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부터 위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고, 2025년 법 개정을 통하여 폐지하였음.

<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 완화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용	중상이자 기준 미적용	65세 이상 노인 기준 미적용	기준 전면 폐지

2) 검토의견

□ ‘생계지원금’ 사업의 2024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6,863명, 지급금액은 82억 6,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약 69%를 집행하였고, 36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22년 시작된 사업으로, 해마다 지급 예상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4년도에는 2022년과 2023년도 편성인원의 과다 추계 요인을 조정하지 않고, 2024년도 편성인원에 기존 과다 추계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인원을 추계하였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생계지원금’ 집행 실적('22~'24) >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인원	지급인원	인원차 (편성-지급)
2022년	6,874	3,851	3,023	5,728	3,490	2,238
2023년	8,124	4,204	3,920	6,770	3,505	3,265
2024년	11,958	8,260	3,698	9,965	6,863	3,102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도 생계지원금 지급 예상인원 추계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2023년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인원(3,195명)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결국 ‘2022년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중상이자, 65세 이상 노인)로 인한 인원을 추

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

< '생계지원금' 편성인원 추계('22~'24) >

구분	추계 방식					편성인원
2022년도	사업 시작연도					5,728명
2023년도	2022년도 편성인원			+	제도 변화 (중상이자 기준 미적용)	6,770명 (5,728명+1,042명)
2024년도	2023년도 편성인원			+	제도 변화 (65세 이상 기준 미적용)	9,965명 (6,770명+3,195명)
	2022년도 편성인원	**+**	**제도 변화 (중상이자 기준 미적용)**	**+**	**제도 변화 (65세 이상 기준 미적용)**	**(5,728명+1,042명** +3,195명)

□ 첫째, 2022년도 편성인원은 사업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2024년도 편성인원을 추계할 당시에는 이미 2022년도 결산인원이 있었던 만큼, 2022년도 편성인원이 과다 추계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2022년도 편성인원 값을 2024년도 편성에 그대로 사용하였음.

○ 2024년 추계 당시는 2022년 실제 지급인원이 3,490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시점이었으므로, 2022년 편성인원(5,728명)이 아닌 2022년 지급인원(3,490명)을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2022년 편성인원과 지급인원의 차이인 2,238명은 2024년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였음.

□ 둘째, 2023년도 편성인원은 중상이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이에 따른 예상 증가 인원 1,042명을 가산한 것인데, 이는 제도의 대상자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2023년도 지급인원이 2022년 대비 15명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인원을 그대로 2024년 편성인원에도 반영하였음.[35)]

○ 위 제도 변화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대상은 중상이자인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이어야 함.[36)]

○ 국가보훈부는, 수급권자가 중상이자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원을 1,042명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를 추계함에 있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보다 중상이자 비중이 훨씬 높을 생활조정수당 전체

---

35) 실제로, 2023년도 지급인원은 2022년도 대비 15명 증가하였고, 이는 해당 제도 변화가 동 사업의 지급 대상인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반증함.

36) 舊「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4호) 제3조(부양능력 등)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급인원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을 적용하였음.[37]

○ 그런데, 앞선 사업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대다수가 비상이 보훈대상자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들이고,

중상이자에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의 상이등급(3급 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으로 중복등록되어 생계지원금보다 지급액이 큰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상대상자가 되므로,

실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에는 중상이자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인원이 극소수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즉, 2023년도 중상이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 미적용이라는 제도 변화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는 생계지원금 대상 인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요소임에도, 2023년 편성인원뿐만 아니라 2024년도 인원 추계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음.

37) **< 중상이자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인원 추계 >**

부양의무자 폐지 시 신규 지급 인원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원(9,965명) - '22년 예산인원(5,728명) = 4,237명
중상이지 요건 완화 시 지급 인원 = 부양의무자 폐지 시 신규 지급 인원(4,237명) **× 생활조정수당 지급 인원 중 중증장애인 비율(24.6%)** = 1,042명

□ 2024년도 생계지원금 편성인원 과다 추계의 원인은, 불가피한 사정변경이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가 아닌, 추계 당시 부주의하였던 측면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편성인원 추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등록관리[38]: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신체검사'는 전·공상군경 등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상이(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억 4,100만원으로 이 중 17억 4,000만원(99.9%)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는 보훈대상자에게 대통령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억 7,600만원으로 이 중 27억 2,400만원(94.7%)이 집행되고, 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등록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등록관리	6,732	6,732	-	△11	6,721	6,309	-	412	3,336
신체검사	1,697	1,697	-	44	1,741	1,740	-	1	1,697
증서관리	2,920	2,920		△44	2,876	2,724		152	1,145

자료: 국가보훈부

38) 세부사업: 등록관리(1143-328)

2) 검토의견

(1)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

□ 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의 내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우편요금’은 종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이었던 4개 질병[39]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4개 질병에 해당하였던 대상자들에게 신체검사 신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임.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 안내문 발송이 필요한 신체검사 수검 예상 인원을 47,189명으로 계산하여 우편 요금 1억 1,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40]

< 예산 편성 당시 신체검사 수검 예상인원 >

(단위 : 명)

전환질병		추출질병		
연번	질병명	연번	질병명	예상인원
1	다발성경화증	①	다발성경화증	34
2	갑상샘기능저하증	②	갑상선기능저하증	1,420
		③	갑상샘기능저하증	20
3	방광암	④	방광암	2,149
		⑤	악성종양	35,329
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⑥	중추신경장애*	7,932
		⑦	중추신경병변	305
		⑧	파킨슨 등	
계				47,189

자료: 국가보훈부

39)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악성종양 중 방광암

40) 우편요금 : 47,189명 × 2,500원(등기우편요금) × 1회 = 118백만원

□ 그런데, 동 내내역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1억 1,800만원 중 2,600만원(22%)만이 집행되었고, 편성금액 중 대부분인 9,100만원(77%)은 동일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되었음.

< '신체검사 우편요금'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이·전용등 내역)
신체검사 우편요금	118	△91	27	26	1	· 동일 내역사업 일반수용비 세목조정(9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실제 안내문 발송 대상 인원이 편성 인원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예산편성 시에는 대상 질병과 관련된 질병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23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 질병 대상자를 선별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 범위를 최소화한 결과 대상 인원이 10,527명으로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임.

<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인원 >

(단위 : 명)

전환질병		추출질병		
연번	질병명	연번	질병명	발송인원
1	다발성경화증	①	다발성경화증	25
2	갑상샘기능저하증	②	갑상선기능저하증	540
		③	갑상샘기능저하증	947
3	방광암	④	방광암	2,671
		⑤	악성종양	-
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⑥	중추신경장애*	6,247
		⑦	중추신경병변	13
		⑧	파킨슨 등	84
계				10,52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이러한 안내문 발송 예상인원 추계는 예산편성 당시에도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인원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동 사업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으로, 법안 제출 당시에 이미 비용추계를 하였으므로, 안내문 발송 예상인원도 당시에 함께 검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이후에 대상 인원을 재산정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 한편,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전환하여야 할 인원에 대한 고엽제검진 및 신체검사 의사 수당을 추가 재정요인으로 추계하고 있는데도,

신체검사 의사 수당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41]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은 과다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편성부터 비용추계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42]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편성 기준이 되는 예상인원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1) '신체검사 의사 수당' 예산액 : (23) 336백만원, (24) 336백만원

42)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당초 고엽제후유증 전환에 따른 의사수당, 정밀검사수수료, 우편료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우편료만 반영되었다는 의견임.

(2) 이행가능성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의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은 신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기존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등을 하는 사업임.

○ 국가보훈등록증은 당사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아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신분증으로, 기존 보훈대상자별로 발급하고 있던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43]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병행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거래·인감신고 등에 있어 신원을 증명하는 공인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편의 기능을 개선한 것임.

< 국가보훈등록증 개요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도입과 함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

43)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엽제, 고엽제2세)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개년에 걸쳐 기존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 발급자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계획하였음.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계획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
시범발급	2023년	6.~7.	신규등록자	2,000명
정식발급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명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명
	2024년	1.~3.	1946년~1949년생	127,000명
		4.~6.	1950년~1955년생	124,000명
		7.~9.	1956년~1965년생	114,000명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000명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2023년도와 2024년도 ‘증서관리’ 내역사업의 예산에는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위한 제작 매수 및 인건비 소요가 반영되었음.

< 내역사업 중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3	’24	’25	비 고
국가보훈등록증 제작	1,500	2,092	352	· 교체발급 제작 매수 반영 · 23년 30만매, 24년 36만매 / 25년 6만매
교체발급인력 인건비 (일용임금, 4대 보험료 등)	728	1,311	-	· 34명, 23년 7개월, 24년 12개월분 임금 반영 / 25년 미반영
합 계	2,337	4,087	352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 교체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총 발급실적은 계획매수 대비 42% 수준인 15만 1,747매이고, 전체 사업 기간인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계획 대비 약 33%(218,402매)의 발급률을 보이는 등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기간별 교체 발급 계획을 기준으로 보아도, 전 기간에서 계획 달성률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실적 >

(단위: 매, %)

구분	2023년 (6월 발급 시작)	2024년	계
계획 매수	300,000	360,000	660,000
발급 매수*	66,655	151,747	218,402
발급률	22.22	42.15	33.09

* 신규 발급을 포함한 해당연도 전체 발급 매수를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 교체발급 계획 대비 실적 및 계획 달성률 >

(단위: 명,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A)	실적(B)	달성률 (B/A)
시범발급	'23. 6.~7.	신규등록자 등	2,000	8,280	37.2
정식발급	'23.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0	18,489	
	'23.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	39,886	36.3
	'24. 1.~3.	1946년~1949년생	127,000	46,621	36.7
	'24. 4.~6.	1950년~1955년생	124,000	35,280	28.5
	'24. 7.~9.	1956년~1965년생	114,000	27,750	24.3
	'24.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000	-*	-

*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이후에는 연령별 교체 발급을 해제하였다는 입장임.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계획 대비 발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당초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집행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과도한 목표를 기준으로 한 사업계획은 결국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 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매수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발급보조인력 34명에 대한 총 19개월분의 임금을 지출하였고, 실제 발급 매수보다 약 20만매를 추가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계획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4. 고엽제환자검진[44]: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고엽제환자검진’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2세 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진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그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6억 6,700만원으로 이 중 19억 7,800만원(74.2%)이 집행되고, 6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고엽제환자검진	2,667	2,667	-	-	2,667	1,978	-	689	2,667

자료: 국가보훈부

44) 세부사업: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2) 검토의견

□ ‘고엽제환자검진’의 2024년 집행률은 74.2%로,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보훈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2021년, 2022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연도별 결산 내역(’21~’24)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2,993	-	-	2,993	2,389	79.8	-	604
2022	2,993	-	-	2,993	2,297	76.7	-	696
2023	2,667	-	200	2,867	2,867	100	-	-
2024	2,667	-	-	2,667	1,978	74.2	-	689

자료: 국가보훈부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고엽제 환자 검진인원은 예년에 비하여 증가한데 반하여 검진비와 검진단가는 감소하였는 바, 이는 일부 검진과목의 정밀검사 및 입원 검진 등 고가의 검사 시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검진인원 및 검진비 변동 현황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검진인원 (실인원, 명)	11,548	13,910	13,318	9,628	10,065	9,977	11,623	13,844
검진인원 (연인원, 명)	30,522	30,792	32,973	22,865	24,101	22,413	28,004	29,437
검진비 (백만원)	3,872	3,130	3,044	2,251	2,386	2,294	2,864	1,975
검진단가 (원)	126,859	101,650	92,318	98,447	99,000	102,351	102,271	67,092

자료: 국가보훈부

< 주요 검진 항목별 '23년 및 '24년 검진 시행 건수 >

(단위: 건, %)

주요 질병	주요 검진 항목	2023년 (A)	2024년 (B)	감소율 (A-B/A)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초음파-심장-(단순)경흉부심초음파	99	39	**60.6**
파킨슨병	MRI Brain 촬영료[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85	171	7.6
	MRI Brain 판독료	195	192	1.5
	PACS영상저장및전송비용/MRI	209	197	5.7
	뇌 PET CT	654	370	43.4
	PACS영상저장및전송비용/PET	598	359	40.0
	해동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98	59	39.8
	듀켐바이오에프디지-20(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68	23	**66.2**
	피디뷰주사(FP-CIT 18F)	139	61	**56.1**
뇌경색증	진단초음파-혈관-뇌혈류	546	283	48.2
	DIGITAL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310	128	**58.7**
중추 신경장애	진단초음파-혈관-(경동맥)두개외 혈관 도플러	152	91	40.1
	CDR치매척도검사	306	175	42.8
	MMSE간이정신진단검사	338	210	37.9
당뇨병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982	1,739	12.3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반정량]	411	349	15.1
말초 신경병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편측)	2,726	1,437	47.3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양측)	612	220	**64.1**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746	573	23.2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양측)	283	44	**84.5**
	(RM)신경전도검사(하지)감각신경	546	186	**65.9**
간질환	ALT (SGP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51	20.1
	AS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51	20.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121	102	15.7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121	100	17.4
지루성 피부염	첩포시험(1종목당)	536	229	**57.3**
다발성 신경마비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편측)	704	342	**51.4**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양측)	218	28	**87.2**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271	121	**55.4**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양측)	104	12	**88.5**
	(RM)신경전도검사(하지)감각신경	40	16	**60.0**
	(RM)근전도검사(상·하지)	56	23	**58.9**
	MRI 경추 촬영료 [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6	16	0.0
	MRI 경추 판독료 [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6	16	0.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한 검진이 저조하게 된 것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

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검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임.

<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

(단위: 명)

구분	정원	24년		
		인원(6월)	인원(9월)	인원(12월)
서울중앙보훈병원	110	9	9	9
부산보훈병원	26	6	5	5
대전보훈병원	12	-	-	-
대구보훈병원	12	1	1	1
광주보훈병원	23	3	2	2

*자연인 기준, 치과병원 소속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 일부 질병 검진 신청 현황 및 검진 실적 >

(단위: 명)

구분	질병명	신청	검진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	539	193
	폐암	861	661
	전립선암	1,344	857
	당뇨병	1,671	1,121
	허혈성심장질환	1,493	1,092
	갑상샘기능저하증	139	88
	다발성경화증	11	3
	방광암	3,068	2,750
	비전형파킨슨증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206	147
고엽제 후유의증	지루성피부염	298	109
	중추신경장애	612	178
	뇌경색증	918	288
	다발성신경마비	55	9
	악성종양	1,367	979
	간질환	102	67
	고혈압	1,619	1,064

* 여러 질병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등 신체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타 검사과목과 검사일자를 맞추기 위해 대기 중인 경우 발생

자료: 국가보훈부

□ 이로 인하여, 2024년 단일 질환[45]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은 평균 48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단일 질환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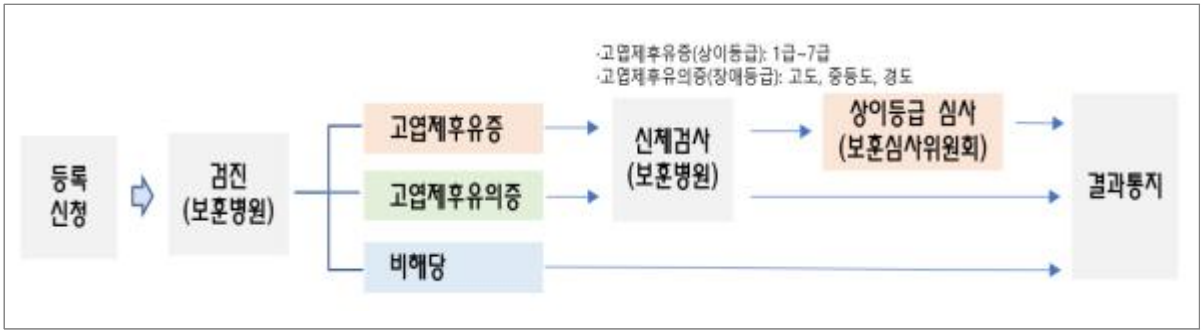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검진 소요기간*	39.8일	39.3일	39.0일	39.8일	54.2일	42.3일	43.6일	43.1일	**48일**
					(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 환자 검진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므로,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 및 이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절차도 함께 지연된다는 측면에서, 검진 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절차 >



* 음영: 고엽제 질병 등록 절차 중 '고엽제 환자검진' 사업으로 수행되는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45) 단일질환 기준이란 하나의 질병을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또한,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는, 2024년에 검진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의 검진을 2025년으로 순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25년 검진 신청인원에게까지 연쇄적인 검진 지연을 유발하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검진 지연의 원인이 된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은 여전히(2025년 6월 기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고엽제 등록 신청자의 검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5년 6월말 기준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비고
서울중앙보훈병원	110	17	△93
부산보훈병원	26	5	△21
대전보훈병원	12	0	△12
대구보훈병원	12	0	△12
광주보훈병원	23	4	△19

*치과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

5.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4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액된 보조사업의 증액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의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59억 3,100만원으로 이 중 59억 1,400만원(99.8%)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단체운영및 선양활동등	35,120	35,120	-	-	35,120	35,071	-	49	34,281
보훈단체 선양활동등	5,931	5,931	-	-	5,931	5,914	-	17	5,031

자료: 국가보훈부

46) 세부사업: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2) 검토의견

□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각 보훈단체의 선양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확정 당시에는 ‘6·18자유상이자회’를 포함한 총 15개의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 동 사업의 실제 집행 단계에서 ‘6·18자유상이자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취소하고, 대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함)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선양사업에 3,60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24년도 보훈단체 선양사업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단체	편성	단체	편성
광복회	648	6·18자유상이자회	36(취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14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377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78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97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2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41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1,35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7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95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8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6
4·19혁명공로자회	3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36(추가편성)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사업은 2010년부터 보훈기금에서 지원하여 온 보조사업으로, 2024년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사업을 포함한 6·25참전유공자회의 선양행사비가 감액되었으나, 고령의 참전유공자 위로·격려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변경하여 지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47)]

<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기념사업 지원’ 개요 >

▫ 개요 : 세부사업 ‘참전유공자지원’(4163-439) 내 **내역사업인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의 내내역사업**
▫ 보조금 규모 : 1억 1,000만원(전년대비 4,800만원 감액)
▫ 세부 내용 :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44백만원), **참전유공자위로격려행사(44백만원)**, 안보현장 방문행사(6백만원), 철의삼각지전투기념행사(16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6·25참전유공자회 보훈기금 지원 선양행사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양행사비	177	166	166	158	110
- 위로·격려행사	90	58	44	40	36

자료: 국가보훈부

47)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18자유상이자회’는 2024년부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위해 해당 단체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 그런데,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은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24년 내역사업을 일정수준 감축’ 할 것을 판정받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감액한 것으로,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참전유공자 위로・격려 행사” 사업이 포함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기념사업 지원”도 같은 사유로 감액된 것임.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을 6・25참전유공자회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일정수준 감축 판정을 받은 보조사업을 편성 시 감액한 이후 다시 증액하였음.

□ 이는, 보조사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8]의 규정 취지와 당초 감축 판정을 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향후 국고보조사

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축된 보조사업을 예산 확정 이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교통시설이용지원[49]: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통시설이용지원’은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3억 2,900만원 중 107억 3,000만원(94.7%)이 집행되고 5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1,329	-	-	11,329	10,730	533	66	10,729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9,084	9,084	-	△20	9,064	8,465	533	66	8,484
철도무임 및 이용지원	2,163	2,163	-	-	2,163	2,163	-	-	2,163
여객선무임 및 이용지원	82	82	-	20	102	102	-	-	82

자료: 국가보훈부

49) 세부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2) 검토의견

(1)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0] 등의 법률 및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에 근거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임.

< 교통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국가보훈부 훈령 별표) >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철 도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고속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5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상이6~7급, 8~14급 5·18부상자	30%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시외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7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상이 6~7급, 8~14급 5·18부상자	30%
내 항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자료: 국가보훈부

□ 이 중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은 ‘시내버스 이용 지원’에 71억 8,000만원,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에 12억 8,400만원,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에 100만원(5억 3,300만원 이월)이 집행되었음.

< 2024년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시내버스 이용 지원	7,200	7,180	‘여객선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으로 2,000만원 내역변경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	1,284	1,284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600	1	5억 3,300만원 이월, 6,600만원 불용
합 계	**9,084**	**8,46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시내버스 이용 지원’의 상세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보전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2년에 64억 2,800만원이 투입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이용금액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이용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51]’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대납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지급 대상액 171억 500만원 중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은 71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99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급이 미루어진 미지급 이월액 99억 2,500만원은 전년도의 이월금액 40억 1,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25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예산 72억원보다도 큰 금액으로, 2025년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원액을 전혀 보전할 수 없는 상황임.

---

51) 2024년 기준 사업 수행자는 신한카드(주)임.

< 2024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지급대상액 및 지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지급대상액	17,105	· 2023년 미지급 이월액 4,017 · 2024년 발생 지급대상액 13,088
지급액	7,180	· 2023년 미지급 이월액 집행 4,017 · 2024년 발생 지급대상액 집행 3,163
미지급액	9,925	· 2025년 3월 일부 집행 5,537

주) 2023.1.1.부터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 실제 대납액 산출 가능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52]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교통권 보장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에도, '교통복지카드 사업수행자'의 대납액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여 미지급액이 누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5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수행자 측에서 미지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지급금 누적으로 인한 협약 해약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교통시설이용지원’ 이용지원 세부사업의 시내버스 이용지원금 미지급액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수행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말 계약체결로 인한 일반연구비 이월 집행 지양 필요

□ 내역사업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외·고속버스 할인 발권 시스템과 광역철도의 복지카드 무임 인식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일반연구비 예산현액 6억 중 100만원(0.2%)이 집행되고, 5억 3,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600	-	600	1	533	66

자료: 국가보훈부

□ 동 내내역사업은 총 4건의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모든 계약이 연말 또는 다음 해에 이루어진 결과, 예산현액의 88.8%가 이월되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월한 사유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또는 운송업계와의 협의 지연 및 계약 체결 지연 등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이 주된 사유로 확인됨.

<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 사업 이월 사유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약 기간
동해선 교통복지카드 무임인식 전산 개선	150	67	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 협의하여 12월 계약체결	24.12.2. ~ 25.2.28.
무인발매기 및 현장발권 전산 연계사업(시외버스)	150	150	운송업계 협의, 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12월 계약 체결 *입찰공고: ’24.10.11.	24.12.26. ~ 25.3.21.
무인발매기 및 현장발권 전산 연계사업(시외·고속버스)	300	300	운송업계 협의, 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25.1월 계약 체결 *입찰공고: ’24.10.25.	25.1.3. ~ 25.4.2.
교통복지카드 발급절차 개선[53] 전산 개발	-	17	동해선 무임인식 전산 개발 예산 잔액 활용으로 12월 계약 체결	24.12.27. ~ 25.3.27.
합 계	**600**	**533**		

자료: 국가보훈부

□ 운송업체와의 협의[54]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있었던 절차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지만 입찰공고 자체가 늦어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상이유공자의 교통 이용 편의가 적시에 개선되지 못하였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연말에 발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3) 2023년부터 시행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가 후불교통카드로 발급되어 신용불량 상이유공자 이용이 불가한 점 등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

54) 국가보훈부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계약금 지급 방식에서 사후 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송사 간 정산금 분배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답변임.

7. 보철구 지급[55]: 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거나,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 장착 등 보철용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0억 2,600만원 중 59억 1,900만원(98.2%)이 집행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철구 지급	6,026	6,026	-	-	6,026	5,919	-	107	6,026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845	5,845	-	-	5,845	5,845	-	-	5,845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175	175	-	-	175	68	-	107	175
보철구담당자 교육	6	6	-	-	6	6	-	-	6

자료: 국가보훈부

55) 세부사업: 보철구 지급(2150-371)

2) 검토의견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편성·집행중임.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상대적으로 활동제약이 큰 상이(장해)등급 1~5급으로 대상 한정
내용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장비	·핸들봉, 세컨더리 컨트롤, 조작력 저감장치, 크레인, 이동(회전)시트, 리프트, 경사로 등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23년에 집행률이 24.8%에 그친데 이어 2024년에도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6,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8.9%에 불과하였음.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3	250	62	24.8
2024	175	68	38.9
2025(6월말)	175	15	8.6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집행실적 부진에 대해 2023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인지도 부족, 사업 수요의 비정기성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집행실적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편성기준과 상세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원을 실시한 대상자 수는 편성기준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부진의 원인이 낮은 사업 인지도보다는 단가예측 미흡에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에는 1인당 1,500만원씩 17명을 기준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1명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집행액이 6,200만원(1인당 평균 295만원)에 불과하였음.

○ 2024년에는 1인당 1,500만원씩 12명을 기준으로 1억 7,500만원을 편

성하였고 지원 대상자는 27명에 이르렀으나 집행액은 6,800만원(1인당 평균 250만원)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6월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편성 기준인 12명을 넘어선 15명이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98만원에 불과함.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기준 및 집행내역 >

연도	예산 편성기준	실제 집행내역
2023	17명×1,500만원	21명(1인당 평균 295만원)
2024	12명×1,500만원	27명(1인당 평균 250만원)
2025(6월말)	12명×1,500만원	15명(1인당 평균 98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1인당 지원 한도액인 1,5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해당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단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56]에 따라 인당 지원 한도 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단가를 책정하였다는 설명임.

---

56)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개조비용 지급)** ① (생 략)
② 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대상자 63명 중 61.9%인 39명은 핸드 컨트롤러, 14.3%인 9명은 좌측 엑셀 페달을 장착하였고, 그 평균 단가는 각각 121만원, 69만원에 불과하므로 편성 단가를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음.

< 보철용 차량 개조 주요 장비 >

구 분	내 용
핸드 컨트롤러	·지체장애 중 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의 엑셀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장치
휠체어 슬로프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저상화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
좌측 엑셀 페달	·지체장애 중 우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왼발로 엑셀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개조용품
오토박스	·접이식 수동/전동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설치된 박스에 수납하도록 하는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개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단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제대군인 의료지원[57]: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상이처에 대해 진료비 지원 및 보철구 지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23억 6,500만원이 전액 집행됨.

< 2024년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의료지원	2,365	2,365	-	-	2,365	2,365	-	-	2,365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위탁병원은 1998년부터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상이처 진료에 한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등급기준 미달 제대군인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상

57)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이처 보완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보철구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 세부사업은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편성·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2,365	2,365	910	3,275	3,275	138.5	100.0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의 경우 집행액은 46억 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96.6%에 이르는데, 이는 제대군인들의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지원 예산의 집행 대상 및 평균 단가가 당초 편성 기

준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임.

< 2023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상세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보훈병원 진료	1,115	7,368명×151,263원	1,199	7,307명×164,142원
위탁병원 진료	1,186	25,545명×46,445원	3,386	32,965명×102,715원
보철구 지급	64	-	64	-
합계	2,365		4,649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금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 2024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상세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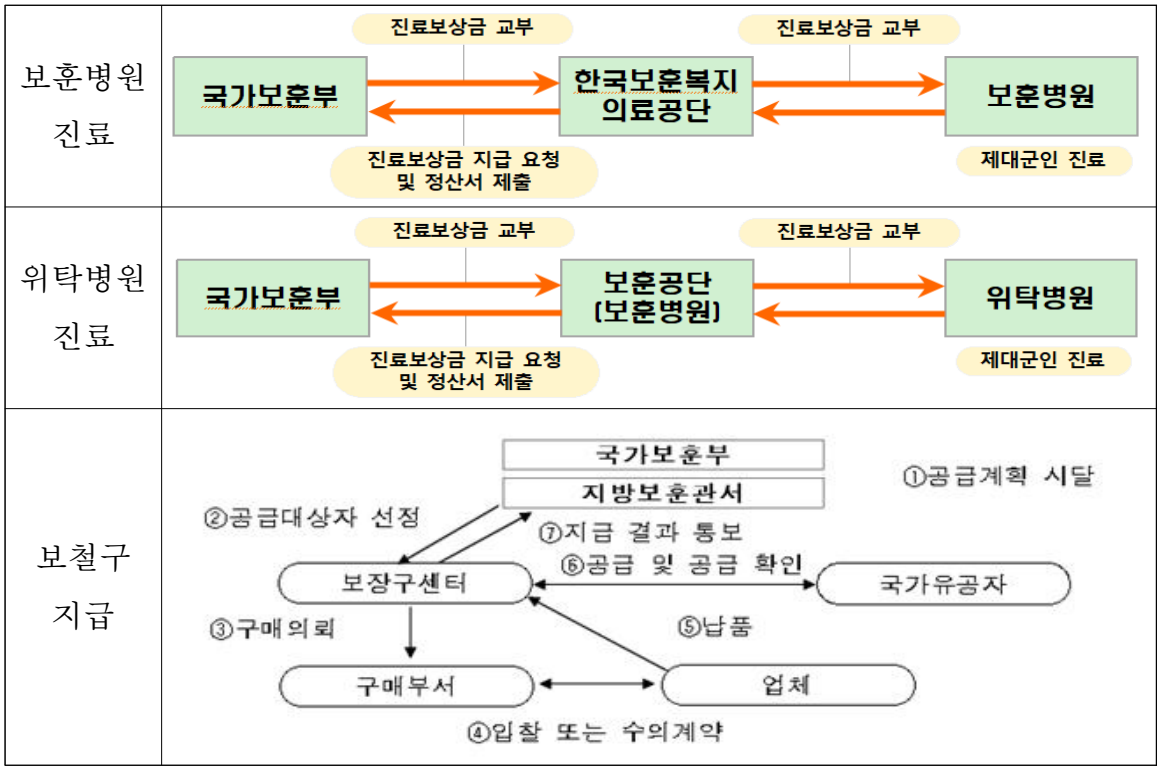
구분	예산		결산		실제 지원	
	금액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보훈병원 진료	1,001	6,703명 × 149,310원	1,001	5,441명 × 183,974원	1,215	7,001명 × 173,564원
위탁병원 진료	1,300	17,520명 × 74,208원	1,300	13,526명 × 96,111원	3,873	38,297명 × 101,124원
보철구 지급	64	-	64	-	64	-

구분	예산		결산		실제 지원	
	금액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내용
합계	2,365		2,365		5,152	

자료: 국가보훈부

○ 이 사업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를 하면 해당 진료비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급하고, 동 공단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진료보상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실제 진료비 발생액 51억 5,200만원 중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한 상황임.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수행체계 >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이 실제 발생 진료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에 대해 재원 부족으로 이·전용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액 내에서 집행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액 27억 8,700만원은 다음다음연도인 2026년 예산으로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58]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출소요의 정산 여부 및 시점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둘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영업손실 누적이 우려되는 상황[59]에서 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될 경우,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복지시설 운영 등 공단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셋째, 법정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소요 예산이 적정하

---

5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5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4년 기준 472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85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수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업손익	의료사업	△13,188	15,078	△85,343	△50,906	△62,242
	복지사업	△6,319	△6,676	△9,793	△4,230	△3,953
	교육사업	△2,299	△2,270	△2,311	△582	△412
	본사	△20,160	△19,848	△20,227	△20,666	△19,261
소 계		△41,966	△13,716	△117,674	△76,384	△85,868
영업외손익 등		13,649	2,726	75,701	25,506	38,696
당기순이익		**△28,317**	**△10,990**	**△41,973**	**△50,878**	**△47,172**

자료: 국가보훈부

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전·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전용 등의 예산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아 왔는데, 2024년에는 이와 같은 예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의료지원 책임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9.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60]: 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비 부담분 우선 집행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건물 노후화,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한 후 재건축(증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3,000만원 중 11억 2,700만원(99.7%)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1,130	1,130	-	-	1,130	1,127	-	3	4,49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9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한 후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10개 병상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비와 자기부담금

60) 세부사업: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비율은 70:30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개원 후 30년 경과로 건물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 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現 서관동 철거 후 증축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10개 병상 *면적 8,823㎡↑(2,180㎡→11,003㎡), 병상 22개↑(88개→110개)
사업기간	·2023년～2027년
총사업비	·479억 2,600만원(국비 70%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사업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3년 8월까지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설계용역을 진행 중임[61].

□ 이에 동 사업의 2024년 국비 예산 11억 3,000만원은 설계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연도에 자기부담금 예산은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지급을 위해 17억 600만원이 책정되었음.

< 2024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합 계	2,836	-	850	1,620	366	-

61) 답변 제출일자: 2025년 8월 4일

구 분	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국 비	1,130	-	-	1,130	-	-
자기부담금	1,706	-	850	490	366	-

자료: 국가보훈부

□ 해당 예산의 상세 집행내역에 따르면, 설계 중 적정한 공사규모 재검토 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등 사유에 기인하여 공단의 자기부담금인 보상비와 감리비 등은 2025년으로 이월되었고, 설계비에 대해서만 연도 중 집행이 이루어졌음.

□ 그런데, 2024년 설계비 국비 예산 11억 3,000만원과 설계비 자기부담금 예산 4억 9,000만원 중 국비 부분은 모두 집행된 반면, 자기부담금 부분은 5,840만원(11.9%)만 집행(잔액 반납분 포함)되고 4억 3,1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설계비 1차 집행에 있어서 계획설계 잔금 2억 5,819만원을 모두 국비로 집행하였고, 설계비 2차 집행 시 중간·실시설계 선금 8억 8,020만원 중 8억 6,880만원을 국비(예산 잔여 전액)로 충당하고 자기부담금 예산은 1,140만원(선금 총액의 1.3%)만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은 이월하였음.

< 2024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설계비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국 비	자부담
예 산	1,130,000	490,000

구 분			국 비	자부담	
집 행			1,127,000	집행	이월
				57,096	431,604
잔액(반납)			3,000	1,300	-
설계비	1차수 (계획설계)	선금	(68,724, '23년 집행)	(6,276, '23년 집행)	
		잔금	258,194 ('24.5월)	-	
	2차수 (중간설계, 실시설계)	**선금**	**868,806 ('24.8월)**	**11,396 ('24.8월)**	**-**
		잔금	**-**	**-**	**425,674**
	기타	교통영향 평가 등	-	45,700 (24.9월)	-
		자문수당 등	-	-	5,93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국비 보조 예산을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자기부담금 예산은 미집행 후 이월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의무에 대한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이하 생략)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등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이하 생략)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 일정 및 계획에 따라 국비 설계비는 선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설계용역 중단 사정으로 공단 자부담 설계비·보상비·감리비는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계획시 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

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10.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62]: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는 독립기념관 전시·연구, 교육·문화사업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1억 7,6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28,176	28,176	-	-	28,176	28,176 [25,739]	-	-	27,479
인건비	9,481	9,481	-	-	9,481	9,481 [9,481]	-	-	9,437
경상비	1,900	1,900	-	-	1,900	1,900 [1,896]	-	-	2,064
기본사업비	12,591	12,591	-	-	12,591	12,591 [12,582]	-	-	11,926
활성화사업비	3,934	3,934	-	-	3,934	3,934 [1,599]	-	-	3,781
예비비	270	270			270	270 [181]	-	-	271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구성된 사업으로, 독립

62) 세부사업: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기념관이 교부받은 금액은 281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5,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1억 2,900만원이고, 이 중 266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6%)되고, 2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부처			사업시행주체(독립기념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0	01	21,355	21,355	21,355	21,355	69	21,424	21,318	21,355	21,249	4	102	99.5
320	07	6,821	6,821	6,821	6,821	884	7,705	5,374	6,821	4,490	2,331	-	65.8
계		28,176	28,176	28,176	28,176	953	29,129	26,692	28,176	25,739	2,335	102	91.4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독립기념관은 전시환경 변화·관람객 니즈 등을 반영하여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주기적으로 전시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며,[63] 교체는 관람객을 고려하여 각 전시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제3차 전시교체사업은 7개 상설전시관의 '전시주제 및 기능 재조정 마스터플랜(2015)'에 따라 연차별 1개관씩 전시교체를 추진 중이며,

63) (1차) 1994년~2004년 / (2차) 2005년~2010년 / (3차) 2015년~현재

제7관은 2022년부터 교체를 진행 중에 있음.

< 제3차 전시교체사업 개요 >

<교체 전>
(체계: 주제관·체험관)

구분	대주제	조성
1관 (주제관)	민족전통	2010.5.
2관 (주제관)	일제침략	2008.8.
3관 (주제관)	의병, 애국계몽운동	2008.8.
4관 (주제관)	3.1운동	2007.8.
5관 (주제관)	독립전쟁	2009.10
6관 (주제관)	사회문화, 임시정부	2009.4.
7관 (체험, 기획관)	체험전시 특별기획전	2010.10

<교체 후>
(체계: 종합관·감성관·복합관·주제관)

구분	대주제	면적 (㎡)	예산 (백만원)	추진년도
1관 (종합관)	한국역사와 독립운동	3,485	-	2028-29(예정) 18년경과
2관 (주제관)	일제 침략	2,619	5,165	2019 '20 재개관
3관 (주제관)	3.1운동과 대중투쟁	1,478	2,956	2018-19 '19 재개관
4관 (감성관)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	1,494	2,984	2016-17 '17 재개관
5관 (주제관)	독립전쟁	2,539	-	2026-27(예정) 17년경과
6관 (주제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2,539	5,289	2021-22 '22 재개관
7관 (복합관)	주제전시(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체험존, 기획전시,	3,561	7,819	2022-26 교체 진행중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제3차 전시교체사업이 진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한 8년 중 1개 연도를 제외한 7개 연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8억 8,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2억 3,800만원 중 9억 3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7.9%)하고 나머지 2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연도별 제3차 전시교체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	1,400	-	-	-	1,400	571	829	-
2017	1,584	829	-	-	2,413	2,413	-	-
2018	2,956	-	-	-	2,956	1,716	1,240	-
2019	5,165	1,240	-	-	6,405	6,246	159	-
2020	-	159	-	-	159	159	-	-
2021	2,645	-	-	-	2,645	1,255	1,390	-
2022	2,874	1,390	-	-	4,264	4,038	226	-
2023	2,350	226	-	-	2,576	1,688	888	-
2024	2,350	888	-	-	3,238	903	2,335	-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전시교체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제안공모, 설계, 공사 등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시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시교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2022년부터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정량적 사항인 관람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과의 질적 평가가 누락되어 온전한 평가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2021년까지는 관람인원과 고객만족도 2가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 온라인 이용객도 포함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으로 지표를 변경하면서 고객만족도는 지표에서 삭제함.

< 2024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람인원 (천명)	목표	1,579	-	-	-	-	성과지표 변경 (‘22년)	독립기념관 관람인원 합산	독립기념관 통계 * 무인체크기 활용
	실적	1,139	-	-	-	-			
	달성도	72.1	-	-	-	-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0.2	-	-	-	-	성과지표 변경 (‘22년)	PCSI(평정부여 방식) 지수 (고객설문조사)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실적	91.7	-	-	-	-			
	달성도	101.7	-	-	-	-			
독립기념관 콘텐츠	목표	1,080	1,849	2,069	2,147	2,262	관람객 방문자수 및 오프라인	연간기념관 관람인원,	독립기념관 통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혜인원 (천명)	실적	1,443	1,727	2,096	2,178	-	콘텐츠 수혜인원은 전년도 대비 5% 증가, 온라인 콘텐츠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를 목표로 도전적 설정	온·오프라인 전시 ·교육 수혜인원합산	* 무인체크기 등 활용
	달성도	133.6	93.4	101.3	101.4	-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이 존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교체사업에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 증대' 및 '전시교체사업 공정진행률'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보훈교육연구원[64]: 보훈교육연구원과 국가보훈부의 일부 사업 유사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은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영역 주제별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1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4년도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문화조성	15,407	15,407	-	-	15,407	14,693	-	714	14,104
보훈교육연구원	5,110	5,110	-	-	5,110	5,110	-	-	5,11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보훈교육연구원’ 내역사업은 ‘보훈정신계승 연수교육’ 내내역사업과 ‘연수교육 운영・인건비(’23년부터 반영)’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관(현원 31명)으로, 2001년 보훈연수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64) 세부사업: 보훈문화조성(3145-401)

○ 당초 보훈교육연구원 설립 시에는 국가보훈처 소속이었으나,[65] 1999년 정부 슬림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66] 이를 근거로 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이 존재함.

○ 주요 기능은 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교육, ② 초·중·고·대학생

---

65) 연혁

○ ’63. 1월 **종합원호원**으로 개원(직업보도, 양로·양육보호) ○ ’93. 2월 **보훈연수원**으로 명칭변경 ○ ’99. 1월 **보훈연수원** 업무를 보훈처→보훈공단으로 위탁 ⇨ 정부슬림화 정책의 일환 ○ ’01. 2월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06. 2월 **보훈교육연구원** 신축 이전
보훈교육연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관이며, 연수교육 운영하는 직원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함.

6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대상 독립, 호국, 민주교육, ③ 교사,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직가치 함양 교육, ④ 보훈정책 및 공단경영과제 등 국가보훈분야 연구·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임.

< 인원 현황 (25.8월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연수부		운영부			연구부		계
	별정직	행정직	행정직	시설직	경비·청소	연구직	행정직	
정 원	1	9	9	5	8	5	-	37
현 원	1	8	6	4	7	4	1	3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교육연구원 결산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수입	세출예산1)	502	715	3,721	5,096	5,096
	연구용역2)	200	141	18	43	350
	기타(공무원교육 등)	375	209	661	752	444
	소계(A)	**1,077**	**1,065**	**4,400**	**5,891**	**5,890**
지출	인건비	2,030	1,868	2,018	2,045	2,285
	경비 등	1,317	1,536	2,966	4,260	4,111
	소계(B)	**3,347**	**3,404**	**4,984**	**6,305**	**6,396**
보훈공단 부담금(B-A)		**2,270**	**2,339**	**584**	**414**	**506**

1) '23년부터 보훈정신계승발전 위탁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반영
2) 연구용역은 대부분 보훈공단 내부적인 위탁 과제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교육연구원 최근 5년간 사업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보훈정신계승연수	502	715	3,721	5,096	5,096
공무원 교육	55	85	238	289	130
기타 교육	11	25	254	260	14
정책연구	200	141	18	43	350
소계	**768**	**966**	**4,231**	**5,688**	**5,590**

자료: 국가보훈부

□ 본 사업의 2024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부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사업 중 유사성이 높은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보훈부		보훈교육연구원	
	사업명	집행액	사업명	집행액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청소년 학습책자 개발·보급	200	청소년 대상 보훈잡지 발간	200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제작	1,477	보훈학습 콘텐츠 개발	442
	디지털 보훈학습 콘텐츠 개발	216		
교육 플랫폼 운영	나라사랑 배움터 웹사이트 운영	30	온라인 보훈교육 플랫폼 개발·운영	32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의 경우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보훈 교과서 개발·보급을, 보훈교육연구원은 연구원 내에 조성된 '디지털 실감형 보훈학습 콘텐츠관'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 플랫폼의 경우 두 기관간 플랫폼이 다르다는 입장이나, 두 기관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이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직무 중 수행 주체가 분명한 연수교육과 달리, 기타 교육사업은 기관 간 역할분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연수교육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5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산하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명확함. 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정신 함양 등의 교육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에서 국가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67]

○ 보훈교육연구원의 일반 국민 대상 보훈교육사업은 국가보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님에도, 2023년부터 보훈교육연구원이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68]함에 따라 직무 수행 범위가 중첩

---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68) 보훈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2021년 5억 200만원에서 2023년 37억 2,100만원, 2024년 50억 9,600만원으로 증가함.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보훈교육연구원이 공단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근거가 미약하고,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두 기관 간 업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됨.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69]: 사업관리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장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9,400만원 중 7억 6,000만원(54.5%)을 집행(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실집행액은 없음)하고, 6억 3,4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문화조성	15,407	15,407	-	-	15,407	14,693	-	714	14,104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1,394	1,394	-	-	1,394	760 [-]	-	634	2,29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4년에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69) 세부사업: 보훈문화조성(3145-401)

○ 동 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2024년 창원시는 2억 2,800만원, 포항시는 5억 3,200만원, 평택시는 6억 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창원시와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창원 보훈문화관은 2025년 5월에야 용지 보상이 완료되었음.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 공모 후 설계 용역 착수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할 때, 창원의 경우 2025년에도 예산액 5억 8,700만원의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창원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3.	2024. 7.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편성 필요에 따른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2.	
건축 설계 공모	2024. 9.	-	
용지 보상 완료	2025. 2.	2025. 5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포항 보훈문화관은 2024년 12월 설계공모를 한 후, 2025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음. 포항 역시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2025년내에 공사 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포항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2.	2024. 2.	지방비 추경 편성 등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6.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0.	
건축 설계 공모	2024. 9.	2024. 12	
건축 설계 착수		2025. 5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부족,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교부한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음. 이와 같이 사업 1년차부터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국가보훈부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은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도 전년도 실집행실적,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70] 교부된 금액전액이 이월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70)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현충시설건립[71]: 사업관리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현충시설 건립’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800만원을 합한 83억 2,100만원으로, 이 중 38억 600만원(45.7%)이 집행되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44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집행률 1.1%)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5,0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현충시설건립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 건립	7,083	7,083	1,238	-	8,321	3,806	100	4,415	4,756
독립의 전당 건립	4,146	4,146	49	-	4,195	45 [45]	100	4,050	4,032

자료: 국가보훈부

71) 세부사업: 현충시설건립(3146-405)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었음.

<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사업기간: 2022~2025년(4년)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52㎡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 교육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총사업비 : 11,900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421	4,146	45	4,032	-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도 예산안 41억 4,600만원은 공사비(1년차) 34억 400만원, 감리비 6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400만원으로 구성됨.

2) 검토의견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실시설계비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1.07%)되었음.

○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1억 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과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중 설계용역 대금 3,500만원과 설계의 경제성(VE) 용역 대금 1,000만원은 2024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은 설계용역에 추가된 대금으로 완료되지 않은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2025년으로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억 8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과 2024년 본예산 배정액 1억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 중 전문가 자문 수당 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1억 400만원 중 독립의 전당 건립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계약 대금 2,2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8,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20	20	-	20	-
- 실시설계비(420-02)	-	45	58	103	45	58	-
- 공사비(420-03)	3,404	-	△78	3,326	-	-	3,326
- 감리비(420-04)	638	-	-	638	-	-	638
- 시설부대비(420-05)	104	4	-	108	-	22	85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2~2024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1.07

자료: 국가보훈부

□ 당초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에 결쳐 편성하였음.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11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2024년 내에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가 2025년 3월에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음. 또한, 현재까지도 실

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72]에 의하면 입찰공고만 최소 5~40일이 소요됨. 입찰공고 기간 외에 조달청에 입찰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자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분	현황 및 향후계획	순연사유
공공건축 사전검토	2022.6.	-
공공건축 심의	2022.8.	-
설계용역 계약	2022.12.	-
계획설계 완료	2023.4.	-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2023.3. ~ 2023.6.	-
도시공원위원회 협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 2024.8.	공원조성계획 심의의견(공원과의 조화, 경관 보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 대비 일정 지연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2024.8. ~ 2024.9.	설계 변경에 따라 문화유산 현상변경 재허가 필요
실시설계 완료	2025.9. 목표	선행절차 지연 및 사업부지 교환 관련 협의 진행*에 따라 순연 * 2024.9. 서울시 협의 2024.12.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서울시) 2025.2. 서울시 행정자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울시, 2025.3.) 실시계획 인가 신청(2025.3.)
공사 계약 및 착공	2025.10. 목표	
준공	2026.12. 목표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사업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14. 보훈기념행사[73]: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내역변경 지양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기념행사’ 사업은 정부기념행사, 국경일행사 지원,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지원 및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41억 5,000만원으로, 이 중 41억 3,900만원(99.7%)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행사’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11개 정부기념식 추진을 통해 국가기념일에 담긴 정신을 국민에 알리고 계승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1억 6,300만원 중 31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보훈기념행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196	4,150	4,139	-	11	3,954
정부기념일행사	2,967	2,967	-	196	3,163	3,158	-	5	2,967

자료: 국가보훈부

73) 세부사업: 보훈기념행사(3147-411)

2) 검토의견

(1)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 내역변경 지양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 2·28민주운동기념행사 등 11개의 정부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초 본예산 29억 6,700만원 대비 6.6% 수준인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정부기념행사 사업으로의 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감액사업		금액	증액사업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2.23.)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3147-413)	220-02	2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3147-411)	210-01 (일반수용비)
전용 ('24.12.23.)	보훈기념행사 (3147-411)	220-01	15		
전용 ('24.12.26.)	보훈기념행사 (3147-411)	220-01	3		
전용 ('24.12.26.)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3147-404)	210-14	100		
내역변경 ('24.12.26.)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3147-413)	210-01	6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예산을 전용·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인건비·물가 등 기본적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행사·문화 콘텐츠가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정부기념행사의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조정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취소된 2020년도를 제외하고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약 2억원 규모를 초과하는 과다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정부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왔음.

<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사업 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4,040	3,760	-	△150	-	3,610	3,479	-	131
2021	2,119	2,119	-	268	-	2,387	2,251	-	136
2022	2,119	2,119	-	252	-	2,371	2,371	-	-
2023	2,476	2,476	-	248	-	2,724	2,712	-	12
2024	2,967	2,967	-	196	-	3,163	3,158	5	

자료: 국가보훈부

□ 본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전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정부기념행사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재정운영으로 보임.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및 ‘기념행사별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재원을 설정하고,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며, 대통령 참석 등 특이 소요예산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행사 추가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해 보훈기념행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현충시설 공사비 낙찰차액 2억 1,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그런데 현충시설공사(국가보훈광장조성사업) 예산을 성격이 전혀 다른 보훈기념행사에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한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향후 보훈기념행사 예산편성 시 정부기념행사별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 반영과 효율적인 보훈기념행사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23년 정부기념행사 예산 증액 편성하여 이·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 내 집행하여 내실있는 기념식 거행 * 정부기념식 : ‘22년 2,119 → ‘23년 2,424백만원으로 증액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7) 보여주기식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의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취소된 2020년도를 제외하고 연례적으로 이·전	○ 코로나-19 이후 참석 규모가 다시 대규모로 확대되고, 물가 상승 등 비용 인상 요인에 비해 정부기념행사 예산은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상황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정부기념 행사 사업의 연례적 전용·조정 지양	용 등을 통해 증액하여 추진하였음 - 특히, 국가보훈사업 자체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참여한 4·19혁명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추념식 등에서 보여주기식 외부 행사에 치중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기념행사별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재원을 설정하고,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며, 대통령 참석 등 특이 소요예산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	으로 본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3년 정부기념식 예산 증액 편성 * 정부기념식 : '22년 2,119 → '23년 2,424백만원으로 증액 - 그 결과 '23년 정부기념식을 이·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 내 집행하여 내실 있는 기념식 거행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국회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Ⅱ-1" 426페이지의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항목에 국가보훈부는 '해당없음'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함.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사전에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제출 자료에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기념식별 구체적인 계획 또는 매뉴얼 수립 필요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은 매년 행사비 부족을 이유로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일반수용비’ 비목만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면 2024년에는 본예산액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일반수용비의 이·전용 등(내역변경 포함)이 발생함.

<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이·전용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액(A)	이·전용 등 규모(B)	예산현액 (=A+B)	이·전용 등 사유
2021	392	161	553	행사비 부족
2022	392	191	583	행사비 부족
2023	380	170	550	행사비 부족
2024	380	488	868	행사비 부족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매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 대응, 인건비, 물가 등의 인상 및 행사 컨텐츠의 전문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를 매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상당히 빈약함.

○ 첫째, 국가보훈부의 설명대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3억 9,200만원(2021년, 2022년), 3억 8,000만원(2023년, 2024년) 수준으로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사업비가 2022년 21억 1,900만원에서 2024년 29억 6,700만원으로 상

당부분 증액되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짐.

- 일반수용비의 증액이 필요했다면, 증액분 8억 4,800만원 중 다른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의 증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보훈부는 2022년 이·전용 등 18회, 2023년 이·전용 등 21회, 2024년 이·전용 등 15회 등 연례적으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에서 잦은 이·전용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을 했음에도 다시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세목조정을 하는 등 비계획적인 세목조정을 반복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1월 31일, 3월 18일, 4월 1일에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각각 1억 6,000만원, 3억원,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으나, 5월 3일, 6월 13일, 8월 19일에 다시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되돌리는 세목조정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

< 2024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이전용 등 감액(A)			이전용 등 증액(B)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1.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6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60,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
3.18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0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300,000	
4.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5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5,000	
5.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27,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000	
5.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5.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6.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0	
6.1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63,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3,000	
8.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8.1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5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50,000	
8.2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16,10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16,108	
12.2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6,971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6,971	
12.23	전용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국외여부 (220-02)	△27,374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374	
12.26	전용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 지원	일반용역비 (210-14)	△99,7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99,700	
12.26.	내역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69,23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9,239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본예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수용비 금액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한 것은 그 규모가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과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동일한 행사 내에서도 연도별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념식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뉴얼이 부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1~2024년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행사명	2021	2022	2023	2024
2·28민주운동 기념식	51,660	28,372	23,655	39,923
3·8민주의거 기념식	15.880	32,025	14,450	30,726
3·15의거 기념식	14,956	56,134	40,164	48,666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87,625	68,022	45,690	62,378
4·19혁명 기념식	31,286	29,434	41,250	30,230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	-	-	171,472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46,148	125,925	123,700	102,210
현충일 추념식	25,816	89,995	80,508	104,150
6·10만세운동 기념식	23,479	27,200	43,784	43,522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29,750	4,032	5,398	31,300
순국선열의날 기념식	65,747	3,847	15,258	43,123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사전에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한 비목간 세목조정 및 이·전용 등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5. 국립신암선열공원[74]: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 필요절차를 예산 편성 전 면밀히 검토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는 국립묘지 내·외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국립묘지의 기능 수행과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5,200만원으로 이 중 1억 2,200만원(48.4%)이 집행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신암선열공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신암선열공원	704	704	-	△52	652	487	-	165	708
시설보수공사	307	307	-	△55	252	122	-	130	307

자료: 국가보훈부

74) 세부사업: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의 내내역사업인 ‘경비실 신축공사’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경비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예산액은 1억 8,500만원,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 신규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경비실 신축공사’ 사업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경비실신축공사	185	△55	130	-	130
기본조사설계비	24	-	24	-	24
실시설계비	7	-	7	-	7
공사비	149	△55	94	-	94
감리비	4	-	4	-	4
시설부대비	1	-	1	-	1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경비실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공원조성계획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임.

□ 국립묘지의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시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

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를 열람공고하는 절차 등을 거쳐 확정 후 고시하게 되면 해당 인·허가 등이 의제되게 됨.[75]

---

7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3. (생 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 7. (생 략)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국립묘지 시설사업 인·허가 절차 >

구 분	추진절차	비 고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 작성 및 승인권자 : 국가보훈부장관 - 권한위임 :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
	국립묘지법 제11조의2, 령 제13조의2	
	관련부서(기관) 협의	○ 30일 내 의견 제출
	국립묘지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주민열람공고	○ 해당 지역 일간신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
	국립묘지법 제11조의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형도면 고시 ○ 의제 협의사항 고시
	국립묘지법 제11조의3	
의제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	○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립묘지법 제11조의4	

자료: 국가보훈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 11. (생 략)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 22. (생 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국가보훈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동 공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생략할 수 잇는 경미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등 필요한 인·허가 등을 의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중 국립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던 2018년에 실시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계획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음.[7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으로,[77] 동 국립묘지가 대구시로부터 이관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 계획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동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78]

---

76) 국가보훈부는 25-29 중기사업계획 요구 등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77) 작성 권한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78)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동 사업은 2024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된 단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전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인·허가 및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예산 편성 이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임.[79)]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고려 없이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재정 운용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임.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신규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선행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79) 국가보훈부는 2023년에도 경비실 신축공사가 시급하다고 건의(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p.671)하였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수요는 장기간 존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임.

16. 국립묘지조성[80]: 안장 여력의 적기 확보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묘지조성’은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27억 6,400만원으로 이 중 87억 8,200만원(68.8%)이 집행되고, 24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묘지조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묘지조성	12,452	12,452	312	-	12,764	8,782	1,579	2,403	30,049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3,797	3,797	256	-	4,053	3,898	141	14	30,037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6,457	6,457	56	-	6,513	4,884	1,428	201	12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2,198	2,198	-	-	2,198	-	10	2,188	-

자료: 국가보훈부

80) 세부사업: 국립묘지조성(3250-364)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증가하는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을 20만기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3곳의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5곳의 호국원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이에 따라 '국립묘지조성' 사업에는 대상자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천, 장흥, 횡성 지역에 국립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 국립연천현충원의 경우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 국립장흥호국원과 국립횡성호국원의 경우 2024년도에 설계 및 보상업무를 진행하여 2025년도에 설계 및 보상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국립묘지조성' 사업 계획 >

(단위: 기)

구분		사업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상 추진 일정
		사업기간	조성규모	
조성	연천현충원	2019~2026	50,000	·(24년) 조성공사 계약·착공 -(3분기) 공사 착공 ·(26년) 조성공사 완료
	횡성호국원	2023~2028	20,000	·(24년) 설계 및 보상업무 진행 ·(25년) 설계 및 보상업무 완료
	장흥호국원	2024~2029	13,000	·(24년) 설계 및 보상업무 진행 ·(25년) 설계 및 보상업무 완료

자료: 「2024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립묘지조성’ 의 각 내역사업은 2024년도에 계획하였던 일정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대규모 이월 및 불용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준공) 연장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되었던 공사계약 및 착공이 계약 체결 지연과 동절기 영향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예산현액 37억 2,900만원이 전액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24년 12월 18일 체결된 동 공사계약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임.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 해소를 위하여 추가 절차(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설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설계비 약 14억원을 이월하였음.

○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설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전타당성 평가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 등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어, 편성된 설계비 예산은 전액 불용하게 되었음.

< 각 국립묘지 조성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연천현충원 조성	공사비(420-03)	3,729	3,729	-	-
횡성호국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420-01)	1,899	381	1,373	145
	실시설계비(420-02)	1,700	1,599	45	56
장흥호국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88	-	-	1,288
	실시설계비(420-02)	900	-	-	9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조성'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비고
	구분	계획	이행	
연천 현충원 조성	공사 계약	'24. 8.	'24. 12.	계약 유찰에 따른 지연
	공사 착공		'25. 4.	동절기 공사 중지
	준공	'26.	('27. 9. 연기)	
횡성 호국원 조성	기본설계	'23. 4. ~ '24. 2.	'23. 4. ~ '24. 12.	
	실시설계	'24. 2. ~ '25. 10.	(2025년 내 추진 예정)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25.8. 종료 예정)
	준공	'28. 12.		
장흥 호국원 조성	기본설계	'23. 11. ~ '24. 9.	- (사업타당성 평가 이행) ('23. 7. ~ '24. 7.)	총사업비 조정 협의 ('25.8. 종료 예정)
	실시설계	'24. 10. ~ '25. 12.		
	준공	'29. 12.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지연은 정책적으로 안장 수요에 대응하는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 확보에 차질을 유발함으로써 안장대상자가 적기에 안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의 미집행과 불용된 예산의 재편성 등을 반복하게 하여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계획된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후속 절차가 순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 전반에 걸쳐 국립묘지가 계획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6월 기준, 생존 중인 국립묘지[81] 안장대상자 수는 약 33만 3,700여명으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13만여기)은 이에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정된 시기에 국립묘지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되어야 할 것임.

< 생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현황 >

(2025. 6. 기준, 단위: 명)

구분	생존 안장대상자*	연령별 현황		
		80세 미만	80~89세	90세 이상
국립현충원	176,598	139,881	29,076	7,641
국립호국원	157,170	97,816	36,633	22,721

* 장기재직 경찰·소방관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대상자이나, 수치에는 미포함되어 있어 실제 생존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이보다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

자료: 국가보훈부

81) 이하에서는 국립묘지 중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에 한정하여 논의함.

< 국립묘지별 안장 여력 >

(2025. 6. 기준, 단위: 기)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안장 여력
국립서울현충원	108,230	89,840	18,390
국립대전현충원	149,340	106,962	42,378
국립현충원 합계	257,570	196,802	**60,768**
국립영천호국원	78,825	55,190	23,635
국립임실호국원	56,912	36,260	20,652
국립이천호국원	100,002	50,002	50,000
국립산청호국원	20,639	11,354	9,285
국립괴산호국원	47,634	23,727	23,907
국립호국원* 합계	304,012	176,533	**127,479**

* 지역별 접근성 고려,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여력(6,736기)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국립묘지가 만장될 시에는 해당 국립묘지의 안·이장이 중지되고, 신규 안장 여력 확보로 안·이장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안이장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안장 여력이 적기에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만장된 국립묘지의 안·이장 대기 현황 >

(2025. 7. 18. 기준, 단위: 명, 기)

구분	만장일	준공일	안이장 시작일	구분	신청자 (A)	승인자 (B)	안이장 완료수 (D)	대기 인원 (B-D)
영천 호국원	24.8.8	25.4.13	25.4.14(이장) 25.5.1(안장)	안장	1,418	1,320	1,219	**101**
				이장	892	711	194	**517**
이천 호국원	17.4.5	25.1.22	25.7.7(안장) 25.7.14(이장)	안장	97	79	59	**20**
				이장	11,953	8,577	130	**8,447**
산청 호국원	24.5.4	-	25.3.24	안장	808	757	710	**47**
				이장	719	649	311	**338**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국립묘지 조성공사와 같이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절차 지연은, 계획된 후속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을 발생케 하여 당해연도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은 다음연도 이후에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됨.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절차 및 공사 진행 등 각 공종에 있어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국립제주호국원[82]: 안·이장 예측치를 정확히 하여 과다한 재료비 편성을 지양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제주호국원'은 국립제주호국원의 운영·관리 및 안장 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31억 700만원으로 이 중 30억 3,000만원(97.5%)이 집행되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제주호국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제주호국원	3,810	3,810	-	△703	3,107	3,030	-	77	3,523
묘역관리	1,347	1,347	-	△466	881	861	-	20	1,024

자료: 국가보훈부

□ 동 호국원은 제주권 안장대상자에게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총 안장기수 10,000기 규모로 제주시에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 개원한 국립묘지임.

< 국립제주호국원 개요 >

○ 위치(면적) : 제주시 노형동 3830(부지면적 273,294.5㎡, 연면적 7476.11㎡)
○ 규모 : 안장시설 10,000기 및 부대시설
○ 인원 : 총 47명(공무원 7명, 공무직 40명)
○ 조성사업 기간 : 2012년~2021년(10년) / 2021년 12월 개원
○ 조성사업 예산 : 517억 4,100만원 (민간대행수수료 14억 2,200만원 별도)

자료: 국가보훈부

82) 세부사업: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2) 검토의견

□ 국립제주호국원은 2021년 개원 첫 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2022년·2023년 약 90%의 집행률을 보여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도에는 다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 '국립제주호국원' 연도별 집행내역('21~'24)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년	1,855	-	△188	1,442	225	77.7
2022년	3,756	-	△120	3,395	241	90.4
2023년	3,332	-	△211	3,042	79	91.3
2024년	3,810	-	△703	3,030	77	79.5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제주호국원'의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내역사업인 '묘역관리'의 집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이장 신청 및 실제 안·이장 기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묘역관리' 사업은 안장 업무를 위한 비석, 유골함, 봉안명패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국립묘지의 안·이장이 감소할 경우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성격을 갖음.

< '묘역관리' 연도별 집행내역('21~'24)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년	472	△158	204	109	43.2
2022년	1,272	84	1,356	-	106.6
2023년	1,026	41	1,067	-	104
2024년	1,347	△466	861	20	63.9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제주호국원 연도별 안·이장 현황('21~'24)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합계	759	9	1,579	1,480	776	822	682	662
안장	16	6	185	168	183	176	169	161
이장	730	3	1,363	1,312	581	646	500	501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제주호국원은 매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안·이장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묘역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측치는 실제 안·이장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안·이장 예측치 및 실제 안·이장 현황 >

(단위: 기)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측치	1,000	2,000	955	1,198
안·이장	9	1,480	822	662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2024년 '묘역관리' 예산 편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까지의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2024년 이장 신청량이 하락함에 따라 집행 부진이 발생

하였고, 2025년 예산부터는 3년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를 반영하여 ‘묘역관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3년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는 안·이장 신청량이 급증했던 2022년 건수를 반영하게 되어 과다 측정될 요인이 있고, 현재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이장 신청 현황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 여전히 과다 편성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이장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3년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안·이장 추세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83]: 제대군인 대학교 수업료 지원비율상향 또는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6억 7,500만원으로 이 중 182억 7,300만원(97.8%)이 집행되고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억 2,100만원 중 5,000만원을 이·전용 감한 예산현액 7,100만원 중 6,300만원(88.7%)이 집행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사회 복귀지원	18,743	18,743	350	△418	18,675	18,273 [18,273]	88	315	17,310
제대군인 수업료지원	121	121	-	△50	71	63 [63]	-	8	121

자료: 국가보훈부

83) 세부사업: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4160-390)

2) 검토의견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역량강화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대학입학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일정 생활 수준 이하 가구의 고교취학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의 경우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84]인 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취학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큰 편차가 없으나,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자녀 수업료 지원은 대상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집행액은 2020년 8,500만원(인당 평균 147만원)에서 2024년 1,500만원(인당 평균 375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임.

84)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 2024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수업료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2020	85	119	1.40	58	85	1.47	27	34	1.26
2021	49	96	1.96	14	53	3.79	35	43	1.23
2022	42	81	1.93	11	45	4.09	31	36	1.16
2023	28	59	2.11	7	32	4.57	21	27	1.29
2024	40	63	1.58	4	15	3.75	36	48	1.33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모두 지원금액 한도 없음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바, 고등학교 수업료의 집행액은 앞으로도 계속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 중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하거나 지원대상을 현행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5]

○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28세로,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바,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85)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1999년 사업 시작 시기에는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었고, 2006년부터 현행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된 바 있음.

19. 제대군인전직지원금[86]: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19억 5,100만원으로 이 중 119억 2,300만원(99.8%)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005	7,005		4,946	11,951	11,923	-	29	7,382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의 편성 근거를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55만원,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 1인당 월 지급액은 7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87]

---

86)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87)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 2024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세부내역 >

구 분	2024년 예산
합 계	70억 5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1억 4,8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 18억 5,6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및 2023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2022년~2024년 전직지원금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407	3,529		1,125
2019	3,314	3,313	-	
2020	3,314	3,314	-	
2021	3,314	3,314	-	-
2022	6,172	7,087	915	915
2023	6,172	9,135	2,963	3,000
2024	7,005	11,923	4,918	4,946

자료: 국가보훈부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중기 및 장기 전역자(신청대상)		신청자	신청률	예산액
2019	중기	3,563	1,764	49.5	3,314
	장기	1,039	360	34.6	
2020	중기	3,121	1,631	52.3	3,314
	장기	1,147	403	35.1	
2021	중기	2,821	1,569	55.6	3,314
	장기	834	399	47.8	
2022	중기	2,999	1,916	63.9	6,172
	장기	1,103	559	50.7	
2023	중기	4,061	2,536	62.4	6,172
	장기	1,266	712	56.2	
2024	중기	3,969	2,789	70.3	7,005
	장기	1,677	937	55.9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2년 신청자 수보다도 적은 숫자로 계상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전용 등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기복무자 : 6개월 →7개

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힘. 또한 2024년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전직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국가보훈부는 지원액 상향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전직지원금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 지역별 · 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88]: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명비를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 3억 4,400억원(52.7%)이 집행되고, 2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참전기념행사	2,677	2,677	-	△11	2,666	2,300	298	68	2,177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653	653	-	-	653	344	298	11	353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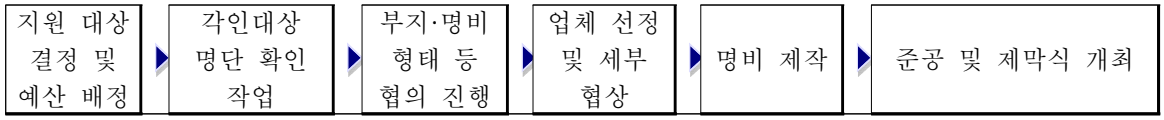
2) 검토의견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지자체, 학

88) 세부사업: 참전기념행사(4161-420)

교 등과 연계하여 명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89]

< 호국영웅 명비 건립 사업 지원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초·중·고교와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2024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역별 명비 건립에 2억 6,000만원, 초중고 명비 건립에 9,300만원, 대학교 명비 건립에 3억원 등 총 6억 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그러나, 동 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 명비는 당초 계획대로 2개 지역에 2억 3,400만원을, 초중고 명비는 2개교에 계획보다 많은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학교 명비(3개교 대상 각 1억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음.

89)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2024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		집행	
	편성기준	예산액	집행기준	집행액
지역별 명비 건립	130백만원×2개 지역	260	117백만원 ×2개 지역	234
초중고 명비 건립	46.5백만원×2개교	93	55백만원 ×2개교	110
대학교 명비 건립	100백만원×3개교	300	-	-
합 계		**653**		**344**

자료: 국가보훈부

□ 대학교 명비 건립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 출신 대학교 37개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3개 대학교 모두 각인 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적부 명단과 보훈부 참전유공자 명단을 대조하는 등의 작업, 학내 의견 수렴, 학사 일정과의 조율 등에도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해명함.

□ 그러나, 위의 사유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국가보훈부가 수립한 계획과 현재 시점 계획 간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대학교 명비는 기존 학교 명비에 비하여 확인 대상이 많고, 법인 이사회, 건립심의위원회 등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 간 의견 수렴 과

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요구되는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2개월만을 배정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2025년 내에 3개 대학교의 명비를 모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5. 8월 현재 기준 부산대학교는 부지 및 명비의 형태 조차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대학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 >

구분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조선대학교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각인대상 명단 확인	2024. 7. ~ 9.	2024.7. ~ 25. 4.	2024. 9. ~ 11.	2024. 9. ~ 25. 3.	2024. 9. ~ 11.	2024. 9. ~ 25. 2.
부자명비 형태 등 협의	2024. 9. ~ 10.	2024. 9. ~ 11.	2024. 12. ~ 25. 1.	2024. 12. ~ 25. 7.	2024. 11. ~ 12.	2024. 11. ~ 12.
건립 업체 선정 및 세부내역 협상 등	2024. 11. ~ 12.	2024. 12. ~ 25. 4.	2024. 12. ~ 25. 2.	2024. 12. ~ 25. 8.	2024. 12. ~ 25. 2.	2024. 12. ~ 25. 4.
건립	2024. 12. ~	2025. 5. ~ 7.	2025. 3. ~ 6.	2025. 9. ~ 11.	2025. 3. ~ 6.	2025. 4. ~ 8.
준공	2024. 12.	2025. 7.	2025. 6.	2025. 11.	2025. 6.	2025. 8.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1.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90]: 연례적 집행 부진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내역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유해발굴을 통해 뒤늦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 중 7,100만원(71.0%)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참전기념행사	2,677	2,677	-	△11	2,666	2,300	298	68	2,177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100	100	-	-	100	71	-	29	10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실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참석 대상 유가족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귀환행

90) 세부사업: 참전기념행사(4161-420)

사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주관 하에 유가족 자택 방문 및 신원확인 통지서 전달 등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 호국영웅 귀환행사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행사 추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호국영웅 귀환행사	0	0	0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행사	23	21	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현재의 호국영웅 귀환행사의 사업 수행 방식이 호국영웅 유가족 등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91]: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 계획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은 2024년 월남전파병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익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파병용사에게 제복을 증정하여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3억 4,500만원 중 179억 1,900만원(88.1%)이 집행되고, 24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60주년계기)	21,889	21,889	-	△1,544	20,345	17,919	-	2,427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단년도 의복 증정 사업이며, 제복(예산액 기준 단가 12만원) 및 모자(예산액 기준 단가 5천원) 등을 증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91) 세부사업: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 계기)(4161-423)

○ 당초 월남참전유공자 17만 5,114명(2024.1. 기준 예측수치)에게 제복을 증정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산출인원은 2023년 1월말 현재 생존 월남참전유공자 18만 63명에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사망률 2.7%를 반영하였음.

□ 본 사업은 예산액 218억 8,900만원 중 179억 1,900만원(81.9%)만이 집행되었는데, 집행 부진 사유는 아래와 같음.

○ 불용액 24억 2,700만원은 사망·불희망 등 제복 미신청(13억 2,700만원), 모자 미제작(9억원), 낙찰차액(2억원) 등으로 구성됨.

□ 첫째, 불희망자 및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함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였음. 국가보훈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추계한 2024년 대상자 175,114명과 2024. 1. 1. 기준 실제 대상자 174,513명은 거의 유사하였으나, 실제 대상자 174,513명 중 사망, 본인 불희망, 미신청 등의 사유로 제복을 지급받지 않은 인원이 25,432명(14.6%)이나 발생하였음.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 관련 현황 >

(단위: 명)

예산상 추계인원	실제인원 (A)	지급인원 (B)	지급률 (=B/A)	미지급인원			
				소계 (=A-B)	사망	불희망	미신청
175,114	174,513	149,081	85.4%	25,432	6,316	7,248	11,868

자료: 국가보훈부

○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월남참전유공자 대상자의 특성상 고령(평균연령 78세)에 따른 사망 및 입원,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원인일 수도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시에 이미 최근 3년간 사망률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부재로 인한 연락두절, 요양원입소, 병원 장기 입원, 제복의 색상·질 등의 불만족 등으로 인해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4.5.20.~6.19.	102,066	102,066	12,120
2차	'24.6.20.~7.31.	27,733	27,733	3,293
3차	'24.8.1.~9.30.	11,576	11,576	1,375
4차	'24.10.1.~12.13.	7,706	7,706	915
기타 (해외배송료 등)	-	-	-	216
합 계		149,081	149,081	17,91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

기 위해 6·25참전용사에게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전체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원은 82.6%인 3만 6,176명에 불과하였음.

- 2023년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집행 저조를 반면교사로 삼아 2024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 국회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유사 사업인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 증정 사업(내역사업: ‘제복의 영웅들’)과 관련하여, 대상인원 43,794명 중 신청인원이 36,176명(82.6%)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가보훈부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음에도 2024년 본 사업에서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였음.

< 제복 증정 사업 비교 >

구 분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2024)	제복의 영웅들 사업(2023)
목 적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 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사업내용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6·25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예산안	218억 8,900만원	52억 5,500만원
1인당 단가 (품목)	12만 5천원 (상하의 및 넥타이, 모자)	12만원 (상하의 및 넥타이)
대상인원	175,114	43,794명
수행방식	직접수행 (용역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후 차수별로 제작·배송 수행)	(좌동)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제복의 영웅사업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3.4.10~4.29.	22,290	22,290	2,626
2차	'23.5.1~7.5.	6,192	6,192	768
3차	'23.7.6~10.31.	5,314	5,314	741
4차	'23.11.1.~12.20.	1,540	1,540	184
기타 (해외거주 등)	'23.8.10~12.31.	840	840	153
합 계		36,176	36,176	4,472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모자 예산액의 경우 단체에서 희망하지 않아 발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대한민국무공수

훈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단체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모자 유지를 희망하여 각 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된 모자 제작에 반대하여 종국에는 모자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함

<단체별 모자 비교 현황>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인원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3. 보훈정책개발[92]: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정책개발’ 사업은 중장기적 정책개발을 위해 보훈정책 연구개발, 연구용역 및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보훈정책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9,500만원 중 17억 1,600만원(78.2%)이 집행되고,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등을 조사하고 보훈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바,[93] 실태조사는 예산액 8억원 중 4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이월함.

< 2024년도 보훈정책개발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정책개발	2,078	2,078	117	-	2,195	1,716	416	62	1,278
실태조사	800	800	-	-	800	478	322	-	-

자료: 국가보훈부

92) 세부사업: 보훈정책개발(7167-425)

93)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 별개로 2022년부터 국민의 인식 및 태도, 정책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훈문화 창달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2)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부진하며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2024년에는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1~2024년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연구용역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용역 내용	기간 연장 사유	이월액
202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등 3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지연, 대면조사 지연에 따른 일정 순연 등	151
2022	호국보훈공원 기본구상 연구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용역내용 보완 필요 등	19
2023	위탁병원 제도개편 방안 연구 등 5건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데이터 구축 및 반출 승인에 따른 지연, 기초자료 수집으로 인한 추가 소요시간 필요 등	117
202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등 4건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면접조사 협조율 저조로 현장조사 지연 등	416

자료: 국가보훈부

□ 이는 연구용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의 경우 전체 연구과제 24건 중 11건이 하반기에 발주되었으며, 그 중 2건은 12월에 발주되었음.

○ 범위를 최근 3년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2022년 ‘호국보훈공원 기

본구상 연구', 2023년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등의 경우 10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음.

<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기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상반기	1월						
	2월	1					1
	3월	2	2	4		2	13
	4월	1	1	1		3	12
	5월		2	2	4	4	16
	6월	2	3	2	5	4	16
	소계	6	8	9	9	13	54
하반기	7월		1	4		3	8
	8월	1			1	4	6
	9월	1		1	6	1	9
	10월			1	6	1	8
	11월			1	6		7
	12월					2	2
	소계	2	1	7	19	11	40
계		8	9	16	28	24	9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도 이월 및 불용 발생에 대하여 '연구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나, 2024년에는 연말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12월 16일과 12월 24일에 각각 2,600만원과 4,900만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12월 16일에 계약체결한 '제대군인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 개선 연구'는 계약기간이 2025년 7월 25일까지며, 12월 24일에 계약체결한 '보훈의료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는 계약기간이 2025년 5월 23일까지임.

< 제대군인센터 조직 체계 및 운영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4. 10. ~ 11.	2024. 10. ~ 12.	제안서 평가 등 계약처리절차에 따른 지연
계약기간		2024.12.16.~ 2025.07.25.	
연구용역 착수	2024. 11.	2024. 12.	계약지연에 따른 순연
중간보고	2025. 2.	2025. 3.	계약지연에 따른 순연
최종보고	2025. 4.	2025. 6.	과업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간 연장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4. 11. ~ 12.	2024. 11. ~ 12.	
계약기간		2024.12.24.~ 2025.05.23	
연구용역 착수	2024. 12.	2024. 12.	
중간보고	2025. 2.	2025. 3. ~ 2025. 4.	보훈병원별 진료비 기초 자료 취합 및 DB 구축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구기간 지연
최종보고	2025. 5.	2025. 6.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보고 순연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향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에 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하고, 연구용역 발주는 가급적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용역 중간점검 매뉴얼을 확립하는 등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응답률 저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진 결과 이월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 당초 추진일정은 계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응답률 저조로 실태조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2024년 12월에 체결하고 결과보고서는 2025년 3월에 제출받음.

< 생활실태조사 당초 추진 일정과 실제 추진 경과 >

당초 추진 일정	실체 추진 경과
(계약일) 2024.5.3.	(변경계약일) 2024.12.2.
(납품기한) 2024.12.31.	(납품기한) 2025.3.31.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로 한 생활실태조사 표본가구 수는 1만 가구였는데, ① 고령자의 경우 건강 등의 문제로 많은 수의 문항에 응답할 여력이 없었던 점, ② 제대군인의 경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관계로 주간 대면조사에 응답하기 곤란한 점, ③ 그 외에 재산 등의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60%)하였고, 그 결과 4천 가구 가량의 표본이 부족하

여 조사가 지연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연구보고서에서도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어 조사표의 문항 수와 난이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거부와 항목 무응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2027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살리되 응답자에게 너무 민감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고,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모바일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보훈기금

1.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94]: 후순위 투찰업체와의 계약 체결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는 호국보훈의 달, 명절,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문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대상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3억 2,000만원 중 12억 9,300만원(98.0%)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1,320	1,320	-	-	1,320	1,293	-	27	1,320
국가유공자 등 위문	966	966	-	-	966	963	-	3	966
재해위로금	270	270	-	-	270	247	-	23	270
보훈대상 시상금	84	84	-	-	84	83	-	1	84

자료: 국가보훈부

94)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2)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역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통령, 장관 위문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2024년에 8건의 위문품 구매 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95])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96][97]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로 계약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시점 이후에 추진한 계약 중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하였음.

---

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7)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실상 가격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 2024년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역사업 계약체결 내역 >

건 명	위문품 또는 사용내역	계약 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품 구매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홍상점 듀얼세트	수의	㈜상훈유통	9,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호국보훈의 달 중앙보훈병원 장관 위문품 구매	홍삼원세트	수의	㈜상훈유통	116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품 구매 (보훈병원)	특산물 선물세트	수의	세종B&P	96,840	여성기업과 체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품 구매 (위탁병원)	특산물 선물세트	수의	세종B&P	171,936	여성기업과 체결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복지시설)	홍삼원세트	수의	㈜상훈유통	46,632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생계곤란 및 1급 중상이자 등)	황태 선물세트	수의	혜인건강	423,024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한과 선물세트**	**수의**	**세종B&P**	**97,948**	**여성기업과 체결 *전자조달 (소액수의견적)**
연말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홍삼절편세트	수의	혜인건강	44,070	여성기업과 체결

자료: 국가보훈부

□ 이 계약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24년 추석 계기 장관 명의 위문품 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를 2024년 8월 23일에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하였고, 8월 29일에 개찰하였으며, 9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런데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165개였고, 이중 63개[98] 업체가 적격업체로서 낙찰하한선[99] 이상의 가격을 제출하였는데, 국가보훈부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적격업체 중 53번째 순위(가격순위)로 응찰한 업체임.

○ 해당 업체는 2023년에도 동일한 계약을 소액수의견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던 업체이며, 2024년 상반기에 체결하였던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품 구매계약의 상대 업체이기도 함.

□ 이와 같이 후순위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적격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2024.8.30.)함에 따라, 과업수행의 시급함[100]을 고려하여 포기서를 제출한 1순위 업체를 제외한 62개 적격업체에 9월 2일까지 과업수행[101] 가능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고,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 국가보훈부는 그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102]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최저

---

98) 자격미달 58개, 예가초과 1개, 낙찰하한선 미달 43개 업체 제외(자료: 국가보훈부)

99)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선은 예정가격의 88%임.

100) 국가보훈부는 대상자에게 추석 계기 위문품 전달을 위해 2024.9.3까지 업체 선정이 필요했다는 입장임.

101) ① 위문품 구매, ② 장관 감사카드 제작·동봉, ③ 위문품 별도 포장 및 배송

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는 입장임.

< 과업수행 능력 회신업체 내역 >

순위	업체명	투찰금액	투찰률	과업수행여부	비고
105 (53)	세종B&P	97,948,400	90.057	과업 가능(기한내 회신)	낙찰자
111 (58)	00컴퍼니	106,550,000	97.966	과업 가능(기한내 회신)	
119 (62)	㈜000 0 000	108,350,000	99.621	과업 가능(기한내 회신)	

※ ( ) 적격업체 중 투찰금액 순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견적서를 제출하여 소액수의견적에 응한 업체들에게 단 2일의 기한을 부여하며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것은 법령이 정한 경쟁절차 외에 별도의 응모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이에 응한 업체들 중에서만 제시 가격을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과업 이행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을 충분히 부여하여 선순위 업체로 하여금 과업 수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필요 시점에 임박하여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실시[103]한 발주기관

의 사정이며, 촉박한 시간 내에 회신을 요구하면서 이를 계약상대방 선정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발주처의 사정을 이유로 참여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방식임.

□ 결과적으로, 이처럼 회신 업체들 간 비교를 통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04]에 위배되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105]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질서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103) 이행 시기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운 시점에 공고를 시행하는 것도 새로운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존재함.

10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105) 국가보훈부는 1순위 업체가 아닌 53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9,572만 3,800원보다 222만 4,600원 높은 9,794만 8,400원에 계약하였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조세심판원[106]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107]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2024회계연도 조세심판원의 세부사업은 4개로, 총 예산현액 141억원 중 139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5,100만원(1.1%)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예산액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610	△6464	11,610	11,543	-	66	12,24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	715	672	-	43	71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42	-	1,342	1,300	22	20	1,440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433	-	433	412	-	22	303
합 계	14,100	△6464	14,100	13,927	22	151	14,868

(자료: 조세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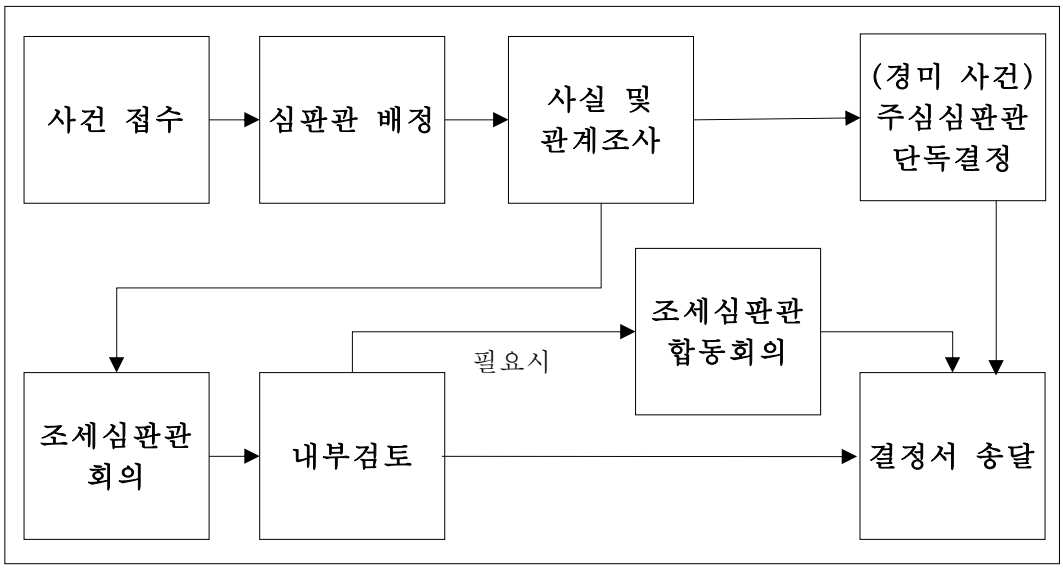
106)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107)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심판원은 ①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② 이를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되[108] ③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함.[109]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 심리 및 결정절차>



108)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단서).

109)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1)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국세기본법」 제81조[1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111]에 따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반기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규정은 관세나 지방세 사건의 경우에도 준용 적용됨.[112]

□ 동 규정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113] 2022년 12월 법률 개정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통해 2023년 2월 28일부터

---

110)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국무조정실훈령 제215호)」 제36조(관련기관 협조) ①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112)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1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 1. 19. ~ 2. 3.) 중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되었음.

□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행정소송 제기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소송제기 사건 자료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 현황>

연도	내국세		관세		지방세	
	조세심판 각하기각 건수	소송제기* 건수	조세심판 각하기각 건수	소송제기* 건수	조세심판 각하기각 건수	소송제기 건수
2023	9,293	1,269 (13.7%)	139	50 (36.0%)	3,431	작성불가**
2024	5,345	1,223 (22.9%)	129	32 (24.8%)	1,793	작성불가**

*소송제기 건수: 해당 연도에 1심 소송이 제기된 건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는 그 정확도가 낮아 통계 작성 불가
(자료: 「조세심판통계연보」 및 조세심판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114]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받고는 있으나, 일부 소송사건이 누락되거나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건[115]이 포함되는 등 관련 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및 완결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116]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117]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

114)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15)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 제기 가능
116) 이에 따라, 현재는 제출받은 자료 중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건(조세심판원에서 각하·기각되었으나 법원에서 원고 승소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함.
117)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118]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119][120]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을 거쳤음에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현황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통보받게 된다면, 불복의 원인을 분석해 심판과 소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조세심판 이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불편이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행정소송 처리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음으로써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다.

118)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2조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119) 다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20)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전자적 송달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전자심판제도 내실화 필요

□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 및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를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선 용역비 1억 4,6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음.

<조세심판 정보화(7036-307)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283	283	283	433
집행액	277	277	278	412 (홈페이지개선 146 포함)

(자료: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등 전자심판제도[121]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비율을 보면, 2020년 23.7%에서 2024년도 44.2%로 증가하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 접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1)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 중 전자심판 접수건수〉

연도	총 접수건수	전자심판 접수건수	전자심판 비율
2020	12,795	3,037	23.7%
2021	13,025	3,214	24.7%
2022	10,373	3,235	31.2%
2023	16,781	3,842	22.9%
2024	9,811	4,341	44.2%

(자료: 조세심판원)

□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우편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전자심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년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심판원 우편요금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우편요금 집행액	93,327	101,942	92,271

(자료: 조세심판원)

□ 이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심판청구서 접수 절차까지만 전자적 방식이 활용되고,

이후 절차에서는 비전자적 방식이 적용되어 조세심판 관련 서류의 대부분을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활용해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송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조세심판 관련 우편 송부대상 및 송부방식>

우편 송부대상	송부사유	송부내용	송부방식
청구서 부본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122)	우편, 전자로 접수된 심판청구서 부본을 처분청에 송부	**비전자**(등기)123)
답변서	국세기본법 제69조제6항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비전자**(일반우편)
항변서 및 추가답변서	국세기본법 제71조제3항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처분청에 송부 및 추가 답변서 청구인에게 송부	처분청 : 전자(공문) 청구인 : **(비전자)**등기
결정서	국세기본법 제78조5항124)	심판결정문을 청구인, 처분청에 송달	**비전자**(등기)
조세심판관 지정 및 변경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해당 사건의 심판관 지정·변경 통보	**비전자**(일반우편)

(자료: 조세심판원)

□ 즉,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심판청구서 접수 외의 대부분의 절차가 비전자적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비용 절감, 사건처리의 신속성125) 등 전자심판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

---

122)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 절차)**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23) 2025년 5월부터는 청구서의 전자접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전면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있음

124)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25) 참고로, 2024년도 조세심판 처리 현황을 보면, 총 처리대상 중 법정기한(90일) 내 처리 사건의 비율은 35.3%임.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법정기한(90일) 내 처리	법정기한(90일) 도과	이월 건수
13,356건	10,178건 (100.0%)	3,596건 (35.3%)	6,582건 (64.7%)	3,178건

□ 현재와 같이, 비전자적 방식으로 조세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있는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 결정서 등의 전자 송달 가능성과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반면, 「행정심판법」은 2010년 전부개정을 통해 전자 송달에 대해 서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고,[126] 「특허법」 역시 1998년부터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127]

---

126) **「행정심판법」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127)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을 포함한 홈페이지 및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전자심판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민 편의성 제고, 예산 절감,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등을 위한 전자심판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128]: 국정과제 점검회의 운영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대통령 공약에 기반하여 수립된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부처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의 수행동력을 제고하고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4,7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	70	247	235	-	12	197

(자료: 국무조정실)

128) 세부사업: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7031-301)

2) 검토의견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의 경우 일반수용비 등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다른 사업 및 비목으로부터 전용·조정 등을 거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 2022년의 경우 4,100만원, 2023년의 경우 5,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개최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매년 다른 비목 또는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세목조정을 통해 충당하였음.

<2022~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현황>

연도	점검회의 개요		예산 관련	
	일시	장소	예산액	집행액
2022	12. 15	영빈관	51	41
2023	11. 30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락'	58	58
2024	4. 2	정부세종청사	33	120
	4. 4	용산 대통령실		

(자료: 국무조정실)

-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동일한 사업 내에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예산 중 각각 1,000만원, 4,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

였고, 2024년의 경우 기본경비 사업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고 동일한 사업 내에서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음.

<2022~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관련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2. 12. 5.)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임차료 (210-07)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세목조정 (2023. 11. 23.)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임차료 (210-07)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수용비 (210-01)	30		
전용 (2024. 4. 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	7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세목조정 (2024. 4.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수용비 (210-01)	5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과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매년 국정과제 성과보고 행사를 담당하였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구가 없어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 성과보고회를 전담하였고, 대통령 행사의 특성상 행사의 내용·규모·진행방식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였다는 입장임.

○ 지난 정부가 2022년 출범하여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방향이 연말에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예산을 국무조정실 소관 예산에 편성

하지 못하여 세목조정이 발생한 부분은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지난 정부 3년차인 2024년에도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세목조정 및 전용 증액을 통해 해당 행사를 수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25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주체 및 행사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129]: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사무·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24회계연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88	88	-	-	481	569	523	-	47	537

(자료: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동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었음.[130]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전 법률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5년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법률 개정[131]을 통해 그 활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129) 세부사업: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7032-305)

1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131)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4. 1. 23.>

연장됨에 따라 2026년 2월 14일까지 활동할 예정임.

2) 검토의견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최초 설치된 2019년도부터 별도의 위원회 홈페이지(www.cleanair.go.kr)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관리용역비(210-15)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2	22	22	22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위원회 홈페이지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① 위원회 소개, ② 미세먼지 관련 정보, ③ 미세먼지 현황, ④ 정보자료(보도자료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위원회 소개' 외의 기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정보내용과 중복되며, 제공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환경부 등 다른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형태임.

자체 생산한 정보인 '위원회 소개'의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회의 일정 및 안건목록과 회의사진만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구성>

위원회 소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현황	정보자료
위원 구성 및 활동소개	환경부 미세먼지종합포털,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보와 유사	에어코리아 (한국환경공단) 연결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가 대부분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정책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은 국무조정실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을 것임.

□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자체 생산 콘텐츠가 거의 없어 정보제공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32]: 규제혁신전략회의 집행관리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억 5,900만원 중 17억 1,200만원(97.3%)이 집행되고, 4,700만원(2.7%)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59	-	186 △186	1,759	1,712	-	47	1,989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매년 이 사업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규제혁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비상설 회의체)로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제단체 및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함.[133]

132)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133)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2024 규제개혁백서』, 2025., p.32.

○ 국무조정실은 2022년 제1차 회의 이후 2024년까지 총 7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24년에는 3차례(제5차～제7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총 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실적>

구분	일시	장소	회의내용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4. 1. 22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	단말기유통법 폐지, 웹콘텐츠·영세서점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등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4. 2. 21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비수도권 그린벨트(GB)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4. 11. 28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업·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개선

(자료: 국무조정실)

<2024년도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행사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예산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비고
일반수용비 (210-01목)	96	△30	66	66	◦ 내역사업 간의 예산 조정
임차료 (210-07목)	6	12	18	18	◦ 내역사업 간의 예산 조정
일반용역비 (210-14목)	160	150	310	303	◦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 규모 확대 및 회의방식 변경을 위한 세목조정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자료: 국무조정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2024년 총 3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총 2건의 용역계약을 동일한 행사 대행사와 체결하였음.

<2024년도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회의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 업체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유
제5차 · 제6차	24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2024. 1. 17. ~ 2024. 12. 20.	152 (변경: 263)	A업체	제한경쟁 → 수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제7차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2024. 1. 17. ~ 2024. 12. 20.	38	A업체	제한경쟁 → 수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자료: 국무조정실)

□ 먼저, 국무조정실은 2024년 1월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업체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총 2차례의 행사[134]를 운영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2023년 12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하여 부처 안건발표 및 전문가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를 연간 총 4회 개최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개시하였으나, A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024년 1월 이 업체와 1억 5,200만원의

134)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런데, 행사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행사방식도 전국에 생중계되는 토론회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 대비 오랜 준비 기간과 많은 인력, 추가적 장비 투입이 필요하게 되어 2024년 7월 과업내용과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월과 4월 국무조정실과 A업체 간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음.

○ 이후 국무조정실은 A업체에 변경된 계약금액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약(연간 4차례)과 달리 2차례의 행사 운영으로 이 계약의 이행은 종료되었음.

<제5차 ·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경과>

일시		집행경과	비고
2023년	12. 6.	공고 게시	
	12. 27.	개찰 → 단독응찰로 유찰	
2024년	**1. 17.**	**계약체결 (152백만원)**	
	1. 22.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1. 29.	변경 계약 사전 합의서	◦(세부과업) 참석 규모 확대(50→100명) 및 생중계로 인한 행사기획 및 무대 제작물 설치 등 ◦(계약금액) 행사 완료 이후 실비 정산
	2. 21.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4. 26.	변경 계약 합의서	◦(세부과업) “변경 계약 사전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 ◦(계약금액) 262,764,590원
	5. 14.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
	7. 10.	**변경계약 체결 (152백만원→263백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상대방과 동일한 A업체와 체결하였으며, A업체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행사를 운영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2024년 10월 4,4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개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A업체의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11월에 이 업체와 3,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업체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를 준비·운영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이 12월 용역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었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경과>

	일시	집행경과	비고
2024년	10. 21.	공고 게시	
	11. 1.	개찰 → 단독응찰로 유찰	
	11. 8.	**계약체결 (38백만원)**	
	11. 28.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1)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선급금 집행 부적정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135]은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

135)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 선급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상 선급금 지급한도는 계약금액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100%)이나,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한도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계약의 착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의 과업 중 완성된 부분(기성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성금"[136]과 구별되는 개념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기성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137]하고 있는데, 이는 선급금의 용도를 기성금과 구분하여 계약 착수준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통하여

· 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4.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13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차 및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완료한 2024년 2월 이후 시점인 3월에 계약금액의 80%인 1억 2,200만원의 선급금을 A업체에게 지급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당초 계약상 연간 4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A업체가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 다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개최 여부나 구체적인 계획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 계약을 통하여 추가로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준비·운영을 위한 과업이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급금의 집행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집행이었던 것으로 보임.

○ 가사 후속 용역계약의 착수를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제5차·제6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기성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체 계약금액(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선급금의 규모를 산정한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138]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

13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절하지 않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계약의 잔여 이행분이 불확실한 경우 선급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예산의 집행관리 부적정

□ 먼저, 국무조정실은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행사장 대관료를 해당 장소를 제공한 자가 아닌 용역업체(A업체)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무조정실은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장 대관을 위한 비용을 임차료(210-07목) 예산으로 A업체에게 400만원 집행하였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행사 관련 지출현황>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금액	건명	수령인명
2024. 3. 29.	4,081,000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장 대관료	A업체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해당 장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행사 용역업체인 A업체에게 지급한 것은 지출관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139]를 위반한 것임.

- 국무조정실이 대관료를 일반용역비(210-14목)이 아닌 임차료(210-07목)로 지급한 것은 행사장을 용역업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139)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임차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A업체에게 지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이처럼 위탁업체를 거쳐 임차료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 용역업체에게 수수료·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140]

□ 한편, 국무조정실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시 게시하였던 과업내용을 축소하고, 해당 과업을 분리하여 별도 건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무조정실은 2024년 10월에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였음.

- 해당 입찰공고 시 게시된 「제안요청서」에는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행사 홍보, 행사 현장 운영 및 관리, 오찬 및 케이터링 관리, 사후 정리, 행사 결과물 제출 등 과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중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사항에는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등 행사장 조성,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140)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행사장을 대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에게 기업이윤(6%)과 부가세(10%)를 추가로 지급하였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입찰공고 개요>

구분	주요내용
공고명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공고일	2024. 10. 21.
입찰서 접수	2024. 10. 30. ~ 2024. 11. 1.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2. 20. 까지
예산액	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 과업내용	○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 행사 관련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행사장 섭외 및 진행 시나리오 마련 - 포디움·좌석 등 배치, 물품 준비,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등 행사장 조성** - **현수막**·배너·프로그램북·네임택 등 **디자인, 제작, 배부 또는 설치** - 기타 제반 사항 ○ 행사 홍보 (상세 내용 생략) ○ 행사 현장 운영 및 관리 (상세 내용 생략) ○ 오찬 및 케이터링 관리 (상세 내용 생략) ○ 사후 정리 (상세 내용 생략) ○ 행사종료 후 행사 결과물 제출 (상세 내용 생략)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국무조정실은 입찰공고 시 이 계약 예산액을 4,4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예산산출내역서상에는 시스템 관련 경비와 백드롭 등 무대 제작물 등의 경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예산 산출내역서>

항목		내용	금액(원)	산출내역
기획/연출	기획료	기획, 프로그래밍, 키비쥬얼 디자인 등 (2D/3D 디자인포함)	1,000,000	21000,000원×1식
인건비	책임연구원	행사총괄	1,398,682	6,993,408원×1인×1개월×20%
	연구원	행사운영	804,368	5,362,452원×1인×1개월×15%
	연구보조원	행사보조	1,075,385	3,584,618원×2인×1개월×15%
	운영인력	행사세팅 및 진행요원	600,000	150,000×4인
경비	**시스템**	**영상·음향·전력 시스템**	**7,000,000**	**7,000,000원×1식**
	무대 제작물	**백드롭, 포디움, X배너 등**	**6,000,000**	**6,000,000원×1식**
	행사장 비품 및 구성	명패, 회의자료 등	1,500,000	1,500,000원×1식
	행사물품	노트북, 프린터, 멀티탭 등	1,000,000	1,000,000원×1식
	도시락 및 다과	도시락 및 다과	1,500,000	1,500,000×1식
	현장 경비	교통, 식비, 숙박 등	1,000,000	1,000,000×1식
	운송/설치/철거	행사 시스템 운송/설치/철거 등	600,000	600,000×1식
소계(A)			23,478,435	
일반관리비 (B=A×8%)			1,878,275	
기업이윤 {C=(A+B)×10%}			2,535,671	
부가가치세 {D=(A+B+C)×10%}			2,789,238	
총계 (E=A+B+C+D)			30,000,000	(십만단위 절사)

(자료: 국무조정실)

○ 이 입찰은 A업체가 단독응찰하여 유찰되었으며, 이에 국무조정실은

A업체와 계약금액 3,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국무조정실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종료 후 A업체에 용역계약 완수금으로 일반용역비(210-14목) 3,800만원을 집행한 외에도, 백드롭 제작 명목으로 일반수용비(210-01목) 700만원, 시스템 임차료 명목으로 임차료(210-07목) 688만원 등 총 1,388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출하였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행사 관련 지출현황>

(단위: 원)

지출일자	세목	지출금액	건명	수령인
2024. 12. 26.	일반용역비(210-14)	38,000,00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완수금	A업체
2024. 12. 30.	일반수용비(210-01)	7,000,00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백드롭 제작	A업체
2024. 12. 30.	임차료(210-07)	6,880,00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시스템 임차료	A업체

(자료: 국무조정실)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①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② 행사장 시설물 및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제안요청서 일반사항[141]에 따라 용역계약상의

141) 제안요청서(자료: 국무조정실)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행사장 시설물 및 참가자, 수량,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상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양측 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과업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과업내용의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과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과업을 변경한 후 과업에 대한 대가를 별건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공고상의 과업내용, 예산금액 등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입찰공고 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예산액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잠재적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입찰공고 시 포함되어 있는 과업을 개찰 이후에 제외하고, 제외된 과업에 대해서 별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관련 법령의 위반, 과도한 과업내용의 변경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14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9억 7,200만원 중 27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6.2%)을 불용함.

<2024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972	-	5 △5	2,972	2,788	-	184	5,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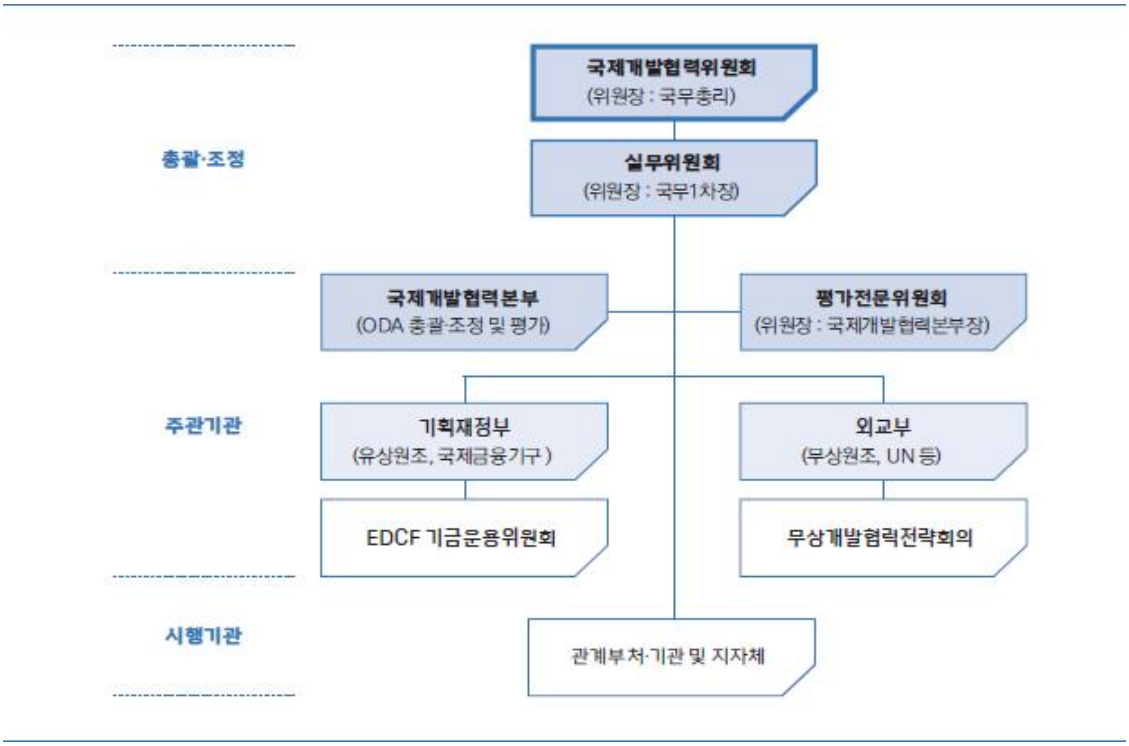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142)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임. 또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사업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심사·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함.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143]>



○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 2024년 기준 총 46개의 시행기관이 ODA 사업을 수행하였음. 주요 시행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유상원조를 수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

143) 「2021-2023 ODA 백서」, p.51

부장관의 감독 아래에 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함.

□ 우리나라의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ODA 규모는 6조 2,629억원임.

<연도별 ODA 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ODA(십억원)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양자간원조	2,387.7	2,493.8	2,775.0	2,926.1	3,115.7	3,673.9	5,128.2
비중(%)	(78.3)	(77.9)	(81.0)	(77.9)	(79.1)	(76.9)	(81.9)
유상원조	1,058.1	1,141.2	1,184.9	1,258.2	1,230.5	1,503.0	2,032.0
비중(%)	(44.3)	(45.8)	(42.7)	(43.0)	(39.5)	(40.9)	(39.6)
무상원조	1,329.6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비중(%)	(55.7)	(54.2)	(57.3)	(57.0)	(60.5)	(59.1)	(60.4)
다자간원조	660.5	706.5	651.9	828.2	822.6	1,103.2	1,134.7
비중(%)	(21.7)	(22.1)	(19.0)	(22.1)	(20.9)	(23.1)	(18.1)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1) 무상보수기간 중 ‘ODA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과다지급

□ 국무조정실은 매년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144]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를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합발주하여 ○○소프트와 총 3억 8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의 유지관리와 관련해, 종전에는 두 사업을 각각 발주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두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단일 계약하고 있음.

○ 또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의 추정가격[145]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2억 9,100만원으로 동일하며, 그 계약상대방은 2021년 이후 동일한 업체임.

144) ‘ODA 홈페이지’ 는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ODA 정보포털’은 ODA사업 기관용 정보 포털임.

145)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 등으로 산정된 가격을 말함.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10-15)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2021	ODA 정보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82	합계 291	196	합계 313	2021.1.1-12.31	○○소프트
	ODA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09		117		2021.1.1-12.31	○○소프트
2022	ODA 정보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82	합계 291	196	합계 313	2022.1.1.-12.31	○○소프트
	ODA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09		117		2022.1.1.-12.31	○○소프트
2023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91		315		2023.1.1.-12.31	○○소프트
	ODA 홈페이지 개편	448		443	합계 531	2023.5.16.-12.12	○○소프트
	ODA 홈페이지 개편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		88		-	-
2024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91		308		2024.1.1.-12.31	○○소프트
2025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91		308		2025.1.1.-12.31	○○소프트

*ODA 정보시스템 = ODA 정보포털 + ODA 홈페이지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유지관리 해오던 정보시스템 중 'ODA 홈페이지'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시스템개발비[146]로 4억 4,300만원을,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147]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무조정실은 2023년 'ODA 홈페이지' 개편 기간 중에 2024년도 'ODA

146) 일반연구비(260-01)
147) 자산취득비(430-01)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통합발주하였는데,[148]

그 계약상대방은 ‘ODA 홈페이지’ 개편을 담당한 업체이며, 총 3억 800만원에 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였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149]는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ODA 홈페이지’ 개편사업의 제안요청서[150]에도 1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즉,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계약상대방은 홈페이지 개편이 마무리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홈페이지와 관련된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이 있음.

□ 이와 같은 법률과 제안요청서 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을

148)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업 전 연도 하반기 중에 계약을 발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14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150) ‘ODA통합누리집 개편 제안요청서’ 중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추정가격을 예년과 동일한 2억 9,100만원으로 표시하여 통합발주하였는데,

해당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그 유지관리 대상에 'ODA 홈페이지'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 개편된 'ODA 홈페이지'와 관련해 그 하자보수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자가 1년간 담당하게 된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결국, 2024년 12월까지 무상하자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ODA 홈페이지'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에 집행한 관리용역비(210-15)는 인건비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서 '하자보수'와는 무관하고,

2024년도 정보시스템 계약상대방[151]은 홈페이지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인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2024년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금액(3억 800만원) 중 홈페이지 하자보수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함.

151) 2023년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담당한 사업자와 같은 사업자임.

□ 그러나, 동 사업 제안요청서 중 기능 요구사항에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에러 수정’,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등 하자보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152]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된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업무로,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트랜잭션 기능수행 중 발생한 오류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한 정보처리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정하는 활동”[153]을 말하므로, 하자보수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 국무조정실은 ‘ODA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152) 국무조정실 ‘2024년 ODA IT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계약 제안요청서 중 기능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시스템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2.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3. 평균 응답시간 단축,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산출정보		결함처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53)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2024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p.49

(2) 법률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수정 절차 준수 필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전문가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임.[154]

○ 위원회는 전체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함.

□ 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1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155]하고, 필요한 경우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

---

15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155)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각각의 ODA 사업에 대해 ODA 적격성, 수원국과의 협의 여부, 대외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주관기관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함으로써 다음 연도 ODA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시행이 가능한 ODA 사업목록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③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ODA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④ 정부는 다음 연도 ODA 사업목록을 연도별 ODA 종합시행계획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음.(「2021-2023 ODA 백서」, p.56-57)

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156]

○ 이 종합시행계획은 시행기관의 ODA사업 실시 근거가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개발협력기획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나,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는 등 종합시행계획은 각 시행기관의 ODA사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종합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1~2월경 국회에 보고되었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종합시행계획 국회 보고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시행계획 (확정)	○	○	○	○
종합시행계획 (수정)	×	×	×	×

15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전「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만 국회 보고의무를 부과한 반면, 2020년에 전부개정된 법률에서는 위원회에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도 중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 종합시행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 〉

개정 전	2020. 5. 26., 전부개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이하 생략)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은 ① 중대한 사업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기관이나 주관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통합·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

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지침(내부지침)’을 근거로,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또는 종합시행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사업대상국이나 사업예산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외교부 및 기재부)이 해당 사업 변경을 승인하도록 하고[157], 이러한 사업변경 내역은 다음연도 위원회 개최 시에 사후보고한 후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2025년 2월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ODA 사업 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은 총 83건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철회 18건, 사업대상국 변경 17건, 총사업비 20%초과 변경 18건, 기타 30건임.

□ 종합시행계획은 1년 단위 사업계획이므로 해당 연도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연내에 이를 반영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변경사항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임.

□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해 결정

157) 중요사항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사전 공유

한 것이고, 시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미 설정된 계획도 수정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정부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6조 2,6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ODA사업의 특성상 국회가 그 사업의 적절성 등을 적기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ODA 규모 확대에 걸맞는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 국무조정실은 ‘위원회의 ODA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강화’ 및 ‘ODA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6.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158]: 민간위탁사업자의 사무편람 승인 및 위탁사무 감사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는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재정비·확충, 청년정책 분석·연구 및 청년과의 소통·참여 활성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9억 8,400만원 중 81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2%)되고, 3억 5,300만원이 이월, 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	-	8,984	8,191	353	440	7,034

(자료: 국무조정실)

158) 세부사업: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2) 검토의견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에서는 민간위탁비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사업이 신설된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중앙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집행비목	예산액	집행액
2023	재단법인 청년재단	320-02 민간위탁사업비	1,739	1,543
2024			2,270	2,072

(자료: 국무조정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춰야 하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함.

○ 수탁기관이 갖춰야 할 사무편람이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관,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의미[159]함.

-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사무편람을 갖추고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려는 취지[160]임.

○ 한편,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있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161].

□ 국무조정실은 위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이 적정하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승인 받은 사무편람의 내용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갖추도록 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5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참조

16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이 승인한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을 보면, 문서관리, 재무회계, 계약업무, 자산 및 물품관리 등 수탁기관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 포함하고 있을 뿐,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관, 처리절차,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함.

<중앙청년지원센터 사무편람(일부 발췌)>

중앙청년지원센터 사무편람

제정 : 2024.01.02.
개정 : 2024.03.15.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근거 및 명칭) 본 시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명칭은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 운영법인의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센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법인의 대표자 및 센터장이 정한다.

제4조(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관정빌딩)로 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센터 업무 종합적 관리·지원·평가
2. 지역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3. 지역센터 종사자 역량·권익 강화사업 개발·운영
4. 국내외 청년정책 정보의 총괄적 수집·분류·제공
5.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지원·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운영조직

제6조(조직과 정원)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어 운영한다.
② 직원의 직위는 선임, 매니저로 구분한다.
③ 센터의 상근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

- 1 -

제4장 재무회계

제1절 총 칙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① 센터장은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회계책임자는 모든 회계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제26조(회계기록의 보전) ① 센터의 모든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파일과 출력파일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록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7조(출납기한)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센터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제24조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2절 예산 및 결산

제2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편성 기준) 센터의 예산편성은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하되, 운영법인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 및 경비의 충당) 센터는 제5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모금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의 경우 운영법인의 결재를 득한 후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센터의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

(자료: 국무조정실)

○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매년 3회의 정례보고회[162] 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나, 정례보고회는

162) 국무조정실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3회의 정기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정기보고회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사업계획, 사업 진행 상황, 최종 사업결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대해 위탁사업의 계획과 진행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일반적인 감사의 성격과 절차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국무조정실의 자체 감사 절차를 규정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을 사전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감사계획을 통보하거나 감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 관련 절차가 부재하였음.

○ 참고로, 국무조정실 소관 예산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탁사무별로 담당부서, 주요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있고, 감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과물 등을 보고하는 형식임.

<정부업무평가지원 위탁사업 사무편람(목차) 및 감사 결과>

〈 목 차 〉

Ⅰ. 사업 개요 ····· 1

Ⅱ. 특정평가 지원 ····· 4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 4
2. 주요 업무 ····· 5
1) 협업과제 선정 지원 ····· 5
2)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선정 지원 ····· 6
3) 전문가평가단(협업 및 주요정책과제) 운영 지원 ····· 8

Ⅲ. 개별평가 관리 지원 ····· 10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 10
2. 주요 업무 ····· 11
1) 개별평가 제도관리 및 심층분석 업무 지원 ····· 11
2) 성과확산 등 환류기능 강화 지원 ····· 13
3) 개별평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 14

Ⅳ.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심층점검 지원 ····· 15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 15
2. 주요 업무 ····· 17

Ⅴ. 수시현안과제 분석 지원 ····· 19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 19
2. 주요 업무 ····· 20

Ⅵ. 각종 평가 사전검토 ····· 21

Ⅶ. 부록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 22

민간위탁기관(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점검 결과

< '24.8.13(화), 평가총괄정책관실 >

□ 점검 개요

○ (근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6조
* △ (제14조)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 (제16조)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 (목적)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탁사업 운영의 적정성 확보

○ (대상기관·기간) 한국행정연구원(수탁사업자) / '23. 4. ~ '24. 6.

○ (점검실시일) '24. 7. 16.

□ 점검 결과

◈ **(총평)**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 관리 및 회계 처리에 일부 미흡** 사항 확인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인사) 정규직 검직 인력의 위탁사무 참여율이 제안내용상 참여율에 미달, 연구조사원 인력 운용 관련 국조실과 사전 협의 미흡 등

○ (예산) 일부 예산 집행 건명과 실제 집행 내용 간 불일치, 직원 여비 집행 시 출장 내용 확인 소홀 등

□ 향후 계획

○ 미흡사항에 대한 현지조치 완료 → 차년도 이행결과 확인('25년 중)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의 정기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163]: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실적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는 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4억 7,300만원 중 31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4%)되고, 2억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통합 플랫폼 구축	3,473	-	-	3,473	3,173	200	100	1,958

(자료: 국무조정실)

163) 세부사업: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2) 검토의견

□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온라인 청년센터'를 2022년부터 이관하여 '온통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해왔으며, 2024회계연도에서는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실시간·맞춤형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할 수 있고, 청년 개인에게 맞춤형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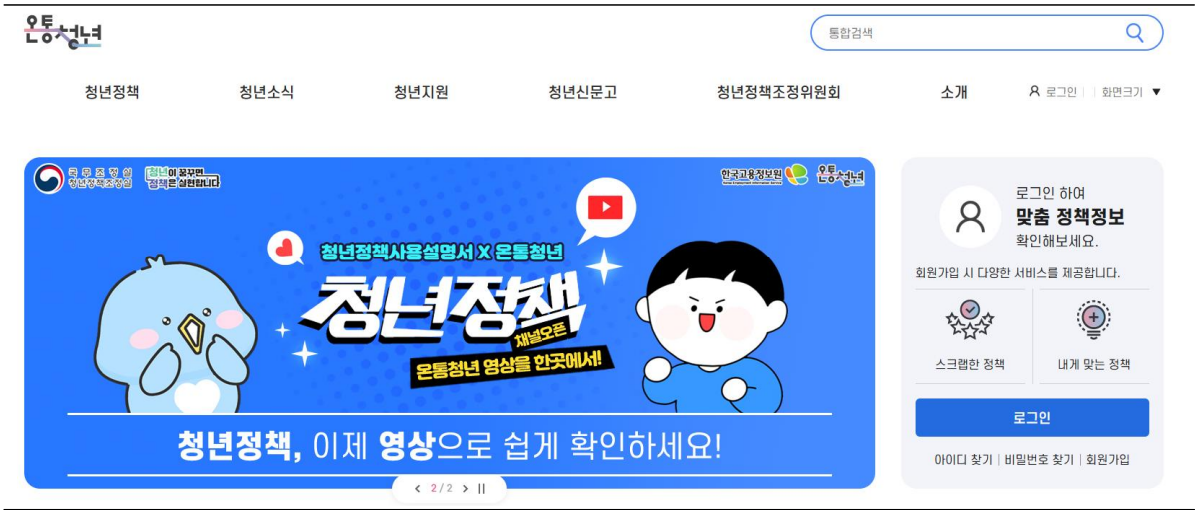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개요〉

구분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정책 정보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책정보 중복·누락** 발생, **데이터 현행화에 장기간 소요**	⇨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중복·누락 없이 실시간 정책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서비스 제공	개인의 수요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정책 추천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	상담원을 통한 분야별·심층 상담을 제공하나, **이력관리 부재**		청년의 분야별 상담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피상담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인프라	**워크넷 서버** 공동 활용, **기능 추가 및 개선에 한계**		**별도 클라우드** 구축하여 기능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확장성** 확보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164]’를 수립하면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을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4년에는 34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을 1차로 구축 완료하였음.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홈페이지 현황>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을 2차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14억 8,800만원이 삭감[165]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제2차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164)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165)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2차 구축예산 중 삭감되지 않은 1억원을 통해 온통청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간 연계사업을 진행하였음.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함께 채택하였음.

□ 이상의 부대의견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2024년도에 1차로 구축하여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초 국무조정실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1차 구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구축 시 청년정책 탐색비용 감소로 인하여 연 87.4억원에 해당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연간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에 가입한 접속자수를 286만명으로 추계하고, 이들 청년이 청년정책을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분 단축된다는 것을 전제로 절감되는 시간만큼을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계산한 것임.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편인 산출 근거>

※ 청년정책 탐색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연 87.4억원) 산출 근거

- 편익(약 87.4억/연) = 최저임금(9,160원) × 절감(95.4만시간=접속자수(286만명)× 단축시간(시간당 20분))
- 접속자수(286만명/연) : 청년인원 수(2021년 서울시 청년밀집 지역 기준-통계청) /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 단축시간(20분) : 유사사례(복지부 공공보건포털 구축 후 조회업무 단축시간 20분) 참조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이 신규 개설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방문자, 가입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추계한 연간 접속자

수(연간 286만명)에 비해 실적(7개월간 약 100만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정책 중 신청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가입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도 방문자의 1% 미만에 머무르는 수준임.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홈페이지 현황>

(단위: 명)

구분	방문자	가입자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건수
2025. 1.	187,022	1,464	409
2025. 2.	85,459*	4,434	1,357
2025. 3.	162,964	5,292	1,457
2025. 4.	171,109	4,634	1,589
2025. 5.	123,096	4,263	1,464
2025. 6.	106,123	3,885	1,174
2025. 7.	163,680	5,324	1,877
합계	999,453	29,296	9,327

* 1. 24 ~ 2. 9 방문자 수의 경우, 집계 솔루션 미적용으로 집계불가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운영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에 따라 2025년도의 운영실적과 미비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부패예방추진단 운영[166]: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활동 기한 연장 부적정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및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국민생활 밀접분야 중 감시가 소홀하거나 부패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으로 부패·부조리를 시정·예방하는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억 900만원 중 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	33 △33	709	705	-	4	707

(자료: 국무조정실)

166) 세부사업: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2) 검토의견

(1)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활동 기한 연장 부적정

□ 부패예방추진단은 2014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및 공직부패 점검·관리를 추진하고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1호, 2014.8.13. 제정)」에 기반하여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시 운영조직으로 신설되었음.

○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이 신설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규정의 존속기한을 7회나 추가 연장하여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현황>

회차	시기	내용	활동기한
설치	2014.8.	부패척결추진단 설치	2015.7.31.
1차	2015.7.	활동기한 연장	2016.12.31.
2차	2016.12.	활동기한 연장	2017.12.31.
3차	2017.8.	활동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부패예방감시단)	2019.12.31.
4차	2019.12.	활동기한 연장	2020.3.31.
5차	2020.3.	활동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부패예방추진단)	2022.6.30.
6차	2022.1.	활동기한 연장	2024.12.31.
7차	2024.7.	활동기한 연장	2027.12.31.

(자료: 국무조정실)

□ 임시조직에 해당하는 부패예방추진단의 활동기한을 여러차례 연장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등 정부의 조직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167]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168]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기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국회는 과거 국무조정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이 조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167) 정부조직관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행정안전부 지침

168) 불가피한 경우 2년 이내(훈령 이상의 법령에 근거한 경우 2년 이상)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관련 국회 지적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2020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연장된 운영 기한(2022년 6월) 도래 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주의)
2021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2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 추진단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시정)
2023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제도개선)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무조정실은 2025년 상반기에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 지속여부 및 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채택한 바 있음.

- 다만, 국무조정실은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으로 정규 직제화 등 조직개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 지속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뒤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국내여비 편성 부족으로 다른 비목 조정 문제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에는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다른 비목으로부터 조정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일반수용비로부터 2,400만원,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일반수용비 등 4개 비목으로부터 각각 4,800만원, 3,800만원을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관련 국회 지적사항>

연도	구분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후 예산액
			증	감	
2022년	일반수용비 (210-01)	87,000 예비비(17,000포함)		△24,000	63,000
	국내여비 (220-01)	102,000 예비비(49,000포함)	24,000		126,000
2023년	일반수용비 (210-01)	60,000		△18,000	42,000
	공공요금 (210-02)	59,000		△4,000	55,000
	특근매식비 (210-05)	13,000		△6,000	7,000
	임차료 (210-07)	224,000		△20,000	204,000
	국내여비 (220-01)	105,000	48,000		153,000
2024년	일반수용비 (210-01)	49,504		△13,500	36,004
	공공요금 (210-02)	59,000		△4,000	55,000
	특근매식비 (210-05)	10,000		△6,500	3,500
	임차료 (210-07)	215,000		△14,000	201,000
	국내여비 (220-01)	130,000	38,000		168,000

(자료: 국무조정실)

○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내여비의 적정한 수준의 집행이 필요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조정 등을 통해 국내여비를 추가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비목별 편성액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연례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을 전제로,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공통: 연구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각각 3년인 원장 1명과 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169]

○ 이 중 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8조의2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되 구체적인 임명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17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3조에서는 연구기관의 감사는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의결을

169)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70)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171]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회 포함 25개 기관(부설연구기관 제외)에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감사는 24명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사 현황>

기관명	감사	임명일	임기종료일
연구회	한경필	2024. 12. 13.	2027. 12. 12.
건축공간연구원	천명환	2020. 11. 20.	2023. 11. 19.(임기계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영재	2024. 11. 21.	2027. 11. 20.
국토연구원	김정훈	2023 .9 .21.	2026. 9.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승관	2024. 11. 21.	2027. 11. 20.
산업연구원	박홍서	2024. 12. 19.	2027. 12. 18.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원일	2023. 4. 27.	2026. 4.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엽	2022. 12. 1.	2025. 11. 30.
통일연구원	정준희	2023. 11. 16.	2026. 11. 15.
한국개발연구원	김한석	2023. 4. 27.	2026. 4. 26.
한국교육개발원	민용식	2024. 11. 21.	2027. 11.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충연	2024. 12. 19.	2027. 12. 18.
한국교통연구원	김지현	2021. 6. 14.	2024. 6. 13.(임기계속)
한국노동연구원	엄상민	2023. 2. 13.	2026. 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은숙	2021. 2. 1.	2024. 1. 31.(임기계속)
한국법제연구원	백경미	2021. 2. 22.	2024. 2. 21.(임기계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연심	2021. 7. 12.	2024. 7. 11.(임기계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미	2020. 9. 25.	2023. 9. 24.(임기계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국	2024. 11. 21.	2027. 11. 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종식	2024. 11. 21.	2027. 11.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성춘	2021. 5. 3.	2024. 5. 2.(임기계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홍철	2024. 11. 21.	2027. 11. 20.
한국행정연구원	공석(2024. 10. 4. 임기종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지봉	2022. 2. 28.	2025. 2. 27.(임기계속)
한국환경연구원	정복영	2024. 12. 19.	2027. 12. 18.

주: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8개 기관의 감사는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정관에 따라 후임자의 임명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 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171) 제43조(연구기관 감사의 선임) ① 연구기관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2.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
②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임감사 선임의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원장선임 절차를 준용한다.

□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기관마다 감사(監事)를 두지 않고 연구회에만 감사위원회를 두어 감사(監査)를 실시하고 있음.

○ 과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들처럼 개별적으로 감사(監事)를 두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

첫째,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임. 즉, 종전의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할 경우 적극적인 면책을 통해 연구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예방 감사 중심의 감사 인력 운용과 함께, 감사원·연구회·기관 등 3단계 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수감 피로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둘째, 감사의 공정성 제고임. 연구기관 자체감사는 구성원 간 유대관계나 업무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감사가 어렵고 감사기법 도입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감사의 독립성과 자원의 효율성 추구임. 개별 연구기관에 소속된 감사와 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감사 인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는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연구회에 통합감사를 두어 각 연구기관에 분산된 감사 인력과 이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매우 유사한 목적을 띠고 있고,[172] 각각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두어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감사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통합 감사조직을 통해 연구회 내 상시적인 감사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현 제도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 임명 지연에 따른 자체감사의 효능성 저하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음.

○ 아울러 감사처분은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

172) 두 법의 목적은 매우유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 장치를 두어 감사권의 일원화에 따른 연구회 이사장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한편,

자체감사를 폐지하고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감사조직을 연구회에 두는 만큼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체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통합 감사 기능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일부 연구기관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제도설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구기관들은 현 자체감사가 기관별·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연구회에 통합 감사조직을 두면 개별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일부 연구기관들은 통합 감사조직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무조정실 감사 등은 폐지함으로써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함.

□ 결국, 감사제도의 설계는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 출연연구기관 운용의 정합성·통일성, 감사의 공정성·효율성, 기관운영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 공통: 수의계약 비중 축소 및 규정 정비 필요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173]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의 계약이거나, 1억원 이하이더라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 등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제5항[174]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경쟁을 계약의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모든 자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국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며,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

173)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7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유발할 수 있는 유착이나 부정청탁으로부터 계약체결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러나 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상당수의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계약방식을 실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대부분의 계약을 일반경쟁보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 먼저, 기관의 2024년 한해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건축연구원 98.1%, 한국교육개발원 9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6%, KDI대학원 96.5%, 국토연구원 96.3% 등 상당수의 기관이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관의 2024년 한해 전체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노동연구원 95.6%, KDI 81.9%, 보건사회연구원 8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9.5% 등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이처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상당수가 비교적 소액이거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정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비록 법정 예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임.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서도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연례적이고 과도한 수의계약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수의계약 비중>

기관	수의계약 건수 비중					수의계약 금액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연구회	95.6	96.6	94.5	88.5	89.3	89.6	97.6	84.4	73.3	77.3
과학	99.2	97.1	93.7	95.5	90.8	88.5	79.3	62.6	66.7	51.8
국토	92.4	94.2	91.7	96.1	96.3	61.2	57.4	50.9	62.6	62.8
대외	95.4	92.8	94.9	98.7	96.6	50.2	69.3	70.2	91.0	79.5
산업	83.5	80.2	87.9	86.6	81.4	62.9	55.4	70	62.4	60.4
에너지	93.3	94.3	95.7	93.3	92.0	60.4	69.1	68.3	54.7	64.2
정보	82.1	81.5	81.6	81.3	72.3	62.2	64.4	68.5	65.5	55.3
통일	100	96	97.2	96.7	94.1	100	82.4	89	68.6	62.7
KDI	85.2	80.4	86.5	87.7	94.9	48.4	47.5	55.1	70.4	81.9
교육	90.3	93.4	92.7	92.7	96.8	49.4	64.9	69.1	56.9	55.3
평가원	86.7	88.4	88.5	84.0	89.6	77.9	75.3	68.5	48.0	67.5
교통	70.1	63.5	67.0	65.8	62.4	20.8	25.8	24.8	30.7	24.9
노동	96.8	96.0	93.8	96.8	93.5	84.9	89.2	87.5	90.4	95.6
농촌	88.6	87.7	85.7	85.1	83.3	52.3	43.6	41.4	44.3	34.6
법제	93.9	93.5	94.8	96.3	95.5	90.3	81.2	84.2	91.2	78.5
보건	93.1	90.2	95.0	94.3	94.6	73.5	71.5	86.6	72.7	81.3
여성	92.6	91.6	93.4	92.0	88.3	57.6	60.1	56.3	61.8	48.2
조세	31.4	34.5	45.7	41.1	29.1	18.1	25.2	27.9	44.4	45.2
직능연	81.3	88.7	87.6	82.6	83.4	43.6	57.0	54.2	46.1	35.2
청소년	93.3	95.3	93.2	92.7	90.6	82.9	83.2	84.9	58.8	73.3
해양	93.5	88.8	88.5	85.2	79.1	96.1	61.5	70.6	65.6	61.1
행정	93.9	92.8	92.3	89.1	80.6	57.8	60.5	56.3	49.4	45.0
형사	83.8	88.7	86.6	81.3	91.1	49.0	52.2	58.8	36.3	34.4
환경	97.2	98.4	96.9	95.6	95.0	72.0	85.4	95.5	85.1	84.6
건축	97.8	98.1	100.0	97.3	98.1	91.1	75.9	100.0	93.8	94.2
대학원	97.2	97.4	92.3	90.8	96.5	90.0	88.3	21.8	46.2	83.3
육아	93.0	88.5	92.7	94.9	89.6	58.5	34.2	49.6	53.7	66.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둘째, 일부 연구기관들의 계약 관련 내부규정이나 해석 기준은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먼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은 회계규정 제96조제4호에서 '예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 용역'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로서 복수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175] 산업연구원은 내부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기만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벗어난 계약규정을 운용하고 있음.[176]

□ 셋째,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177]에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됨.

---

175)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176) **'산업연구원 연구사업수행규칙'** 제30조(수의계약 선정 및 관리) ①위탁연구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본(本) 연구과제의 위탁사항이 학술연구용역과 관련성이 낮은 구매, 시설공사, 행사대행 등인 경우 회계규정 일반계약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위탁연구과제의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위탁연구과제의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탁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단체,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나. 위탁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
다.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177) 동인사회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조합임)

○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은 2023년 퇴직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와 2024회계연도에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한국노동연구원이 퇴직자와 체결한 수의계약 연구 목록>

(단위: 천원)

수의계약명	연구기간	금액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의 반영 및 효과성 모니터링 연구	2024. 9. 12 ~ 2024. 12. 11	29,900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분석	2024. 4. 26 ~ 2024. 7. 23	9,5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수탁과제 수행 경험과 퇴직 인력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하였다는 입장이나, 퇴직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위 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규정[178]의 예를 참고하여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 등 내부규정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봄.

17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약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3(수의계약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회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 또는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연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통: 결산잉여금 과다

□ 결산잉여금이란 수입결산액에서 지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함.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 2024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12개 기관으로 총 324억 4,600만원임.

○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억 8,3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71억 9,800만원, 육아정책연구소 65억 8,6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억 8,700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억 700만원 등임.

<2024회계연도 기관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결산		
	예산(A)	결산(B)	증감(B-A)
합 계	1,162,027	1,194,473	32,446
0. 연구회	27,629	27,343	△286
연구기관	1,134,398	1,167,131	32,733
1. 과학	27,243	26,653	△590
2. 국토	45,768	46,696	928
3. 대외	36,883	36,352	△531
4. 산업	43,949	38,793	△5,156
5. 에너지	30,975	33,339	2,363
6. 정보	35,166	36,601	1,434
7. 통일	15,540	15,535	△5
8. KDI	84,652	86,988	2,336
8-1. 대학원	39,867	40,600	734
9. 교육	85,692	83,783	△1,909
10. 평가원	167,606	193,490	25,883
11. 교통	55,771	62,969	7,198
12. 노동	28,114	25,103	△3,011
13. 농촌	51,701	47,399	△4,303
14. 법제	21,644	21,761	117
15. 보건	41,739	37,794	△3,945
15-1. 육아	11,385	17,971	6,586
16. 여성	25,141	23,676	△1,465
17. 조세	56,829	60,936	4,107
18. 직능연	50,728	48,710	△2,018
19. 청소년	17,991	20,887	2,896
20. 해양	55,486	59,673	4,187
21. 행정	21,423	21,235	△189
22. 형사	16,309	15,891	△418
23. 환경	47,482	46,292	△1,190
24. 건축	19,314	18,008	△1,306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2024회계연도에 2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8개 기관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수탁용역수입이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함.

<결산잉여금의 주요 재원>

(단위: 백만원)

연구기관	결산잉여금	수탁용역수입	정부대행사업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정부출연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83	22,928	2,928	422	269	△735
한국교통연구원	7,198	7,553	△433	137	101	△303
육아정책연구소	6,586	6,688	-	32	-	△1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87	4,662	△121	197	124	△6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06	1,708	-	119	5,057	△2,77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896	2,973	-	5	△2	△80
에너지경제연구원	2,363	994	1,774	114	143	△583
한국개발연구원	2,336	4,036	-	329	66	△2,125

주: 상기 열거한 연구기관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 회계연도에 회계 처리 변경에 따라 기타수입이 약 50억 5,700만원 증가하면서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연구기관의 결산잉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연구기관들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출연금으로 부족한 기관운영비는 수탁사업 등을 통해 보충함.

그러나 수입계획에 비하여 실제 수입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기관운영비 중 일부는 사용되지 못하고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된다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게 되므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간접비 과다 계상의 문제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탁용역 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 229억 2,800만원 중 50억 4,600만원이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도 수탁용역 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 75억 5,300만원 중 58억 3,900만원이 간접비 초과분에서 발생하였음.

<기관별 간접비 초과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기관	결산잉여금	수탁용역 수입		
		합계	직접비(비율)	간접비(비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83	22,928	17,882(78%)	5,046(22%)
한국교통연구원	7,198	7,553	1,714(22.7%)	5,839(77.3%)
육아정책연구소	6,586	6,688	5,793(86.6%)	895(1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87	4,662	1,690(42.3%)	2,972(6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06	1,708	1,128(85.9%)	580(14.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896	2,973	1,773(64.0%)	1,200(34.0%)
에너지경제연구원	2,363	994	△55(△5.5%)	1,049(105.5%)
한국개발연구원	2,336	4,036	1,510(37.4%)	2,526(62.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105.5%), 한국교통연구원(7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63.7%), 한국개발연구원(62.6%)은 간접비 초과분에 따른 수탁용역 수입 결산잉여금이 60%를 상회하였음.

간접비의 증가는 실제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비 감소를 초래하고, 과다 계상된 간접비는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채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되므로 각 연구기관은 수탁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 기관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간접비로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공통: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우선고용 의무비율인 전체 고용인원의 6%를 27개 기관 중 7개 기관만이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검토의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6% 이상을 전상군경, 전몰군경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여야 함[179].

---

179)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국가유공자법」은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가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기준을 5%로 하고 있는데, 법 제33조의2제2항과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업종별 비율에 1%p를 더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선고용비율이 전체 고용인원의 6%임.

□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7개 기관만이 우선고용 비율을 준수하였고, 20개 기관은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별표 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 70. 연구개발업 5%

<기관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단위: 명, %)

기관	총 직원수(A)	법정인원 (B=A×6%)	고용인원 (C)	고용률 (C/A)	2024년 신규고용 인원	준수여부
연구회	**94**	**5**	**5**	**5.3**	**-**	**준수**
과학	162	9	3	1.9	0	미준수
국토	**287**	**17**	**17**	**5.9**	**4**	**준수**
대외	**212**	**12**	**13**	**6.1**	**-**	**준수**
산업	222	13	6	2.7	1	미준수
에너지	160	9	7	4.4	0	미준수
정보	181	10	7	3.9	-	미준수
통일	**97**	**5**	**5**	**5.2**	**0**	**준수**
KDI	514	30	7	1.4	1	미준수
교육	447	26	6	1.3	2	미준수
평가원	355	21	6	1.7	0	미준수
교통	258	15	5	1.9	0	미준수
노동	140	8	3	2.1	0	미준수
농촌	250	15	11	4.4	2	미준수
법제	141	8	4	2.8	1	미준수
보건	210	12	9	4.3	1	미준수
여성	128	7	6	4.7	-	미준수
조세	344	20	3	0.9	0	미준수
직능연	**175**	**10**	**10**	**5.7**	**3**	**준수**
청소년	96	5	2	2.1	-	미준수
해양	**291**	**17**	**19**	**6.5**	**1**	**준수**
행정	122	7	2	1.6	-	미준수
형사	101	6	5	5.0	0	미준수
환경	255	15	10	3.9	0	미준수
건축	**112**	**6**	**6**	**5.4**	**0**	**준수**
대학원	116	6	3	2.6	0	미준수
육아	56	3	2	3.6	0	미준수

* 2024. 8.에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업체 등 실태조사서' 기준으로 작성
** 총 직원수(A)는 업체 등 실태조사서 산정인원 기준대로(정규직, 무기계약직, 1년 이상 계약직)에 한하여 작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미준수 기관이 20개 이하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17개 기관은 5년 연속으로 우선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기관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현황>

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구회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과학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국토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대외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산업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에너지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정보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통일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KDI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교육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평가원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교통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노동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농촌	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법제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보건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여성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조세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직능연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청소년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해양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행정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형사	준수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환경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건축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대학원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육아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기관(개)	20	20	19	17	2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이 있었으나, 미준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석·박사급 연구직 채용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인력풀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목표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특히 정부 출연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공통: 능률성과급 체계 개선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에 지급한 능률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을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능률성과급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외에 초과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각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3개 기관이 지급한 바 있음[180].

□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최상·최하 등급 간 차이가 2배 이상 되어야 하고 업적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하며,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이상으로 배분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연구원은 해당연도 능률성과급 미발생 기관임.

□ 그러나 이러한 지급기준과 달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은 5개 등급 미만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배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B등급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음[181].

<5개 기관 2024년도 지급 능률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기관	구분	S	A	B	C	D	합 계
한국교육개발원	인원	-	41	391	44	-	476
	금액	-	151	1,175	120	-	1,446
	비중	-	8.6	82.1	9.3	-	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원	-	35	191	33	-	259
	금액	-	190	588	92	-	870
	비중	-	13.5	73.8	12.7	-	1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원	7	14	91	18	-	130
	금액	33	68	217	106	-	424
	비중	5.4	10.8	70.0	13.8	-	100.0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인원	-	11	68	10	-	89
	금액	-	2	10	2	-	14
	비중	-	12.4	76.4	11.2	-	100.0
한국육아정책연구소	인원	-	1	67	1	-	69
	금액	-	0.06	2	0.01	-	2
	비중	-	3.77	95.4	0.83	-	100

* B등급에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등급 미발생자(휴직자, 중도입사자, 비정규직 등)도 포함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81) B등급에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등급 미발생자(휴직자, 중도입사자, 비정규직 등)도 포함됨에 따라, 능률성과급 지급시에는 B등급에 집중 분포하게 되며, 모수의 증가는 최상·최하 등급의 비중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회측에서 설명함.

□ 또한, 5개 기관의 최상·최하 등급간 차등지급률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최상·최하등급 간 차등지급률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지급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

기관	최상등급 표준지급률(A)	최하등급 표준지급률(B)	최상·최하등급 간 차등지급률(A/B)
한국교육개발원	88.1%	72.1%	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	67%	1.9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1%	99%	1.02
한국육아정책연구소	105%	95%	1.1

* 청소년청책연구원의 경우 연구직에게 수탁사업 수탁기여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어 최상·최하 표준지급률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능률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실적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능률성과급 지급 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은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공통: 연구과제 미배정으로 인한 수시연구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를 의미함[182].

○ 각 연구기관은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수시연구사업비를 편성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있거나 연구기관이 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경우에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음[183].

---

182)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3

1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이월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수시연구과제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시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정·수행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수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경우
3. 연구기관이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
4. 기타 연구기관이 수시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시연구과제는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초과제와 정책과제로 구분하고,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절차에 의거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2) 검토의견

□ 25개 출연연구기관[184]의 2024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현액 37억 9,400만원 중 28억 5,200만원을 집행(75.2%)하고 6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18.2%)하였으며, 2억 5,200만원을 불용(6.6%)[185]되었음.

<2024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	79	-	133	126	7	-
국토연구원	100	65	-	165	165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0	37	-	157	139	18	-
산업연구원	175	275	-	450	246	204	-
에너지경제연구원	80	55	-	135	128	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3	-	20	20	-	-
통일연구원	59	32	-	91	40	51	-
한국개발연구원	145	-	△56	89	22	67	-
한국교육개발원	146	2	-	148	148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9	282	-	441	346	-	95
한국교통연구원	42	14		56	56	-	-
한국노동연구원	92	56	-	148	140	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5	55	-	210	42	13	155
한국법제연구원	70	111		181	112	6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3	30	-	143	116	2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2	40	-	112	91	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9	9	△9	79	57	22	-

18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수시연구사업 없음.
185) 수시연구사업비 불용액은 출연금 미교부액임.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1	50	-	141	116	2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7	5	-	52	51	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9	-	-	109	109	-	-
한국행정연구원	63	61	123	247	151	96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9	27	-	126	84	42	-
한국환경연구원	113	44	-	157	157	-	-
건축공간연구원	63	39	-	102	95	7	-
육아정책연구소	72	30	-	102	95	5	2
합 계	**2,335**	**1,401**	**123 △65**	**3,794**	**2,852**	**690**	**252**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수시연구사업비의 주된 집행 부진 사유는 연구과제가 2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와 수시연구사업비를 연구과제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경우[186]로 판단됨.

<2022년~2024년 수시연구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별)			불용액 (미교부액)
			연도내 집행액	미지급액 (다음연도 집행)	연구기간 미종료	집행 잔액	미배정액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22	158	145	-	-	13	-	-
	2023	152	115	-	-	10	27	-
	2024	133	126	-	-	7	-	-
국토연구원	2022	257	257	-	-	-	-	-
	2023	216	216	-	-	-	-	-
	2024	165	165	-	-	-	-	-

186)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 결산에서는 불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출연연구기관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됨.

기관명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별)			불용액 (미교부액)
			연도내 집행액	미지급액 (다음연도 집행)	연구기간 미종료	집행 잔액	미배정액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22	292	177	-	89	4	22	-
	2023	358	289	-	62	6	1	-
	2024	157	139	-	17	1	-	-
산업연구원	2022	285	127	1	36	35	86	-
	2023	407	244	-	163	-	-	-
	2024	450	246	-	94	56	54	-
에너지경제 연구원	2022	150	88	-	52	10	-	-
	2023	207	147	4	33	23	-	-
	2024	135	127	1	4	3	-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22	38	38	-	-	-	-	-
	2023	29	25	-	-	-	3.5	-
	2024	20	20	-	-	-	-	-
통일연구원	2022	99	80	-	-	6	13	-
	2023	97	85	-	-	3	9	-
	2024	91	40	-	23	6	22	-
한국개발연구원	2022	205	156	-	38	11	-	-
	2023	92	20	-	6	36	30	-
	2024	89	22	-	2	4	61	-
한국교육개발원	2022	364	298	20	-	31	15	-
	2023	285	243	2	-	26	14	-
	2024	148	146	2	-	-	-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22	658	265	-	-	29	364	-
	2023	679	319	-	-	29	331	-
	2024	441	346	-	-	-	-	95
한국교통연구원	2022	61	25	-	36	-	-	-
	2023	84	84	-	-	-	-	-
	2024	56	56	-	-	-	-	-
한국노동연구원	2022	334	199	-	99	26	9	-
	2023	229	165	-	48	16	1	-
	2024	148	140	-	2	5	1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22	328	197	-	118	13	-	-
	2023	278	224	-	19	34	-	-
	2024	210	42	-	13	-	-	155
한국법제연구원	2022	187.3	142	9	10	27	0.3	-
	2023	171	140	2	-	26	3	-
	2024	181	105	7	-	24	45	-

기관명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별)			불용액 (미교부액)
			연도내 집행액	미지급액 (다음연도 집행)	연구기간 미종료	집행 잔액	미배정액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22	123	66	13	37	7	-	-
	2023	207	155	22	21	9	-	-
	2024	143	103	13	27	-	-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22	189	153	-	31	5	-	-
	2023	183	138	-	36	9	-	-
	2024	112	91	-	17	4	-	-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22	79	74	-	-	5	-	-
	2023	83	64	-	-	19	-	-
	2024	79	57	-	1	21	-	-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2022	301	301	-	-	-	-	-
	2023	238	238	-	-	-	-	-
	2024	141	116	-	-	5	20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22	90	85	-	-	5	-	-
	2023	75	61	-	-	14	-	-
	2024	52	51	-	-	1	-	-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22	127	127	-	-	-	-	-
	2023	154	154	-	-	-	-	-
	2024	109	109	-	-	-	-	-
한국행정연구원	2022	152	132	-	-	14	6	-
	2023	188	176	-	-	12	-	-
	2024	247	151	-	-	15	81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2022	129	81	21	13	14	-	-
	2023	149	121	1	23	4	-	-
	2024	126	74	10	36	6	-	-
한국환경연구원	2022	235	228	-	-	7	-	-
	2023	230	217	-	-	14	3	-
	2024	157	157	-	-	-	-	-
건축공간연구원	2022	118	113	-	-	5	-	-
	2023	92	83	-	-	9	-	-
	2024	102	95	-	-	7	-	-
육아정책연구소	2022	176	167	-	-	9	-	-
	2023	184	177	-	-	7	-	-
	2024	102	97	-	-	5	-	2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수시연구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시작하는 과제로 인하여 일정 부분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교부받은 연구비를 연구

과제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을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기본연구→기본연구/연구지원→연구지원/일반사업→일반사업)에 편성하도록 규정[187]하고 있으므로, 집행되지 않은 수시연구사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시연구사업비 외의 기본연구사업비에 편성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집행될 수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구조>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187)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5

구 분	내 용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미배정액의 다음연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미배정액	다음연도 편성 내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	27	수시연구사업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22	수시연구사업비
	2023	1	수시연구사업비
산업연구원	2022	86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2024	54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3.5	수시연구사업비
통일연구원	2022	13	수시연구사업비
	2023	9	수시연구사업비
	2024	22	수시연구사업비
한국개발연구원	2023	30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2024	61	기본연구사업비
한국교육개발원	2022	15	수시연구사업비
	2023	14	수시연구사업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364	수시연구사업비
	2023	331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한국노동연구원	2022	9	수시연구사업비
	2023	1	수시연구사업비
	2024	1	수시연구사업비
한국법제연구원	2022	0.3	수시연구사업비
	2023	3	수시연구사업비
	2024	45	수시연구사업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20	수시연구사업비
한국행정연구원	2022	6	수시연구사업비
	2024	81	수시연구사업비
한국환경연구원	2023	3	수시연구사업비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따라서, 연구과제에 배정하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는 수시연구사업비는 다음연도 기본연구사업의 출연금 규모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연구기관에서 수시연구의 적정한 사업·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산현액 2억 1,0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20.0%에 불과하고,

○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 예산 중 일부를 기본연구사업비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예산현액 대비 24.7%로 저조하였으며[188],

○ 한국행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의 예산 일부를 수시연구사업비로 조정(1억 2,300만원)하였으나 조정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189].

□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함과 함께 수시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88) 당초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 5,600만원을 기본연구사업비로 조정하여 예산현액은 8,9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그 중 2,200만원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24.7%, 예산액 대비 15.2%를 집행한 것임.

189)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을 합한 1억 2,400만원이었으나, 기본연구사업비 1억 2,3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2억 4,700만원으로 늘어났음. 그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과제에 배정하지 않은 8,100만원과 집행잔액 1,500만원을 더한 9,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7.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190].

2) 검토의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6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1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관별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191]>

(단위: 명, %)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4	3	4	3.8	준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5	6	6	**3.43**	**미준수**
국토연구원	362	13	14	3.87	준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8	8	8	3.87	준수
산업연구원	230	8	9.5	4.13	준수
에너지경제연구원	189	7	5.3	**3.17**	**미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3	7	8.3	4.06	준수
통일연구원	105	4	5	4.76	준수
한국개발연구원	507	19	19	**3.68**	**미준수**
한국교육개발원	499	18	16	4.41	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05	19	22	4.36	준수
한국교통연구원	336	12	12.2	3.63	준수
한국노동연구원	147	5	2	**1.89**	**미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1	10	12	4.35	준수
한국법제연구원	147.8	5	6	4.06	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6.9	8.7	8.7	**3.7**	**미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1	4	5	5.34	준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2	13	15	4.26	준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99	10	13	4.51	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5	4.6	5.0	3.83	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30	12	13	3.94	준수
한국행정연구원	164	5.8	4.8	**2.90**	**미준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1	4.6	4.9	4.07	준수
한국환경연구원	324	12	14	4.32	준수

191) 일부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준수이나 의무고용인원에 비해 장애인 고용인원이 적은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보기 때문임.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 단서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중증장애인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함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2)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건축공간연구원	146	5	6	4.11	준수
KDI국제정책대학원	180	7	7.6	4.20	준수
육아정책연구소	65	3	2	3.80	준수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총 6,347만원으로, 법령상 의무 미준수로 인하여 예산 지출이 발생하였음.

<2024년 고용부담금 납입액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고용부담금 납입액*	부담금 납부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00	출연금의 경상운영비
에너지경제연구원	8,399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개발연구원	1,199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노동연구원	31,845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99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행정연구원	18,430	출연금의 경상운영비
합 계	**63,472**	

* 2024년도 부담금에 대한 2025년도 납부 내역임.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단위: 명, %, 천원)

기관명	연도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고용부담금 납입액
한국개발 연구원	2022	485	17	17	3.47	미준수	1,114
	2023	490	17	17	3.52	미준수	-192)
	2024	507	19	19	3.68	미준수	1,199
한국행정 연구원	2022	173.2	5.9	5.9	3.41	미준수	9,117
	2023	178.1	6.4	3.5	1.97	미준수	28,708
	2024	164	5.8	4.8	2.90	미준수	18,430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2024년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193]을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5개 기관의 장애인 직원은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기관은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기관별 2024년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직종	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규직	행정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규직	행정직	3
	무기계약직	행정직	1
국토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연구직/행정직	6
	비정규직	**행정직**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직	행정직	1
	무기계약직	행정직	6
산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5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3**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직	연구직/공무직	2
	비정규직	**행정직**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무기계약직	공무직	1
	비정규직	**연구직/기술직/행정직**	**5**
통일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3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3
	무기계약직	공무직	1
	비정규직	**행정직**	**14**
한국교육개발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5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11**

192) 본원 기준 일부 월 미달 있었으나, 부설 포함 전체 연평균 고용률 충족으로 고용부담금 미부과
193) 2024년 중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 현황으로, 연중 입·퇴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194) 이 중 3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2025년 정규직으로 임용됨.

기관명	구분	직종	인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규직	연구직	1
	무기계약직	행정직	1
	비정규직	**행정직**	**18**
	일용직	**행정직**	**2**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4
	비정규직	**행정직/일용직/인턴**	**10**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2
	비정규직	**행정직**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규직	사무직	1
	무기계약직	공무직	1
	비정규직	**행정직**	**4**
한국법제연구원	정규직	연구직/전문직/행정직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직	전문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2
	비정규직	**연구직/인턴**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비정규직	**행정직**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규직	연구직/공무직	2
	비정규직	**행정직**	**6**[19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비정규직	**연구보조**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2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사무직	1
	비정규직	**단기채용직**	**5**
한국행정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비정규직	**행정직**	**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비정규직	**행정직**	**4**
한국환경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1
	명예직원	연구직	1
	비정규직	**인턴**	**10**
건축공간연구원	정규직	행정직	1
	무기계약직	행정직	2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2**
KDI국제정책대학원	**비정규직**	**비연구직**	**4**
육아정책연구소	**비정규직**	**행정직**	**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개선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공통: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 비목 통일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우수직원 해외연수” 는 매년 연구기관 행정직(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실사하는 사업으로, 연구기관 행정직 중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각 연구기관의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국내교육 및 외국의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방문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 정부정책 기여 우수사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2개 출연연구기관[195]의 우수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2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개요〉

방문국가	기간	주요 방문기관	연수자
A그룹 (네덜란드, 벨기에)	11. 5.~11. 13. (7박 9일)	- 마이크로소프트 (네덜란드) - 연방기획국(벨기에) - 국제전략연구소(네덜란드)	16명
B그룹 (체코, 오스트리아)	11. 6.~11. 14. (7박 9일)	- 정치사회연구소 (체코) - 경제연구소 (체코) - 경제연구소 (오스트리아)	19명

1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외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동 사업은 당해연도 출연금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기관별 참석 규모를 제안하며, 최종 참석 대상은 각 기관의 우수직원(연구지원인력)을 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여 확정하고,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 역시 각 기관이 개별 부담하고 있음.

<우수직원 해외연수 사업 예산 분담 현황>

예산 부담	내용	비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전체 해외연수자에 대한 국내연수(집체교육) 비용 집행	
	- 연구회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해외연수 관련 비용 분담	
개별 연구기관	- 기관별 여비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해외연수 관련 비용 분담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그런데, 2024년 기관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각각 다른 비목에서 집행하였음[19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9개 기관은 국외여비로,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교육훈련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기관별 2024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과목	집행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외여비	5,745

196) 이에 대하여 사업 총괄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어서 세부 비목별 집행이 가능하나, 각 연구기관은 총액을 청구받고 있어 하나의 항목으로 집행되며, 연구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한다고 설명함.

기관명	예산과목	집행액
	공공요금	124
	회의비	2,857
	수용비	1,665
	전문가활용비	2,090
	임차료	2,597
	외부용역비및부담금	5,8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외여비	6,212
국토연구원	교육훈련비	5,885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외여비	5,88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훈련비	12,495
한국개발연구원	교육훈련비	12,424
	국내여비	10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훈련비	12,0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훈련비	12,097
한국교통연구원	교육훈련비	12,559
한국노동연구원	국외여비	5,998
	국외여비	6,3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외여비	12,298
한국법제연구원	국외여비	5,8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여비	12,4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훈련비	6,2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육훈련비	12,42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훈련비	12,5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육훈련비	6,099
한국행정연구원	국외여비	12,5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외부용역비	5,885
한국환경연구원	교육훈련비	5,885
	여비	51
건축공간연구원	공공요금	44
	국외여비	6,071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훈련비	5,885
육아정책연구소	여비	5,885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교육훈련비를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 여비를 연구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출장여비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직원 해외연수의 예산을

각 연구기관이 동일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연구회: 연구개발적립금 운용 개선 검토

□ 연구회는 2013년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체수입의 초과달성, 비용의 절감, 연구개발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개발적립금 개요>

구 분	내 용
○ 연구개발적립금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 - 연구개발 및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초과분, 명시성 이월금을 제외한 지출예산잔액(단, 미충원인력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은 제외),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한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함.
○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처	자체연구사업, 연구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에 지출하되 총 적립금의 40% 이상을 자체연구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이사회 의결로 변경 가능)
- 자체연구사업	연구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기본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연구관련 정보화사업)
- 연구지원·인프라사업	연구지원성격의 사업, 연구(업무)효율성 및 몰입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
- 교육훈련사업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에 사용되는 사업(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연수교육비 등)
- 기관발전사업	기타 연구기관의 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경상적 경비 등)
○ 연구개발적립금 집행잔액의 적정 규모	직전 연도 결산기준 총예산의 3.0% 이내(초과하는 집행잔액분은 정부출연금 예산편성시 연계)

(자료: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 2024회계연도의 연구기관 전체 연구개발적립금은 총 327억 4,300만원이고,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세 차례 의결(3월, 4월, 8월)된 사용승인액은 315억 3,600만원(가용액 대비 96.3%)임.

<2024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기관	가용액	1차 승인(3월)				2차 승인 (4월)								3차 승인 (8월)								1+2+3차 승인액	
		자체연구		기관발전		자체연구		연구지원·인프라		교육훈련		기관발전		자체연구			연구지원·인프라		기관발전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누적비율	건	예산	건	예산		예산	비율
합계(26)	32,743	77	7,665	14	2,879	93	6,764	52	8,570	11	479	19	3,931	7	239	46.5	12	679	6	331		31,536	96.3
과학	785	8	240	1	70	4	130	1	140	-	-	2	205	-	-	47.1	-	-	-	-		785	100.0
국토	2,548	9	960	1	140	2	129	9	834	1	40	4	349	-	-	42.7	1	95	-	-		2,548	100.0
대외	157	1	80	-	-	-	-	-	-	1	40	1	37	-	-	50.8	-	-	-	-		157	100.0
산업	1,106	2	160	1	130	1	330	1	86	-	-	1	400	-	-	44.3	-	-	-	-		1,106	100.0
에너지	999	2	114	1	203	10	288	2	235	-	-	2	114	-	-	40.2	-	-	1	45		999	100.0
정보	1,282	3	127	1	154	6	400	-	-	-	-	1	600	-	-	41.2	-	-	-	-		1,282	100.0
통일	27	1	11	-	-	1	16	-	-	-	-	-	-	-	-	1000	-	-	-	-		27	100.0
KDI	2,064	12	556	1	100	1	50	3	480	2	37	1	178	2	70	40.0	3	105	1	114		1,690	81.9
대학원	1,321	3	450	-	-	1	45	1	363	-	-	1	378	-	-	40.1	-	-	-	-		1,236	93.6
교육	2,142	-	-	2	1,100	-	-	-	-	-	-	1	1,042	-	-	-	-	-	-	-		2,142	100.0
평가원	3,654	2	200	1	100	2	1,262	4	1,965	1	100	-	-	-	-	40.2	1	15	-	-		3,641	99.6
교통	5,968	11	1,923	1	365	14	1,326	5	1,555	-	-	2	158	-	-	61.0	-	-	-	-		5,327	89.3
노동	325	1	100	-	-	2	130	1	30	-	-	-	-	-	-	70.8	2	65	-	-		325	100.0
농촌	763	-	-	-	-	4	210	3	228	-	-	1	70	3	95	40.0	1	46	2	114		763	100.0
법제	1,295	3	300	1	100	3	290	3	555	1	50	-	-	-	-	45.5	-	-	-	-		1,295	100.0
보사	1,085		-	1	90	19	644	2	199	1	20	-	-	2	74	66.2	-	-	1	58		1,085	100.0
육아	62		-	-	-	1	30	1	11	-	-	1	21	-	-	48.7	-	-	-	-		62	100.0
여성	90	2	90	-	-	-	-	-	-	-	-	-	-	-	-	1000	-	-	-	-		90	100.0
조세	211		-	-	-	1	48	1	20	-	-	-	-	-	-	40.7	1	50	-	-		118	55.9
직능	1,257		-	-	-	6	550	1	260	1	68	1	379	-	-	43.8	-	-	-	-		1,257	100.0
청소년	485	1	60	1	160	2	135	4	130	-	-	-	-	-	-	40.2	-	△9	1	9		485	100.0
해양	1,984	6	1,514	-	-	-	-	1	424	1	46	-	-	-	-	76.3	-	-	-	-		1,984	100.0
행정	242	-	-	-	-	2	105	2	137	-	-	-	-	-	-	43.4	-	-	-	-		242	100.0
형사	108	-	-	-	-	1	60	1	34	1	14	-	-	-	-	55.3	-	-	-	-		108	100.0
환경	2,004	6	540	1	167	9	514	4	601	1	63	-	-	-	-	52.6	2	120	-	-		2,004	100.0
건축	778	4	240	-	-	1	72	2	283	-	-	-	-	-	-	40.1	1	183	-	-		778	100.0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24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율	비고
연구기관 합계	31,536	100	
자체연구사업	14,669	46.5	기관 목적에 부합한 연구과제 수행 사업
연구지원·인프라 사업	9,239	29.3	연구기획·학술회의·국제교류 등 연구지원 성격 또는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인프라 개선 등 사업
교육훈련사업	478	1.5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기관발전사업	7,150	22.7	기관장이 기관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연구개발적립금의 적립실태 및 사용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되는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이내 사업 위주로 진행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안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고 기존에 수행하는 기본연구사업과 유사한 연구에 한정될 소지가 있음.

2024회계연도에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수행한 자체연구 178개 과제 중 중·장기 연구과제는 2건(산업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 1건씩 수행)에 불과함.

○ 둘째, 현행 규정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자체연구사업에 40% 이상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을 기관발전사업의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2024회계연도에도 전체 연구개발적립금의 22.7%가 기관발전 사업에 집행되었는데, 산업연구원(47.9%), 정보통신정책연구원(58.8%), 한국교육개발원(100%)의 경우 연구개발적립금의 대부분을 기관발전사업에 집행하였고, 이는 자칫 경상적 경비의 편법적인 증액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

<2024회계연도 기관발전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기관	금액	기관발전 사업
산업연구원	130	북경지원 운영
	400	산업연구원 미래 비전 50주년 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4	청년인턴
	600	ICT 글로벌 컨퍼런스 및 기념행사
한국교육개발원	100	청년인턴
	1,000	차입금 상환
	1,042	차입금 상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셋째, 연구기관별로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도 연구개발적립금의 적정규모를 획일적으로 직전 연도 결산기준 총예산의 3% 이내로 규정하면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연구기관은 쉽게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

또한, 적립금 규모가 큰 기관은 다음연도에 일시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규모가 커져 자칫 관리부실이나 예산의 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적립금 규모가 집행잔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된 집행잔액분에 대해 다음연도 정부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연계(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위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봄.

○ 첫째, 중·장기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개발적립금 총액의 40% 이상을 자체연구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도 사용비율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상 기관발전사업은 단순히 '기타 연구기관의 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구개발적립금의 적정규모를 일괄적으로 직전 연도 결산기준 총예산의 3% 이내로 규정하기보다는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연구개발적립금 규모가 집행 잔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연도 정부출연금에 연계하는 제도도 그 초과분을 출연금과 자체수입의 경우를 분리하여 정함으로써 기관의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 산업연구원[197]: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산업·기술과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산업연구원의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68억 400만원 중 242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16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4,965	24,965	1,839	-	-	26,804	24,261	1,679	864	23,97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산업연구원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198]과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아세안

197) 세부사업: 산업연구원(1535-301)

198)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10개국임.

정책연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추진함.

○ 센터의 2024년 예산액은 7억 4,500만원으로 그 산출 근거는 여비 1억 7,800만원,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억 7,700만원,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1억 5,70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1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센터는 본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연락사무소로 구성되는데, 본부는 아세안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 전략 허브로서, 정책의제 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부처·유관기관 조정, 지식 축적을 담당하는 정책 설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연락사무소는 현지 대사관,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정부, 현지에 진출한 산업계 등과의 대면을 기반으로 한 정보 파악과 사업 협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나아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아세안 현지 연구를 위한 연구 협력 플랫폼 등 현장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본 사업은 2024년 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통보를 받으면서 현지 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지연되었음.

○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현지 연락사무소는 산업연구원 직원 외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에서 각 1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별도정원

승인이 지연되면서 본 사업은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었음.

○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승인이 불허되면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10월에서야 수시배정을 해제하여 예산을 교부받았음.

○ 결국, 현지 연락사무소의 법인 등록이 2024년 12월에 되었고, 정식 개소는 2025년 1월에 이루어졌음.

□ 산업연구원의 본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첫째,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므로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지 연락사무소는 2024년 초 개소하여 맞춤형 정책연구 기획, 아세안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네트워크 조성·지원, 현지 국제행사 및 연구과제 관리, 산업전략 수립, 산업계의 현장 의견 수렴, 국제세미나 실시, 산업별 정책다이얼로그[199]의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4년에는 수시배정 해제 지연에 따라 사업성과 창출이 부진하였고, 2025년 6월이 되어서야 첫 번째 정책다이얼로그(전기차 생태계 다이얼로그)가 진행됨.

199) 정책다이얼로그란, 특정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함.

○ 둘째, 예산 집행율 제고가 필요함.

본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7억 4,500만원이었으나, 수시배정 해제가 2024년 10월에 이루어지면서 실제 교부액이 1억 8,800만원(25.2%)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실집행액이 1억 1,100만원에 그쳐 예산 대비 실집행율이 14.9%임.

○ 셋째, 예산의 적절한 비목편성 및 조정이 필요함.

산업연구원은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각각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예산에서 지급하였음.

산업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면담을 통해 현지 파견자 인건비(파견수당 및 가족교육비), 경상운영비(주택임차료, 이사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최소 인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통해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사업비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인건비 등에 사용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음.

○ 넷째, 파견인력의 구성 측면에서 현지 네트워크 구성 등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과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즉. 공무원 파견이 결렬되면서 예정과 달리 현지사무소에는 산업연구원 직원 외에 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이 각각 1인 파견되었고 이들 직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현지 연락사무소 인력구성 현황>

소속	직위	주요 역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장)	업무총괄 - 대사관 정책지원 -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대응 - 사무소 운영 총괄(행정 및 회계 등)
연구회	전문위원 (파견직원)	연구기획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 국가별 맞춤형 정책연구 기획 -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 아세안 지역 역량 강화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파견직원)	산업협력 및 민간부문 네트워킹 - 산업계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 - 현지 진출 기업 및 한입 기업 등 네크워킹

(자료: 산업연구원)

□ 현 인력은 계획(산업연구원 직원 및 공무원 3인 파견)에 비하여 적다는 점, 연구회 직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나 집행력 및 예산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산업연구원은 본 사업의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개발연구원[200]: 과다한 상품권 구입 및 기념품 제작 주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은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78억 1,100만원 중 417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억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46,106	46,106	1,705	-	-	47,811	43,907	1,779	2,125	47,31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개발,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사업 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음.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4회계연도에 280억 4,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64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원을 불용하였음.

200)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2024회계연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25,608	25,608	2,436	-	-	28,044	26,428	616	1,000	21,40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만 42차례에 걸쳐 약 1억 59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현안 및 경제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1회에 3,950만원의 기프티콘 구매를 집행하는 등 다소 과다한 모바일상품권과 기프티콘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개발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모바일상품권 등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회수	총 집행액
월간 나라경제	12회	700
학술 및 정보교류	11회	10,802
빅테이터와 여론조사를 활용한 경제이슈 분석	7회	21,200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2회	8,880
경제현안 및 경제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6회	42,190
연구기획사업	2회	1,192
학교경제교육사업	1회	900
K-콘텐츠 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1회	4,260
경제 구조개혁의 방향과 전략	1회	4,960
경제교육 및 경제정책정보 제공	1회	10,845
합계	42회	105,50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생일축하용 기프티콘, 명절선물용 온누리상품권 등 직원 복지성 상품권 등은 제외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은 대국민 설문 조사나 전문가 의견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의 구매 횟수나 금액이 다소 과도하고,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조사 참여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이나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구매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집행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4년 한 해에만 69종, 약 8,700만원의 기념품을 제작하였는데,[201]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10종 미만의 기념품을 소액 집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비록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행사를 진행하여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많은 기념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으나,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에서도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만큼 향후 적정한 규모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1)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도 매년 유사한 수준의 기념품을 제작함.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58억 1,200만원 중 25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327	25,327	485	-	-	25,812	25,052	26	734	26,021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회계연도 경상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목으로 포상금을 총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당해 포상금은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에 해당하며, 10년 근속자 8명에게 30만원씩 총 240만원, 20년 근속자 4명에게 40만원씩 총 160만원, 정년(명예)퇴

202)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급되었음.

<최근 5년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액>

구분	근속포상			정년(명예)퇴임포상 (100만원)	지급총액
	10년 (30만원)	20년 (40만원)	30년 (50만원)		
2024년	240만원	160만원	-	600만원	1,000만원
2023년	660만원	200만원	-	600만원	1,460만원
2022년	690만원	400만원	-	800만원	1,890만원
2021년	330만원	80만원	-	-	410만원
2020년	180만원	40만원	-	800만원	1,020만원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203]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204]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정부 지침과 국회 지적사항의 취지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 근속포상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임.

---

203)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8p.

204)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① ~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향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5]: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방안 등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42억 9,400만원 중 238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71	23,871	423	-	-	24,294	23,887	262	145	23,786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 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음.

205) 세부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1546-301)

○ 육아정책연구소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83억 1,800만원 중 80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육아정책연구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8,135	8,135	183	-	-	8,318	8,075	109	134	8,503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206]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1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24개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설연구기관으로서 2005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육아정책연구소의 설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207]임.

206)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7) 제13조의2(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① 연구원은 육아정책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위상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별도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즉,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아닌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소의 출연금도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회계 등의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조직 규모면에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정규 연구인력 38명을 비롯하여 정원 61명의 기관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연구회의 기관평가에서도 다른 법정 연구기관들처럼 독립된 평가대상임.

<부설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의 독립적 특징>

구 분	부 설 기 관
운영규정	· 별도 내부규정
소장 임명	·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운영협의회	· 이사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협의회 규정 (위원장: 소장)
권리·의무/ 독립성·대표성	·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 보유 · 정부(소속부처 및 기재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 국회, 연구회 등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직제	· 육아정책연구소장이 결정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임면, 승진, 전보, 포상, 징계 등)	· 육아정책연구소장 권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및 변경	· 별도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회계 및 결산	· 별도 독립회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하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구 분	부 설 기 관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	· 독립 선정, 계약 및 관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가 연구기관의 설립은 법률 개정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이 법률에 근거 없이 정관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연구기관인 부설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통제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208] 운영의 투명성이나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설연구기관도 그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지역조직의 설립에 관한 입법례[209]처럼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8) 2007년 국토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던 건축도시공간연구소(현 건축공간연구원)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의 증원이 이루어지다 2020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연구기관으로 승격하였음.

209)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10]: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63억 9,900만원 중 150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87	16,087	312	-	16,399	15,078	243	1,078	16,933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2025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해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211]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1억 3,700만원임.

---

210) 세부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2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024회계연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한 계약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JSTOR)	2024-12-23	2025-01-01 2025-12-31	5	이미숙외1인, 유한회사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SAGE외)	2024-12-24	2025-01-01 2025-12-31	105	글렌 알렌 파월, 엡스코코리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Social Science Premium Collection)	2024-12-24	2025-01-01 2025-12-31	21	박찬헌외1인,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코리아주식회사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DBpia)	2024-12-24	2025-01-01 2025-12-31	6	최순일, ㈜누리미디어
합 계			13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이를 위해 기관고유사업인 28개 내역사업에 편성된 2024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예산 1억 3,700만원을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한 2024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집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집행금액	집행일자	사업내역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DB) 구독 계약(DBpia)	2,579,840	2024.12.27.	2024년 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사업-연구지원사업
	3,532,160	2024.12.27.	지역의 성별 특성과 인구 감소의 관계에 관한 -기본연구

구분	집행금액	집행일자	사업내역
소계	6,112,000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DB) 구독 계약(JSTOR)	3,177,000	2024.12.26.	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창작 및 전문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기본연구
	5,000	2024.12.26.	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창작 및 전문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기본연구
	992,000	2024.12.26.	양성평등정책포럼-운영비-연구지원사업
	837,760	2024.12.26.	연구성과 및 평가관리-연구지원사업
	10,441	2024.12.26.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Ⅰ)-일반연구사업비
소계	5,022,201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DB) 구독 계약(SAGE외)	16,460,530	2024.12.26.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일반연구사업비
	10,000	2024.12.26.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_일반연구사업비
	15,523,740	2024.12.26.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일반연구사업비
	13,801,100	2024.12.26.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Ⅲ): 정부기관의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 모형 개발-일반연구사업비
	12,953,380	2024.12.26.	2024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일반연구사업비
	8,513,600	2024.12.26.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Ⅲ):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략-일반연구사업비
	8,456,250	2024.12.26.	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Ⅱ):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일반연구사업비
	7,466,880	2024.12.26.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일반연구사업비
	5,990,000	2024.12.26.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Ⅲ):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일반연구사업비
	4,300,000	2024.12.26.	연구기획 및 경영혁신(예산제도센터)-연구지원사업
	3,800,000	2024.12.26.	기업 내 공정과 성평등 구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와 정책방안-기본연구
	3,720,980	2024.12.26.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기본연구
	3,517,497	2024.12.26.	2024년 성평등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일반연구사업비
소계	104,513,957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DB) 구독	3,345,404	2024.12.26.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Ⅱ)-일반연구사업비
	54,596	2024.12.26.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Ⅱ)-일반연구사업비

구분	집행금액	집행일자	사업내역
계약(Social Science Premium Collection)	2,792,400	2024.12.26.	청년세대의 성별 디지털안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연구-기본연구
	2,400,000	2024.12.26.	청년 정치인의 성평등 의식과 정치문화 변화에 대한 전망과 과제-기본연구
	2,300,000	2024.12.26.	여성 디지털 핵심인재 교육훈련 개선 및 진로교육 방안-기본연구
	2,200,000	2024.12.26.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기본연구
	2,200,000	2024.12.26.	여성노숙인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기본연구
	2,101,845	2024.12.26.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비교 연구-기본연구
	1,956,000	2024.12.26.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연구지원사업
	1,380,460	2024.12.26.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연구: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와 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 연구-일반연구사업비
	306,970	2024.12.26.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연구: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일반연구사업비
	142,039	2024.12.26.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Ⅰ)-일반연구사업비
	15,853	2024.12.26.	연구성과 및 평가관리-연구지원사업
소계	21,195,56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정보활동비란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를 말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의 연구정보활동경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등으로 구성됨.

□ 전자저널 및 학술DB구독 계약은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학술정보

DB사용료에 해당하여 연구정보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나, 「국가재정법」[212]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년도 사용 계약을 위해 2024회계연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임.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은 정부 세입·세출의 이연 처리 등으로 인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사업기간과 회계기간의 불일치는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212)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213]: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집행 개선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현액 226억 8,500만원 중 21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8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2,543	22,543	142	-	22,685	21,684	133	859	23,586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검토의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 12억 5,700만원 중 자체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인프라 구축 사업, 교육훈련 사업, 기관발전 사업 등에 8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원을 이월하여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13) 세부사업: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49-301)

<2024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1,257	1,257	-	-	1,257	898	335	24	688
자체연구개발	550	550	-	-	550	377	163	10	330
연구지원인프라	260	260	-	-	260	258	-	2	145
교육훈련	68	68	-	-	68	56	-	12	68
기관발전	379	379	-	-	379	207	172	-	145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근 5년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집행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연구개발적립금 교육훈련사업 예산 6,800만원 중 퇴직예정자 6인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 귀산촌 임업후계자 과정, 목공 전문 과정 등에 797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4년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	대상	집행액	프로그램 내용
2024	연구개발적립금-교육훈련사업	68,000	퇴직예정자 6인	800	전화 영어
				380	귀산촌 임업후계자 과정
				1,500	목공 전문 과정
				490	한식 심화 과정
				1,600	광고사진 전문과정(2단계)
				400	전화 영어
				800	면접관 자격 인증 과정
				1,600	광고사진 전문과정(2단계)
				400	산림기사과정
합계				7,970	
2023	연구개발적립금-교육훈련사업	68,000	퇴직예정자 9인	800	드론 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과정
				68	재테크·부동산 공·경매
				57	알아두면 든든한 생활법령 정보
				50	정부 지원을 활용한 창업 성공 전략
				800	전화 영어
				50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버 스쿨
				50	슬기로운 자산관리
				50	심리명리학
				50	부동산 재테크와 자산관리
				270	부동산 투자의 사례분석 및 실전투자
				50	세종시에서 빛나는 사회적 기업가 되기
				50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버 교실
				50	심리 명리학의 기초학습
				50	알아두면 든든한 생활법령 정보
				800	전화영어
				1,200	광고사진 전문과정(1단계)
				50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1,200	전화 영어
				800	전화 영어
				1,200	광고사진 전문과정 (1단계)
				230	영어 교육(오픽)
				450	바리스타 교육과정
				104	면접관 기법향상을 위한 직무적성 교육
합계				8,479	
2022	연구개발적립금-교육훈련사업	60,000	퇴직예정자 3인	810	손해평가사 교육과정
				133	화상 영어 회화
				1,600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199	영어 교육(토익)

구분	사업명	예산	대상	집행액	프로그램 내용
합계				2,742	
2021	연구개발 적립금- 교육훈련 사업	58,000	퇴직 예정자 5인	960	베이킹 전문과정
				660	목공 과정
				380	바리스타 전문과정
				800	전화 영어
				367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60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버
				180	유튜브 크리에이터
				1,950	한식 요리 심화반
				800	전화영어
				440	공공기관 말하기, 글쓰기 기법 향상 세미나
				340	전자회로, 신호 및 시스템
합계				6,937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또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부족한 퇴직급여충담금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214)215).

214)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개발사업
2. (삭제)
3. 교육훈련사업
4. 기관발전사업(경직성 경상비 성격 사업 제외)
5.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④ 사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1항제1호의 자체연구개발사업 비중을 당해 연도 적립금 총 사용금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215) 2024.2.29. 개정전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구분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운영비 성격[216]으로 연구 재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구분	내용
자체연구개발사업	○ 연구기관 설비목적에 부합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연구기획 및 정책연구, KDI대학원 교육사업 포함)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연구지원성격 사업 ○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고도화(지식정보시스템, 행정(인사·채용, 전자증빙시스템 등)) ○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환경 개선(단, 연례적 추진 경상비적 성격 제외)
교육훈련사업	**○ 연구기관 소속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 사업**
기관발전사업	○ 기타 연구기관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 경제인문사회계 청년인턴사업 수행 ○ 지방이전경비 ■ 건물 원상복구비용 ■ 장기차입금 상환 ■ 출퇴근 버스 구입 및 운영경비 ■ 종전부동산 매각 감정평가비 ■ 연구·행정공간, 시설·장비 등 이전 ■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아웃소싱 경비, 공공요금 및 자산관리유지비 등 증가 비용 ■ 지방이전 이사비용 부족분 ■ 기관장 관사 구입, 직원사택 임차 ○ 기관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등

○ 즉,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사업 등을

216) 「2024회계연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101p.

통한 연구개발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217], 이를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를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217) 「연구기관 회계처리 및 결산지침」 제21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8. 연구개발적립금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기관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 연구재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하며, 기중 변동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6. 한국환경연구원[218]: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행태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19억 4,200만원 중 210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환경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환경연구원	21,745	21,745	197	-	-	21,942	21,015	161	789	22,90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18) 세부사업: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2) 검토의견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행태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219]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포함됨.[22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에 속하는데,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기관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221]

□ 한국환경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 714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전액 정규직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하였음.

---

219)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2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2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전액을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한 것은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원인력은 연구수당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우수한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액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환경연구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지원인력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수 지원인력의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급대상도 일정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로 기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정책교육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필요

□ 한국환경연구원은 2001년부터 우수 연구성과를 이러닝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환경분야의 지식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환경정책교육원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72	272	15	-	287	277	1	-	272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교육원 과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환경정책 이해 증진 교육을 제공하는 입문과정, 환경 종사자나 관련 학습자를 위한 실무 강의 등을 제공하는 일반과정, 환경 분야 종사자, 연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한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는 심화과정, 본 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과정을 대학교, 기관, 기업의 교육 특성에 맞춰 선택하거나 조정하여 제공하는 맞춤형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에는 입문과정 58과목, 일반과정 15과목, 심화과정 8과목 등 총 81과목을 운영하였고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61건을 운영하였음.

<환경정책교육원 교육과정>

구분		대상	역할
입문과정 (58과목)	(1~3차시) 환경 의식 제고와 환경정보 불평등 해소	전 국민	-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국민의 환경정책 이해 증진 교육 제공 - 대상별/수준별로 차별화된 맞춤 콘텐츠 보급 - 연구보고서, 환경포럼, 환경정책연구 등 연구 성과물에 기반을 둔 교육 제공 - 환경영향평가 등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제공
일반과정 (15과목)	(6~8차시) 환경 이해 증진 및 환경정보 제공	일반인 (성인 등)	- 환경 종사자나 관련 학습자를 위한 실무 강의 제공 - 올바른 국토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교양 수준의 교육 - 일반 시민(성인) 대상 환경의식 고취 및 본원의 연구성과 홍보 - 환경영향평가 인식 확대를 위한 개론 수준 교육
심화과정 (8과목)	(16차시 분량) 환경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대상 환경 소통	공무원, 대학(원)생 등 환경 전문가	- 환경 분야 종사자, 연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KEI 연구 성과의 소통 창구 - 환경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교육 운영 - 각종 환경정책 관련 기초 정보 및 데이터에 기반을 둔 환경교육
	환경영향평가 전문 지식 제공	환경영향평가 업체, 기타 산업체	- 평가서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 - 평가서 작성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교육제공 등 환경영향평가사 실무교육
맞춤형 교육과정 (61건)	환경 인식 제고	기관, 기업, 대학, 교사, 학생	- 본 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과정을 대학교, 기관, 기업의교육 특성에 맞춰 선택하거나 조정하여 제공 - 교육 차시 단위로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고 과목 명칭도 다양하게 신청 가능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최근 4년간 과정별 신청·수료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신청 및 수료 인원이 각각 56,309명, 45,244명으로 2021년 50,056명, 30,415명 대비 각각 12.5%(6,253명), 48.8%(14,829명)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과정별 신청 · 수료 현황>

구분		신청			수료			수료율(%)		
		일반 시민	공무원 등	소계	일반 시민	공무원 등	소계	일반 시민	공무원 등	전체
21	입문	22,978 (64.3)	12,740 (35.7)	35,718 (100)	10,797 (59.1)	7,460 (40.9)	18,257 (100)	47.0	58.6	51.1
	일반	5,545 (40.8)	8,046 (59.2)	13,591 (100)	7,365 (61.8)	4,543 (38.2)	11,908 (100)	132.8	56.5	87.6
	심화	546 (73.1)	201 (26.9)	747 (100)	177 (70.8)	73 (29.2)	250 (100)	32.4	36.3	33.5
	소계	**29,069 (58.1)**	**20,987 (41.9)**	**50,056 (100)**	**18,339 (60.3)**	**12,076 (39.7)**	**30,415 (100)**	**63.1**	**57.5**	**60.8**
22	입문	37,020 (92.7)	2,894 (7.3)	39,914 (100)	17,125 (89.9)	1,928 (10.1)	19,053 (100)	46.3	66.6	47.7
	일반	6,315 (86.9)	949 (13.1)	7,264 (100)	4,666 (88.4)	615 (11.6)	5,281 (100)	73.9	64.8	72.7
	심화	976 (78.1)	273 (21.9)	1,249 (100)	544 (70.9)	223 (29.1)	767 (100)	55.7	81.7	61.4
	소계	**44,311 (91.5)**	**4,116 (8.5)**	**48,427 (100)**	**22,335 (89.0)**	**2,766 (11.0)**	**25,101 (100)**	**50.4**	**67.2**	**51.8**
23	입문	17,518 (52.3)	16,009 (47.7)	33,527 (100)	13,645 (54.7)	11,278 (45.3)	24,923 (100)	77.9	70.4	74.3
	일반	12,020 (88.2)	1,603 (11.8)	13,623 (100)	8,182 (88.5)	1,064 (11.5)	9,246	68.1	66.4	67.9
	심화	1,409 (86.7)	216 (13.3)	1,625 (100)	738 (83.8)	143 (16.2)	881 (100)	52.4	66.2	54.2
	소계	**30,947 (63.4)**	**17,828 (36.6)**	**48,775 (100)**	**22,565 (64.4)**	**12,485 (35.6)**	**35,050 (100)**	**72.9**	**70.0**	**71.9**
24	입문	4,203 (10.1)	37,299 (89.9)	41,502 (100)	2,753 (8.0)	31,475 (92.0)	34,228 (100)	65.5	84.4	82.5
	일반	12,081 (92.8)	942 (7.2)	13,023 (100)	9,262 (92.8)	717 (7.2)	9,979 (100)	76.7	76.1	76.6
	심화	1,685 (94.5)	99 (5.5)	1,784 (100)	956 (92.2)	81 (7.8)	1,037 (100)	56.7	81.8	58.1
	소계	**17,969 (31.9)**	**38,340 (68.1)**	**56,309 (100)**	**12,971 (28.7)**	**32,273 (71.3)**	**45,244 (100)**	**72.2**	**84.2**	**80.3**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그러나, 일반시민은 2024년 신청인원과 수료인원이 각각 17,969명, 12,971명으로 2021년 29,069명, 18,339명 대비 각각 38.2%(△11,100명), 29.3%(△5,368명)가 감소하였음.

□ 이러한 일반시민의 교육원 신청 및 수료인원의 감소는 우리나라 환경문제 및 관련 정책의 국민 소통과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 환경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육원의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교육원의 2024회계연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80만원 중 264만원을 집행하고, 500매의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배부·홍보하여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교육원 2024회계연도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잔액	비고
수용비 (브로슈어 제작)	480	264	136	2024.11.12. 500부 제작 배부: 맞춤형 교육 수요기관(① 기초지자체 150부, ② 광역지자체 80부, ③ 공공기관 50부, ④ 민간 50부) 에 330부 배부, ⑤ 세미나 포럼 50부, ⑥ 각종회의 20부, ⑦ 교육박람회 20부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따라서, 한국환경연구원은 교육원 운영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의 참여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안내 브로슈어 제작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의 교육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38억 1,200만원 중 17억 2,9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4%)되고 미수납액 20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음.

□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을 위반한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7,351억 8,200만원 중 1,696억 2,700만원이 수납(수납률 23.1%)되고 불납결손액 3억 9,600만원, 미수납액 5,651억 5,8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가산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데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101억 8,400만원 중 2억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2.7%)되고 미수납액 99억 1,000만이 발생하였음.

<2024 회계연도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2,705	2,705	-	2,705	3,812	1,729	2,083	-	2,705
과징금	445,557	445,557	-	445,557	735,182	169,627	565,158	396	534,811
가산금	473	473	-	473	10,184	274	9,910	-	49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과태료는 각각 67.5%, 52.9%, 53.7%, 45.3%이고, 과징금은 각각 59.8%, 55.7%, 65.9%, 23.1%이며, 가산금은 각각 1.9%, 6.1%, 3.2%, 2.7%로서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 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경우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기 때문임.

○ 과징금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체납 과징금이 36.5%이고, 과태료는 54%에 달함.

<체납 발생 경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체납발생경과기간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1년 미만	26	5,147	6.5	131	251	12.7	6	210	2.1
1년 이상~2년 미만	26	13,563	17.2	57	152	7.7	3	2	0.0
2년 이상~3년 미만	34	17,308	22.0	51	100	5.1	7	110	1.1
3년 이상~4년 미만	26	10,887	13.8	45	188	9.5	135	9,525	96.1
4년 이상~5년 미만	21	3,083	3.9	104	219	11.1	4	0.1	0.0
5년 이상	116	28,753	36.5	324	1,069	54.0	30	63	0.6
총 계	249	78,741	100.0	711	1,980	100.0	185	9,910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의 경우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수납률 저조의 주요 원인임.

○ 징벌적 과징금이 전체 미수납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로서 이는 사업자의 재정 여력 부족, 소송진행 등의 사유에 따른 것임.

<과징금의 형태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건수
계	735,182	169,627	565,158	71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15,744	11,740	4,004	4
징벌적 과징금	719,438	157,887	561,154	710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해당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과태료·가산금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고, 세입 예산으로서 안정적 지출의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높은 수납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회계연도에 완료한 연구개발과제는 25건으로 총 예산액 9억 4,500만원 중 9억 3,100만원을 집행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222]의

---

222)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공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연구개발 과제 29건 중 8건만 공개(공개율 28%)하였고, 2022년에는 31건 중 5건(16%), 2023년에는 29건 중 6건(21%), 2024년에는 25건 중 4건(16%)만 공개하였음.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 공개 수준 추이>

(단위: 건, %, 백만원)

연도	연구개발과제건수			해당연도 과제 완료			총 예산	
	수의계약 (비율)	경쟁입찰 (비율)	합계 (비율)	공개 (비율)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비율)	합계 (비율)	예산	집행
2020년	16(73)	6(27)	22(100)	10(45)	12(55)	22(100)	1,009	992
2021년	20(69)	9(31)	29(100)	8(28)	21(72)	29(100)	1,305	1,245
2022년	24(77)	7(23)	31(100)	5(16)	26(84)	31(100)	1,463	1,429
2023년	13(45)	16(55)	29(100)	6(21)	23(79)	29(100)	1,711	1,339
2024년	15(60)	10(40)	25(100)	4(16)	17(71)	25(100)	945	9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4년 종료과제의 연구결과 공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공개여부	비공개기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40	40		2026.4.30.
2024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66	66	공개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30	30		2026.3.12.
전속대리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35	35		2026.6.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40	40	공개	
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 합리화 관련 연구	41	40		2026.12.4.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50	50		2026.10.8.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20	20		2026.12.22.
필수품목 관련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40	40	공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49	49		2026.9.29.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계약 관련 법제 개편연구	40	40		2027.1.14.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 위반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0	40		2026.12.26.
AI 시장 실태조사 연구	60	60		2026.3.28.
주류산업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50	50		2026.11.4.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35	31		2026.4.11.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방법 연구	40	40	공개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 연구	20	20		2027.2.13.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35	35		2026.7.22.
해외 경쟁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 집행 동향 연구	18	18		2027.2.21.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방안 연구	34	34		2026.12.24.
의료기기 간접 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	50	41		2026.3.26.
기후테크산업 부문 경쟁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43	43		2029.11.30.
라이브 커머스 시장 실태 연구	13	13		2027.1.12.
사업기회 제공행위 적용 범위와 적용요건 등 연구	30	30		2026.12.3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 연구	27	27		2027.4.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료 과제라 하더라도 기관 내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특정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시기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 또는 연구결과에 기업의 민감한 영업 정보가 포함되어 외부 공개 시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연구결과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연구결과는 공개가 원칙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연구결과 대부분을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오히려 실태조사 성격이 짙은 연구과제는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연구 결과물을 개방하고, 연구에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국가 규제의 방향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규제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봄.

3.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상용임금(110-03)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를 말함.[223]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약 9억 1,469만원의 상용임금을 편성하는 등 2024회계연도에 총 11개 세부사업에서 약 15억7,400만원의 상용임금을 편성하여 1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600만원을 불용함.

22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p.50

<2024회계연도 상용임금(110-03)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915	915	-	△1	-	914	756	-	158	879
공정거래지원 -공정거래 정책 알리기	138	138	-	△9	-	129	128	-	1	142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7	37	-	-	-	37	32	-	4	38
전산운영경비	72	72	-	-	-	72	53	-	19	75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42	42	-	-	-	42	34	-	8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29	29	-	-	-	29	29	-	-	3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33	33	-	-	-	33	30	-	3	33
소비자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229	229	-	-	-	229	198	-	31	236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46	46	-	-	-	46	36	-	10	47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9	29	-	1	-	30	30	-	-	30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3	13	-	-	-	13	11	-	2	14
합계	1,583	1,583	-	△9	-	1,574	1,337	-	236	1,52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서는 상용임금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고, 연도 중 인력증원, 별도 수당 신설, 단가인상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건비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2월까지 기관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24]

○ 기관별 집행계획에는 사업별·직종별 정원과 현원 및 예산 현황 등을 반영한 정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사용자인 국가가 지급의무를 지는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상용임금 집행계획의 주요 목적이 연도 중 인건비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는 점, 집행지침은 모든 행정부처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224) p.51

4. 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억 9,900만원 중 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불용함.

□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등의 개선과 경제분석 및 경쟁영향평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9억 9,200만원 중 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을 불용함.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시장 감시를 통한 경쟁제한적 거래행태의 시정과 왜곡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ICT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3억 2,600만원 중 1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800만원을 불용함.

□ “카르텔 환경개선”은 카르텔 발생의 예방, 적발 및 시장, 입찰질서의 공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억 8,8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함.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쟁정책국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371	371	-	28	-	399	378	-	21	376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992					992	901		91	629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320	3,320	9	△3	-	3,326	1,738	-	1,588	3,470
카르텔 환경개선	391	391	-	△3	-	388	373	-	15	8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 국제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국외 공무출장을 실시하면서 동일한 목적의 국외 출장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성 예산을 혼합하여 집행함.

○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에서 총 약 5,621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쟁주창 관련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에서 총 약 1,564만원을 집행함.

<2024회계연도 동일 목적의 국외 출장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출장목적	인원	집행액	출장지 및 기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261-340)	OECD 경쟁위원회 오픈데이 및 백투백 워크숍	2명	6,478	프랑스 (2024. 3.)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OECD 경쟁위원회 2024년 6월 정기회의	8명	56,205	프랑스 (2024. 6.)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OECD 경쟁위원회 2024년 12월 정기회의	7명	40,616	프랑스 (2024. 12.)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261-340)	경쟁주창 관련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4명	15,638	스페인 (2024.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의제가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고, 출장의 목적과 세부사업 간 정책목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적절한 이·전용 절차 없이 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예산을 다른 세부사업에서 각각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5조[225]의 예산의 목적 외 사

용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또한, 행정부가 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세출예산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국외출장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실시하거나,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해당 사업을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출장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5)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226]: 국회 결산 및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3억 2,600만원 중 20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2,326	2,326	-	-	-	2,326	2,094	-	232	1,718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652	1,652	-	-	-	1,652	1,473	-	182	1,55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574	574	-	-	-	574	524	-	50	62
공시위탁운영	100	100	-	-	-	100	100	-	-	1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26) 세부사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2)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인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에서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27]에 따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기획·총괄, 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표본 추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실무업무[228]는 통계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229].

<연도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대상 업체 변동추이>

(단위: 천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사업체수	100	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4	100	100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28) 표본추출 및 조사대상자 선정, 응답 지원을 위한 활동, 관련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상담 활동 및 결과분석·도출, 결과보고서 작성 등

229) 2020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의 실무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당초 일반용역비(210-14목)로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용하여 8억 1,741만원을 집행하였고[230] 1억 6,359만원을 불용하였음.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감사원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지적[231]에 따른 것인데,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 감사원은 기존에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왔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비[232]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230) 계약금액: 8억 1,576만원, 부대비용(심사위원 수당): 165만원

231)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기간: 2023. 3. 6. ~ 4. 7. / 감사원의 지적사항 통보일: 2023. 6. 2.

23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0, 186

1-12. 일반용역비(210-14목)
가.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6-1. 일반연구비(260-01목)
가.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산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생략)
- 기타 연구용역: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생략)
- 기타 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2024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통보되었다고는 하나,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이나 국회의 심사과정[233]에서 수정할 기회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연구비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234].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235], 2024년에는 일반연구비에 맞춰 예정가격을 재산출하였는데[236]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불용되었음.

<연도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비고
	예산비목	편성액	예산비목	집행액	
2021년	일반용역비 (210-14)	980,000	일반용역비 (210-14)	979,000	
2022년		980,000		979,000	
2023년		980,000	일반연구비 (260-01)	957,135	전용
2024년		981,000		817,410	전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더욱이 2020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지식기반 조사·연구 성격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국회의 지적[237]이

233) 정무위원회의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반연구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p.54).

234) 2025년 예산에서는 일반연구비로 편성함.

235) 2023년 전용일: 2023. 6. 14.
2024년 전용일: 2024. 3. 28.

236)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포함된 내용 중 홍보 관련 비용(실태조사 관련 컨텐츠 제작 등)을 반영할 수 없어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37) 2021. 12. 2. 본회의 의결

있었던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도 일반연구비로 집행되고 있는 점[238]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지적 이전에도 동 사업의 예산 비목을 시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기반 조사·연구 성격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고, 정책개발 성격의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할 것

* 당시 배달앱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음.

238)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239]: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9억 8,700만원 중 9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9백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87	987	-	-	987	978	-	9	1,501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678	678	-	-	678	672	-	6	1,192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5	305	-	-	305	303	-	2	305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	4	4	-	-	4	4	-	-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39) 세부사업: 건전한 규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2) 검토의견

(1)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2007년 하도급분야[240]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에 차례대로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241].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이행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 내용의 지속적인 이행과 자율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결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반영[242]되므로, 동반성

---

240) 참고로, 하도급분야는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사업에서 집행함.

241) 근거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42) 동반성장지수는 동방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함.

* 동반성장지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

장지수 평가대상기업[243](이하 “지수기업”이라 한다)은 공정거래협약의 체결부터 이행평가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동반성장지수 대상이 아닌 기업(이하 “비지수기업”이라 한다)은 자발적으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이행평가의 대상이 됨.

□ 2024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은 85.7%로, 전년도 62.5%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24.12월 기준)

구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가맹분야	17	17	17	16	14	12	13	11	10	12
유통분야	27	26	25	26	26	24	24	25	25	24
대리점분야	9	10	11	11	14	-	8	10	10	8

※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제도는 2019. 7. 도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참여가 의무인 지수기업을 제외한 비지수기업의 참여만 살펴보면, 협약체결 실적은 줄어들었고 최근 3년 동안 이행평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맹분야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24.12월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243)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함.

구 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수기업	11	11	11	10	12	10	11	11	10	12
비지수기업	6	6	6	6	2	2	2	-	-	-
합 계	17	17	17	16	14	12	13	11	10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체결기업 중 이행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비지수기업으로, 비지수기업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고 평가자료 작성, 평가준비를 위한 인력·비용 부담 및 평가결과에 대한 불확실성[244] 등으로 평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행평가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본연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비지수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45].

- 특히,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

244) 협약이행평가를 받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45)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지수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의 이행평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2024년 12월 가맹분야 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제공, 2026년 평가부터 반영

여부, 참여 저조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246], 현재 제공 중인 각 인센티브의 유인 효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협약 확산 활동 내역>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가맹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하도급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실무자 간담회	2	1	1
유통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실무자 간담회	-	-	1
대리점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협약제도 설명회	-	1	1
분야 통합	모범사례발표회	1	1	1
	맞춤형 컨설팅	25	34	35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야 협약이행 인센티브 제공기준>

('24. 12월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에 의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 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 수여 -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2년간 표시
우수	90점 이상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에 의한 직권조사 1년간 면제

246) 가맹분야의 경우, 서면실태조사나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음.
참고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공급업자의 비율은 54.9%였음.
- 참여의향은 있으나 고민 중인 사유는 담당인력 및 비용 문제 67.2%, 협약제도 이해부족 46.3%, 인센티브 부족 26.9% 순이었고,
- 참여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유는 담당인력 및 비용 문제 42.8%, 협약제도 이해부족 35.9%, 인센티브 부족 13.8%, 번거로움 13.5%순임.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2년간 표시
양호	85점 이상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시, 공표 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1년, 1회)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1년간 표시[247]

247) 당초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표지에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으로 양호 이상 등급으로 확대되었음.

(2)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2024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 비중이 유통분야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유통분야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8개로 전체의 33.3%에 불과하였는데, 가맹분야가 83.3%, 대리점분야가 62.5%, 하도급분야가 51.9%인 것을 고려하면, 유통분야의 이행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측면이 있음.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단위: 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통분야	최우수	0	2	3	1	4
	우수	2	2	2	3	2
	양호	5	3	2	1	2
	등급외	17	17	18	19	16
가맹분야	최우수	5	9	6	6	7
	우수	5	2	5	4	3
	양호	2	1	0	0	0
	등급외	0	1	0	0	2
대리점분야	최우수	-	1	1	1	1
	우수		1	1	3	3
	양호		0	3	1	1
	등급외		6	5	6	3
하도급분야	최우수	69	63	65	72	72
	우수	14	26	25	22	18
	양호	20	13	18	16	18
	등급외	65	80	89	88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는 세부 평가 대상의 수가 많고 각 평가대상이 촘촘한 기준에 따라 다구간으로 나뉘어져 있

어서 이행평가의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유통 분야는 3가지 평가 항목(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에 대해 13개 세부평가 항목, 30개(업태별 차이 존재) 평가요소로 점수를 산정하고 있어 하도급분야나 대리점분야에 비해 세부평가 대상의 수가 많은 점[248], 준수 정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249]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타 분야에 비해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임[250].

□ 그런데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대상 기업은 대규모유통업자[251]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수기업에 해당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외 평가를 받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지속되는 것[252]은 실질적으로 협약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253],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개선의 계

---

248) 하도급분야: 12개 세부평가 항목, 23개 평가 요소, 대리점분야: 11개 세부평가 항목, 23개 평가 요소

249) 가맹 분야(24개 세부평가 항목, 58개 평가요소)는 유통 분야보다 평가 요소는 많으나, 대체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250) 실제로 가맹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유통분야에서는 등급외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음.

251)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②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52) 2020년 70.8%, 2021년 70.8%, 2022년 72%, 2023년 79.2%, 2024년 66.7%

253) 2024년 등급외 평가를 받은 17개 기업 중 신규로 평가받은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3번 이상 등급외 평가를 받음(2020~2024년 기준).

기를 마련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참여 기업의 협약 이행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공정거래지원[254]: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9,000만원 중 1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정거래지원	1,389	1,389	-	1	-	1,390	1,298	-	92	1,157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43	543	-	13 △9	-	547	546	-	1	548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9	159	-	3 △2	-	160	154	-	6	158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356	356	-	-	-	356	299	-	57	116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등 대학생대상 홍보·교육사업	71	71	-	-	-	71	69	-	2	71
청년인턴 운영	260	260	-	△4	-	256	230	-	26	2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4) 세부사업: 공정거래지원(7031-300)

2)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인 ‘조사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건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력별·부서별 맞춤형 조사 교육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2024년 신설되었음.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3억 5,600만원으로, 전문교육 운영에 1억 500만원,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제작에 2억 4,000만원, 관련 출장 국내여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전문교육 운영(일반수용비, 210-01)	1억 500만원	9,700만원
교육컨텐츠 제작(일반용역비, 210-14)	2억 4,000만원	1억 9,400만원
교육출장, 기타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220-01)	1,100만원	800만원
합 계	**3억 5,600만원**	**2억 9,9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전문가 교육과 외부전문가 교육을 입문-실무-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자체 콘텐츠 8개 과목을 제작하였음.

<2024회계연도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교육 내용	비 고
내부전문가 교육	조사절차규칙, 진술조사 요령, 보고서 작성법, 포렌식 기법·자료탐색 요령, 현장조사 요령 등에 대해 강의 및 조사 실습	총 9회 실시 (본부 4회, 지방사무소 5회)
외부전문가 교육	인지면담 분야 및 수사 기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 병행	총 16회 실시
온라인 교육	조사절차규칙 등 8개 과목을 강의형과 인터랙티브 드라마형으로 제작하여 나라배움터에 과정 개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외부전문가 교육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

○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① 인지면담 과정과 ②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신생 산업 분야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이해 향상을 위해 계획하였던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는 강사 섭외 문제[255]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이 인지면담 관련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지게 되었음.

255) 공정거래위원회는 AI·플랫폼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하고자 하였으나, 일정·보수·기타 문제로 강의 편성이 곤란하여 추진하지 못함.

<2024년도 외부전문가 교육 과정 내용>

	입문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수사심리학 조사기법	BIG5 요인 검사	갈등 관리	조사프로세스 단계별 이해
2교시	질문 유형별 특성	성격별 피조사자 반응	갈등상황별 적합모드 실습	조사 협력· 협동 실습
3교시	조사 대화기술	화이트칼라 범죄	협상 전략 프로세스	조사 시나리오 작성· 실습
4교시	사례분석 실습	공정거래 사건의 심리적 특성	협상관리 역량의 이해와 실습	조직내 의사소통 기법
				질문 유의사항

	실무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인지면담 사례분석	집단지성의 활용	설득의 심리·기법	진위판단 기법
2교시	인지면담 실습	수사기법과 절차	면담계획 수립 실습	사례분석
3교시	진술조사와 수사심리기법	의사소통의 기술	라포형성 기법	성격프로파일링
4교시	인지면담 프로토콜	의사소통 분석·실습	진술조사 도입 실습	싸이코패스 분석

	심화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인지 면담 기법	진술 조사 전략	심리 협상	진위판단 기법
2교시	인지 면담 실습	SUE 기법·실습	설득기법	진술·신문조서 분석 실습
3교시	진술 조사 기법	집단지성 활용	협상· 설득 실습	성격이론
4교시	인지면담 프로토콜	경찰 수사 기법·절차	사건·수사 사례 분석	싸이코패스 분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인지면담 과정’은 진술분석가, 심리분석가, 수사팀장 등 관련 전문가·실무자를 활용하여 인지면담 분야 및 수사 기법 등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는데, 일부 강사에게 수업이 집중된 측면이 있음.

<2024년도 외부전문가 강사료 지급 현황>

(단위: 천원)

수령인	담당 분야	강의횟수	집행액	비고
○○○	인지면담, 진술분석	70	26,706	
○○○	의사소통, 인지면담	55	24,640	
○○○	성격·범죄유형분석	51	21,404	
○○○	경찰 수사절차, 기법	26	8,104	
○○○	수사지휘, 수사기법	14	3,152	
○○○	경제범죄학	8	3,074	
○○○	조직·리더십	7	2,594	
○○○	진술분석	6	1,714	
○○○	진술분석	6	1,614	
○○○	경제범죄학	4	1,556	
○○○	실습 보조	7	1,028	
○○○	실습 보조	7	712	
○○○	실습 보조	5	476	
○○○	실습 보조	4	354	
14명		270회	97,1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면담 분야 과목 특성상 과목 간 연속성이 존재하고, 강사 섭외 등 실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강사가 여러 과목을 강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런데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전문가 교육 과정이 일부 강사에게 편중되어 실시되고, 교육 시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 과목은 추진되지 못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외부전문가 교육 운영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부	입문	-	-	-	-	-	-	-	-	-	-	3회	2회
	실무	-	-	-	-	-	-	-	-	-	2회	4회	2회
	심화	-	-	-	-	-	-	-	-	-	-	1회	-
지방 사무소	입문	-	-	-	-	-	-	-	-	-	-	-	1회
	실무	-	-	-	-	-	-	-	-	-	-	-	1회
	심화	-	-	-	-	-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조치 등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선진소비자정책 추진[256]: 평가의 투명성 제고 및 불용 최소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운영,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13억 8,900만원 중 1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389	1,389	-	-	1,389	1,336	-	53	1,792
소비자의날 행사	43	43	-	-	43	43	-	-	83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1	11	-	-	11	11	-	-	11
소비자정책사업운영 지원	40	40	-	-	40	37	-	3	41
특수전자거래인식개선	40	40	-	-	40	40	-	-	40
소비자중심경영활성화	150	150	-	-	150	150	-	-	150
소비자정책연구용역	160	160	-	-	160	154	-	6	40
표준약관 교육	11	11	-	-	11	11	-	-	11
소비자정책위원회운영	29	29	-	-	29	25	-	4	29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	-	181	161	-	20	181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50	50	-	-	50	47	-	3	50
소비자정책 수립을위한 실태조사	100	100	-	-	100	92	-	8	-
중점 대응과제	61	61	-	-	61	60	-	1	61

256) 세부사업: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직권조사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	-	25	25	-	-	25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	-	40	40	-	-	40
SNS 부당광고상시 모니터링	189	189	-	-	189	189	-	-	189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6	56	-	-	56	51	-	5	56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54	154	-	-	154	153	-	1	76
소비자관련 법률교육 콘텐츠 제작	40	40	-	-	40	38	-	2	40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9	9	-	-	9	9	-	-	9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	-	-	-	-	-	-	6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전체 공개를 통한 평가의 투명성 제고

□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257]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257) **「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

‘연도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소비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1억 8,1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181	161	-	-	181	161	-	20
· 일반수용비(210-01)	88	88	-	-	88	88	-	-
· 임차료(210-07)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	40	-	-	40	20	-	20
· 사업추진비(240-01)	3	3	-	-	3	3	-	-
· 포상금 (310-03)	50	50	-	-	50	5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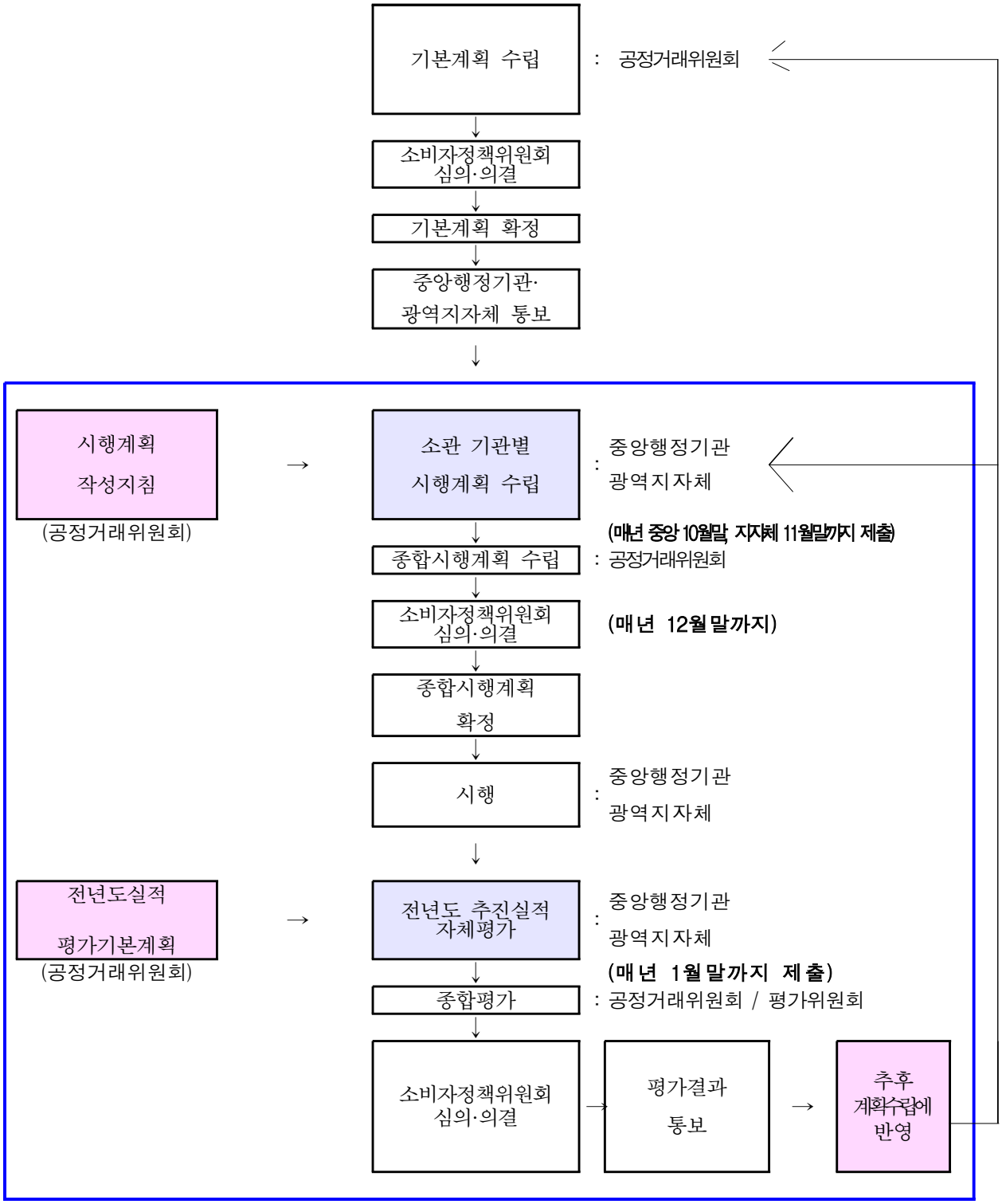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있음.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절차>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위원회’[258]와 6개 분과의 ‘전문평가단’[259]을 구성하여, 18개 중앙행정기관[260]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267개 과제에 대해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 ~ 2023)」에 따른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2024년에 평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음.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대상 과제>

(단위: 개)

기관	5대 정책목표	17개 중점과제	합계
중앙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35) 【1분과】	▪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⑹	120
		▪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6)	
		▪ 소비자거래 시장 개선 및 법 집행 강화(9)	
		▪ 금융·디지털 등 취약 시장 분석 및 개선(7)	
		▪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7)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제고(31) 【2분과】	▪ 소비자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13)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7)	
		▪ 지속가능한 소비생태계 구축(11)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26) 【3분과】	▪ 소비생활 안전 취약 분야 대응 강화(14)	
		▪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협력 강화(4)	

258) 평가위원회는 평가절차와 일정을 총괄하고 평가 결과를 검토 및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장, 전문평가단장, 각 분과위원장, 정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됨.

259) 전문평가단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구성 체계를 반영하여 6개 분과 총 31명(평가단장 포함, 각 분과별 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추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를 실시함.

260) 13부·1처·4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기관	5대 정책목표	17개 중점과제	합계
		▪ 소비자안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 기반 마련(8)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12) 【4분과】	▪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및 비대면 분쟁 해결 활성화(4)	
		▪ 분쟁해결의 전문성·실효성 강화(3)	
		▪ 소비자피해 조기대응 및 집단 분쟁 대응 강화(5)	
	과학적·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협력체계 강화(16) 【5분과】	▪ 과학적· 협력적 소비자 정책 추진(6)	
		▪ 소비자 지향적 법제 정비(2)	
		▪ 글로벌 대응· 협력 강화(8)	
지방	광역자치단체 【6분과】	▪ 5개 정책목표별, 총 147개 과제 [기본과제 147, 대표과제 17(기본과제 중 지역 특성 과제)]	14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에 실시한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는 80.6점으로 120개 과제 중 66개(55%) 과제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중앙)>

연도	평균점수	평가등급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21	80.3점	128개	10개(7.8%)	52개(40.6%)	52개(40.6%)	14개(10.9%)	-
2022	80.5점	119개	10개(8.4%)	59개(49.6%)	42개(35.3%)	7개(5.9%)	1개(0.8%)
2023	80.6점	120개	10개(8.3%)	56개(46.7%)	51개(42.5%)	3개(2.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지방의 경우 대표과제 및 기본과제의 평균점수는 각각 76.0점 및 78.0점으로 대표과제는 17개 중 7개(41.2%)가, 기본과제는 147개 중 75개(51.1%)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지방)>

구분	연도	평균 점수	평가등급					
			합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대표 과제	2021	74.0점	17개	2개(11.8%)	4개(23.5%)	6개(35.3%)	3개(17.6%)	2개(11.8%)
	2022	77.6점	17개	2개(11.8%)	6개(35.3%)	5개(29.4%)	3개(17.6%)	1개(5.9%)
	2023	76.0점	17개	2개(11.8%)	5개(29.4%)	7개(35.3%)	3개(17.6%)	-
기본 과제	2021	70.6점	147개	5개(3.4%)	41개(27.9%)	37개(25.2%)	44개(29.9%)	20개(13.6%)
	2022	80.1점	150개	26개(17.3%)	79개(52.7%)	24개(16.0%)	13개(8.7%)	8개(5.3%)
	2023	78.0점	147개	38개(25.9%)	37개(25.2%)	46개(31.3%)	19개(12.9%)	7개(4.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기관에서 총 12개 과제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 사례>

(단위: 개)

구분	매우 우수 등급
기관	과기정통부(1), 농식품부(2), 환경부(1), 개인정보위(1), 공정위(2), 대구시(1), 전북자치도(1), 한국소비자원(3)
영역	거래(5), 역량(2), 안전(1), 분쟁해결(2), 정책협력(2)
주요특징	-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이슈 신속 대응, 기업의 자율개선 유도(환경부·소비자원)

구분	매우 우수 등급
	- 고령소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농식품부·전북자치도·대구시) -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권리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공정위) -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등 보다 스마트한 의사결정 지원 (농식품부·소비자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7개 중앙부처에 '매우우수' 과제 1건당 180만원, '우수' 과제 1건당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11개 지자체에는 '매우우수' 과제 1건당 40만원, '우수' 과제 1건당 35만원을 지급하여 총 11개 기관에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2024년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사업 포상금 지급 내역>

순번	구분	기관명	포상금 산정	포상금
1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180만원)+(3×150만원)	810만원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80만원)+(2×150만원)	480만원
3		환경부	(1×180만원)+(2×150만원)	480만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0만원)+(1×150만원)	330만원
5		문화체육관광부	(2×150만원)	300만원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150만원)	300만원
7		식품의약품안전처	(2×150만원)	300만원
		소계		3,000만원
1	지자체	전라북도	(13×40만원)+(5×35만원)	695만원
2		대구광역시	(10×40만원)+(4×35만원)	540만원
3		경기도	(7×40만원)+(3×35만원)	385만원
4		인천광역시	(6×40만원)+(4×35만원)	380만원
		소계		2,000만원

순번	구분	기관명	포상금 산정	포상금
합계		11개		5,0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소비자기본법」제25조[261]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7조 및 제26조[262] 에서도 정부업무평가의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의 원칙과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장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일부인 매우 우수사례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261)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 5. (생 략)

② ~ ⑦ (생 략)

262)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정부업무평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263]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제도가 아직은 시행 초기[264]임을 고려하여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수립과 집행을 유도하고자 우수 등급 이상의 과제를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전체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263) https://www.consumer.go.kr,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나 동 위원회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및 각 기관 담당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하여 위원회 상정안건 등을 공유하고 있음.

264) 2019년부터(제4차 기본계획의 1차 년도(2018년) 과제) 정식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2) 예산의 과다편성 주의 및 집행비목에 맞는 연구용역 실시

□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중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임.

<2024회계연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181	161	-	-	181	161	-	20
· 일반수용비(210-01)	88	88	-	-	88	88	-	-
· 임차료(210-07)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	**40**	**-**	**-**	**40**	**20**	**-**	**20**
· 사업추진비(240-01)	3	3	-	-	3	3	-	-
· 포상금 (310-03)	50	50	-	-	50	5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방안'(2022)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2023),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 연구'(2024)를 수행하였는데, 매년 4,000만원 예산 중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2	40	40	20	20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22. 11. ~ 12.)
2023	40	20[265]	20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한국소비자원, 2023. 8. ~ 12.)
2024	40	40	20	20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연구 (한국소비자원, 2024. 5. ~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방안'(2022),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2023),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 연구'(2024)은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65) 평가위원 수당 부족으로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고 보여짐.

□ 또한, 매년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원으로 2022년 및 2024년에 각각 2,000만원씩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 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는 바 매년 예산이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9. 소비자상담센터 운영[266]: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사업 관리 철저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36억 2,800만원 중 35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3,628	3,628	-	-	3,628	3,593	-	35	3,628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304	2,304	-	-	2,304	2,304	-	0	2,304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144	1,144	-	-	1,144	1,140	-	4	1,144
공공요금	180	180	-	-	180	149	-	31	18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66) 세부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2) 검토의견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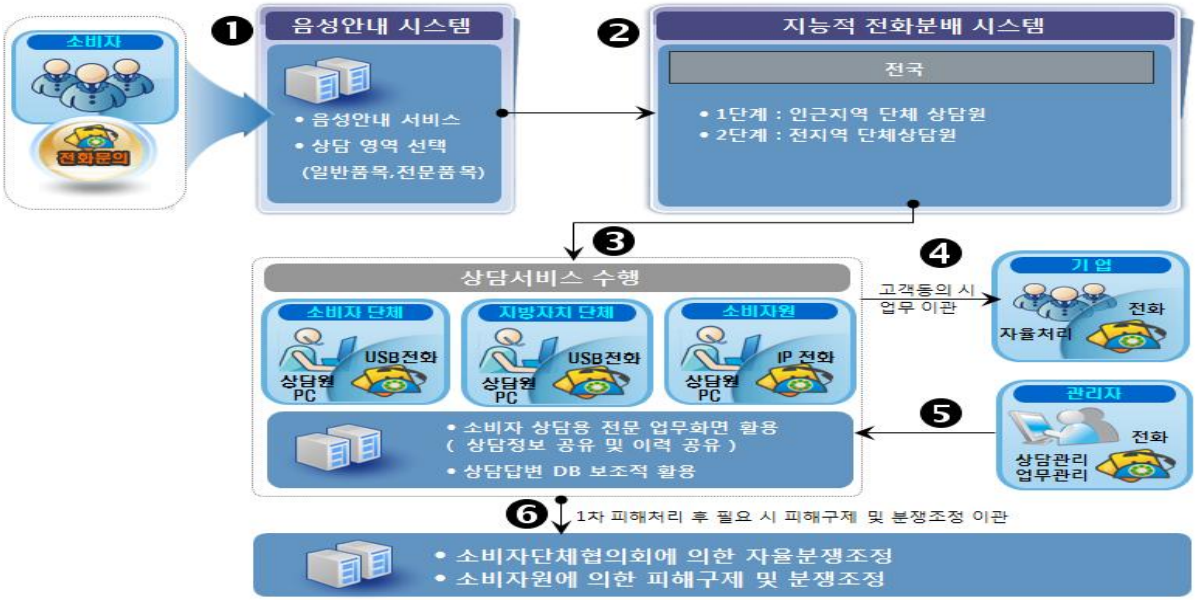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상담이 필요한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영역을 선택하면 인근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함으로써 상담과 피해구제를 진행하게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세부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상담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267].

26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건수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업무 흐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소비자단체의 일반상담 건수와 피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상담과 피해처리 실적이 감소하다 2023년부터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일반상담 실적은 28만 3,560건으로 2023년 25만 2,091건 대비 3만 1,469건(12.5%) 크게 증가하였고, 피해처리 실적은 12만 6,447건으로 2023년 11만 3,661건 대비 1만 2,836건(11.3%) 증가하여 각각 2024년 계획을 초과하였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의 경우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 발생 후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설명함.

<최근 5년간 일반상담 건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상담 건수 계획(A)	430,000	450,000	350,000	320,000	252,000
일반상담 건수 실적(B)	305,830	290,440	235,301	252,091	283,560
차이(A-B)	124,170	159,560	114,699	67,909	△31,5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피해처리 건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해처리 건수 계획(A)	98,000	120,000	120,000	115,000	120,750
피해처리 건수 실적(B)	107,061	102,085	100,466	113,661	126,447
차이(A-B)	△9,061	17,915	19,534	1,339	△5,69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024년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실적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일반상담건수 계획은 25만 2,000건, 피해처리건수 계획은 12만 750건으로 산정하였음.

<2024년도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예산 산출내역>

○ 합 계: 2,304백만원

가. 상담위탁: 2,100백만원

- 정보제공(일반상담) 수당 및 데이터 수집: 252,000건*4,500원=1,134백만원
- 피해처리 수당: 120,750건*8,000원=966백만원

나. 관리자 인건비: 120백만원
 - 상담관리자 인건비 1,000,000원*10명*12월=120백만원
다. 상담원 교육: 34백만원
 - 상담원 온라인 교육: 1,000,000원×8회= 8백만원
 - 상담원 집합 교육: 5개지역×5,200,000×1회= 26백만원
라. 상담원 카운슬링: 50백만원
 - 상담원 집단 카운슬링: 19,000,000×2회= 38백만원
 - 상담원 개별 카운슬링: 6,000,000×2회= 12백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실적은 각각 28만 3,560건, 12만 6,447건으로 계획 대비 3만 1,560건, 5,697건을 초과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에 소비자단체가 진행한 일부 상담 및 피해처리 수당을 정산하지 못하고, 2025년 1월에 2025년 예산으로 미지급분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단체 상담위탁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건명	지급액	수령인명
2024.02.26.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월분)	209,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3.28.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2월분)	171,584,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4.23.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3월분)	169,895,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5.23.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4월분)	172,889,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6.27.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5월분)	179,727,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7.2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6월분)	171,606,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8.29.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7월분)	236,470,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9.27.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8월분)	226,926,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0.2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9월분)	194,363,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1.25.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0월분)	218,884,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급일	건명	지급액	수령인명
2024.12.24.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1월분)	215,354,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2.26.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2월 첫째주분)	52,697,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 계		2,220,000,000[268]	
2025.01.15.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2월 미지급분)	171,809,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합 계		2,391,809,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2024년에 수행한 사업비 부족분을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2025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25년 예산은 22억 3백만원으로 2025년 7월 기준 15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9.2%임.

<2025년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처리 건수 실적 및 수당 집행 현황>

(2025. 7.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편성(A)	집행(B)	집행율(B/A)
건수	일반상담	246,240	157,006	63.8
	피해처리	111,490	73,296	65.7
예산		2,203	1,525	69.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 및 피해처리 건수의 추이를 분석

268) 관리자 인건비 1억 2,000만원 포함된 금액임.

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내 미지급 및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상담위탁비로 편성된 2024년도 일반용역비(210-14) 예산 23억 4백만원을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액 집행하였음.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비로 편성된 2024년 관리용역비(210-15) 예산 11억 4,400만원 중 11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유찰 후 단독 응찰한 ㈜오파스넷과 관리용역 계약을 통해 8억 5,500만원을 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고, 2억 8,500만원을 한국소비자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비로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상담센터 위탁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약방식	계약자 및 계약기간	비고 (수의계약 근거)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304	2,304	-			
- 상담위탁	**일반용역 210-14**	**2,304**	**2,304**	**-**	**수의**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5.1.1.~2025.12.3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등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144	1,140	4			
- 유지보수	관리용역 210-15	859	855	4	수의	㈜오파스넷 (2025.1.1.~2027.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2차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운영위탁	**관리용역 210-15**	**285**	**285**	**-**	**수의**	**한국소비자원 (2025.1.1.~2025.12.3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등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약방식	계약자 및 계약기간	비고 (수의계약 근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일반용역비(210-14)와 관리용역비(20-15) 집행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7호)」 제7조제1항[269]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및 정보시스템 운영위탁을 각각 (사)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운영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앙관서

---

269)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중 일부를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대상기관의 인력·조직·재정상태·공신력·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의 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수행 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270]"의 내역사업 중 소비자정보 위탁운영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 2[271] 등에 근거를 두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음.

---

27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451-621

271)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록표지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10. 한국소비자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소비자원 출연”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액(수입실적)은 출연금 528억 4,200만원 등 555억원 6,4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376억 4,200만원, 사업비 127억 2,300만원, 운영비 43억 1,600만원 등 총 546억 8,100만원(집행률 97.2%)임.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52,842	52,842	52,842	-	100.0
2. 자체수입	3,417	3,417	2,722	△695	79.7
- 전년도이월금	952	952	607	△345	63.8
- 수탁용역수입	1,660	1,660	1,397	△263	84.2
- 교육연수수입	40	40	1	△39	2.5
- 이자수입	164	164	275	111	167.7
- 임대·기타수입	601	601	442	△159	73.5
수 입 합 계	**56,259**	**56,259**	**55,564**	**△695**	**98.8**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인건비	36,559	37,669	37,642	27	99.9
2.사업비	13,718	13,718	12,723	995	92.7
(항)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299	1,299	994	305	76.5
(세항) 정책연구	500	500	394	106	78.8
(세항) 거래조사	540	540	433	107	80.2
(세항) 대외협력	259	259	167	92	64.5
(항)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3,237	3,149	3,052	97	96.9
(세항) 소비자 정보제공	413	395	386	9	97.7
(세항) 소비자 역량강화	135	135	106	29	78.5
(세항) 소비자원 정보화	2,553	2,483	2,448	35	98.6
(세항) 소비자홍보	136	136	112	24	82.4
(항)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5,982	5,982	5,649	333	94.4
(세항) 소비자안전	2,576	2,576	2,448	128	95.0
(세항) 시험검사	3,406	3,406	3,201	205	94.0
(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706	1,794	1,644	150	91.6
(세항) 피해구제	812	846	832	14	98.3
(세항) 분쟁조정위원회	550	604	567	37	93.9
(세항) 지방소비자	345	344	245	99	71.2
(항) 수탁용역	1,494	1,494	1,385	109	92.7
(세항) 수탁용역	1,494	1,494	1,385	109	92.7
3. 운영비	4,631	4,631	4,316	315	93.2
(세항) 경영기획	4,077	4,077	3,785	292	92.8
(세항) 부서운영비	554	554	531	23	95.8
4. 예비비	1,351	241	-	241	0
지 출 합 계	**56,259**	**56,259**	**54,681**	**1,578**	**97.2**

(자료: 한국소비자원)

2)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수입결손 발생

□ 한국소비자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위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계획액은 34억 1,700만원이나 수납액은 27억 2,200만원으로 6억 9,5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정부출연금	52,842	52,842	52,842	-	100
자체수입 등	3,417	3,417	2,722	△695	79.7
수 입 합 계	**56,259**	**56,259**	**55,564**	**△695**	**98.8**

(자료: 한국소비자원)

□ 2024회계연도의 자체수입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6억 9,500만원 자체수입 결손의 주된 요인은 전년도이월금 3억 4,500만원, 수탁용역사업 2억 6,300만원, 기타수입 1억 5,900만원, 교육연수수입 3,900만원 순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 세부내역>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합 계	**3,417**	**3,417**	**2,722**	**△695**	**79.7**
- 전년도이월금	952	952	607	**△345**	**63.8**
- 수탁용역수입	1,660	1,660	1,397	**△263**	**84.2**
- 교육연수수입	40	40	1	**△39**	**2.5**
- 이자수입	164	164	275	**111**	**167.7**
- 임대·기타수입	601	601	442	**△159**	**73.5**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편,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72] (22p.) 및 「2024회계연도 수지차보전기관 예산안 작성요령」에 따르면, 수지차보전 기관은 과거 자체수입 실적(직전년도 또는 3개년도 평균 실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수입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2024년에도 자체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272)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2p.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

- **과거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

○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수입결손을 제외한 결산잉여금으로 매년 수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수납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2023년과 동일하게 2024년에도 9억 5,2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3억 4,5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전년도이월금 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1,040	1,040	952	952
실적(B)	676	226	506	607
수납률(B/A)	65.0	21.7	53.2	63.8
수입결손(B-A)	△364	△814	△446	△345

(자료: 한국소비자원)

○ 수탁용역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기관이 의뢰하는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수납액이 13억 6,600만원임에도 2024년에 그보다 많은 16억 6,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2억 6,3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수탁용역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2,741	2,318	1,660	1,660
실적(B)	1,751	1,333	1,366	1,397
수납률(B/A)	63.9	57.5	82.3	82.2
수입결손(B-A)	△990	△985	△294	△263

구분	2021	2022	2023	2024

(자료: 한국소비자원)

○ 기타수입은 청사 임대수입[273]을 비롯한 각종 잡수입으로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4년간 동일하게 6억 100만원을 편성함[274]으로써 2024년에 1억 5,9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기타수입 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601	601	601	601
실적(B)	127	108	144	442
수납률(B/A)	21.1	18.0	24.0	73.5
수입결손(B-A)	△474	△493	△457	△159

(자료: 한국소비자원)

○ 교육연수 수입은 외부기관 교육 의뢰에 따른 강사료 수입으로 매년 10% 이하의 수납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4,000만원의 수입 예산을 편성[275]하여 3,9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교육연수 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40	40	40	40

273) 청사 1층 농협은행 및 지역 자활센터 카페

274)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법인세 환급, 청사 공사 관련 지체 보상금 등 일시적 특이소요에 따라 증가한 기타 수입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억 100만원으로 유지한 것으로 설명함.

* ('17~'19년도 평균) 560백만원 / ('19년도) 600백만

275)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기관이 학교·정부기관·기업체 등에 대한 직접 교육 위주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던 시기에 편성(2017년도 ~)된 것으로서, 2024년도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설명함.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실적(B)	9	3	4	1
수납률(B/A)	22.5	7.5	10	2.5
수입결손(B-A)	△31	△37	△36	△39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러한 자체수입의 과다 계상은 수입 예산 수납률 저하의 원인이 되며, 이는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지출소요를 충당하지 못해 소비자 안전 및 시험검사,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고유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과거 수입 실적의 추이와 실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예산을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결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정보화사업 집행 관련규정 준수 필요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립 등 지속 가능한 소비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역량 강화, 소비자원 정보화, 소비자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사업출연금 예산 31억 4,900만원 중 3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9%임.

<2024회계연도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
	본예산	수정예산(A)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3,237	3,149	3,052	96.9	2,787
- 소비자 정보제공	413	395	386	97.7	369
- 소비자역량 강화	135	135	106	78.5	121
- 소비자원 정보화	2,553	2,483	2,448	98.6	2,176
- 소비자 홍보	136	136	112	82.4	121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정보화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년도 사업출연금 수정예산 24억 8,300만원 중 2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원 정보화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이·전용 등	수정예산(A)	집행액(B)	집행잔액 (A-B)
▪ 소비자원 정보화	**2,553**	**△70**	**2,483**	**2,448**	**35**
- 여비	9	-	9	7	1
- 일반수용비	212	-	212	211	1
- 일반연구비	**2,228**	**△88**	**2,140**	**2,118**	**21**
- 업무추진비	3	-	3	2	1
- 공공요금	51	38	89	88	1
- 자산취득비	5	-	5	-	5
- 시설장비유지비	46	△20	26	21	5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에 소비자원 정보화를 위해 일반연구비로 수정예산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9억 4,500만원,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276]에 11억 5,100만원,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 감리용역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여 2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

276) 모바일을 통한 지능형 소비자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3개년 사업, 2022 ~ 2024),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채팅서비스 제공,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가능한 챗봇 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함.

<2024년도 소비자원 정보화 일반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이·전용	수정예산	집행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기간)
소비자원 정보화 (일반연구비)	2,228	△88	2,140	2,118	2,225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058	△88	970	945	1,052	㈜ 오파스넷 (2024. 3. ~ 12.)
-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	1,170	-	1,170	1,151	1,151	㈜ 그노티 (2024. 7. ~ 12.)
-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 감리용역	-	-	-	22	22	한국정보평가원(주) (2024.9 ~12)

(자료: 한국소비자원)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계약기간 전체 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2024. 1. 1. ~ 2025. 12. 31.)으로 진행하였는데, 2024년 1월 17일에 입찰공고를 하여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 오파스넷을 선정하고, 2024년 3월 28일에 계약기간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1,052,297,950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함.

<202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내역>

◦ 입찰공고일: 2024. 1. 17.

◦ 입찰공고기간: 2024. 1. 17. ~ 2024. 2. 20.

◦ 계약일: 2024. 3. 28.

◦ 계약방식: 제한경쟁, 장기계속계약

◦ 계약업체: ㈜ 오파스넷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2,104,595,900원(2024. 3. 28. ~ 2025. 12. 31.)

- 1차: 1,052,297,950원(2024. 3. 28. ~ 2024. 12. 31.)
- 2차: 1,052,297,950원(2025. 1. 1. ~ 2025. 12. 31.)

◦ 주요 과업내용

- 한국소비자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정기(월간, 분기 등) 점검, 장애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자료: 한국소비자원)

□ 2024년 소비자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분부터 11월분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총 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2월분은 2025년 1월 23일에 2025년 사업출연금 예산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내용	지급일	집행액
2024	2024년 1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3.06.	80,833,330[277]
	2024년 2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3.06.	80,833,330
	2024년 3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4.23.	81,718,230
	2024년 4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5.21.	87,691,495
	2024년 5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6.13.	87,691,495
	2024년 6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7.10.	87,691,495
	2024년 7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8.09.	87,691,495
	2024년 8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9.13.	87,691,495
	2024년 9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10.17.	87,691,495

구분	내용	지급일	집행액
	2024년 10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11.22.	87,691,495
	2024년 11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12.13	87,691,495
소 계			944,916,850
2025	**2024년 12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5.01.23.**	**87,691,495**
총 합계			1,032,608,345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런데, 「국가재정법」[278]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에 수행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를 2025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연말까지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업체의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2월 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준 계약(SLA)[279] 평가를 2025년 1월 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함.

□ 한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80]에서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

277) 계약체결 전까지인 1월부터 3월 27일까지 2023년도 요율을 적용하여 기존업체(주 오파스넷)에 지급함.
278)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79)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는 계약
280)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p32.

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비 12월분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8,800만원을 이월하지 않고, 분쟁조정사업의 일반수용비(4,800만원), 일반용역비(400만원), 공공요금(3,600만원)으로 2024년 12월 23일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원 정보화사업 일반연구비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전용 전	전용 후	금액
		과목	과목	
2024-12-23	(항) 간 전용	(관)사업비-(항)정보교육-(세항)소비자원정보화-(목)일반연구비	(관)사업비-(항)분쟁조정-(세항)분쟁조정위원회-(목)일반수용비	48
			(관)사업비-(항)분쟁조정-(세항)분쟁조정위원회-(목)일반용역비	4
			(관)사업비-(항)분쟁조정-	36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기관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자	구분	전용 전	전용 후	금액
		과목	과목	
			(세항)피해구제-(목)공공요금	
합 계				88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러한 전용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5조[281]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2024년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82]에 따르면 기관장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83]에 따르면, 정보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원 정보화 사업비를 분쟁조정 사업에 집행한 것은 「2024년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음.

---

28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82) **「2024년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31p.** 기관장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28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 관련 예산 86p.

○ 정보화사업의 범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한국소비자원은 예산집행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등 국가회계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 가맹·대리점종합지원, 공정위 수탁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조정원의 2024회계연도 수입액(수입실적)은 공정위 출연금 117억 4,200만원 등 139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75억 4,400만원, 운영비 25억 5,000만원, 사업비 26억 4,100만원 등 총 138억 3,400만원(집행률 97.2%)임.

<2024회계연도 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 예산	수정 예산 (A)	수입 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1,742	11,742	11,742	-	100.0
2. 기타수입	1,269	1,269	1,086	△183	85.6
3. 수탁사업비	1,222	1,222	1,099	△123	89.9
수 입 합 계	**14,233**	**14,233**	**13,927**	**△306**	**97.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회계연도 조정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7,622	7,622	7,544	78	99.0
2. 운영비	2,591	2,591	2,550	41	98.4
3. 사업비	2,798	2,798	2,641	157	94.4
- 분쟁조정	637	637	624	13	98.0
- 공정거래연구	513	513	443	70	86.4
- 협약이행평가	323	323	316	7	97.8
- 공정거래전문교육	181	181	174	7	96.1
- 가맹종합지원	253	253	238	15	94.1
- 대리점종합지원	325	325	304	21	93.5
- 동의의결이행관리	17	17	15	2	88.2
- 시정조치이행관리	110	110	92	18	83.6
- 전산운영지원	90	90	88	2	97.8
- 차세대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349	349	347	2	99.4
4. 수탁사업비	1,222	1,222	1,099	123	89.9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304	304	303	1	99.7
- CP등급평가	321	321	320	1	99.7
- 기술자료비밀보호컨설팅	53	53	-	53	-
- 경쟁영향평가 연구	320	320	272	48	85.0
- 하도급연동지원본부	224	224	204	20	91.1
합 계	**14,233**	**14,233**	**13,834**	**399**	**97.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검토의견

(1) 공정거래연구사업: 자체수입사업으로 수탁연구 편성 · 집행 필요

□ 조정원의 출연사업 중 공정거래연구는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사업출연금 예산 5억 1,300만원 중 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6.4%임.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연구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 액 (C=A-B)	집행률 (D=B/A)
공정거래연구	513	443	70	86.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4년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정책연구 3건, 이슈검토 12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3건, 수탁연구 1건을 실시하였음.

<2024년 조정원 공정거래연구 실적>

구 분	연번	연구주제
정책 연구	1	(보안과제) OOO 연구
	2	(보안과제) OOO 기준 개선안 마련
	3	(보안과제) OOO 방안 연구

구 분	연번	연구주제
이슈 검토	1	국내 Compliance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비교 고찰
	2	골판지 제조·유통 등에 대한 시장분석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Ⅰ -가정용 맥주 시장을 중심으로-
	4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Ⅱ -인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독점사업권 폐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5	가정용 캔 맥주 시장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 효과 분석
	6	2024년도 경쟁영향평가 사례분석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7	(보안과제) OOOOO 개선 과제
	8	공법과 사법 간 틈 메우기 -국고행정에 관한 독일의 경쟁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9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대우 조항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10	편의점 산업 시장 현황 검토 -체인화 편의점 사업체를 중심으로-
	1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과 관련한 경제적 단일체 항변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1	디지털 경제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 관계를 고려한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한 연구 - 온·오프라인 쇼핑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2	미국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신 법집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3	EU의 배제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한 최근 법집행 변화에 관한 연구
수탁연구	**1**	**(보안과제) OOO 연구**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의 「연구업무규정」 규정에 따르면, 수탁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2024년 사업출연금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819만원을 집행하고 1,181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40.9%임.

○ 2024년 조정원의 수탁연구는 총 1건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은 과제(계약금액 36백만원)를 수행함.

○ 조정원은 과제 수행 인력이 전원 조정원 소속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는 조정원 자체 예산에서 충당되었으며, 수탁연구예산에서는 회의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등 직접비 약 819만원만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 조정원 공정거래연구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 액 (C=A-B)	집행률 (D=B/A)
공정거래연구사업비	**513,000**	**443,415**	**69,585**	**86.4**
일반수용비	164,558	162,748	1,810	98.9
특근매식비	10,368	9,179	1,189	88.5
임차료	15,856	15,392	464	97.1
여비	37,163	16,167	20,996	43.5
업무추진비	19,000	18,794	206	98.9
연구용역비	84,000	65,946	18,054	78.5
공공요금	7,691	7,691	0	100
상용임금	91,964	78,819	13,145	85.7
일용임금	50,400	49,804	596	98.8
수탁연구	**20,000**	**8,187**	**11,813**	**40.9**
자산취득비	12,000	10,688	1,312	89.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2조[284] 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연구는 조정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2조[285]에 근거가 없어 타 기관의 위탁용역 사업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수탁연구를 출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행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타 기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수탁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기타 수입으로 수납하는 등 연구용역 위탁기관과의 예산 중복편성의 문제가 있음.

---

28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연구사업 중 수탁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위탁기관	수탁연구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출연금 예산			위탁기관 예산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2020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매뉴얼 개발 연구(2020. 2. 5. ~ 2020. 6. 4.)	20	20	-	18	-	1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2020. 11. 6. ~ 2020. 12. 18)				18	-	18
2021	공정위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마련(2021. 6. 1. ~ 2021. 9. 30.)	20	8	12	23	-	23
2022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행사 용역 위탁(2022. 11. 30. ~ 2022. 12. 2.)	20	11	9	11	-	11
2023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관련 위반금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2023. 4. 10. ~ 2023. 8. 31.)	20	3	17	6	-	6
		OOO 시장 분석(2023. 10. 20. ~ 2023. 11. 24.)				3	-	3
2024	기재부	OOO 연구(2024. 8. 20. ~ 2024. 12. 20.)	20	8	12	36	-	3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따라서, 향후 조정원은 수탁연구비를 사업출연금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 보다 자체수입 사업의 하나인 수탁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2) 전산운영지원 사업: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 필요

□ 조정원의 출연사업 중 전산운영지원은 조정원 정보화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사업임. 2024회계연도 사업출연금 예산 9,0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7.8%임.

<2024회계연도 전산운영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 액 (C=A-B)	집행률 (D=B/A)
전산운영지원	90	88	2	97.8
- 관리용역비	90	88	2	97.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의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홈페이지 등 서버,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그룹웨어 시스템, 온라인분쟁조정 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함.

<조정원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구 분	대 상	세부 항목	수 량
정보화시스템	서버(H/W)	· 홈페이지,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DB 서버 등(OS 포함)	6대
	스토리지	· 데이터 저장용 (NAS 저장소)	2대
	그룹웨어 시스템	-	1식
	온라인분쟁조정	-	1식

구 분	대 상	세부 항목	수 량
	시스템		
	콜센터시스템	-	1식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및 상용소프트웨어	· 백업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문서보안솔루션 등	3종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입찰공고문)

□ 조정원은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입찰공고(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를 실시하였으나 단일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후 주식회사 튠시스템과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6,961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24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내역>

◦ 입찰공고일 : 2024. 3. 5.

◦ 입찰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25.

◦ 계약일 : 2024. 4. 30.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약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1호

◦ 계약업체 : ㈜튠시스템

◦ 계약금액 : 69,610,000원

◦ 계약기간 : 2024. 5. 1.~ 2024. 12. 31.

◦ 주요 과업내용

- 정기적인 정보화시스템 점검
- 장애 발생 시 처리
- 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실시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편,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 용역 등을 추가로 진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전산운영지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잔 액 (C=A-B)
전산운영지원(관리용역비)	90	88	1.9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90	63	
-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용역	-	22	
- 공정거래교육센터 유지보수	-	2	
- 더존 Bizbox Alpha 이메일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	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86]에 따르면, 조

28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 관련 예산 86-87p.

○ 정보화사업의 범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원의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정보화사업에 해당하고,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되,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은 추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조정원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총 9,060만원[287]을 집행하였는데, 전산운영지원에서 6,270만원을 집행하고, 분쟁조정에서 870만원을, 기관운영출연금의 관리용역비에서 1,92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편성·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288]	집행액	비고
사업 출연금 (350-02)	전산 운영 지원	90	62.7	- 3월·4월(5,269천원×2개월) - 5월~ 10월(8,701천원×6개월)
	분쟁 조정 (콜센터)	15.6	8.7	- 12월(8,701천원)
기관운영 출연금(350-01)		-	19.2	- 1월·2월(5,269천원×2개월) - 11월(8,701천원)

287) 2024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2024. 4. 30.)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21,076천원(2023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에 준하여 매월 5,269천원을 기존 업체에 지급)을 집행하고, 5월부터 12월까지(계약기간: 2024. 5. 1.~ 2024. 12. 31., 매월 8,701천원을 계약업체에 지급) 계약금액 69,608천원을 집행하였음.

구분	편성액[288]	집행액	비고
합 계	105.6	90.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에 있어 국가회계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정원은 「국가재정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가재정법」 제45조[289]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90] 에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 간의 비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간의 비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사업출연금 예산사업비를 집행한 점 등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288) 2024년도 각목명세서상 편성된 내역

28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9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출연금 예산 202p.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본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출연금의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일반출연금 중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간의 비목 변경**, 또는 연구개발출연금 중 인건비(360-01목)와 경상경비(360-02목)의 비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024회계연도 기관운영출연금 중 관리용역비 결산내역>

(단위: 천원)

예산		집행내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관리용역비	631,610	관리용역비	630,878
- 청사공간 관리비	591,962	- 청사공간 관리비 등	571,111
- IDC센터 서버 위탁관리비	34,848	- IDC센터 서버 위탁관리비	34,848
- 통신장비 유지보수	4,800	- 통신장비 유지보수	4,800
- 단수조정	1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9,239**
		- 그룹웨어 장애 발생에 따른 기술지원	880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예산집행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목적이나 관련된 예산의 전체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조정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출연금을 사업출연금 사업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소관 】

제1장 일반회계

1. 핀테크 지원 사업[291]: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3억 3,000만원 중 122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핀테크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핀테크 지원 사업	12,330	-	-	12,330	12,252	-	78	12,933

(자료: 금융위원회)

291)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1)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필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핀테크 기반구축’, ‘사업 운영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292]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핀테크 지원 사업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165	108	57
	사업추진비 (240-01)	19	18	1
	민간경상보조 (320-01)	6,858	6,858 [6,765]	-
	소계	**7,042**	**6,984 [6,891]**	**58**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320-01)	2,374	2,374 [2,337]	-
	소계	**2,374**	**2,374 [2,337]**	-
핀테크 기반구축	일반수용비 (210-01)	9	3	6
	국외업무여비 (220-02)	39	30	9
	사업추진비 (240-01)	5	1	4
	정책연구비 (260-02)	30	30	-
	민간경상보조 (320-01)	1,661	1,661 [1,661]	-
	소계	**1,744**	**1,725 [1,724]**	**19**
사업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320-01)	1,060	1,060 [1,024]	-
	민간자본보조 (320-07)	110	110 [110]	-
	소계	**1,170**	**1,170 [1,134]**	-
합계		**12,330**	**12,252 [12,087]**	**78**

(자료: 금융위원회)

29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까지는 핀테크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해왔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단독으로 신청·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24년도부터는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 중 '핀테크 보안'(5억 1,400만원) 및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 중 '핀테크 교육'(5억 5,000만원)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음.

○ 그 결과, '핀테크 보안'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보안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핀테크 교육' 및 나머지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경과>

2019년~2023년		2024년	
대상 사업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보조사업자
핀테크 지원 사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보조사업자 통합 선정)	핀테크 지원 사업 (교육, 보안 제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교육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보안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	금융보안원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핀테크 보안 및 핀테크 교육 사업을 분리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근거한 것이나, 이와 같은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법령에 따른 투명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최적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4년도부터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에 대한 분할공모를 시행하였다는 조치 완료 결과를 보고하였음.

○ 그러나 분할 공모한 '핀테크 교육' 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선정되었고, '핀테크 보안'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사업자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핀테크 보안 사업을 수행한 금융보안원이 선정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가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할 공모 방식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의문임.

□ 동 사업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293]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294]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공모에 의하여 제출받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외방식(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295]에서는

29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9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보조사업자를 지정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공모방식 및 2024년부터 진행한 분할 공모방식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96] 보고서에서도 현행과 같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노하우 축적 측면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정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29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컨설팅 용역 계약 방식 부적정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297]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초기(2019. 7.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길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약식 사전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컨설팅을 하는 절차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별한 후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정식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요조사' 절차를 운영해왔음.

○ 이러한 '수요조사' 절차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298]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299]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수요조사' 절차를 종료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

29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29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관련 기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299)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가 사전 검토하는 '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한 것은 법률 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임.

- 그 결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 건수는 과거 대비 20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청 건수	84	60	48	52	57	400	701
지정 건수	77	60	48	52	56	315	608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에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률·회계·기술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핀테크 종합지원실 운영 및 전문지원단 운영 등을 위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용역은 크게 ① 핀테크 종합지원실 행정인력 운영, ② 전문지원단 운영 및 수당 지급, ③ 중·소 핀테크기업 컨설팅 관련 법률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의 경우 컨설팅 용역 편성액 3억 5,000만원은 용역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1억원, 전문지원단 수당 1억

4,000만원, 기타 컨설팅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음.

□ 2024년 5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지정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위 용역을 통해 수행한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은 크게 ① 일반 컨설팅, ② 전문지원단 컨설팅, ③ 현장자문단 컨설팅으로 구분됨.

- 이 중 전문지원단은 핀테크 기업 컨설팅과 관련한 4개 분야(디지털금융, 데이터, 금융기술, 경영 전략·관리) 전문가 6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 핀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전문지원단의 컨설팅은 건당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총 90회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나, 제도가 개편된 2024년의 경우 오히려 80건으로 컨설팅 건수가 감소하였음.

<컨설팅 종류 별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일반상담	전문지원단 상담	현장자문단
2022	76	-	-
2023	199	90	48
2024	379	80	7
2025. 7.	354	47	2

(자료: 금융위원회)

○ 그 결과 2024년 컨설팅 용역이 종료된 이후 용역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정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행정인력 인건비로 6,600만원, 전문지원단 수당 8,900만원, 법률검토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용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편성액	집행액
2023년	· 인건비(행정인원 1명)	50	30
	·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	150	91
	· 법률 검토 등	50	129
	합계	**250**	**250**
2024년	· 인건비(행정인원 2명)	100	66
	·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	140	89
	· 법률 검토 등	110	195
	합계	**350**	**350**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지정 건수의 증가로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과 같은 컨설팅 용역 대가 산정 방식은 효율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현행 컨설팅 용역 대가 산정 방식은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배정된 예산을 총액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업자는 이 중 행정인력 인건비와 전문지원단 컨설팅 건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당사자에게 지급한 이후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용역비로 처리하는 방식임.

○ 이러한 방식은 용역사업자가 중소 핀테크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법률 검토 등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성과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온라인 교육 방식 변경 필요

□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에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에 필요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교육’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용역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핀테크 교육 용역은 크게 ① 핀테크 인턴 과정, ② 핀테크 전문가 과정, ③ 핀에듀 과정(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온라인 교육인 핀에듀 과정은 핀테크 실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수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23종의 강의가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음.

<핀에듀 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구분	과정명	구분	과정명
헬로, 핀테크	1. 입문	인슈어테크Ⅰ	13. 보험업의 이해
	2. 지급결제·송금	인슈어테크Ⅱ	14. 인슈어테크 인사이트
	3. 자산관리·보험	핀테크 기술 분석	15. 인공지능의 이해
	4.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		16. 블록체인의 이해
	5. 보안인증·블록체인		17.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6.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활용		18. OpenAPI
	7. 핀테크 기반기술		19. IoT의 이해
금융규제 및 정책방향	8.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20. 빅데이터의 이해	
지급결제·송금Ⅰ	9. 은행업의 이해	21. 마이데이터의 이해	
지급결제·송금Ⅱ	10, 지급결재·송금 인사이트	22. 핀테크 프로덕트 기본과 서비스 기획	
자산관리Ⅰ	11. 금융투자의 이해	23. 핀테크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자산관리Ⅱ	12. 자산관리 인사이트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핀에듀 과정의 성과를 살펴보면, 개설된 강좌 1회 당 수강을 신청한 인원과 실제 수료까지 마친 인원이 평균 3명에 미달하는 등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교육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4년 핀테크 교육 용역을 발주하면서 목표 수료인원을 97명으로 설정하였고, 실제 수강신청을 한 인원은 213명, 수료인원은 183명임.

- 구체적으로 보면, 23개 강좌가 총 77회 개설되었는데, 입문 강좌를 제외하고는 강좌별로 개설횟수 1회 당 평균 0.7명에서 5.3명이 수료하였고, 전체 강좌 기준으로는 개설횟수 1회 당 평균 2.4명이 수료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음.

<핀에듀 과정 개설 현황>

(단위 : 건)

구분	과정명	제작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설 횟수	수강 신청 인원	수료 인원	개설 횟수	수강 신청 인원	수료 인원	개설 횟수 (A)	수강 신청 인원	수료 인원 (B)	B/A
헬로, 핀테크	입문	2022	1	73	57	1	70	58	1	32	24	24.0
	지급결제·송금	2020	2	41	35	3	33	29	4	10	7	1.8
	자산관리·보험	2020	2	7	6	3	4	4	3	5	5	1.7
	금융플랫폼·금융데이터	2022	2	15	9	3	33	32	4	9	8	2.0
	보안인증·블록체인	2020	2	22	19	3	12	11	3	3	2	0.7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활용	2022	2	18	16	3	28	26	4	10	10	2.5
	핀테크 기반기술	2022	2	24	21	3	28	25	4	5	5	1.3
금융규제 및 정책방향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2022	2	15	14	3	13	10	3	9	8	2.7
지급결제·송금Ⅰ	은행업의 이해	2022	2	11	8	3	8	6	4	5	4	1.0
지급결제·송금Ⅱ	지급결제·송금 인사이트	2022	2	14	11	3	16	14	3	11	10	3.3
자산관리 Ⅰ	금융투자의 이해	2022	2	16	14	3	10	7	4	5	4	1.0
자산관리 Ⅱ	자산관리 인사이트	2022	2	12	11	3	13	11	4	5	5	1.3
인슈어테크Ⅰ	보험업의 이해	2022	2	8	8	3	6	5	3	6	5	1.7
인슈어테크Ⅱ	인슈어테크 인사이트	2022	2	9	6	3	13	12	3	4	4	1.3
핀테크 기술 분석	인공지능의 이해	2022	2	9	7	3	9	5	3	6	6	2.0
	블록체인의 이해	2022	2	12	10	3	15	14	3	7	6	2.0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2022	2	6	6	3	4	3	4	7	5	1.3
	OpenAPI	2022	2	22	18	3	30	27	4	10	9	2.3
	IoT의 이해	2022	2	9	9	3	6	2	4	7	4	1.0
빅데이터의 이해		2023	-	-	-	1	8	7	3	13	13	4.3
마이데이터의 이해		2023	-	-	-	1	8	8	3	16	16	5.3
핀테크 프로덕트 기본과 서비스 기획		2023	-	-	-	-	-	-	3	17	13	4.3
핀테크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2023	-	-	-	-	-	-	3	11	10	3.3
합계			55	343	285	57	367	316	77	213	183	2.4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2024년 수강 실적은 2023년 목표 수료인원 340명, 수강 신청 인원 467명, 수료인원 380명 대비 각각 약 30~50% 수준에 불과한 수치임.

<핀에듀 과정 수료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목표인원(명)	수강신청인원(명)	수료인원(명)
2023년(A)		340	467	380
2024년(B)		97	213	183
차이	(B-A)	-243	-254	-197
	(B/A)	28.5%	45.6%	48.2%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핀에듀 과정의 목표인원 및 수강신청·수료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4년 핀에듀 과정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핀에듀 과정에 배정된 예산은 2023년 6억 1,700만원에서 2024년 2억원으로 4억 1,700만원 감액 배정된 바 있음.

<핀에듀 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항목	예산액 및 집행액
2023년	· 대학연계과정	161
	· 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 운영	195
	· 기능개발 / 유지보수	195
	· 클라우드 사용료	66
	합계(A)	**617**
2024년(B)	· 교육과정 운영	120
	· 유지보수	22
	· 클라우드 사용료	58
	합계(B)	**200**
차이	(B-A)	△417

(자료: 금융위원회)

□ 핀테크 교육 사업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핀에듀 과정과 같은 온라인 교육과정은 이러한 핀테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에 해당함.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예산 하에서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세탁방지추진[300]: 분담금 납부액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금세탁방지추진”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과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8,3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자금세탁방지추진	783	-	-	783	756	-	27	846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국제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에서는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1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5억 9,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이 중 5억 9,200만원을 집행함.

300) 세부사업: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 금융위원회가 동 사업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 에그몽그룹(Egmont) 등 총 3개로, 모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함.

<분담금 납부 국제기구 현황>

구분	국제기구명	납부기간	주요 역할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2009년~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
APG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1998년~	· 역내 국가들의 FATF 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후발국들의 기준 이행을 지원
Egmont	에그몽그룹	2002년~	· 각국 FIU간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 체계화·활성화 및 비밀 보호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과 2025년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금액 대비 각각 약 4,000만원, 4,800만원이 부족하여,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의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에서 2,8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2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분담금 부족분으로 활용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에서 3,7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1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분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용 감액		전용 증액	
2024년	일반수용비	△2	국제부담금	40
	국외업무여비	△28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계	△40	계	40
2025년	상용임금	△6	국제부담금	48
	일반수용비	△6		
	국외업무여비	△36		
	계	△48	계	4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분담금 증가율보다 실제 증가율이 높았고, 실제 납부 시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분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기관	편성액			집행액			(B-A) (천원)
		원화(A) (천원)	납부화폐 기준	기준 환율	원화(B) (천원)	납부화폐 기준	기준 환율	
2024	FATF	301,024	EUR 211,989	1,420	330,256	EUR 222,123	1,486	△29,232
	APG	226,926	AUD 260,835	870	229,228	AUD 260,835	878	△2,302
	Egmont	25,292	USD 19,455	1,300	32,830	USD 23,754	1,382	△7,538
	소계	552,420			592,313			△39,893
2025	FATF	342,908	EUR 236,000	1,453	385,228	EUR 242,827	1,586	△42,320
	APG	251,834	AUD 286,500	879	259,262	AUD 279,974	920	△7,428
	Egmont	35,880	USD 26,000	1,380	32,817	USD 23,645	1386.5	3,063
	소계	630,388			678,388			△48,000

(자료: 금융위원회)

□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실제 규모가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에 결정되고 있고, 납부 당시의 환율과 편성

당시의 기준환율의 차이로 인해 분담금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부족한 분담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획한 국외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공조를 위해 계획된 후발국 컨설팅 및 현장지도, 상호평가자 교육, 현지실사 등을 위한 예산이나, 2024년의 경우 3,600만원 중 2,800만원, 2025년의 경우 3,600만원 전액이 분담금 납부를 위해 전용되었음.

○ 그 결과 2024년에 계획된 4건의 국외출장 중 1건만 집행되었고, 2025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전액이 국제부담금으로 전용되어 동 사업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2024년도 국외출장 계획 및 실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국외출장 계획			실제 집행액
	출장목적	출장지역	예산편성액	
2024년	후발국 컨설팅 및 현장지도	파푸아뉴기니	8	미집행
	FATF 상호평가자 교육	프랑스 파리	7	미집행
	FATF 현지실사	프랑스 파리	10	미집행
	FATF 실무회의	프랑스 파리	11	8
2025년	후발국 컨설팅 및 현장지도	필리핀	8	미집행
	FATF 상호평가자 교육	프랑스 파리	12	미집행
	FATF 현지실사	프랑스 파리	11	미집행
	FATF 실무회의	프랑스 파리	6	미집행

(자료: 금융위원회)

□ 위와 같이 국제 분담금 납부 규모가 과소 추계 및 편성됨에 따라 자금 세탁과 관련한 국제 공조를 위한 필수적인 국외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은 분담금 납부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301]: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 햇살론15 보증을 거절당한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560억원 전액을 진흥원에 교부하였음.

<2024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	-	56,000	56,000	-	-	92,500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이로써 불법 사금융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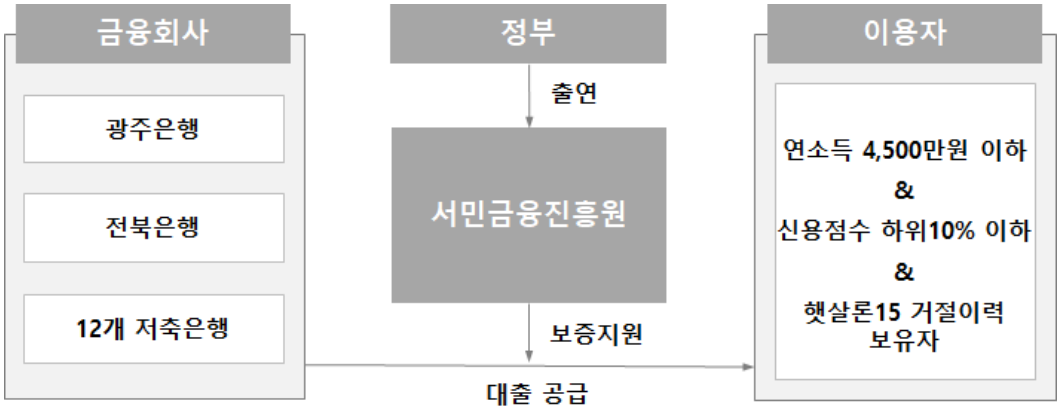
301)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302]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303]이 거절된 자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금리는 최초 15.9%이고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인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최종금리가 9.8%~9.9% 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설계되었음.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진흥원 심사 결과 보증이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집행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302) KCB와 NICE 중 더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303) 햇살론15 기본 이용요건: ①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2) 검토의견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보증[304]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후 차주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함.

○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보증공급 목표는 연간 2,800억원 규모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보증공급 실적은 1,935억원에 그쳐 당초 계획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2022년[1)]	2023년	2024년	2025년(7월말)
예산편성액 (집행액)	480 (200[2)])	280 (560[3)])	560 (560)	925[4)] (925)
대위변제액	0.1	575	1,039	560
지원건수	34,208	112,009	70,636	55,274
편성 당시 보증공급 목표	600	2,800	2,800	2,800[5)]
보증공급액	1,002	2,924	1,935	1,968

주1) 2022년 9월 보증 공급 첫 실시
주2) 2022년도 보증공급액이 1,002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 및 준비금 총 200억원만 집행
주3)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집행
주4) 2025년 당초예산 560억원 → 1차 추경 925억원 (365억원 순증)
주5) 2025년 당초목표 1,700억원 → 1차 추경 2,800억원(1,100억원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304) 보증비율: 100%

○ 동 사업의 예산액은 목표 보증공급액에 사업손실률과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신청 당시 예상사업손실률 20%를 반영하여 2,800억원을 공급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급격한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사업손실률을 33%로 상향한 결과 보증공급액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임.

<2024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 편성 산식>

[변경 전]
560억원(보증재원) = 2,800억원(보증공급액)×20%(사업손실률[1])×100%(보증비율)

[변경 후]
560억원(보증재원) = 1,700억원(보증공급액)×33%(사업손실률)×100%(보증비율)

주1) 사업손실률(예상) = 대위변제율 - 구상채권회수율 - 보증료 수입 + 사업운영비

(자료: 금융위원회)

<예상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변경 내역>

구 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변경 전	변경 후
❶ 대위변제율 (+)	40%	53.5%
❷ 구상채권회수율 (-)	9.6%	11.1%
❸ 보증료수입률 (-)	12.8%	12.4%
❹ 운영비율 (+)	3.0%	3.0%
❺ 사업손실률	20.6%[1]	33.0%

❶ 대위변제금액 / 보증공급액
❷ 구상채권회수금액 / 보증공급액
❸ 조기상환비율, 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
❹ 운영비는 공급액의 3%로 추정: 운영비율 1.2% × 5년 × 0.5(평잔)
주1) 사업손실률은 약 20.6%로 추정하였으나 출연금 예산 편성 시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고 20%만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지원 대상이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면서 연체 경험 등을 사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낮기에 대출 실행 이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해당 차주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다중채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연체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고 구상채권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유사 보증상품 대비 대위변제율이 높고 회수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등 현황>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자햇살론[1] (2016년~)	순대위변제율[3]	10.4	12.1	12.7
	회수율[4]	20.9	20.7	22.3
햇살론15(17)[2] (2019년 9월~)	순대위변제율	15.5	21.3	25.5
	회수율	6.6	7.7	9.6
햇살론유스 (2020년 1월~)	순대위변제율	4.8	9.4	12.7
	회수율	5.0	5.3	7.2
햇살론뱅크 (2021년 7월~)	순대위변제율	1.1	8.4	16.8
	회수율	0.5	1.5	3.9
햇살론카드 (2021년 10월~)	순대위변제율	6.1	12.3	17.8
	회수율	2.8	4.7	6.9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022년 9월~)	순대위변제율	0.01	14.5	26.8
	회수율	-	0. 7	2. 8

주1) 근로자햇살론II(2016년~현재 공급)
주2)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15(1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합산
주3)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주4) 회수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동 사업은 보증부 대출 지원 사업으로서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수혜 제공 사업이 아닌바, 매년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공급실적 및 대위변제 등>

(단위: 억원)

구분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공급목표	600	2,800	2,800
공급실적	1,002	2,924	1,935
누적순대위변제율[1)]	0.01%	14.5%	26.8%

주1) 누적순대위변제율 = (누적대위변제 발생액 - 누적대위변제 회수액) / 누적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연도 중 보증공급 목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의 사업 성과가 창출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보증 심사 신청 시기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리 적용[305]될 수도 있는 등 정책수혜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동 보증 지원 사업의 예산액 산출 근거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한 만큼의 보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05) 연중 보증잔액이 계획 대비 빠르게 소진될 경우, 보증공급 목표를 축소함에 따라 연도말 보증 신청자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수준의 상환능력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306]: 진흥원 내 과다한 이월·유보잔액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682억 1,100만원 중 560억 5,000만원(15.2%)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으로 내역변경[307]하고 남은 예산현액 3,121억 6,100만원 전액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8,211	-	△56,050	312,161	312,120	40	1	347,015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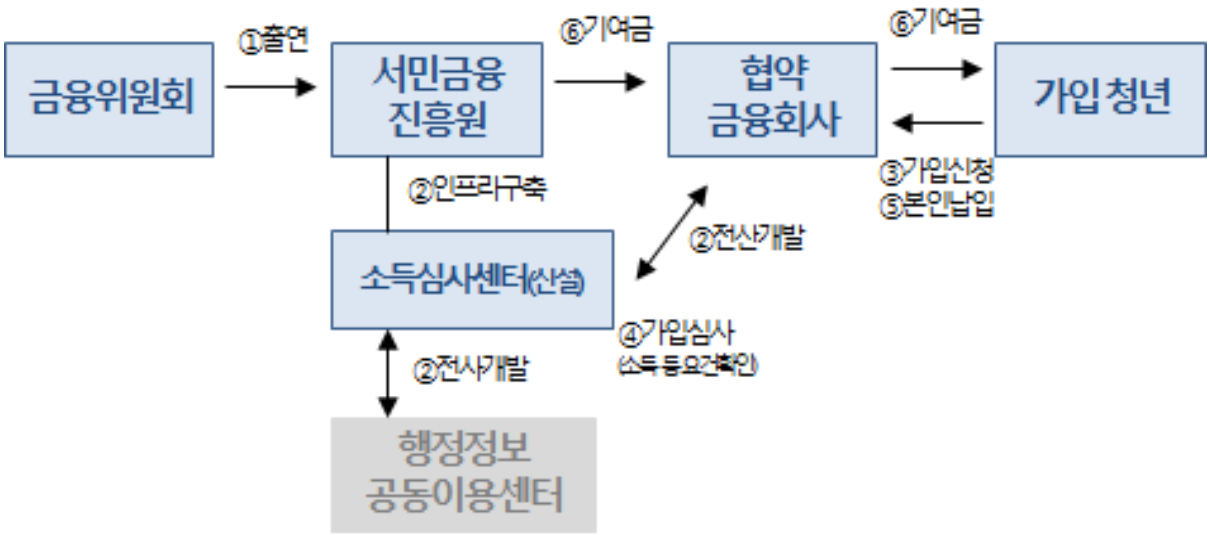
306)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307) 청년희망적금 사업(2024년도 종료사업)의 저축장려금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청년도약계좌 사업 총 예산현액의 15.2%에 해당하는 560억 5,000만원을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으로 내역변경함.

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 동 상품의 기본구조는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협약은행[308]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3.0%~6.0%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309]을 제공하는 것임.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308)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1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30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024년[1]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매칭한도	매칭비율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		

주1)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매칭한도를 70만원(납입한도)까지 상향하여 추가한도에 대하여는 3.0%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급함 - (예)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한도 30만원에 대한 정부기여금(3%)인 9천원을 추가로 매칭 지급(→최대 지급한도 33,000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동 상품은 만기가 5년으로,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미적용하고 旣지급된 정부기여금을 환수[310]하게 되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의 특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보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대상이 됨.

-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기(5년) 도래 이전이고 별도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60%)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2년 2월 출시되어 2024년 초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방식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며, 소득기준, 기여금 매칭비율, 만기, 월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310) 정부기여금은 진흥원 출연예산으로 매월 협약은행 계좌에 매칭 지급되기는 하나,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전까지는 해당 금액을 이용자가 인출(현금화)할 수 없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청년희망적금</th><th colspan="4">청년도약계좌</th></tr>
<tr><td rowspan="2">가입기준</td><td>개인소득</td><td>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td><td colspan="4">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td></tr>
<tr><td>가구소득</td><td>없음</td><td colspan="4">중위소득 250%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7">기여금</td><td rowspan="7">1년차 2%
2년차 4%</td><td colspan="2">개인소득</td><td>산출식</td><td>기여금</td></tr>
<tr><td>총급여</td><td>종합소득</td><td>(매칭한도×비율)</td><td>한도</td></tr>
<tr><td>2,400만</td><td>1,600만</td><td>월40만원×6.0%</td><td>2.4만원</td></tr>
<tr><td>3,600만</td><td>2,600만</td><td>월50만원×4.6%</td><td>2.3만원</td></tr>
<tr><td>4,800만</td><td>3,600만</td><td>월60만원×3.7%</td><td>2.2만원</td></tr>
<tr><td>6,000만</td><td>4,800만</td><td>월70만원×3.0%</td><td>2.1만원</td></tr>
<tr><td>7,500만</td><td>6,300만</td><td colspan="2">기여금×, 비과세만</td></tr>
<tr><td rowspan="3">특징</td><td>만기</td><td>2년</td><td colspan="4">5년</td></tr>
<tr><td>납입한도</td><td>월 50만원</td><td colspan="4">월 70만원</td></tr>
<tr><td>기여금 지급</td><td>만기 시</td><td colspan="4">매월</td></tr>
</table>

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 8. 29.)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기존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7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3.0% 기여금 추가 지급 중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인프라 구축비용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비용을 출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출연금으로 전산시스템 운영, 민원상담 용역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약은행을 통하여 매월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또한 진흥원에 출연되는 출연금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비용 5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운영협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2) 검토의견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용자가 매월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매칭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구체적으로,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매월 이용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해당 은행의 계좌[311]에 입금한 후 이를 매월 정산하여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그런데 2024년도 기여금 지원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총 3,029억 9,300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교부하였고[312], 진흥원은 전년도 이월액 3,008억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6,038억 900만원 중 2,843억 2,900만원을 협약은행에 지급하였는바,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7.1%에 불과함.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로, 2023~2024년 고금리 상황의 지속 등에 따라 시중 일반적금상품 금리가 오르면서 예산 편성 시 가입 목표에 비해 가입자 수가 충분히 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311)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별도 개인계좌 개설

312) 1차: 19,336백만원(‘24.2.6.) / 2차: 58,000백만원(’24.2.28.) / 3차: 138,000백만원(’24.3.29.) / 4차: 52,000백만원(’24.7.1.) / 5차: 33,000백만원(’24.8.8.) / 6차: 1,650백만원(’24.10.18.) / 7차: 1,007백만원(’24.11.27.)

<2023회계연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진흥원 유보금)
출연	기여금 지원	344,037	344,037 (100%)	43,221 (12.6%)	300,816 (87.4%)
	인프라 구축	23,610	23,610 (100%)	21,059 (89.2%)	2,551 (10.8%)
직접 수행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54 (100%)	147 (95.5%)	-	-
합계		367,801	367,794 (100%)	64,427 (17.5%)	303,367 (82.5%)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024회계연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내역변경 (청년희망적금)	집행액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이월액 포함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진흥원 유보금)
출연	기여금 지원	359,043	△56,050	302,993	603,809 (이월액: 300,816) (100%)	284,329 (47.1%)	319,480 (52.9%)
	인프라 구축	8,664 (100%)	-	8,664	9,924 (이월액: 1,260) (100%)	9,181 (92.5%)	743 (7.5%)
직접 수행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504 (100%)	-	463 (91.9%)	-	-	-
합계		368,211	△56,050	312,120	613,733 (100%)	293,510 (47.8%)	320,223 (52.2%)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진흥원은 2023년도 기여금 지원 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 중 집행되지 못한 잔액(3,008억 1,600만원)만큼을 이월하여 진흥원 내 계정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 실집행액(2,843억 2,9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3,008억 1,60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는바 2024년에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별도로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진흥원 내부에 유보된 이월액만으로 2024년도 정부기여금 소요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7회에 걸쳐 진흥원에 총 3,029억 9,300만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는바, 진흥원 내 이월·유보 잔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출연금을 집행함에 따라 진흥원 내 3,000억원대 규모의 잔액이 유보된 상태가 지속되어 재정운용 및 국고금관리상의 비효율을 야기하였음.

<2024년도 기여금 지원 사업 출연금 교부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교부	-	77,336	138,000	-	-	-	52,000	33,000	-	1,650	1,007	-	302,993
집행	8,690	44,819	62,467	29,172	18,123	16,201	17,081	17,294	17,646	18,231	17,554	17,051	284,329
잔액	292,126[1)]	324,643	400,176	371,004	352,880	336,679	371,598	387,304	369,659	353,078	336,530	319,479	319,479

주1) 이월금액(300,815백만원)에서 집행 후 잔액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고자금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월별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 집행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나,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금의 일괄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내용>

1-7.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자금 집행지침 준수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 지출순기에 맞게 자금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월별로 과다하게 신청하거나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월초에 집중하여 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국고자금 집행지침」 중 관련 내용>

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1-1 **(월별 자금배정 요구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 특성, 월별 집행 소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1-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자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2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소요 보다 과다하게 자금을 신청하거나 불가능한 사업 또는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중앙관서의 장은 월중 자금의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자금배정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월초에 집중하여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고자금의 경비별 지출기준** 3-6 **(출연금)**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출연기관 주거래 은행에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6-1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D-Brain시스템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한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 지출실적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3-6-3 기관운영 경비성 출연금은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출연금은 최종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분할하여 교부해야 한다.

□ 한편, 진흥원 내규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313]은 출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연사업 종료연도 이전에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출연금 교부액의 미집행잔액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사업이 종료된 차년도에 출연금 집행잔액을 정산·반납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2023년도~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같이 교부액 대비 미집행잔액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국고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차원에서

313)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서민금융진흥원내규, 2024. 12. 13. 제정) 제7조(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① 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의 출연금 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해당사업의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② 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을 고려한 최종 집행잔액을 정산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국고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의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반납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 이전에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해당 잔액을 사업 종료연도 이전에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2025년도에는 기여금 지원 예산 3,368억원 중 6월말 기준 총 1,761억원을 집행하였는데[314], 연말까지 그 두 배인 3,522억원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도말 진흥원 유보잔액인 3,195억원에 더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327억원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2025년도에도 대규모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임.

□ 나아가, 이러한 출연금 과다 교부 또는 미정산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 예산안 편성 시 연간 집행소요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향후 동 사업의 이월·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흥원 내 과다한 이월·유보잔액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도약계좌 사업 및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또는 출연규모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315], 최근 정부기여금 지급 등 기본적인 상품구조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의 신

314) 금융위원회는 7월말 기준 총 5회에 걸쳐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총 1,745억 4,900만원을 교부하였음(그 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연금 97억 700만원 교부).

315) 정무위 검토보고(2022년도·2024년도·2025년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예결특위 검토보고(2023~2025년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2022년도·2024년도·2025년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바, 신규 사업 추진 시 정부기여금 지원 방식 및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16]: 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 추진 재검토 및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관계인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2억 5,5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을 집행(집행률: 50%)하고, 6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	-	1,255	628	-	627	1,205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본인 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316)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317]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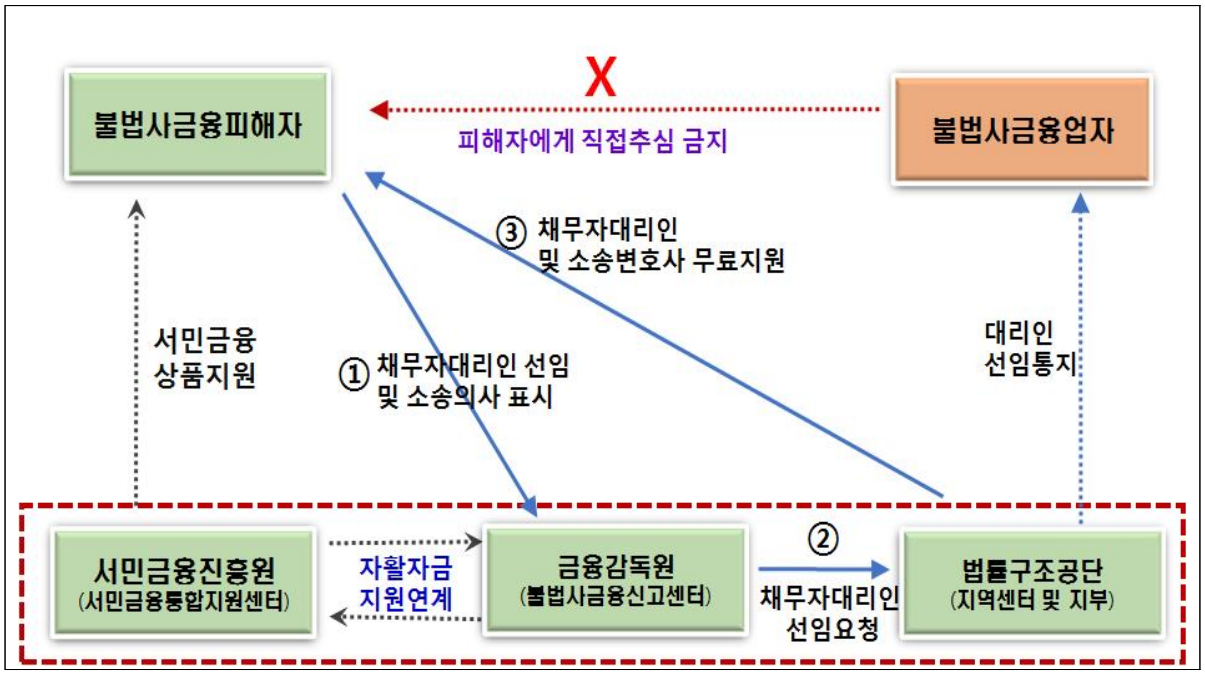
-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31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검토의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채무자 및 관계인의 불법추심 등 피해 예방·구제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8억 8,600만원) 대비 총 3억 6,900만원(+41.6%)이 증액된 예산액 총 1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예산현액의 50%인 6억 2,800만원만을 공단에 교부하였고, 공단은 교부받은 금액 중 5억 7,199만원만을 실제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에 집행한바, 2024년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45.5% 수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04	604	-	-	604	604 [604]	100.0	100.0	-	-
2022	1,144	1,144	-	-	1,144	1,144 [1,144]	100.0	100.0	-	-
2023	886	886	-	-	886	886 [886]	100.0	100.0	-	-
2024	1,255	1,255	-	-	1,255	628 [571]	50.0	50.0	-	627
2025 (7월말)	1,205	1,559	-	-	1,559	1054 [908]	67.6	58.2	정산 전	정산 전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이후 2024년도까지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지원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7월말기준)
신청건수(a)	1,252	5,657	5,225	3,760	3,489	5,946
지원건수[1](b)	919	4,841	4,510	3,249	3,096	5,241
지원비율(b/a)	73.4	85.6	86.3	86.4	88.7	88.1

주1)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건수 합산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① 불법추심의 양상 다변화 등으로 인한 신청요건 불비 문제[318], ② 신청창구 부족, 전담인력 미비 등 행정적 요인 ③ 홍보예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번호 특정이 어렵더라도 SNS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319], 신청창구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원 내 전담직원을 충원하였으며[320],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

318)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기 위하여는 선임 사실 통지를 위하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건화하고 있었으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신청요건 불비로 접수가 취하되는 사례가 많았음.

※ 접수 후 취하 건수(금감원, 건): (2021년) 619 → (2022년) 962 → (2023년) 1,324 → (2024년) 2,677

319) 2024년 11월

320) **(창구 확대)**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유선·인터넷·방문접수)하였으나, 이를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2024년 12월 개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2026년 1월 개설 예정)까지 확대함.

과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사업내용을 변경[321]하여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에 대하여도 대리인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배분을 조정하고, 2024년 7월부터 관계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사업을 수행하였음.

○ 이는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마련된 것임.

<2024년도 사업 산출내역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물량	단가	사업비	구분	물량	단가	사업비
채무자대리인 변호사보수	5,965건	208,000원	1,241	채무자대리인 변호사보수	4,430건	208,000원	922
부수사건 소송대리	28건	497,000원 (평균비용)	14	채무자의 관계인지원 변호사보수 (신설)	4,560명	70,000원	319
				부수사건 소송대리	28건	497,000원 (평균비용)	14
		합계	1,255			합계	1,241

(자료: 금융위원회)

(인력 충원) 금융감독원 내 전담직원 충원(1명→3명, 2025년 5월)

3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2024년도 동 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관계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연간 총 10건에 불과해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도 내역사업별 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120	127	150	455	162	261	348	154	150	278	271	448	2,924
부수사건 소송대리	-	2	3	-	2	-	-	2	8	61	81	3	162
채무자관계인 대리인선임	-	-	-	-	-	-	-	-	3	2	5	-	10
합계	**120**	**129**	**153**	**455**	**164**	**261**	**348**	**156**	**161**	**341**	**357**	**451**	**3,096**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관계인 지원을 위해서는 채무당사자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가족·지인 등에게 알려야 하는데 채무당사자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관계인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2024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단계에서부터 관계인 지원도 가능한 점을 안내하고, 동 사업 홍보 시 관계인 지원 내용도 계속 강조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5년도에도 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실적은 7월말 기준 3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며,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채무자(본인) 대리인 선임 예산을 증액 요청하면서 관계인 지원 예산의 경우 2025년도 신청건수가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본인 대리인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2025년도 내역사업별 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463	442	412	736	902	896	1,344	5,195
부수사건 소송대리	-	42	-	-	1	-	-	43
채무자관계인 대리인선임	3	-	-	-	-	-	-	3
합계	466	484	412	736	903	896	1,344	5,241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산출근거 비교>

구 분		산출근거	
		본예산(1,205백만원)	제2회 추경(1,559백만원) (+354백만원)
대리인 선임	본인	**772백만원**=*3,711건**×208천원** * 연평균 신청건수 ** 변호사보수(200천원)+송달료(8천원)	**1,126백만원**=*5,411건*×208천원 <1,700건 추가 지원>
	관계인	**319백만원**=4,560건*×70천원** * 연평균 지원인원(950명)×채무자 1인당 관계인 4.8명 추정 ** 파산·회생 관련 보전사건 등 변호사보수 최저단가	
부수사건 소송대리		**14백만원**=28건*×497천원** * 연평균 구조건수 ** 연평균 구조단가	
홍보비		**10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2024년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45.5%에 그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바 있고, 최근 몇 년간 전체 지원실적이 감소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4년도 신설된 내역사업인 '채무자 관계인 대리인 선임' 집행은 사업 출시 이래로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임.

○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22]에 따라 관련 법률적 분쟁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사업을 통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이 반복적으로 편성 당시의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과 달리 운영·집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22)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323]: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324]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00억원은 전액 산업은행에 출자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	-	100,000	100,000	-	-	100,000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발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

323)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324)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미함.

정, 지방소멸대응기금[325]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모펀드에 출자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326],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327]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때,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j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PF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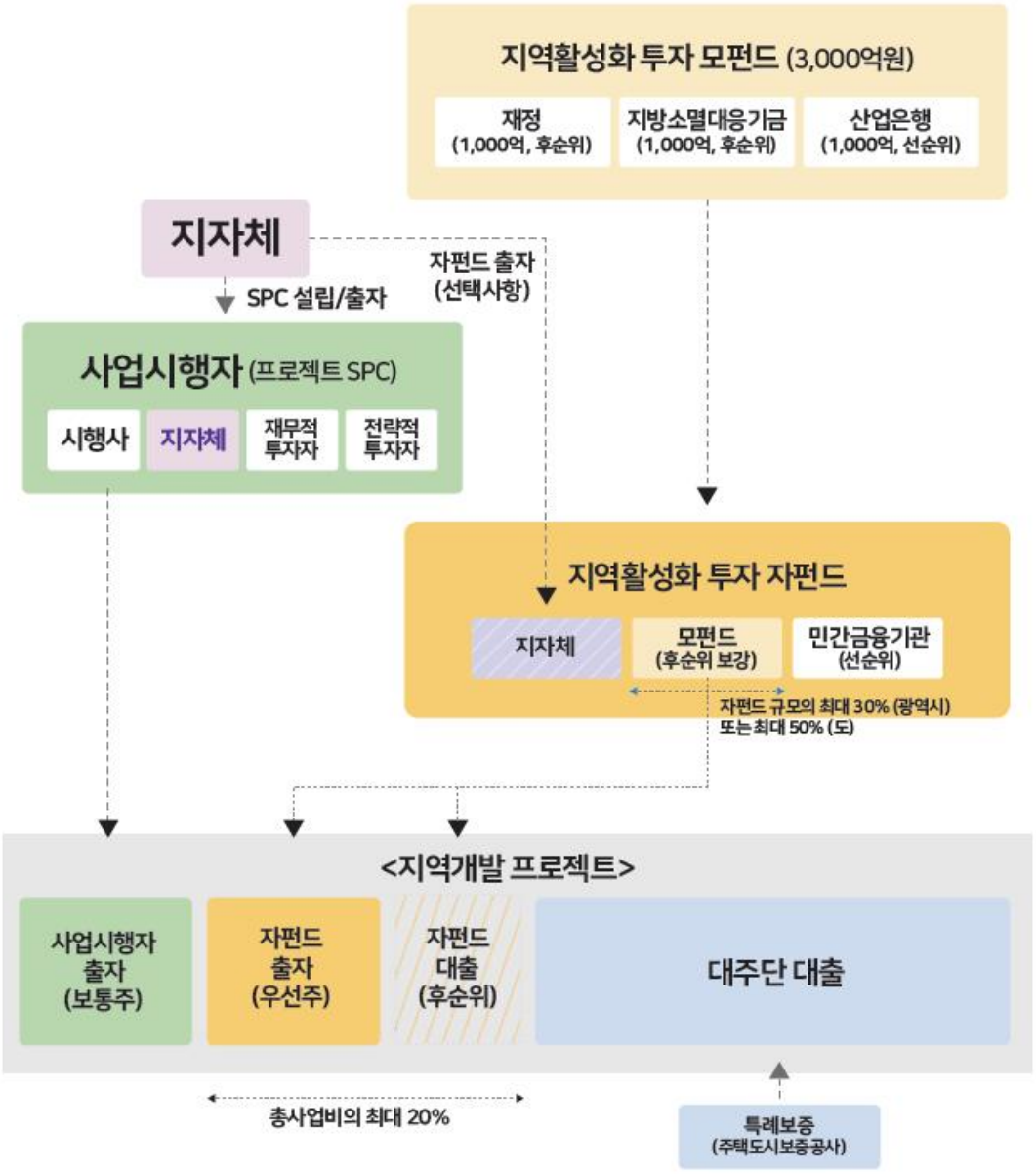
---

325)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됨.

326)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음(「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327)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한국산업은행 자체 자금 각 1,000억씩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최소 6,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개발프로젝트에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음[328].

2) 검토의견

(1)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음. 선정된 프로젝트의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약정액은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당초 계획액 3,000억원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선정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요 〉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글로벌 홀티콤플렉스[주1)]
위치	단양군 단양읍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일원	전남 여수 묘도	경북 경주	충남 서산
참여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투자기간	'25년~'27년	'25년~'28년	'24년~'28년	'25년~'28년	'25년~'25년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호텔 및 어드벤처 시설 개발)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립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 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 및 농업융복합단지 건설
총사업비	1,133억원 →680억원	1,239억원 →925억원 →876억원	1조 4,362억원	7,716억원	1,300억원
모펀드 약정액	68억원	39억원	1,435억 5,500만원	771억 5,700만원	130억원
선정일	1차 2024. 2. 2차 2024. 11.	1차 2024. 2. 2차 2024. 11. 3차 2025. 1.	2024. 8.	2024. 11.	2024. 12.

주1) 서산 프로젝트는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20'25년 3분기 중 재심사 추진 중이며, 상기 표의 내용은 2024년 12월말 기준 제안 철회 이전 현황으로, 총사업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재심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328) 각 자펀드가 도(道)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비의 20%를 투자한 경우

□ 그러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연도 내 자펀드 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각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① 2024년 2월,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사업(이하 ‘단양’)’의 자펀드는 2024년 12월이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329]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급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규모를 1,133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모펀드 운용사(한국성장금융)가 변경된 내용으로 2024년 11월 26일 해당 자펀드를 재선정함.

- 재선정된 자펀드는 최초 펀드 결성기한(3월말) 및 1차 연장기한(6월말)을 도과하여 2025년 7월말까지 결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은 2025년 9월 29일임.

○ ② ‘구미 국가산단구조고도화 사업(이하 ‘구미’)’의 자펀드도 2024년 12월이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주거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을 2차례 변경함에 따라 모펀드 운용사가 변경된 내용으로 2024년 11월 26일과 2025년 1월 23일 해당 자펀드를 두 차례 재선정함.

- 재선정된 자펀드는 결성기한(5월말)을 도과하여 2025년 7월말까지 조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은 2025년 11월

329) 펀드 결성기한은 원칙적으로 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총 10개월)이 가능함. 기한 내 결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자펀드는 미결성된 것으로 하여 자펀드 결성이 취소될 수 있음.

24일임.

○ ③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하 ‘여수’)’의 자펀드는 2024년에 선정된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2025년 2월 28일 결성이 완료되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자펀드 투자가 집행되고 있음.

○ ④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이하 ‘경주’)’의 자펀드는 최초 펀드 결성기한(3월말) 및 1차 연장기한(6월말)을 도과하여 최종 결성기한(9월 29일)을 앞두고 있음.

○ 2025년 12월 24일 선정된 ⑤ ‘충남글로벌 홀티콤플렉스(이하 ‘서산’)’의 자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사업 제안을 철회한 상황임[330].

〈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경과 〉

자펀드명	(①단양) 코레이트 충북단양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②구미) 코람코 일반사모 투자신탁제153호	(③여수) 신한 동북아 LNG허브터미널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	(④경주) NH-Amundi 강동그린에너지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⑤서산) 하나대체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000호*
자펀드 선정일	(1차) ’24. 2. 16 (2차) ’24. 11. 26	(1차) ’24. 2. 22 (2차) ’24. 11. 26 (3차) ’25. 1. 23	’24. 8. 29	’24.11.26	’24.12.24
자펀드 결성일	-	-	**’25. 2. 28**	-	-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	(1차)~’24. 12. 19 (2차)~’25. 9. 29	(1차)~’24. 12. 24 (2차)~’25. 9. 29 (3차)~’25. 11. 24	~ ’25. 7. 2	~ ‘25.9.29	-
프로젝트 착공일	-	-	’24. 10. 3	-	-
투자액 (2024. 12말 기준)	0	0	0 (’25. 5 기준 2.5억원)	0	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330)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펀드 운용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이와 같이 자펀드 결성이 부진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 과도한 유보금이 발생하였으며,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도 자펀드에 대한 투자 성과가 없어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납입된 재원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24년도 재정 투입분(①) 1,000억원은 2024년 4월(400억원)과 7월(600억원)에 각각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되었고[331],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산업은행 자체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모펀드계정(②)에 보유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은 2024년 해당 계정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③)에 2차례(2024년 8월 및 9월)에 걸쳐 총 28억원 출자하였음.

〈 재원 흐름 (2024.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①정부재정	②산업은행 모펀드계정	③지역활성화 투자모펀드	④각 자펀드
투입액	**100,000**	100,000	2,800	0
잔액(연도말)	0	**97,200**	**2,800**주1)	**0**

주1) 모펀드 운영비용 및 이자발생액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따라 2025년 6월말까지도 2024년 재정출자금 1,000억원 중 28억원만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된 상황이며, 나머지 972억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계정에 유보[332]되어 있음.

---

331) 2025년도 예산은 2025년 6월(400억원)과 7월(100억원)에 정부에서 산업은행으로 출자되었음.
332)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서 자펀드로 투자된 금액은 없으며[333], 모펀드 운용사는 약 84억원[334]을 미투자자산으로 운용[335]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24년 동 사업 예산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운용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 새로운 방식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이고, 모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의 집행 부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선정된 프로젝트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1차 결성 기한(4개월) 내에 자펀드를 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펀드가 최종 결성기한(10개월)까지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최종 결성기한에도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프로젝트 선정 시

333) 이에 따라 2024년말 기준, 자펀드의 투자금 집행실적은 없으며, 2025년 5월말 기준으로도, 여수 자펀드만 2억 5,000만원 규모의 자펀드 대출만을 실행하여,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334) <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재원 납입 내역 >

(단위: 백만원)

납입시기	합 계	재정	산은 자체출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 8.	150	50	50	50
2024. 9.	8,250	2,750	2,750	2,750
합계	8,400	2,800	2,800	2,800

335) 금융기관에 예치(이자율 2.53%)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유보금으로 남았으며, 실제 프로젝트 투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위해 향후 지역개발 프로젝트 선정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성과계획

□ 동 사업은 자펀드 조성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4년과 2025년 각 7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의 자펀드 조성실적은 3,086억원으로, 411.5%의 달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출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펀드 조성실적 (단위: 억원)	목표	-	-	-	750	750	모펀드의 자펀드 앞 출자비율, 펀드 결성기간 등 감안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제출자료
	실적	-	-	-	3,086	-			
	달성도	-	-	-	411.5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 금융위원회는 모펀드의 투자기간이 2년이고, 매년 최초 자펀드 선정

가능 시점과 펀드 결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각 년도 예산으로는 매년 4분기부터 자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3,000억원의 모펀드로 조성할 수 있는 자펀드의 최소 규모가 2년(8분기)[336]간 6,000억원(도 프로젝트 기준)이므로, 매분기 750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4분기 조성가능금액 750억원을 목표로 설정함.

- 매년 성과 측정대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에 조성된 모펀드로 연도 내에 조성할 수 있는 자펀드 규모를 설정한 것임

□ 그러나 이와같이 성과목표를 설정할 경우, 동 사업의 성과는 매년 4분기의 자펀드 조성실적만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모펀드의 투자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펀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에 조성되는 모펀드의 자펀드 조성 가능금액을 합산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2025년 성과목표는 3,750억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336) 모펀드의 투자집행 기간이 2년임.

□ 한편, 동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달리, 동 사업의 자펀드 조성 실적은 3,086억원으로 기록되어 성과목표(750억원)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2024년말 기준으로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단양(136억원), 구미(78억원), 여수(2,872억원)의 자펀드 결성 '예상' 규모를 합산하여 성과를 산출함에 따른 것임.

○ 즉, 동 사업은 연도내 발생한 실적이 아닌 향후 기대치에 기반하여 성과를 산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7.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337]: 저조한 사업 실적을 고려해 국가 재정 출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338]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추경	이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330,000	-	330,000	330,000	-	-	500,000	1,200,000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였음.

337)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338)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함.

□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매입형’(원금 감면) 방식을,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중개형’(금리 인하) 방식을 적용함.

‘매입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새출발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339]을 매입한 후 동 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순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임.

‘중개형’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총 약정 체결 채무액은 6조 5,061억원인데,

매입형의 경우 원금의 평균 70%, 이자의 100%가 감면되었으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평균 4.8%p의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남.

339)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며, ①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②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불가. 단,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약정 현황〉

(2025. 6.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신청		약정체결		
	신청자	채무액	약정자	채무액	평균 감면율
매입형 (원금감면 방식)	136,915	220,875	37,950	33,988	70%(원금) 100%(이자)
중개형 (금리인하 방식)			41,619	31,073	4.8%p(금리)
합 계			79,569	65,061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저조한 사업 실적을 고려해 국가 재정 출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

□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영을 위해 부실(우려) 채권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주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채권매입 소요 재원 중 예상되는 손실분만큼은 국가 재정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 새출발기금의 사업계획이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변경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분도 이에 연동하여 변화하고 있음.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2025년 3월 계획변경	2025년 7월 추경
지원대상	2020. 4.-2023. 11.	2020. 4.-2024. 6.	2020. 4.-2024. 11.	**2020. 4.-2025. 6.**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신청기간	2025. 10.까지	2026. 12.까지		
채무감면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까지)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상향		**저소득층(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은 90% 일괄 감면**
대상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서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제외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가능	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만기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저소득층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계획 변화>

구 분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2025년 7월 추경
부실채권 매입규모	30조원	33.4조원	
채권매입 기한	2025. 10.까지	2026. 12.까지	
채권매입 소요재원	18조원 = 30조원×60%(매입가율)	13.6조원 = 33.4조원×40.7%(매입가율)	
국가재정 부담분(출자)	3.6조원 = 18조원×20%(손실률)	**4.01조원** = 13.6조원×29.5%(손실률)	**4.48조원** = 13.6조원×33%(손실률)
공사 부담분(공사채)	14.4조원 = 18조원-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새출발기금 신설 시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대 3년간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고, 채권 매입가율 60%를 적용하여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 총 소요재원 18조원 중 14조 4,000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예상 손실률 20%를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조 6,000억원은 정부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충하는 계획을 세웠음.

□ 그러나,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신정기한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채권 매입 목표를 종전 30조원에서 33.4조원으로 늘렸으며, 사업 손실률 현실화를 위해 종전 손실률 20%를 29.5%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분은 종전 3.6조원에서 4.01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출발기금제도 개선사항[340]이 발표됨에 따라 새출발기금 사업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 재정 부담분은 다시 한번 증가하여 총 4.48조원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음.

340) ① 90% 원금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
② 지원대상 사업기간 연장(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 그런데, 2025년 6월 기준 채권매입 재원 투입 현황을 보면, 국가 재정 부담분은 계획액 4.48조원 중 2.21조원이 투입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0.7조원까지 포함하면 2025년 말까지 총 2.91조원의 출자가 이루어져 계획대비 65%의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담분은 계획액 9.12조원 중 2025년 6월 기준 총 2.86조원이 집행되어 계획대비 31.4%만 투입된 상황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조달 계획 및 실적>

(2025. 6.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실 적						계획대비 실적
	부담액	비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비율	
국가재정 (출자)	**44,800**	32.9	11,000*	2,800	3,300	12,000	**29,100**	50.4	**65.0**
공사 (공사채)	**91,200**	67.1	-	3,600	15,600	9,400	**28,600**	49.6	**31.4**
합 계	**136,000**	100	11,000	6,400	18,900	21,400	**57,700**	100	**42.4**

*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총 51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 총 33.4조원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시작 이후 33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기준 총 10.4조원의 매입 실적을 보여, 계획 대비 실적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2025. 6.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액	채권매입액[341]
계획 (2022. 10. ∽ 2026. 12. **총 51개월)**	334,000	136,000
실적 (2022. 10. ∽ 2025. 6. **총 33개월)**	103,861	45,953
계획 대비 실적	**31.1**	**33.8**

(자료: 금융위원회)

□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실(우려)채권 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1.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계획 대비 65%를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한 것으로서, 사업 진행 속도에 비해 국가 재정 투입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또한, 금융위원회는 총 51개월 동안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 총 사업기간의 약 3분의 2가 경과한 2025년 6월 시점의 계획 대비 실적이 31.1%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업기간 내에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사업 진행 속도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의 출자를 늘릴 경우 국가 재정이 동 사업에 장기간 유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정된 국가 재정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 등을 고려해 그 출자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임.

341) 부실(우려)채권에 매입가율을 적용하여 실제 채권을 매입한 가격을 말함.

(2) 채권금융회사의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채무조정 방식 중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에 적용하는 '매입형'(원금감면)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새출발기금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동 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금(순부채)을 감면해주는 방식임.

□ 이에 비해,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해 적용하는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를 약정하는 방식인데, 만약, 채권금융회사가 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 비교〉

구분	매입형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대상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채권)
채무조정 범위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만 감면(금리 인하방식)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 단,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

□ 즉,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재정의 투입 역시 불필요해지는 것임.

□ 그런데,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채권매입액 4조 5,953억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매입액은 2조 175억원(43.9%)인데 비해 중개형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매입액은 2조 5,778억원(56.1%)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현황〉

(2025. 6. 기준, 단위: 명, 억원, %)

구분	매입채권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비율
합 계	122,651	103,861	**45,953**	**100**
매입형 (원금 감면방식)	78,513	70,074	**20,175**	**43.9**
중개형 (금리 인하방식)	44,138	33,787	**25,778**	**56.1**

※ 중개형 약정 체결 후, 실효된 차주는 원금감면방식, 금리인하방식에 중복(단, 채권액은 인수시점 기준 차주 성격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부실(우려)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342]의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계좌에 대한

342) 새출발기금과 채권금융회사 간에 채권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지면 새출발기금은 계약체결일 당일에 현금으로 채권매입 대금 전액을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므로, 채권금융회사는 부실채권 관리부담 감소 및 현금 확보를 통한 유동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새출발기금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현황 〉

2022. 10.~ 2025. 6. 동의회신 대상	동의	부동의 (과반동의계좌 포함)
425,344계좌 (100%)	145,512계좌 (34.2%)	279,832계좌 (65.8%)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2024년도 중개형 채무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평균 76.6일이 걸리는 반면,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평균 266.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정책효과가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중개형 채무조정 평균 소요기간〉

채무조정 신청일 ∽ 채무조정 약정일	
채권금융회사 **동의 경우**	채권금융회사 **부동의로 인해 새출발기금이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 경우**
76.6일	266.3일*

* 2024년 부동의 계좌 98,720건 중 새출발기금과 약정을 완료한 51,490건(52.2%)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이 낮은 경

우 부실(우려)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부담이 국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가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의 정책효과 역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343]: 펀드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 지연 방지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 재정을 출자해 모펀드 조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제5호 펀드 조성을 위해 국가 재정 500억원을 출자하여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50,000	-	-	50,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자본과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344] 동 펀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1호~5호) 조성되었고,

343)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2432-304)

344) 정부는 2017년 12월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6호 펀드도 조성될 계획임.

○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된 국가 재정은 2020년도 750억원, 2021년도 675억원, 2024년도 500억원이며[345], 2025년도에도 500억원이 추가로 출자될 예정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6호 주요 특징>

구 분	1호 (2018년)	2호 (2020년)	3호 (2021년)	4호 (2023년)	제5호 (2024년)	제6호(예정) (2025년)
재정 출자	-	750억원	675억원	-	500억원	500억원
운용 주체	한국성장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특 징	조선, 건설중장비, 철강 분야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기업의 차입수요에 대응하여 투자 방식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증가 대비	다양한 업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주력산업 인센티브 삭제	금리·물가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 대비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 대비

(자료: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

345) 모펀드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국가재정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KAMCO	국민	농협	하나	우리	신한	키움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합계
제1호	약정총액	-	1,502	1,102	646	250	350	350	350	350	350	-	40	125	**5,415**
	(비중)	-	(27.7)	(20.4)	(11.9)	(4.6)	(6.5)	(6.5)	(6.5)	(6.5)	(6.5)	-	(0.7)	(2.3)	(100.0)
제2호	약정총액	**750**	1,502	1,062	686	1,000	-	-	-	-	-	-	15	-	**5,015**
	(비중)	(15.0)	(30.0)	(21.2)	(13.7)	(19.9)	-	-	-	-	-	-	(0.3)	-	(100.0)
제3호	약정총액	**675**	1,322	935	668	600	-	-	-	-	200	100	10	-	**4,510**
	(비중)	(15.0)	(29.3)	(20.7)	(14.8)	(13.3)	-	-	-	-	(4.4)	(2.2)	(0.2)	-	(100.0)
제4호	약정총액	-	1,495	1,110	835	1,560	-	-	-	-	-	-	-	-	**5,000**
	(비중)	-	(29.9)	(22.2)	(16.7)	(31.2)	-	-	-	-	-	-	-	-	(100.0)
제5호	약정총액	**500**	1,335	991	824	1,350	-	-	-	-	-	-	-	-	**5,000**
	(비중)	(10.0)	(26.7)	(19.8)	(16.5)	(27.0)	-	-	-	-	-	-	-	-	(100.0)

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임.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346]은 사전적 ·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인데, 이는 부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사전적 구조조정기업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기업[347]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대상기업[348]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③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의 지원대상기업[349]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④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④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⑤ 코로나19 피해 기업[350]	

(자료: 금융위원회)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① 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4~5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펀

346)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은 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② 운용 효율성이나 민간자금 유입 등 시장성 확보를 위해 일부 허용되는 일반 투자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은 60%이며,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에는 100%임.

347)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48) 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기업, 최근 2년간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27제3항)

349)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으로서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35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 업체

드와 ② 운영사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정한 후 민간 투자자가 출자 여부를 정해 단건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즉시 소진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됨.

2) 검토의견

□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제5호의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기준 총 2조 4,94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4조 9,702억원의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총 7조 4,642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고, 이 자펀드 결성액 중 총 5조 4,123억원이 투자 집행되어 그 집행률은 72.5% 수준임.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5호 결성 및 집행 현황>

('25.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개)

구 분			결성 현황			집행 현황		
구분	펀드 구분	자펀드 수	모펀드 총액	민간 자금	자 펀 드 결성(A)	투자업체 수	투자실적 (B)	집행률 (B/A)
1호 (2018년~)	소 계	12	5,415	11,026	16,441	48	15,995	97.3%
	프로젝트	6	1,415	4,798	6,213	5	6,213	100.0%
	블라인드	6	4,000	6,228	10,228	43	9,782	95.6%
2호 (2020년~)	소 계	17	5,015	10,836	15,851	45	15,130	95.4%
	프로젝트	12	2,006	6,875	8,881	12	8,881	100.0%
	블라인드	5	3,009	3,961	6,970	33	6,248	89.6%
3호 (2021년~)	소 계	13	4,510	13,283	17,793	42	16,567	93.1%
	프로젝트	7	1,510	8,770	10,280	7	10,280	100.0%
	블라인드	6	3,000	4,513	7,513	35	6,287	83.7%
4호 (2023년~)	소 계	8+α	5,000	6,190	11,190	16	4,577	40.9%
	프로젝트	3+α	2,200	2,800	5,000*	3	2,159	43.2%
	블라인드	5	2,800	3,390	6,190	13	2,418	39.1%
5호 (2024년~)	소 계	6+α	5,000	8,367	13,367	6	1,855	13.9%
	프로젝트	α	1,650	1,850	3,500*	-	-	-
	블라인드	6	3,350	6,517	9,867	6	1,855	18.8%
합계		56+α	24,940	49,702	74,642	157	54,123	72.5%

* 제4호 및 제5호 프로젝트펀드는 수시 결성 중으로 최소결성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 현재 투자 여력이 있는 제4호 및 제5호 펀드를 살펴보면, 2025년 6월 기준 투자 집행률이 각각 40.9%, 13.9%로 나타나, 그 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블라인드 자펀드 결성은 완료된 상태이나, 프로젝트 자펀드의 경우에는 수시 결성 중으로 2025년 6월 현재 그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500억원을 기반으로 하여 제6호 펀드[351]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 8월 중에 모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연도 중에 자펀드 운용사 선정작업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6호 집행계획안>

2025년 3~4분기	▪ 재정·정책 모펀드 정관 체결 및 설립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선정공고 및 심사
	▪ 자펀드(프로젝트펀드) 수시 출자 제안 접수 및 심사
2026년~	▪ 선정 자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거쳐 투자집행 개시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주력산업 투자 관련 의무투자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존 펀드와는 달리, 제6호 펀드의 경우 사전적 ·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6개 주력산업분야(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351)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5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2,000억원)으로 모펀드(2,500억원)를 조성한 후,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총 5,0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할 계획임.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제6호 펀드의 프로젝트 재원 전액을 주력산업에 배분하며, 후순위 배정[352]을 위한 재정 출자 비율을 종전 펀드의 5~7%보다 높은 10%로 상향한다는 계획임.

□ 제4호 펀드는 2023년부터, 제5호 펀드는 2024년부터 결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투자 집행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올해 내에 자펀드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는 제6호 펀드의 투자 집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 펀드와 기존 펀드 간 투자 집행 관련 경쟁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설될 제6호 펀드의 경우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 실적이 저조한 6개 주력산업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므로, 펀드 간 경쟁구도 형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관련 민간 재원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설될 제6호 펀드의 투자조건이 유리할수록,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결국, 제6호 펀드와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투자 집행이 동시에 진행

352) 후순위 자금은 투자금 상환 시 가장 마지막 순위로 상환받게 되고, 펀드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순위 출자자 → 중순위 출자자 → 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부담함. 즉,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동 펀드의 재정 출자금은 전액 후순위로 배정될 예정임.

된다면 기존 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재정으로 출자한 재원이 구조조정 수요 기업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고,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어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호 펀드의 지원 분야를 제4호 및 제5호 펀드와 차별성 있게 설정하고, 제4호 및 제5호 펀드 관련 자펀드 운용사 등의 조기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시장에 새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한정된 민간 투자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신설 펀드와 기존 펀드 간의 경쟁으로 인해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9.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353]: 특정업무경비 개인 정액 지급 시 현금 지급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공무원 상용임금,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기타운영비 등의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2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5%)되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02	-	-	702	593	-	109	719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사업에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및 검사수행을 위한 조사활동비 및 정보활동비를 집행하기 위한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서는 1억 4,000만원이 편성되

353) 세부사업: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02)

어 이 중 1억 3,600만원이 집행됨.

○ 금융위원회의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자금세탁 관련 심사분석 및 검사수행을 위한 정보, 조사 및 검사활동비로 활용하도록 소속 직원 64명에게 개인별 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2024년도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직 급	인원수	1인당 月지급액	소 요 액		비 고
			月 소요액	年 소요액	
고공단	1	300	300	3,600	정보활동비
국장급	1	250	250	3,000	
실장급, 심의위원	3	200	600	7,200	
과장급 이하	59	178	10,500	126,000	조사활동비 검사활동비
합 계	64			139,800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음.

○ 위 집행지침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별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2024년 3월까지 이러한 원칙과 달리 금융정보분석원 부서 계좌로 특정업무경비를 이체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24년 4월 이후에는 위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인원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 방식을 변경하였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 시 현급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54]: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의 금융감독원 파견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은 금융위원회 조직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억 3,400만원 중 6억 7,200만원(80.6%)이 집행되고, 1억 6,200만원(19.4%)은 불용되었음.

○ 불용은 주로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발생(1억 3,900만원)하였음.

〈 2024회계연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34	-	-	834	672	-	162	575
-직무수행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54	-	-	54	45	-	9	54
-금융혁신 전문 역량 강화	55	-	1	56	54	-	2	55
-워크숍	51	-	-	51	39	-	12	51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4	-	-	4	4	-	-	4
-업무우수부서/ 직원 포상	8	-	-	8	8	-	-	8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	662	-	△1	661	522	-	139	403

(자료: 금융위원회)

354) 세부사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5-301)

○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청년인턴 급여가 불용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50명의 청년인턴을 5개월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청년인턴(9명/49명)이 취업 등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였고, 상반기 25명은 5개월(2024. 3. 25. ~ 2024. 8. 24.)간 근무하였으나, 하반기에 채용한 24명은 약 4개월(2025. 8. 25. ~ 2024. 12. 31.)만 근무하였기 때문임.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에는 청년인턴 6명을 금융위원회에 배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증액된 예산[355]을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각 25명(총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음.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4년 확대된 청년인턴 인원 전체를 금융위원회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청년인턴에게 보다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채용한 총 50명의 청년인턴 중 20명(10명, 2회)은

355) 정부안은 6개월 6명, 2개월 3명 등 총 9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인턴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50명에 대해 5개월간의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금융감독원에서, 10명(5명, 2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였음[356].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부 예산으로 선발한 청년인턴을 외부기관, 특히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4년 예산을 의결하였는데, 타 기관에 청년인턴을 파견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그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금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직무역량이나 필요 인재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직접 고용이 아닌 '외부기관 근무' 형태로 집행될 경우 인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채용한 청년인턴[357]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예금보험공사에 배치된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도 서류전형 등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부합하지

356) 근무기관 및 부서와 무관하게 금융위원회에서 선발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현장체험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357)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자체적으로 3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함. 보수수준은 금융위원회 청년인턴과 유사(월 210만원)하며, 기간은 6개월임.

않는 사례도 발생함.

□ 결과적으로,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청년인턴 인원을 모두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금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타 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리·책임체계의 모호함, 근무조건과 혜택의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절적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청년인턴 인원(’23년 6명 → ‘24년 50명)을 금융위원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어려워, 청년인턴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인력의 60%(30명)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운영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청년인턴 규모를 현실화(30명)하여 채용 청년인턴은 전원 금융위 내부에 배치·근무하고 있으며,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원만큼 하반기 추가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청년인턴 급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함.

제2장 공적자금상환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358]: 채무상환 완료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49조원(원금기준)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임.

□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계획현액은 9조 8,409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8조 8,423억원만 상환하여 그 집행률은 89.9%임.

<2024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세목명	2024						2025
	계획액		계획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계획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789,418	9,840,902	9,840,902	8,842,338	998,564	89.9	5,997,739

(자료: 금융위원회)

358) 세부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9111-841)

2) 검토의견

□ 정부는 2003년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예수받아,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가운데 49조원을 부담하였음.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49조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359] 등 수입 재원을 활용해 상환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약 20.6조원(원금)인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 법률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360] 정부는 이 기한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전액을 상환 완료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금 기준으로, 2025년도에 6조원, 2026년도에 8.7조원, 2027년도에 5.9조원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한 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임.

---

359)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45.7조원) 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

360)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7월말기준)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내역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4,084,124	8,718,811	5,894,626
	이자	799,543	647,009	537,709	484,798	232,530	302,592	60,121
원리금 상환계획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8,718,811**	**5,894,626**
	이자	844,790	703,109	651,458	549,755	438,282	302,592	60,121
잔액(원금)		38,648,264	32,232,982	28,011,614	**20,611,176**	14,613,437	5,894,626	-

*2026~2027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의 주요 재원[361]인 ① 일반회계전입금, ② 세계잉여금, ③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의 최근 5년간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5조 3,621억으로 나타나,

기금 청산까지 남은 3년간(2025년~2027년) 채무잔액 약 20.6조원(연평균 6.9조원)의 상환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36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수입원 〉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6,000	26,000	3,039	25,000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1,034	1,067	1,075	1,107	1,129
세계잉여금	-	10,362	19,970	16,843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	12,580	24,000	26,000	51,900
합 계	22,034	50,009	71,045	46,989	78,029
평균 수입	53,621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재원 중 2024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5조 1,900억원)인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항목[362] 중 향후 안정적인 수입 재원은 「예금자보호법」[363]에 따른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약 2.7조원

36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24년도 수입 현황 및 2025년도 계획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계획
	당초	수정	결산	수납률	
총 계	**4,641,030**	**5,581,030**	**5,443,234**	97.5	**4,749,605**
정부출자수입 (출자금융회사 배당금 등)	191,028	191,028	214,490	112.3	227,459
기타이자수입	101,079	101,079	130,723	129.3	117,396
기타경상이전수입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등)	2,544,120	2,544,120	2,580,600	101.4	2,660,038
재고자산매각대 (출자금융회사 주식매각)	1,033,172	1,033,172	216,626	21.0	525,330
정부예금회수	771,631	1,711,631	2,300,794	134.4	1,219,382

(자료: 예금보험공사)

36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2025년도 계획액) 뿐이므로, 2025년부터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364]

□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른 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2027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기 쉽지 않아 보임.

□ 2027년을 법정 존속기한으로 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한 것은 일반 재정 활동과 분리해 안정적으로 관련 자금을 모아, 2002년 이전에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 청산과 관련해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자금 부채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정해진 기한 안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안정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64) 출자금융회사(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을 통한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주식 매각은 주가 및 경제환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금 청산 전 주식 매각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제3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Ⅱ. 검토의견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365]: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00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특별회계전입금	30,000	-	30,000	30,000	30,000	-	-	150,0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신보의 건전성 악화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농신보 기본재산[366] 확충을 통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되었음.

---

365) 세부사업: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366)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익금,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367]는 기금의 운용배수[368]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규정」 제12조[369]는 추가적 보증여력의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370]에 따라 적정운용배수를 12.5배[371]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4년~2019년 농특회계로 1.6조원 반환[372]과 보증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 보증잔액[373]의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에 있음.

---

36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8)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369)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370) 적정운용배수 관리의 필요성(자료: KFR 한국펀드평가,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 2020 8.)

구 분	내 용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 보증 상품의 다양화, 보증 수요의 확대 등으로 보증자산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계획보다 보증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운용배수를 법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재산 가치변동에 대응	○ 기본 재산은 경기 변동,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기본 재산의 평가금액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배수가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법정 수준 이하의 보증 배수 유지 * 이러한 필요성은 Basel 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임
보증자산의 질적변화에 대응	○ 기본 재산은 대위변제의 재원으로서 보증 자산의 사고율 증가, 대위변제 증가시 기본 재산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피함 ○ 운용배수의 분모항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를 급격히 증가시킴 ○ 이러한 보증 자산의 부실화 상황에서도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법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371)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

372) 기본재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이 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임.

373)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증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농어업분야의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의 확대* 등에 따라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업분야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관련 정책자금 배정규모: (2021년) 8조 9,419억원 → (2023년) 10조 3,585억원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보증료,이자수입등	1,114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계	△664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지출	보증보조비용	746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구상채권상각비	1,466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관리업무비 등	741	666	590	566	633	660	626	635
	계	2,953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기본재산(A)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보증잔액(B)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운용배수(B/A)		6.9	9.7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처럼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동 기금을 통하여 같은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374]이 원칙이나, 적정운용배수 내에서는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375]까지 예외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운

37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375) 「신용보증규정」
제14조(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15억원(법인은 20억원)으로 한다.
제15조(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 이내로 한다.
1.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보증총한도의 적정한 수준이내에서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

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예외보증을 중단하여야 함.

-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부터 매년 예외보증 지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외보증 운용기한 적용 현황>

일 정	적용현황
2020. 2.	■ 2019년 적정운용배수 초과(15.4배)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부여 - (최초) 2020. 5. 31.까지
2020. 5.	■ 예외보증 지원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0. 5. 31. → (변경) 2020. 8. 31.까지(3개월)
2020. 8.	■ 농신보 「신용보증규정」 개정 시행 및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0. 8. 31. → (변경) 2021. 8. 31.까지(1년)
2021.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1. 8. 31. → (변경) 2022. 8. 31.까지
2022.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2. 8. 31. → (변경) 2023. 8. 31.까지
2023.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3. 8. 31. → (변경) 2024. 8. 31.까지
2024. 8.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4. 8. 31. → (변경) 2024. 12. 31.까지(3,133억원 한도내)
2024. 12.	■ 예외보증 운용시한 연장 - (당초) 2024. 12. 31. → (변경) 2025. 12. 31.까지(3,133억원 한도내)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 중,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총액한도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총액의 한도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 이와 같이 농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2024년 4분기 순신규보증총량제[376]를 시범도입하였으며, 향후 운용배수, 정책자금 등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024년도 300억원, 2025년도 1,500억원 등 1,800억원의 정부출연과 더불어 금융기관 특별출연[377]으로 기금 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376) 순신규보증총량제 개요(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배경**
- ❍ 재정 상황 및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탄력적 보증공급 관리방안 마련
- ❍ 보증총량 관리를 통한 법정운용배수 준수 및 보증지원 체계 확립

□ **조치 내용**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후 법정운용배수를 감안한 연간 순신규보증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분기별 한도 관리
  - 분기별 배정한도 비중(1분기 15%, 2분기 35%, 3분기 30%, 4분기 20%)

(예시) '25년 순신규보증 3조 4,000억원

(단위: 억원,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순신규보증	5,100	11,900	10,200	6,800	34,000

□ **분기별 배정한도 소진 시 관리 계획**
- ❍ 배정한도 80% 소진 시 대체 보증기관이 없는 농림어업인 및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우선 실시
- ❍ 배정한도 100% 소진 시 정식신용조사 대상 보증 건*에 한해 다음분기 이월

  *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법인 혹은 3억원 초과 비법인(재무제표 보유시)

※ 분기별 한도 소진율(80~100%)에 따라 일반자금과 정책자금 차등 지원

377) 2024년 12월 농협은행 특별출연금 100억원 전입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25.4.30)
○ [지적사항] 농신보 운용배수는 2023년말 기준 16.8배, 2024년 6월 기준 17.3배로 전년도 14.6배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운용배수: 17.3배 - 향후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회복되기 위하여 장기간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운용배수 진입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제도개선	○ 순신규보증총량관리제를 시범도입하였으며 향후 운용배수, 정책자금 등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보증 공급계획을 기금의 재정상황 및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 현행유지, 증가 등으로 구분하고 보증공급의 예측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순신규보증총량제를 도입('24.4분기 시범도입, '25년 하반기 정식도입 예정) - 기금 건전성,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추이, 기존 보증의 질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정부 정책자금 배정물량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 운영* 중 * (구성) 금융위, 농신보, 농식품부·해수부, 연구기관(금융연·농촌경제연) (내용) 농·어업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과 연계한 보증총량 관리방안 및 기금건전성을 고려한 충당금 적립방식 개선안 마련 - 정부 출연과 더불어 금융기관 특별출연으로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 정부출연금 1,500억원('25년), 농협은행 100억원('24.12월) 旣반영 / 수협은행 15억 예정('25년중) ○ 조치예정일 : 2025년 중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 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용배수는 2024년말 기준 17.3배 수준으로, 2023년말 16.8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추정)
기본재산(A)	10,792	11,741	10,476	10,384	10,894
보증잔액(B)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1,463
운용배수(B/A)	15.2	14.6	16.8	17.3	16.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농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는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위변제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상채권회수율 하락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378]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및 구상채권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추정)
대위변제액	3,021	2,904	4,074	4,195	4,380
구상채권회수율[1)]	4.5	3.7	2.8	2.6	2.2

주1) 연중 구상채권 회수 수입액/구상채권 잔액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편, 2024년~2025년 각각 300억원, 1,500억원 등 1,8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 전입에도 불구하고 2025년말 기준 기금의 운용배수는 16.7배 수준으로 전망되는바, 정부의 출연이 기금 건전성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378) 2021년 1,896억원 → 2022년 1,849억원 → 2023년 3,104억원 → 2024년 3,271억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향후 보증총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마련,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 출연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대위변제금[379]: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신보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계획현액 4,303억원 중 4,195억 1,300만원(97.5%)이 집행되고, 107억 8,700만원(2.5%)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330,300	430,300	-	430,300	419,513	-	10,787	438,01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대위변제금의 적정 계획액 편성 필요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증 부실의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실시하였음.

○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농신보를 포함한 금융성

379) 세부사업: 대위변제금(2432-680)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체변경을 허용하고 있음.[380]

○ 금융위원회는 보증부실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 농신보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출금액의 각각 26.1%와 28.0%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금융성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상한인 30% 수준에 근접한 수준임.

<2023년~2024년 농신보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자체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계획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A)	수정 (B)	증감율 ((B-A)/A)			
2023	산업금융지원(2400)	346,030	436,461	**26.1**	430,138	124.3	98.6
	- 대위변제금(2432-680)	319,604	409,604	28.2	407,437	127.5	99.5
2024	산업금융지원(2400)	356,654	456,654	**28.0**	441,509	123.8	96.7
	- 대위변제금(2432-680)	330,300	430,300	30.3	419,513	127.0	97.5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381]에 따라 의무적

380) **「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국가재정법 [별표 3] 금융성 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8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적 지출사업이며, 보증 부실의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금 부족분 발생은 사전에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382]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그동안의 대위변제금 추계가 과거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율에 의존하여 추계되었으며, 향후 대위변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보증[383]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위변제금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보임.

○ 예를 들어 2024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액의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2024년 추정 보증잔액에 최근 5년(2019~2023년) 간의 평균 대위변제율[384]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최근 급증하는 불건전보증 규모 추세[385]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382) 다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2024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안에 편성된 3,303억원은 최근 대위변제금과 불건전보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과소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음.

> 내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안에 편성된 3,303억원은 최근의 대위변제금과 불건전보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과소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신보는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불건전보증 정상화 등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자료: 정무위원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383)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384)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액

385) 불건전보증 잔액: (2021년) 526억원 → (2022년) 789억원 → (2023년) 1,053억원 → (2024년) 1,390억원

<2024년도 대위변제율 산출내역>

2024년도 계획안 산출근거
○ 대위변제금 = 2024년 보증잔액 추정 ×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대위변제율 = 18조 5,962억원 × 1.78% = 3,303억원 * 보증별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대위변제율(1.78%) 적용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및 추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추정	2024년 계획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8,629	185,962
대위변제액	3,265	3,073	3,021	2,904	3,188	3,303
대위변제율	2.03	1.87	1.85	1.69	1.78	**1.78**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은 ①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국회의 재정 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②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회계연도 중에 농신보의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대위변제금 발생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대위변제 규모는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904억원에서 2024년 4,1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2025년) 1,658억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율은 2022년 1.69%에서 2024년 2.33%까지 상승하였음.

○ 2024년말 기준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보증[386], 우대보증[387], 특례보증[388]에서 각각 3,183억원, 729억원, 284억원의 대위변제금이 집행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각각 3.29%, 1.40%, 0.91%로 나타나고 있음.

<농신보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보증	보증잔액(A)	99,464	99,367	97,827	96,739	95,954
	대위변제(B)	2,409	2,272	3,201	3,183	1,507
	대위변제율(B/A)	2.42	2.29	3.27	3.29	1.57
우대보증	보증잔액(A)	45,773	48,253	50,590	51,969	52,941
	대위변제(B)	432	468	620	729	395
	대위변제율(B/A)	0.94	0.97	1.23	1.40	0.75
특례보증	보증잔액(A)	18,348	24,232	28,003	31,205	32,513
	대위변제(B)	181	162	253	284	154
	대위변제율(B/A)	0.99	0.67	0.90	0.91	0.47
합 계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1,408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6	2,056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1.13

주: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특히,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하여 일반보증 중심[389]으로 법인보증 부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말 기준 법인의 대위변제율은 6.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386) 농림어업인의 영농림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387)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조건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388) 재해피해복구 등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389) 2024년말 법인 승낙잔액 18,532억원 중 일반보증 취급 건은 18,385억원(약 99.5%)으로 대다수 일반보증으로 취급 중임.

<2020년~2024년 법인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증잔액(A)	24,840	23,124	22,417	20,479	18,532
대위변제(B)	1,264	1,156	973	1,309	1,136
대위변제율(B/A)	5.09	4.99	4.34	6.39	6.1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농신보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2024년 1분기(1,153억원) 대비 2025년 1분기(846억원) 대위변제금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고 국회에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금은 2,056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 2,049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대한 농신보의 대응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25.4.30)
○ [지적사항]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3년 대위변제액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74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당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억원(+28.2%)을 증액변경하였음 * 2024년도 상반기 대위변제금 집행률: 61.9% ○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조기경보시스템 및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 등을 통해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금 감소('24.1분기 1,153억 → '25.1분기 846억)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건전성 관리 강화 ('25.1분기 관리목표 7,123건 100% 달성) *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유의관리가 필요한 피보증인의 신용정보,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하여 유효보증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 -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을 통해 지역센터별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25년 업적평가 배점 확대(2점→3점) ○ 조치완료 : 2025년 3월 31일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 한편, 이러한 대위변제 증가 추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건전보증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4년말 기준 불건전보증 잔액은 2021년 526억원의 약 2.6배 수준인 1,39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건전보증비율은 2021년 0.32%에서 2024년 0.77%로 0.45%p 증가하였음.

<농신보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1,408
불건전보증잔액(B)	526	789	1,053	1,390	1,658
불건전보증비율(B/A)	0.32	0.46	0.60	0.77	0.91

주: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여유자금운용[390]: 여유자금운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어업인의 금융지원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유동성 관리를 목표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조 5,073억 7,300만원 중 1조 5,611억 2,200만원(103.6%)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여유자금운용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여유자금운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07,373	1,507,373	-	1,507,373	1,561,122	-	-	1,743,874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실적 개선 필요

□ 농신보의 2024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조 8,634억 6,400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3.88%(직접운용 3.85%, 연기금투자풀 3.88%)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음.

○ 금융위원회 소관의 다른 금융성 기금 중 농신보와 사업체계가 유사

390) 단위사업: 여유자금운용(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9701)

한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익률이 각각 5.73%, 6.21%인 점을 감안할 때, 농신보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농신보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1,863,464**	**1,863,464 (3.88%)**	**1,288,861 (3.85%)**	**574,603 (3.88%)**	**-**
신용보증기금	13,659,531	13,265,759 (5.73%)	5,715,408 (4.36%)	7,550,351 (6.84%)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409,466	12,409,466 (6.21%)	4,783,633 (4.41%)	7,625,832 (7.38%)	-

(자료: 금융위원회)

□ 그동안 농신보는 다른 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작은 여유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산군을 제한적으로 운용하였으며, 특히 대위변제금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자금 인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예치금)의 비중을 높게 운용하여 왔음.

○ 2024년 기금별 연간자금운용계획 자산배분안을 살펴보면, 농신보의 확정금리형 상품(예치금) 비중은 69.8%로, 신용보증기금(35.5%)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17.4%)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2024년 기금별 연간자금운용계획 자산배분안 요약>

운용자산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단기자금		0.3%	0.4%	0.3%
중장기자금		99.7%	99.6%	99.7%
확정금리형 (예치금)		**69.8%**	**35.5%**	**17.4%**
실적배당형	국내채권	27.9%	53.4%	69.2%
	국내주식	2.0%	3.4%	5.1%
	해외채권	-	2.9%	1.4%
	해외주식	-	4.4%	6.6%
합 계		100.0%	100.0%	100.0%

주: 기금별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확정금리형 자산(예치금)의 비중을 높게 운용하는 자산배분 전략은 기금 안정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농신보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391]) 확정금리형 자산의 운용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39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기금의 사용)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협은행
2. 삭제 <2001. 7. 31.>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

확정금리형 자산은 실적배당형 자산에 비하여 중장기 수익률 제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92]

□ 이에 대하여 농신보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 비중[393]을 높이는 한편,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의 투자 승인을 받아 해외채권·주식의 위탁 투자(연기금투자풀 수익증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5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해외자산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운용을 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농신보는 향후 기금 여유자금의 관행적 운용을 지양하는 한편,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의 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9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농신보의 경우 타 금융성 기금 대비 확정금리형 상품의 투자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축소하여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93) (중장기형) 확정금리형 비중 추이: (2022년) 71.4% → (2023년) 72.6% → (2024년) 66.8% → (2025년 6월) 62.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의 분리 필요

□ 농신보의 「자금운용준칙」 제32조[394]에서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준칙 제34조[395]에서는 자금운용의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성과평가조직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신보는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신용보증기획부)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인 “신용보증업무부 리스크관리팀”를 설치·운용중이나, 이 조직에서 성과평가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의 담당인력은 팀장과 담당자 각각 1명에 불과함.

□ 그러나, 성과평가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가 동일한 조직에 의해 수행될 경우 업무 간의 이해 상충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농신보는 자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투명성

---

394) **「자금운용준칙」**
제32조(위험관리조직의 설치) ① 자금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설치 운용한다.
② 위험관리 조직은 위험의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고 점검한다.

395) **「자금운용준칙」**
제34조(성과평가조직의 설치) ① 자금운용의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성과평가 조직을 설치 운용한다.
② 성과평가 조직은 운용상품과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투자자산별로 기준 수익률을 설정하여 운용성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검증한다.

제고를 위하여 전담 조직의 분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396]

396)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해당 기능의 조직적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농신보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 위원회를 독립 설치하였고, 전문성 보완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담조직 분리를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4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을 운영하는 사업임.

○ 동 저축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5년 기본금리: 연 3.68%) 외에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장려금(연 0.9%~4.8%)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가입한도는 연간 총 240만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일반농어민</th><th>저소득농어민</th></tr>
<tr><td>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td><td colspan="2" rowspan="3">·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td><td>·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td></tr>
<tr><td>·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td></tr>
<tr><td>·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24년 기준 월 217,980원 이하)</td></tr>
<tr><td>저축형태</td><td colspan="3">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td></tr>
<tr><td>저축기관금리</td><td colspan="3">연 3.68% (2025년 기본금리)</td></tr>
<tr><td rowspan="4">저축장려금</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colspan="2">이자율(%)</td></tr>
<tr><td>일반</td><td>저소득</td></tr>
<tr><td>3년 만기</td><td>연 0.9</td><td>연 3.0</td></tr>
<tr><td>5년 만기</td><td>연 1.5</td><td>연 4.8</td></tr>
<tr><td colspan="3">*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td></tr>
<tr><td>장려금재원</td><td colspan="3">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td></tr>
<tr><td>가입한도</td><td colspan="3">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td></tr>
<tr><td>취급기관</td><td colspan="3">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총 가입계좌 수는 21만 계좌이며, 총 불입액은 1조 1,542억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 좌 수,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가입 계좌수(누적)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불입액(누적)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각각 314억 6,300만원, 기금운용 수익금 1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총 624억 2,9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397]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39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저축장려금 재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원	정부 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한국은행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기금운용수익	7	17	12	23	132	118
저축장려금지급액		70,815	67,757	68,233	53,260	54,135	62,429
	만기 지급액	70,306	64,441	67,045	53,071	49,771	60,627
	중도해지 지급액	1,365	1,401	1,186	1,208	1,350	1,18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한다는 점에서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구분되고,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쓰고 남은 재원은 미래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의 지출 경비를 충당하여 매해 연말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이며, 기금의 수입(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저축장려금 지급)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동 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기금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데, 2024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 하였음.

또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며,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기금 구조로 인해 중기 가용자산이 없으므로,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음.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398]〉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18	조건부 존치	농어가 재산형성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농어민 중심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2019	폐지 (일몰)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함.
2022	폐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함.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024	폐지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함.

398) 2024년도 기금존치평가, p.60 (일부 내용 축약)

□ 「국가재정법」 제5조[399]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적 재정제도인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동 기금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동 기금에 대한 부처 간 재원조달 및 소관 주체에 대한 이견[400]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39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400) 관련 부처의견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처 이관 및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
-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이관 시에도 한은 출연금 유지 필요
- ○ (한국은행) 재정의 화폐화 우려 등 감안 시 한은 출연은 부적절

제5장 신용보증기금

1. 정부출자수입[401]: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출자수입”은 출자회사 주식, 보증연계투자 주식,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 및 유동화회사보증 SPC출자금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5억 4,200만원이었으나, 302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계획액 대비 수납률 5,583.4%)되었음.

<2024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정부출자수입	542	542	542	30,262	30,262	-	-	478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수입 과목의 세부적인 계획액 편성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계획액은 출자회사 주식 배당금 5억 200만원,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 4,000만원 등 총 5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302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여 계획현액 대비 5,583.4%의 수납률을 기록하였음.

401) 세부사업: 정부출자수입(52-521)

<2020년 이후 정부출자수입 계획 대비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부출자수입	386	34,412	431	1,530	375	15,815	510	44,974	542	30,262
·출자회사 주식 배당금	273	380	315	467	274	510	452	532	502	422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	113	32	116	22	101	27	58	71	40	21
·유동화회사보증 SPC출자금 등	-	34,000	-	456	-	-	-	14,850	-	15,578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	-	-	-	585	-	15,278	-	29,521	-	14,241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당초 계획액 대비 수납 실적이 높은 이유는 수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화회사보증 SPC 출자금 및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이 각각 155억 7,800만원, 142억 4,100만원 징수되었기 때문임.

-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하여 SPC 출자금이란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한 P-CBO 만기 도래 후 해산 및 청산하는 과정에서 SPC가 보유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경우 잉여 재원을 배당받는 것을 의미하고, 대물주식 배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이 P-CBO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후 SPC가 보유한 유동화자산(부실편입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등)을 양도받은 후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유동화회사보증과 관련한 SPC 출자금 및 대물주식 배당금은 2020년 이후 각 1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

증기금은 이를 정부출자수입 수입 과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그 동안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해당 항목을 수입 과목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입 추계시 시장상황, SPC 자산 현황 및 부실 기초자산 편입기업의 배당 가능성을 정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금운용계획에서의 수입 과목의 정확한 추계는 기금의 지출규모, 여유자금 운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자수입의 계획 대비 징수 실적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402]: 채권시장안정 유동화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 산정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 시, 선순위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971억 400만원 중 1,335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33.6%)되고, 2,635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397,104	397,104	-	397,104	133,511	-	263,593	546,887

(자료: 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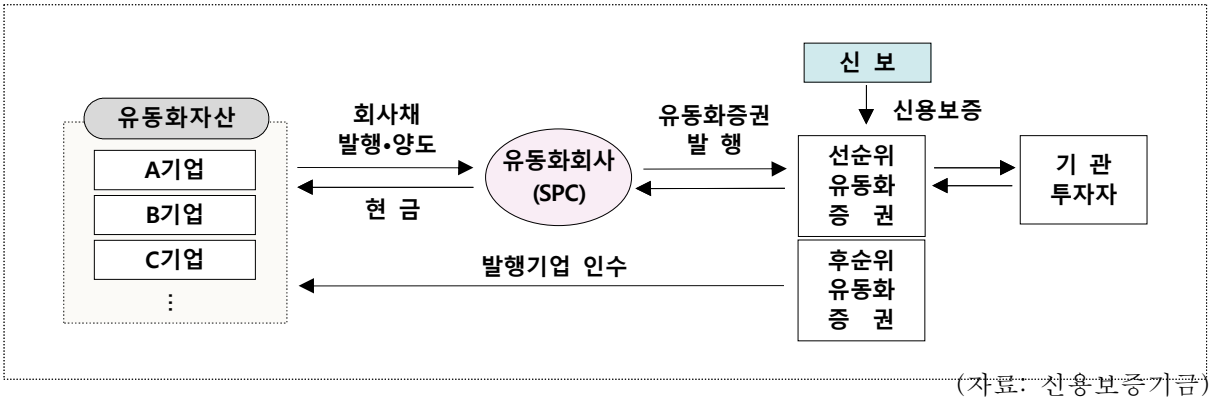
402) 세부사업: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2)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크게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과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 923억 2,500만원, 채권시장안정계정 3,04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함.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대부분 2020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403]을 수행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경우 계획액 3,048억원 중 582억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9.1%에 불과한 상황이며, 2023년의 경우에는 2,10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음.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유동화 계정구분	예상 대위변제액 (A)	실제 대위변제액 (B)	불용액(A-B)	집행률
2023년	일반	1,171	346	825	29.5%
	채권시장안정	2,109	0	2,109	0.0%
2024년	일반	923	754	169	81.7%
	채권시장안정	3,048	582	2,466	19.1%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당초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가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를 기존 발생한 부실금액에 부실발생 예상금액을 더한 후 후순위유동화증권 규모(버퍼) 만큼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403) 코로나 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어 현재는 공급이 종료되었고, 2023년 신설된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에 편입되어 있음. 2023년부터 공급된 채권시장 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은 차환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 부실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시작될 예정임.

-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선순위유동화증권과 후순위유동화증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되며, 이 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 등에게 발행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발행한 기업이 인수하고 신용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2024년 채권시장안정계정 대위변제금액 산출 방식>

대위변제 예상액	=	기 발생 부실금액	+	부실발생 예상금액	—	버퍼 (Buffer)
3,047억 7,900만원		361억원		3,766억 8,500만원		1,080억 600만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4회계연도 계획안의 경우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기존 부실금액 361억원, 부실발생 예상금액 3,766억 8,500만원, 버퍼 1,080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3,047억 7,900만원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부실발생 예상금액이 과다 산출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부실발생 예상금액은 정상 기초자산에 대한 연차별 경험부실률과 잔여만기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경우 신규와 차환,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을 구분하여 예상 부실률을 적용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예상부실률과 동일한 수준이나, 중견·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예상부실률을 적용하고 있음.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 예상부실률〉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일반계정		신규	1.62	3.03	3.35
		차환	6.77	6.63	-
채권시장 안정계정	중소기업	신규	1.62	3.03	3.35
		차환	6.77	6.63	-
	중견·대기업	신규	3.64	6.81	7.51
		차환	15.19	14.89	-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러한 결과는 예상부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예상부실률은 최근 10년간 경험부실률을 사용하되 과거 연도에 비해 최근 연도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부실발생 금액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산출[404]하고 있는데, 중견·대기업의 경우 과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실 발생[405]으로 대량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 경험 부실률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현행 예상부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은 과거의 부실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예상부실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특정 사건으로 인해 대량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상부실률이 구조적으로 과다추계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

404) 다만,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최근 10년간 경험부실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속인수 채권과 시장안정계정의 과거 경험부실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405) 2015년 동부제철(주) 2,053억원, 2016년 현대상선(주) 4,675억원, 2016년 ㈜한진해운 3,705억원 등

계정의 예상부실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험부실률 중 특정 사례로 인해 전반적으로 과다추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업무용건물[406]: 광진지점 리모델링 및 본점 주차타워 공사 지연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업무용건물” 사업은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19억원 중 2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1%)되고, 95억 200만원이 이월,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업무용건물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업무용건물	11,900	11,900	-	11,900	2,396	9,502	2	14,294
- 광진지점 리모델링	6,000	6,000	-	6,000	637	5,362	1	5,250
- 본점 주차타워 신축	5,900	5,900	-	5,900	1,759	4,140	1	-

(자료: 신용보증기금)

406)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2)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업무용건물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를 위해 60억원, 본점 주차타워를 신설하기 위한 59억원 등 총 119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경우 6억 3,700만원(10.6%)을 집행하고 53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본점 주차타워 신설 공사의 경우 17억 5,900만원(29.8%)을 집행하고 41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음.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는 광진지점(서울 광진구 소재)[407]의 건물이 1992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는 대수선 공사비용으로, 2024회계연도에 편성되어 이월된 금액 외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추가 공사비 52억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음.

○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는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용임.

407) <광진지점 건물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소 재 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20(구의동)	지하철역 도보 18분*
대지면적	2,154.40m2 (652평)	공시지가: 약186억원
연면적	8,284.65m2 (2,506평)	주차 45대(외부 4대)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6층	1~4층 업무시설
신축일	1992년 12월 21일	32년 경과

* 2호선(구의역) 1.2km / 5호선(아차산역) 1.1km / 7호선(어린이대공원역) 1.2km

(자료: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개요>

구 분	공사 前		공사 後		증축 등*
옥탑	물탱크실		창고		42.52m2
6층	옥상정원, 공조기실, 기계실		옥상정원, 회의실		265.56m2
5층	농구장(제외)	샤워실, 휴게실	아트리움	다목적 로비	11.05m2
4층	이행전담팀, 임금피크직원		스타트업기업 입주공간		11.05m2
3층	동부채권관리단		동부채권관리단		11.05m2
2층	광진지점		로비 (신설)	광진지점	△49.43m2
1층	기업은행, 동부신용보험1센터			임피, 보험센터	△17.30m2
지하1층	주차 25대		주차 27대		△28.79m2
지하2층	주차 16대	전기실, 기계실	주차 18대	전기실, 기계실	△27.66m2
연면적	8,284.65m2 (2,506평)		8,460.18m2 (2,559평)		총 175.53m2
엘리베이터	1대		2대		1대 추가
주차대수	지하41대, 지상4대		지하45대(전기차 2대 포함)		차단기설치
비고	▪ 외장재 전면교체(기존 커튼월 존치) 및 일부 증축 ▪ 엘리베이터 1대 신설, 기존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 전면 교체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대지)면적	1,531.47m2 (463평)	테니스장, 조경공간 일부
연면적	4,464.92m2 (1,351평)	1층 453평, 2~3층 각 449평
건축규모	지상 3층 (11.45m)	옥상포함 총 4개층 주차
주차면수	133대	일반 124, 전기차 7, 장애인 2
기타시설	엘리베이터, 전기차 충전시설, 보안용 CCTV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와 본점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계획액이 차년도로 이월된 것은 당초 2024회계연도 계획안을 편성하던 당시 공사 계획에 비해 설계 및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보면,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경우 당초에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마친 후 5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24년도 공사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 및 인·허가가 지연되어 2024년 11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였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어 2025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023. 12월	2023. 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심사위)	2024. 2월 ~2024. 4월	2024. 2월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		2024. 8월
인·허가	▪ 인·허가(경관심의 포함)		2024. 10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024. 5월	2024. 11월
착공	▪ 착공신고 및 구조물 철거	2024. 5월 ~2024. 12월	2024. 11월 ~2025. 11월 (2025. 4월말 공정률 31.78%)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폐)		
추가설계	▪ 제안공모(2차) 및 설계	-	2025. 2월 ~2025. 6월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024. 12월	2025. 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본점 주차타워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마친 후 6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24년도 공사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 및 인·허가가 지연되어 2024년 10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였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어 2025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본점 주차타워 공사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3.12월	'23.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	'24. 2월	'24. 2월
설계 및 인·허가	▪ 설계용역 및 BF인증 심의 ▪ 건축 인·허가	'24. 3~5월	'24. 3~8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4. 6월	'24. 9월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24. 6~12월	'24.10월 ~'25. 9월 ('25. 5월말 공정률 53.2%)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4.12월	'25. 9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당초 계획과 달리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와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는 2024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서울시 경관심의(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및 BF 인증(본점 주차타워 신축) 등 필요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408] 제2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대상이 되나,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4년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종료한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사실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고 실제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였으며, 그 결과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이 당초 2024년 4월에서 10월로 연장되었고, 경관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고, 2025년도 계획안에 추가 공사비용을 반영하였음.

○ 본점 주차타워 신축 공사의 경우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409]에 따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408)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4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BF인증) 의무 대상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2024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6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 결과 BF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설계 및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BF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되었음.

□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공사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획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2024년도에 완공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계획액의 상당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효율적인 계획액의 집행과 공사의 효과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경영지도[410]: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잡매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료 수입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87억 1,000만원 중 163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1%)되고, 24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경영지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경영지도	18,710	18,710	-	18,710	16,304	-	2,406	20,252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신용카드, 펌뱅킹[411], 현금 및 계좌이체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수납할 수 있음.

410) 세부사업: 경영지원(2431-307)

411) 펌뱅킹은 기업 또는 기관과 금융기관이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여 자금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

○ 2024년의 경우 보증료 수입은 7,363억 4,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료 수입	672,842	702,076	721,745	724,194	736,348

(자료: 신용보증기금)

□ 경영지도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수납받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을 위한 계획액은 2022년 30억 200만원, 2023년 31억 6,400만원, 2024년 36억 6,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은 2022년 19억 700만원, 2023년 17억 500만원, 2024년 15억 1,5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경영지도 사업 중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A)	결산 (B)	차이 (B-A)	예산 (A)	결산 (B)	차이 (B-A)	예산 (A)	결산 (B)	차이 (B-A)
경영지도	15,920	13,960	△1,960	16,082	15,952	△130	18,710	16,304	△2,406
신용카드 수수료	3,002	1,907	△1,095	3,164	1,705	△1,459	3,660	1,515	△2,145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 중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펌뱅킹 방식의 수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연도별 수납방법에 따른 보증료 수납액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이체 방식의 보증료 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펌뱅킹을 이용한 보증료 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수납방법에 따른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펌뱅킹	407,543	475,626	532,149	561,512	583,453
신용카드	107,513	103,407	84,520	75,796	67,733
기타	157,786	123,043	105,076	86,886	85,162
합계	672,842	702,076	721,745	724,194	736,348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사에 보증료의 평균 2.28%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으나, 펌뱅킹을 통해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건당 최대 200원에 불과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료 납부 금액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412]: 리스크 관리 철저 및 임시전용 재원 상환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보증에 대해 수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5,554억 7,400만원 중 4,729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1%)되고, 825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555,474	555,474	-	555,474	472,926	-	82,548	347,946

(자료: 신용보증기금)

412) 세부사업: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2) 검토의견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1년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잔여한도 2.85조원을 활용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음.

○ 사업 기간 동안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는 추가 보증공급 없이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위변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개요〉

구 분	소상공인위탁보증	
	기본 프로그램	임차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기업인 소기업 (도박·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기본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영위 임차 기업
지원한도	1,900만원	1,900만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및 구조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5년 만기) ※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만기)에서 거치기간 1년 연장(2022.4월)	
보증료율	- 1년차 0.3% - 2~5년차 0.9%	- 1~2년차 면제 - 3~5년차 0.4%
보증심사	- 수탁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 · 지방세 체납,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심사 - 현장조사 미실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보증과는 달리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위탁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수탁은행 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현장조사와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규모,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변동 내용 등을 수반하는 일반보증과 달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함.

<일반보증과 위탁보증 주요 심사항목 비교>

심사 항목	일반보증	위탁보증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비실시
▪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적용	비적용
▪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규모	적용	비적용
▪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변동 내용	적용	비적용
▪ 신용도 취약기업 해당 여부	적용	비적용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 보유	적용	완화*
▪ 최근 1년 이내 신용관리정보 보유	적용	완화*
▪ 최근 1년 이내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적용	완화*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적용	적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적용	적용

주: 검토일 기준 저촉 여부를 심사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수탁은행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위탁보증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위험은 일반보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순자산은 잠식된 상태이고, 대위변제액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 재원도 부족한 상황임.

<일반보증과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 비교>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0.2	1.7	3.9	13.1	16.7
	대위변제율	0.04	1.1	2.6	10.8	19.7
일반보증	부실률	2.4	2.0	2.0	3.3	3.6
	대위변제율	1.9	1.5	1.4	2.4	3.2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을 위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600억원, 2021년 본예산으로 1,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나, 2023년 8월부터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이 자본잠식 상태가 됨에 따라 2024년 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한 바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출연금 규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출연금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4,600
2021년	본예산	1,500
2024년	본예산	800
합계		6,9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에서 발생한 누적 부실은 1조 3,499억원으로, 2024년에 대위변제를 위한 현금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반보증 계정에서 2,000억원을 임시 전용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의 임시 전용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대위변제 종료 시까지 약 1,739억원의 현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이에 따라 잔여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환보증 계정'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할 것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대환보증 계정'의 잔여재원 추정액 중 2,000억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하였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34(전망)
누적부실	1,324	3,863	9,749	13,499	15,475		16,673
순자산	3,079	1,527	⊿1,100	⊿2,778	⊿3,424		⊿4,087
기말현금	8,407	6,322	1,803	⊿793	⊿2,562		⊿3,739
일반계정 임시전용 반영 시 (2024년)				1,207	⊿562	…	⊿1,739
대환보증계정 전용 반영 시 (2025년)					1,438		261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2024년에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임시로 전용한 2,000억원에 대한 상환 방안[413]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13)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지침」에서는 "본 계정(소

○ 참고로, 일반보증 계정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증배수를 일반적으로 12.5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임시 전용한 2,000억원은 실질적으로 일반보증 공급 규모가 2조 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

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에 대한 '25년도 및 '25년도 이후 정부 출연예산 확정 시 전용분은 “일반보증 계정”으로 재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6. 대환보증 대위변제[414]: 프로그램 수요에 비해 과다 추계된 정부출연예산 편성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보증에 대해 수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2,544억 3,600만원 중 1,236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6%)되고, 1,307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환보증 대위변제	254,436	254,436	-	254,436	123,679	-	130,757	326,100

(자료: 신용보증기금)

414) 세부사업: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2) 검토의견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도입되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연 최대 6.5%(금리 최대 5.5%, 보증료 연 1%)로 5년간 상환(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개인 5천만원, 기업 1억원 한도임.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재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800억원, 2023년도 예산 800억원 등 총 7,60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교부받아 마련되었으며, 공급액의 9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총 9.5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었음.

□ 한편,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3월과 8월, 2024년 3월 등 총 3회에 걸쳐 각각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환대상채무, 접수 및 상한기한, 대출한도 등을 변경한 바 있음.

○ 2023년 3월에는 코로나 19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접수기한도 기존 2023년말에서 1년 연장했으며, 상환기간은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2023년 8월에는 대환대상 채무를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사업목적 가계대출로 확대하고, 2024년 3월에는 대환대상 채무의 취급 기준일을 1년 확대하고, 최초 1년간 보증료를 0.7%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요>

구 분	2022년 8월 도입	2023년 3월	2023년 8월	2024년 3월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22.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23.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접수기한	2023년 말	2024년 말		
총량한도	8.5조원	9.5조원		
상환구조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금리	최대 5.5%			최대 5.0%
보증료율	연 1% 고정보증료율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은행 출연)
보증비율	90%			
보증방식	위탁보증(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iM뱅크(舊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등 제도를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한 공급목표 대비 공

급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말까지 8조 5,000억원, 2024년에는 9조 5,000억원(누계기준)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을 보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공급 계획(a) 주1)	8,500,000	9,500,000	9,500,000
신규 보증공급액 주2)	232,085	933,288	494,712
누적 신규 보증공급액(b)	232,085	1,165,373	1,660,085
계획 대비 보증 공급 실적(b/a)	2.7	12.3	17.5

(자료: 신용보증기금)

주1) 보증공급 계획: 정부출연금[2022년 추경(6,800억원) + 2023년 본예산(800억원)] × 운용배수(12.5배)
주2) 신규보증 운용기간: 2022년 9월 ~ 2024년 12월

□ 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이들 유사 프로그램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 최초 설계된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대환 이후의 대출금리는 최대 5.5%, 보증료율은 연 1%로 비용부담 비율이 최대

6.5%였으나, 3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대출 금리는 최초 1년간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는 최초 1년간 면제하고 2~3년차는 0.3%를 인하한 바 있음.

○ 이에 반해 유사한 시기에 운영된 다른 유사 프로그램의 경우 대환 이후의 금리는 최대 연 4.5% 수준에 불과하고 보증료도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됨.

<소상공인 대환보증,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회UP 특례보증 비교>

구 분	신보 (저금리 대환보증)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경기신보 (기회UP 특례보증)
대환 금리	· (1년) 5.0% 고정 · (2년) 5.5% 고정 · (3~10년) 시장금리 적용	· (1~10년) 4.5% 고정	· 시장금리 - 2%(이차보전) * 2024년 9월 기준 3.6%
보증 료율	· (1년) 0% (2~3년) 0.7% (4~10년) 1.0%	· 해당 없음	· 0.5%

(자료: 신용보증기금)

□ 당초 계획한 9조 5,000억원의 공급 계획 대비 17.5%에 해당하는 1조 6,600억원 수준의 공급만 이루어진 후 2024년말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 7,6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의 일부를 현금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사업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계정에서 약 2,119억원의 잔여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2,000억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잔여재원 예상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e	2026년e	2027년e	2028년e	2029년e	2030년e	2031년e	…	2034년e
잔여재원	7,109	5,968	4,909	3,937	3,223	2,744	2,395	2,125	…	**2,119**

(자료: 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당초 수요에 비해 과도한 정부 재정을 출연받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6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재고자산매각대[415]: 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한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융회사의 주식 매각 수입을 말하는데, 2024년도 계획액 1조 332억원 중 2,166억원이 수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계획
	계획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재고자산매각대	1,033,172	1,033,172	216,626	216,626	525,330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4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리금융지주 출자주식 잔여지분(1.24%) 매각대 1,366억원[416], 수협중앙회 국채[417] 만기도래 금액 800억원 등임.

415) 세부사업: 재고자산매각대(73-731)
416)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도에 잔여지분 모두를 매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완료하였음.
417) 수협중앙회는 2022년 9월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에 대해 국채로 상환 완료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2023년-2027년) 만기 도래시에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재고자산매각대의 연도별 계획액 및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이후 그 수납률이 감소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1조 332억원의 수입계획을 세웠으나, 최종 2,166억원(21%)만 수납되었음.

< 연도별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수납액	수납률
	당초	수정(A)				
2022	910,859	910,859	-	910,859	558,986	61.4
2023	215,642	215,642	-	215,642	80,000	37.1
2024	1,033,172	1,033,172	-	1,033,172	216,626	21.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이처럼 재고자산매각대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당초 계획한 출자금융회사의 주식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6월 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 약 8,686만주와 서울보증보험 주식 약 5,855만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가 등 매각 환경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에 대하여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2017년 이후 남아있는 지분 10%에 대한 매각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공적자금의 미회수액 규모가 1조 299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이 지원되었

지만, 2025년 3월에 보유지분(93.85%) 중 10%를 매각하는데 그쳐, 2025년 6월 기준 총 5조 1,584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상황임.

< 출자금융회사 주식 보유 현황 >

(단위: 억원, 2025. 6. 기준)

구 분	공적자금('97~'25.6.)			보유 주식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주식 수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35,500	25,201	10,299	86,857,001주	10%
서울보증보험	102,500	51,584	50,916	58,546,746주*	83.85%*

* 2025. 3. 14. IPO(기업공개) 시 보유 주식(6,553만주, 93.85%) 중 698만주(10%)를 공모 가격(26,000원)에 매각하여 1,815억원 회수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이와 같이 공적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낮은 주가[418] 등으로 인해 그 지분을 즉시 매각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인한 의무보호예수 기간[419](1년)이 2026년 3월까지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존속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기금 청산을 준비해야 하는

418) 2025년 8월 11일 기준 시가 3,385원

419)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주주, 임원 등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 매도를 제한함..

한편[420], 공적자금 상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 최소화[421]를 위해 보유자산 매각 시에 그 가치를 극대화할 책무도 있음.

□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그 보유지분을 기금 청산 전에 가능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식 매각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보유 주식을 현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최종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 등에 귀속[422]시키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적정 가격 형성 시점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법정 존속기한(2027년 12월)을 고려한 보유지분의 효율적 매각 방안과 함께 기금 청산 후 잔

---

420)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42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2)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제7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대위변제(주택신용보증계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423] 및 기타경상이전수입[424]: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 사업은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은 2024년 계획현액 8,700억원 중 8,578억 5,700만원(98.6%)이 집행되고 121억 4,3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은 2024년 계획현액 564억 3,500만원 중 531억 8,300만원(94.2%)이 집행되고 32억 5,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주신보)	669,400	870,000	-	870,000	857,857	-	12,143	1,336,400
대위변제(주연보)	31,450	56,435		56,435	53,183	-	3,252	88,814

(자료: 금융위원회)

423) 세부사업: 주신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주연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424)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은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등 구상권 행사에 의한 구상권 회수금, 법인세 환급금 및 구상권관리비 회수액 등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1,929억 9,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3조 3,750억 1,800만원 중 2013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6.0%) 2조 9,255억 4,100만원을 미수납(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86.7%), 2,481억 1,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 7.4%).

<2024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192,993	192,993	192,993	3,375,018	201,359	2,925,541	248,119	288,759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으로 구분됨.

○ 주신보계정은 개인이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 포함)·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개인보증), 사업자가 주택의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사업자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반환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개인보증 구조〉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림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4년도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 규모는 총 76조 2577원이고, 연도 말 보증잔액은 130조 9778억원임.

〈2024년도 주신보계정 보증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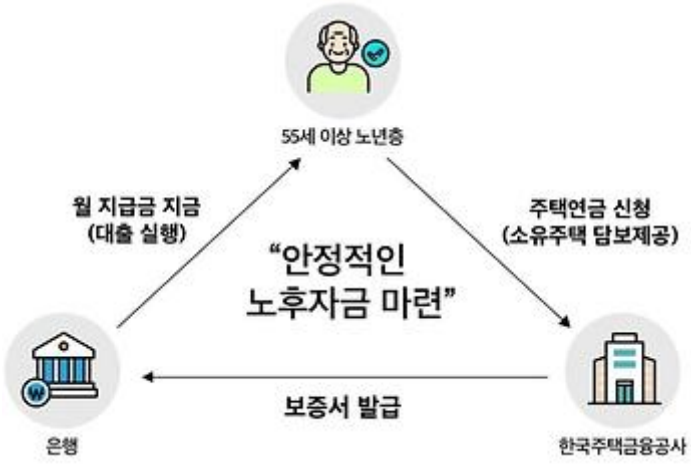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2024년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개인	528,000	601,361	610,000	588,873	674,000	641,769	623,000	618,766	652,000	615,960	1,029,849
반환		2,941		10,700		30,650		68,298		92,666	154,110
사업자	36,000	42,291	40,000	51,370	44,000	57,488	48,000	68,196	60,000	53,951	125,819
총계	**564,000**	**646,593**	**650,000**	**650,943**	**718,000**	**729,907**	**671,000**	**755,260**	**712,000**	**762,577**	**1,309,778**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연보계정은 55세 이상 고령자인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

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이른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도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 규모는 총 23조 5,575억원이고, 연도말 보증잔액은 161조 1,499억원임.

<2024년도 주연보계정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2024년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건수	11,600	10,172	10,500	10,805	10,850	14,580	14,700	14,885	15,080	14,670	105,127
보증공급액	119,000	111,028	140,000	150,255	230,000	249,692	254,000	225,016	255,000	194,499	1,386,790
연금지급액	12,274	12,105	13,168	14,547	13,168	19,242	21,167	23,856	26,242	26,406	119,582
총계	**142,874**	**133,305**	**163,668**	**175,607**	**254,018**	**283,514**	**289,867**	**263,757**	**296,322**	**235,575**	**1,611,49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 검토의견

□ 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연금 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보증사고 발생 증가와 함께 공사의 대위변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출 실행 후 연체 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등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금융기관의 보증심사 부실 여부 등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그런데 2024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보증, 반환보증, 사업자보증 및 연금보증 상품 모두에서 전년 대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그리고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비중이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전세사기[425] 등에 따라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4년도의 경우 보증사고[426] 금액이 전년 대비 2.5배로 증가(1,013억원→2,524억원)하였고,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전년 대비 2.7배로 증가(840억원→2,275억원)하였음.

---

4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1. 시행) 이후 2025년 7월말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결정한 사례는 총 3만 2,185건임.

426) 2022년도 반환보증 공급분에 대한 보증사고는 해당 반환보증이 만기(2년)가 되는 2024년에 발생하게 됨.

<최근 5년간 주신보계정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보증 잔액(A)	1,719,624	995,686	1,793,405	1,078,006	1,805,307	1,102,294	1,799,371	1,087,086	1,725,155	1,029,849
	보증사고 금액(B)	10,772	3,593	9,351	3,596	11,059	5,287	15,438	7,790	17,892	9,445
	보증사고율(B/A)	0.63	0.36	0.52	0.33	0.61	0.48	0.86	0.72	1.04	0.92
	대위변제 금액(C)	7,392	2,461	6,009	2,242	6,653	3,099	9,086	5,035	10,994	6,168
	대위변제율(C/A)	-	0.25	-	0.21	-	0.28	-	0.46	-	0.6
반환[1]	보증 잔액(A)	1,591	2,928	7,347	13,384	21,658	41,849	49,820	96,557	77,286	154,110
	보증사고 금액(B)	-	-	-	-	51	111	486	1,013	1,312	2,524
	보증사고율(B/A)	-	-	-	-	-	0.27	-	1.05	-	1.64
	대위변제 금액(C)	-	-	-	-	28	61	405	840	1,182	2,275
	대위변제율(C/A)	-	-	-	-	-	0.15	-	0.87	-	1.48
사업자	보증잔액(A)	1,324	58,904	1,830	78,599	2,211	92,192	3,138	124,586	3,611	125,819
	보증사고금액(B)	51	237	16	35	17	55	110	1,791	144	2,026
	보증사고율(B/A)	3.85	0.40	0.87	0.04	0.77	0.06	3.51	1.44	3.99	1.61
	대위변제금액(C)	18	27	6	45	5	7	9	16	1	136
	대위변제율(C/A)	-	0.05	-	0.06	-	0.01	-	0.01	-	0.11

주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2020년 7월 처음 출시되어 2020년도 보증공급 건의 만기도래 시점인 2022년부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주연보계정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 잔액(A)	66,121	734,914	71,791	829,866	82,941	1,046,243	94,406	1,235,333	105,127	1,386,790
보증사고 금액(B)	-	-	-	-	-	-	-	-	-	-
보증사고율(B/A)	-	-	-	-	-	-	-	-	-	-
대위변제 금액(C)	109	137	131	148	174	207	284	466	380	538
대위변제율(C/A)	-	0.019	-	0.018	-	0.020	-	0.038	-	0.03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계획 대비 과다해짐에 따라 공사는 2024년 ‘대위변제(주신보·주연보)’ 사업에 대한 총 3회[427]에 걸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신보계정 총 30.0%, 주연보계정 총 79.4%의 계획액 증액을 실시하였음.

- 공사는 2024년도뿐 아니라 과거부터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대위변제 계획액을 증액하여 운용해왔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음.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회)

연도	사업명	계획액				
		당초	증액	(변경률)	변경횟수	수정
2020	대위변제(주신보)	240,000	13,130	(+5.5%)	1	253,130
	대위변제(주연보)	11,359	2,700	(+23.8%)	2	14,059
2021	대위변제(주신보)	281,000	-	-	-	281,000
	대위변제(주연보)	24,438	-	-	-	24,438
2022	대위변제(주신보)	291,200	28,800	(+9.9%)	1	320,000
	대위변제(주연보)	23,400	0	-	0	23,400
2023	대위변제(주신보)	306,100	288,345	(+94.2%)	3	594,445
	대위변제(주연보)	24,790	30,386	(+122.6%)	2	55,176
2024	대위변제(주신보)	669,400	+200,600	(+30.0%)	1	870,000
	대위변제(주연보)	31,450	+24,985	(+79.4%)	2	56,435

(자료: 금융위원회)

427) 2024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횟수는 총 8회임.

□ 한편 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공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구상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DM발송, 유선연락 등 채권 추심 활동을 실시함. 또한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상환을 회피하거나 채무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자발적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또한 통상적인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하고, 시효 내 구상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공사의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6%로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 주신보계정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24,043	124,043	124,043	2,443,416	130,624	105.3	5.3	2,119,703	193,089
2022	135,197	135,197	135,197	2,452,207	124,922	92.4	5.1	2,190,830	136,455
2023	145,612	145,612	145,612	2,798,656	143,348	98.4	5.1	2,481,273	174,035
2024	192,993	192,993	192,993	3,375,018	201,359	104.3	6.0	2,925,541	248,119
2025 (7월말)	288,759	288,759	288,759	3,746,905	151,763	52.6	4.1	3,408,168	186,973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간 주신보계정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인	구상채권[1]	13,789	13,245	14,105	16,430	18,902
	구상채권회수액	1,413	1,130	1,068	1,100	1,377
	회수율[2]	7.81	7.05	6.53	5.74	6.09
반환	구상채권	-	-	55	781	2,751
	구상채권회수액	-	-	6	113	305
	회수율	-	-	10.55	12.69	9.98
사업자	구상채권	8,040	7,806	7,609	7,460	7,435
	구상채권회수액	34	15	23	45	7
	회수율	0.4	0.19	0.3	0.6	0.09

주1)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각처리한 채권도 포함
주2) 회수율(원금) = 보증종류별 구상권 원금 회수액/{보증종류별 전년도 구상권 잔액 + 보증종류별 당해 대위변제액}*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주연보계정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상채권	131.95	162.82	245.28	443.84	616.01
구상채권회수액	85.18	114.47	124.8	265.47	346.38
회수율[1]	39.15	40.97	33.73	37.34	35.27

주1) 회수율(원금) = 구상채권회수(원금) / {전년도 구상채권잔액 + 당해연도 발생} ×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히 반환보증의 경우 2024년 구상채권의 규모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가운데 회수율은 오히려 9.98%로 감소하였으며, 사업자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회수율이 1% 미만대로 몹시 미흡한 실정임.

○ 나아가, 최근 감사원의 공사 기관정기감사(2025. 7. 31.) 결과에 따

르면 개인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3사[428]의 최근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을 비교했을 때, 공사의 경우 보증 공급금액이 보증3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 데 반해 관련 대위변제 비중은 67%에 달하는 등 타사 대비 보증사고 비율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주금공	공급 건수	629,924	717,114	709,470	740,426	713,163 (67%)	357,753
	공급 금액	403,196	506,948	493,353	546,800	529,299 (45%)	280,630
HUG	공급 건수	118,963	128,385	162,273	154,587	218,100 (20%)	110,505
	공급 금액	168,291	194,463	256,755	246,673	329,386 (28%)	171,647
SGI	공급 건수	124,434	161,818	162,182	163,806	140,234 (13%)	76,152
	공급 금액	225,055	341,232	372,675	367,758	314,682 (27%)	177,570
계	공급 건수	873,321	1,007,317	1,033,925	1,058,819	1,071,497	544,410
	공급 금액	796,542	1,042,643	1,122,783	1,161,231	1,173,367	629,847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정기감사", 2025. 7.)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주금공	대위변제 건수	5,439	6,939	5,475	6,276	8,708 (85%)	5,056
	대위변제 금액	1,689	2,386	2,166	3,053	4,983 (67%)	2,964
HUG	대위변제 건수	118	222	199	392	873 (8%)	423
	대위변제 금액	172	310	262	502	1,298 (17%)	615
SGI	대위변제 건수	378	426	364	459	693 (7%)	491
	대위변제 금액	343	462	470	674	1,211 (16%)	840
계	대위변제 건수	5,935	7,587	6,038	7,127	10,274	5,970
	대위변제 금액	2,204	3,158	2,898	4,229	7,492	4,419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정기감사", 2025. 7.)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심사 승인 단계에서 보증기관 간 물건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 물건지에 대한 중복

428)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과 사기대출 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보증상품의 채권보전조치가 미흡하여[429] 타 보증상품 및 보증기관 대비 회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회수 단계에서 부정대출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430]이 확인되었음.

□ 공사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과 저조한 구상채권 회수율은 초기 보증심사 단계의 리스크 관리와 대위변제 이후 채권회수 프로세스 모두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공사는 향후 피보증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잠재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적 보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추후 연간 기금의 대위변제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429) 청년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경우 낮은 보증금액(2억원 제한), 특례보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채권보전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채권보전조치가 의무화된 타 보증기관에 비해 회수율이 저조하였음.

430) 고발기준상 고발대상에 해당되어도 공사가 자체 조사하여 고발한 사례는 없고, 공사가 고발한 사례는 모두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거나 특정 차주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비위 통보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Ⅰ. 총괄

1. 회계처리 오류: 순자산 과대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계상 등

1) 순자산 과대계상 및 재정운영결과 과소계상[431]

□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산한 2024회계연도 자산은 425억원, 부채는 1억원, 순자산은 424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1,040억여원이었음.

그러나, 감사원이 재무제표 결산을 검사한 결과 부채가 1,885만원 과소 계상되어 순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었고, 재정운영결과가 1,885만원 과소 계상되어 있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정무직공무원 관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해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차액을 별도의 계좌에 예금으로 관리하고서도 이를 미수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 이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유동자산)이 2억 2,0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수채권(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되었음.

-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지침」 문단 5(현금및현금성자산)와 문단 6(미수채권)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

431) 이하는 감사원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하고,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432]

○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 3건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향후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이를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885만원, 소송충당부채 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음.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 7(최선의 추정치) 및 문단 13(충당부채의 변동)에 따르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2) 「국고금 관리법」 위반

432)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5월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다고 밝힘.

□ 2024회계연도에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의 임차료(210-07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2건(각각 808만원, 533.5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636.8만원) 등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임.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한 현황 >

(단위: 원)

지급일자	세부사업명	지급내용	지급액
2024.5.10.	반부패기술지원(ODA)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제12차 영어 과정) 강의실 임차료(210-07목) (SEOULGARDENHOTEL-112)	8,080,000
2024.9.25.	반부패기술지원(ODA)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스페인어 과정) 강의실 임차료(210-07목) (SEOULGARDENHOTEL-112)	5,335,000
2024.12.1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시스템 냉난방기 콤프레샤 교체(210-09목)	6,368,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관서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기존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433] 이에 동법 시행령

433)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등에서는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434]

< 「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예산과목	범위
운영비 (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 경비에 한하여 기존 지급 절차의 예외를 설정한 관서운영경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위반 집행 지양 필요

1) 총액인건비제 개요

□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하여 2007년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직 정원관리 측면에서 인력 규모의 결정과 기구 설치의 자율성 확대임.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총정원의 3% 내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둘째, 보수 관리 측면에서 인사 관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인건비의 배분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보수월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활급 성격의 인건비 또는 통일적 기준이 요구되는 필수 항목만을 '기본항목'으로 두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각 기관에서 지급 대상이나 요건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예산관리 측면에서 종전에 경직적 성격이 강했던 인건비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인력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액인건비 시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간 ‘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이용 요구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음. 또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인건비 여유 재원의 사용에 대해 각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음.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

구 분		세부내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목)

자료: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3

2)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예산 운영 개요[435]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함.

○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함.

○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은 집행지침 상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봄.

○ ①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함.

○ ② 각 경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와

43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5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함.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

3)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집행을 위해 ‘인건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 ‘인건비(대상)’사업은 2024년 이·전용 증 6억 9,4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495억 1,100만원 중 494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예산액 대비 101.3%])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사업은 2024년 이·전용 증 1억 8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32억 6,800만원 중 30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0%[예산액 대비 95.2%])되고, 2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사업은 2024년 이·전용 감 2억 2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44억 8,500만원 중 41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예산액 대비 89.4%])되고, 2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대상)	48,817	48,817	-	694	49,511	49,476	-	35	52,132
보수(110-01)	48,025	48,025	-	620	48,644	48,616	-	29	51,339
기타직 보수(110-02)	410	410	-	191	601	599	-	2	394
연가보상비(110-05)	382	382	-	△116	265	262	-	4	399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3,160	3,160	-	108	3,268	3,008	-	260	3,59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4,687	4,687	-	△202	4,485	4,189	-	296	4,5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대상) 사업 및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각각 6억 9,400만원과 1억 8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하였음.

○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부족, 신규공무원 초과운용 등으로 인한 부족분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및 청렴권익국제교류, 종합상담창구운영, 청렴교육및의식확산,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 자체전용 하였음.

< 인건비(대상)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4.4.25.)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105	인건비(대상) (1101-100)	110-02	수습직원(7급)의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른 기타직보수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4.11.11.)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47	인건비(대상) (1101-100)	110-02	
조정 ('24.12.11.)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38	인건비(대상) (1101-100)	110-02	지역인재 9급 직원의 수습 근무에 따른 기타직보수 부족분 충당
	인건비(대상) (1101-100)	110-05	116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기타직보수 증가에 따른 보수재원 조정으로 보수목 부족분 충당
자체 전용 ('24.12.18.)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110-03	23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신규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한 보수 부족분 충당
	청렴권익국제교류 (1133-332)		22			
	종합상담창구운영 (1134-341)		53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136-361)		43			
	행정심판운영 (1137-370)		7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은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청년인턴)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등 부족분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등에서 전용하였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6.7.)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1111-250)	210-01	185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110-04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전용 ('24.6.7.)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1111-250)	210-01	21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320-09	
전용 ('24.10.22.)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210-05	75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1111-250)	220-01	지방의회 실태조사 팀 운영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전용 ('24.12.16.)	기관운영기본 경비(대상) (1111-200)	110-03	23	인건비(대상) (1101-100)	110-01	신규공무원 편성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인건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중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은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대상 사업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적용대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할당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의 규모, 종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사업비의 일용임금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 인건비(대상)"를,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의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을 각각 충당하였는바, 이는 총액인건

비 제도 위반임.

○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 집행지침 및 절차를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임.

○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와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정원·보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필요

1)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436]된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 집행 및 제도 운영을 담당함.

□ 이와 같이 소관 업무가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수범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령의 해석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해설집, 판례집, 사례집, 업무편람·매뉴얼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권익위가 제작하는 사례집, 업무편람 등 안내서는 규율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며, 각종 교육 및 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교재로 활

4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용되고 있음.

< 2024년 권익위 제도 안내책자 발간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안내서 명	집행액	계약업체	세부사업명
1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집	2	휘문인쇄	기관운영기본경비
2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집	8	가온기획	기관운영기본경비
3	권익백서	9	(사)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기관운영기본경비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영문브로셔 제작	0.51	휘문기획	기관운영기본경비
5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안내서(국회의원)	9	(사)하나복지회 인쇄사업장	청렴권익정책알리기
6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4.12.)	3	휘문인쇄	청렴권익민간협력
7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3	가온기획	부패고충제도개선
8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9.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부패고충제도개선
9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	10	가온기획	고충민원조사활동
10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3	가온기획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1	2025 부패영향평가 지침	16	사단법인하나복지회 인쇄사업장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2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6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	2024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29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4	청탁금지법 주요 형사판례집	36	㈜휘문인쇄	청탁금지제도운영
15	2024년도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8	성심기획	청탁금지제도운영
16	20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1	성심기획	청탁금지제도운영
1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2024)	49	(사)하나복지회 인쇄사업장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8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46	한결엠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9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자료집	10	가온기획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20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5	성심기획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연번	안내서 명	집행액	계약업체	세부사업명
21	2023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10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행정심판운영
22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매뉴얼	3	㈜성심기획	행정심판운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가 발간하는 인쇄자료 및 책자 등은 예산상 제약으로 기관별 배포 부수가 한정적이어서 각급 기관에서 추가 배포를 요청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함.

□ 그런데, 이와 같이 배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출판한 사례집, 해설집, 업무편람 등 책자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가 펴낸 안내서가 시중 출판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는 총 43종에 이르며, 판매가격은 최저 9,000원에서 최고 45,54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권익위 안내서 시중 판매 현황[437] >

연번	책자명	출판사명	판매가격(원)
1	국민권익백서(2022)	진한엠앤비	40,500
2	2021 국민권익 백서	진한엠앤비	45,540
3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진한엠앤비	10,800
4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진한엠앤비	21,600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진한엠앤비	36,000
6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4)	진한엠앤비	21,600
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3)	진한엠앤비	18,000

437) 실제로 권익위 안내서를 판매 중인 출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으나, 지면 관계상 책자별로 일부 출판사만 예시로 기재하였음.

연번	책자명	출판사명	판매가격(원)
8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진한엠앤비	20,700
9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진한엠앤비	9,000
10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진한엠앤비	20,700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김영란법)	진한엠앤비	20,700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2017)	진한엠앤비	18,000
13	알선 청탁 근절방안	진한엠앤비	9,000
14	공직사회의 부당한 청탁방지를 위한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진한엠앤비	9,900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김영란법)	진한엠앤비	20,700
16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진한엠앤비	16,200
17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6,200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 법인 대상)(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9,800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9,800
20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3,500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김영란법)	진한엠앤비	19,800
2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2016)	진한엠앤비	13,500
23	부패영향 평가지침(2016)	진한엠앤비	21,600
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진한엠앤비	18,000
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025	산책길	34,200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4	산책길	21,600
2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024	산책길	36,000
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2023	산책길	10,800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산책길	23,400
30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산책길	20,700
31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산책길	20,700
32	영국뇌물법(2010)	휴먼컬처아리랑	15,000
3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진한엠앤비	16,200
34	부패 공익침해 방지 심의 의결례집(제14집)	진한엠앤비	40,500

연번	책자명	출판사명	판매가격(원)
35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기업고충민원팀 적극행정 3년의 성과)	진한엠앤비	12,600
36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진한엠앤비	9,000
37	공공부문 특별(악성, 고질)민원 대응 매뉴얼	진한엠앤비	10,800
38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는 국민권익 패스트트랙)	진한엠앤비	16,200
39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역사 속에 찾은 청렴 이야기)	진한엠앤비	11,700
40	고등학교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14,400
41	중학교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14,400
42	초등학교 고학년용(4~6학년)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14,400
43	초등학교 저학년용(1~3학년)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연구(교사용 지도서)	진한엠앤비	27,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업무편람 등 책자를 판매하는 출판사가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규정[438] 등에 따라 구매수요를 고려하여 자체 결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판 및 판매는 권익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함.

□ 그런데,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식은 기준[439]을 분류하

438)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여 저작권자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은 이 기준 즉 “공공누리[440]”를 적용하도록 의무화[441]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조건의 종류(이용 허락의 범위)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공공누리의 유형 >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

439)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40)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44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 - 0449호

□ 권익위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442]하여 공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제공하는 안내서 전자파일에 대해서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누리 제2유형(자유로운 이용은 가능하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제4유형(자유로운 이용은 가능하되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형금지)을 적용하고 있음.

44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등)**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권익위 전자파일 배포 형태 예시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이와 같이 권익위는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스스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자료들이 시중에서 상업용으로 매우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임.

○ 권익위가 상업적으로 이용 금지한 자료를 일부 업체가 출판·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가 표시한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만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가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해당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여 공공누리 유형을 제3유형에서 제4유형으로 변경한 것이며, 업체가 출판할 당시에는 상

업적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또한, 공공저작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공공 목적의 안내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및 주의를 다하겠다는 입장임.

□ 권익위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Ⅱ. 일반회계

[세입]

1. 과태료[443]: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 및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4년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00만원이며, 이 중 7,3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의6(이행강제금)[444],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1조의2(이행강제금)[445]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이행강제금)[446]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이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

---

443) 세부사업: 과태료(56-563)

4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24년도 과태료 항목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56-563)	160	160	-	160	93	73	20	-	180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50	53	43	10	-	6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	60	30	30	-	-	60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50	-	-	-	-	60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과태료	-	-	-	-	10	-	10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2024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예산 5,000만원 중 4,300만원,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예산 6,000만원 중 3,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은 수납이 없음.

□ 한편, 2023년 미수납액 1억 8,000만원(6건)의 2024년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1억 2,000만원(4건)은 2024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처분

취소(사유: 최근 판례 고려 시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결정을 하였고, 6,000만원(2건)은 2024년 1월과 12월 각각 수납하였음.

○ 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 과태료 총 1,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도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부과 연도	부과 일자	부과대상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비고
2020	'20.09.07.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30	-	30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2021	'21.10.12.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30	-	30	
2024	'24.03.04.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8	8	-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 2024.3.22. 수납
2020	'20.12.28.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30	-	30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2022	'22.02.28.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30	-	30	

부과 연도	부과 일자	부과대상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비고
2024	’24.03.04.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5	5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결정(2024.5.13.) - 2024.6.17. 수납
2022	’22.11.29.	사립학교 회계비리 등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30	30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4.10.10. 대법원 위원회 승소 ▪2024.12.16. 수납
2023	’23.12.18.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2차) 미이행	30	30	-	▪2024.1.31. 수납
2024	’24.07.02.	OO마을교회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10	-	10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2022.9.23.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① 이행강제금 수납 5건(대법원 승소 1건), 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16건(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3건 포함)으로, 징수결정 21건 중 76.1%가 취소되었음.

< 2022년~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2	2020-12-08	-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3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4	2021-02-09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5	2021-07-20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6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7	2022-02-28	20백만원	20백만원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8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9	2022-11-29	20백만원	20백만원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10	2022-11-29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1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2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3	2023-12-22 (반환일자)	-	△22백만원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2023.10.12.선고)
14	2024-03-04	10백만원	8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1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2024.3.22.**
15	2024-03-04	5백만원	5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2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구분	부과일자	장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024.3.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결정 2024.5.13. - 2024.6.17. 수납
16	2024-07-02	10백만원	-	1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17	2022-04-11	20백만원	20백만원	-	▪2022.7.26. 수납
18	2022-05-20	20백만원	20백만원	-	▪2022.6.30. 수납
19	2022-07-25	30백만원	30백만원	-	▪2022.8.31. 수납
20	2023-12-18	30백만원	-	30백만원	▪2024.1.31. 수납
21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024.10.10. 대법원 위원회 승소 ▪2024.12.16. 수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9건 중 패소가 8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아래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최근(2024.3.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소송 2건의 요지 >

<사례 1: OO고등학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요지>
원고들이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신법 제62조의6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례 2: OO센터 신분보장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요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신법 제62조의3에서 정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아닌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구법 제9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신법 제6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 대법원 판결(2024.3.4.)이 위에 인용된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려졌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행강제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규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부과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권익위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447]: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 과오납급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4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2,000만원이며, 이 중 5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9,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682	-	682	820	521	299	-	68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권익위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한 공공기관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48], 「공

447)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44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

익신고자 보호법」[449] 등에 따라 보상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런데,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2억 9,900만원)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억 5,1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89.3%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

연도	내용	금액(원)	건수(건)	비고
2022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33,946,500	9	납기 미도래 7건 (31,129,000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11,834,160	50	납기 미도래 21건 (34,893,250원)
	과오지급금 등 반납액	4,829,610	2	납기 미도래 1건 (4,416,610원)
2023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68,418,440	36	납기 미도래 11건 (16,270,260원)
	과오지급금 등 반납액	11,966,820	28	-
2024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171,720**	**3**	**납기 미도래 3건 (16,171,720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51,242,290**	**44**	**납기 미도래 35건 (238,605,520원)**
	과오지급금 등 반환액	31,858,820	29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44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납기 미도래(부패신고 2억 3,860만원, 공익신고 1,617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신고보상금 상환액의 납기는 각 법률에 3개월로 정해져 있음을 감안하면, 2024년도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납기 미도래였다고 할지라도 3월 이내에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미수납 금액이 여전히 5,147만원(11건)에 달함.

<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현황 >

기관명	금액(원)	발생일자	현재('25.7.10. 기준) 수납 여부
서울노원구청	228,000	2024-06-18	미수납
경기도 고양시	3,581,690	2024-10-07	미수납
해운대구	17,486,000	2024-10-07	미수납
경기도	5,250	2024-10-18	미수납
대구광역시	9,499,06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7,111,50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13,356,44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52,88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52,88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6,000	2024-10-23	미수납
경기도	93,000	2024-10-23	미수납
합계	51,472,7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이와 같은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납부 독촉을 위한 공문 발송 횟수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문 출장은 11월 또는 12월에 연간 5~7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그쳤음.

○ 권익위가 신고자 보·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50억원[450]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공문 발송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문 발송 횟수	192회	104회	90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50) 2025년 예산 기준 54억 2,500만원

<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 현황 >

연도	순번	대상기관	출장일
2022년 (5개 기관)	1	전라북도	2022-11-24
	2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2-12-01
	3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09
	4	서울특별시	2022-12-16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12-20
2023년 (6개 기관)	1	충청남도	2023-11-29
	2	충청남도 서천군	2023-11-29
	3	대구광역시	2023-12-08
	4	경기도 여주시	2023-12-13
	5	서울특별시	2023-12-15
	6	서울특별시 중구	2023-12-15
2024년 (7개 기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11-13
	2	전남특별자치도	2024-11-14
	3	전북특별자치도	2024-11-15
	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11-15
	5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4-11-19
	6	대구광역시	2024-11-19
	7	경기도 평택시	2024-11-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을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청렴권익정책알리기[451]: 연말에 집중된 홍보비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권익정책알리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정책홍보효과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7억 5,400만원(97.7%)이 집행되고,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96	1,796	-	-	1,796	1,754	-	42	1,390
권익증진 정책홍보	619	619	-	-	619	716	-	△97	384
디지털소통팀 운영	952	952	-	-	952	833	-	119	75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51) 세부사업: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2) 검토의견

□ ‘청렴권익정책알리기’는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임.

○ 세부적으로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매체 등을 기준으로, TV・라디오 옥외광고 등을 홍보수단으로 하는 ‘권익증진 정책홍보’ 내역사업과 포털 사이트, 메신저 배너 등을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소통팀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역사업 내에서 각 제도 홍보 사업 등으로 내내역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권익증진 정책홍보’ 사업에서 5억 7,300만원을, ‘디지털소통팀 운영’ 사업에서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음영: 주요 제도 홍보비, 단위: 백만원)

구분	권익증진 정책홍보		디지털소통팀 운영	
	편성금액	집행금액	편성금액	집행금액
부패방지 제도 홍보	120	250	204	194
고충민원 제도 홍보	80	123	136	91
행정심판 제도 홍보	20	24	34	26
권익개선 제도 홍보	80	20	136	128
기타 제도 홍보	-	-	68	40
디지털소통 콘텐츠 홍보	-	-	318	308
기타 (홍보물 제작, 구독료 등)	162	156	43	34
계	**462**	**573**	**939**	**821**

* 홍보비 관련 내역사업 중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2024년도 홍보비 예산의 기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70.7%를 4분기에 집행하였고,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51.7%를 12월에 집행하여, 연말에 홍보 사업이 집중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비' 예산 월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기간		집행액		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	
1분기	1월	3,676	20,078	0.3	1.4
	2월	6,511		0.5	
	3월	9,891		0.7	
2분기	4월	35,349	135,674	2.5	9.7
	5월	25,533		1.8	
	6월	74,792		5.4	
3분기	7월	93,662	253,251	6.7	18.2
	8월	132,736		9.5	
	9월	26,853		1.9	
4분기	10월	126,748	984,540	9.1	**70.7**
	11월	137,499		9.9	
	12월	720,294		**51.7**	
계		1,393,543	1,393,543	100	1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특정 사업의 예산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음. 특히, 기관의 홍보사업은 사전에 정해진 사업계획에 맞추어 집행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 홍보가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면 한정된 기간에만 노출되게 되므로 그보다는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보다 높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사업의 예산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반부패주간(12.6.~12.12.)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반부패 관련 홍보비를 연말에 집행하였고, 2~3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위원회 주요정책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비 등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12월 집행된 홍보사업 중에는 반부패 주간 운영과 무관하여 반드시 12월에 실시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도 다수 있어, 이를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2월 집행된 내역 중 반부패 관련성이 낮은 집행 내역(일부 예시) **>**

(단위: 천원)

일시	집행내용	금액	비고
2024.12.5.	국민생각함 옥외광고	15,000	국민생각함: 국민정책참여플랫폼
2024.12.6.	청렴연수원 홍보 영상 신규 제작	20,000	기관 홍보영상
2024.12.16.	행정심판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50,000	행정심판 제도 홍보
2024.,12.16.	국민콜110 버스 외부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30,208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24.12.24.	국민생각함 온라인 배너 홍보	81,400	
2024.12.26.	110 콜센터 온라인 배너 홍보	17,600	
2024.12.27.	국민콜110 지하철, 유튜브, 버스 외부광고	6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특정 주간에 관련 제도 홍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정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균형 있게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특정 주간에 관련 제도 홍보를 우선 배치하고, 그 외의 제도 등의 홍보는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기간에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계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홍보예산이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452]: 통합시스템 참여율 개선 노력 및 사업계획 수립 전 준비절차 철저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4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51억 9,900만원(85.2%)이 집행되고, 3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2,372	22,372	-	-	22,372	19,057	3,236	79	7,665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운영	18,491	18,491	-	-	18,491	15,199	3,236	56	2,96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52)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2) 검토의견

□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일반·특별 행정심판 등 행정심판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등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통합시스템 기반 구축-고도화-자동화 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203억 8,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

기간	내용
’23. 3. ~ ’23. 8.	BPR/ISP/ISMP 용역 추진
’23. 9. ~ ’24. 3.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24. 6. ~ ’25. 6.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기반 구축)
’25(예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기능 고도화)
’26(예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편성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26년 (3단계)
예산액	20,389	16,885	1,988	1,51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비교하여 그 이행이 저조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업 계획상 통합시스템 참여 대상 기관의 실제 통합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임.

□ 동 사업은 다양한 경로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인데, 사업 계획 수립(2023년)부터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25년 6월)된 현재까지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에 큰 변화가 없음.

이는 통합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의 이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변화 >

(단위: 개)

구분	2023년도 (12월 기준)	2024년도 (10월 기준)	2025년도 (5월 기준)	2025년도 (6월 기준)
참여 기관 수	94	93	95	90
미참여 기관 수	24	25	23	2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당시 통합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기관 중 현재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각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이 기

관 성격상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가정보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국가안보·군사보안 때문에 애초부터 시스템 통합에 부적절한 기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과의 시스템 참여 협의도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통합시스템 미참여 기관 현황 >

구분(기관 수)	기관명
일반(8)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세(3)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상보험(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청(11)	중앙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소청심사위원회,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토지등(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위와 같은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시스템 참여율 저조가 지속된다면, 일반 행정심판기관뿐만 아니라 조세·보상보험·소청·토지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까지 일원화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동 사업의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 복잡한 권리구제 경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인 처분에 따라 각 소관 심판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창구 통합이 중요한데, 통합 대상 특별행정심판기관 61개의 기관 중 41개 기관만이 참여하였음.

<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현황 >

(단위: 개, %)

구분	총 기관	통합 대상 기관(A)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현황		
			참여 (B)	미참여	참여율 (B/A)
일반행정심판기관	57	57	49	8	86
특별행정심판기관	**66**	**61**	**41**	**20**	**67.2**
계	123	118	90	28	76.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시스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청렴권익민간협력[453]: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의 임의 폐지 및 이를 통한 신규 사업 수행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권익민간협력’은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5,500만원 중 4억 5,300만원(99.5%)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권익민간협력	455	455	-	-	455	453	-	2	318
시민협력	190	190	-	-	190	194	-	△4	185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87	87	-	-	87	86	-	1	41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178	178	-	-	178	173	-	5	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53) 세부사업: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2)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청렴정책 모니터링’ 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4,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전액 세목조정하였고, 추가로 일반수용비(210-01) 5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하였음.

< 2024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9.)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14	40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01	기존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 예산 세목이 변경되어 일반용역비(210-14) 40백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4.12.23.)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01	0.5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10-07	2030자문단이 신규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면회의 증가로 인한 임차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반수용비(210-01) 0.5백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아래와 같이 대상·인원·프로그램 내용·사업 성과 등에서 매우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청렴정책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전연령’의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20대와 30대로 국한하고 있음.

○ 둘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인원이 200~250명인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20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에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19명을 선발함

○ 셋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청렴을 주제로 반부패 정책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요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넷째,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및 전문가와 함께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청년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고충처리 회의 및 위원회 정책 홍보 등에 참여함.

<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의 비교 >

구분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2022~2023)	2030자문단 운영(2024)
대상 인원	청렴정책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일반국민 및 전문가 200~250명	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20대·30대 19명
예산	연 4,000만원	연 5,700만원
프로그램 내용	(사전의제 취합)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모니터단의 의견을 온라인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 사전의제를 선정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 (연계 활용) 소관부서 협업 및 제도개선 과제 연계 등을 통하여 모니터단의 제안 활용	(청년참여 확대) 오프라인 정책참여 기회 제공 및 오프라인 토의 진행 (청년 의견수렴) 청년의 정책 제안·자문 등을 받아 청년의 의견을 위원회 업무에 반영 (정책 홍보) 위원회 영상 콘텐츠 제작 참여 등을 통해 위원회 정책 홍보
사업 성과	(국민생각함 정책제안 활동) 2년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115건 제안 (1·2차 온라인 토론회) 매년 2회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주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충처리 현장회의 6회 제도개선 간담회 3회 청년 제도개선 제안 40건 위원회 영상 콘텐츠 제작 참여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부터 2030자문단이 全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모니터링 측면에서만 유사할 뿐, 대상·인원·프로그램 내용·사업 성과 등이 모두 상이함. 특히 국회가 심의 및 확정한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임의로 폐지하고,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로 임의로 세목조정한 것은 부적절함.

○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임의로 폐지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4) 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사업 예산 50% 삭감 집행 지양 필요	○ [지적사항]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확대가 필요함에도, 2023년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5,000만원을 격오지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차량 지원 등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조정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예산 이·전용 미실시 ※ 설치기관 : ’22년 70개 → ’23년 80개 → ’24년 11월 94개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 예산의 50%를 삭감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업을 임의로 대체하여 세목조정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종합상담창구운영[454]: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이 법적 지위와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은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상담,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1,400만원으로 이 중 1억 6,200만원(75.7%)이 집행되고,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종합상담창구운영	11,910	11,910	-	△530	11,380	11,129	-	251	9,526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214	214	-	-	214	162	-	52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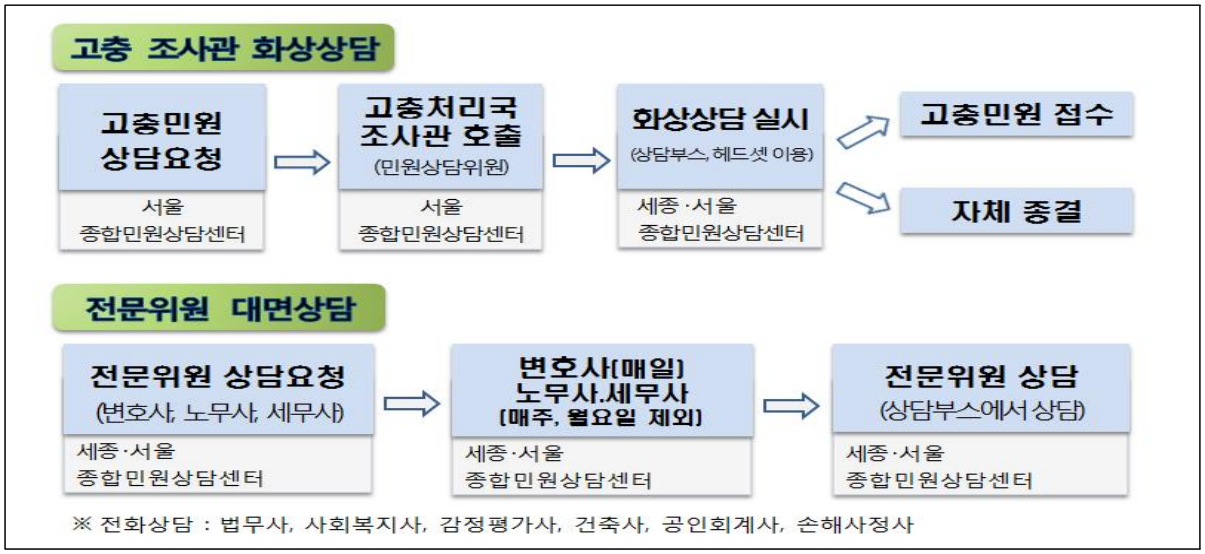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54) 세부사업: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의 내내역사업인 ‘민원상담위원·전문상담위원 수당’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상담센터 내에서 화상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민원상담위원 및 전문상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민원상담위원·전문상담위원 수당’ 사업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 중 ‘민원상담위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455] 및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456]에 따라 국민권익

45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56)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2조(위촉)** ② 위원장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③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실무담당 공무원 등 2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에서 민원 안내·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면접채점표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457]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원상담위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에 민원상담위원・전문상담위원 수당으로 1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민원상담위원 수당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5,760만원(6명×80만원×12개월)을 집행하였음.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의 고용부담금(320-09)으로 600만원(50만원×12개월)을 집행하였는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담금(320-09)은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458]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촉직인 민원상담위원에게 고용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민원상담위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457)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3조(임기)** ①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위원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5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76

원은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보험 가입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해 2012년부터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으로 해당 보험금을 납입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해당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공문의 취지는 단순히 민원상담위원을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상담위원의 채용 및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을 안내한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음.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공문 내용(일부 발췌) >

3. 근로자 인정

○ 명예직으로 위촉되어, 1일 5만원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은 실비보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미신고 등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일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있으나

○ 실질적인 요건에 있어

- 격일제로 근무하여 매월 10일 이상 근무하면서, 1일 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해당 금액은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져 있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며,[459] 결근, 지각 등 운용규정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해촉 등 불이익이 있고,
- 방문 또는 전화 민원 상담이라는 고유의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상담 매뉴얼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면서, 중요 업무에 대하여 상담안내 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필요시 상담기법 및 친절 교육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

□ 즉,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460]과 유사한 기준으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것이라면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으로 유지하면서 수당 지급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병행할 것이 아니라, 상용직 또는 일

459) 출근 시 근무상황부에 출석 날인 등

46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용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

○ 그러한 방식이 인건비 비목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 국가기관이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고용부담금 비목에 부합하는 집행방식일 것임.

□ 반면, 만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상담위원의 업무 범위나 내용에 비추어 민원상담위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였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청렴교육및의식확산[46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 신규 추진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9,600만원 중 21억 1,100만원(96.1%)이 집행되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9	2,239	-	△43	2,196	2,111	-	85	2,41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청렴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 국민, 미래세대 등 대상의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3억 8,400만원이

461)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며 집행액은 3억 7,900만원임.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예산액 5,000만원의 2배 이상인 1억 300만원 집행됨.

< 2024년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4년 집행액 (B)	집행 잔액	비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379	5	
· 교육보조원 운영	39	15	24	
· 교육과정 운영	72	41	31	
· 교육콘텐츠 개발	120	120	-	
·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	103	100	3	·85개교 대상 실시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0**	**103**	**△53**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59) **·초등학생 청렴캠프(44) - 연도 중 신설 추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같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적의 일반용역비가 초과 집행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24년 초등학생 청렴캠프” 용역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4,400만원을 집행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4년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용역계약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2024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59	2024.2.26.~2024.12.20.	제한경쟁
	2024년 초등학생 청렴캠프	**44**	**2024.4.22.~2024.12.17.**	**제한경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목)로부터 일반용역비(210-14목)로 6,500만원을 세목조정[462]하였는데, 세목조정 실시 일자는 2024년 1월 10일임.

< 2024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세부사업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예산조정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10.)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일반수용비 (210-01)	6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일반용역비 (210-14)	국민 대상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위한 용역비 추가 확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62) 권익위는 해당 세목조정의 명목이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나,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기존 운영 사업인 바(2023년 예산 50백만원, 집행 46백만원), 실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초등학생 청렴캠프' 용역을 신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이 회계연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다른 비목의 예산을 조정하여 당초 예산 편성 과정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하지 않은 집행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권익위가 신규로 추진한 초등학생 청렴캠프의 내용을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약 20~3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2박 3일 간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초등학생 청렴캠프' 용역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사업명	· 2024년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
교육기간	· 6. 13.(목) ~ 6. 15.(토) / 10. 17.(목) ~ 10. 19.(토)
교육장소	· 정약용, 맹사성 등 청렴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 우산각공원(류관 유적지), 다산기념관, 율곡기념관, 맹사성기념관, 월봉서원, 명량대첩해전사기념관, 다산박물관, 사의재 등
교육인원	· 초등학생 5·6학년 53명(선발인원 : 60명) * 감기 등 개인사정으로 교육 당일 취소자 7명 발생
교육내용	· 청렴한 위인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다양한 청렴 체험활동을 통해 청렴 6덕목 함양 * 청렴일기 작성, 청렴쇼츠 만들기, 청렴골든벨, 청렴박스 만들기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오히려, 본 내역사업의 다른 세부 편성내역인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집행액 1억원)’을 통해 매년 약 85개교, 1만여명[463]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4,400만원을 집행하여 불과 50여 명의 학생에 대한 캠프 운영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해당 용역사업의 결과보고서에서도 “학생 안전과 장거리 이동 일정(2박 3일) 등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 참여인원이 소수여서 청렴 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자체평가가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2025년에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일정, 횟수 및 참여 인원 등을 조정[464]하였다는 설명임.

□ 권익위는 당초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필요성 및 사업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신규 용역사업을 연도 내에 추진하는 집행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63) 2024년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기준

464) (’24년) 2회(2박 3일)·회당 30명(총 60명) → (’25년) 3회(1박 2일)·회당 50명(총 150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1. 기타재산이자수입[465]: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4년에는 예산액 1,500만원을 3억 900만원 초과한 3억 2,4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목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5	-	15	324	324	-	-	6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납액 3억 2,4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비 이자 반납금으로 전체 이자 반납액의 98.8%를 차지함.

<연도별 출연금 이자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

년도	전체 이자 반납	KISA 이자 반납	KISA 비율
2022년 반납 (2021년 발생)	17	16	94.1
2023년 반납 (2022년 발생)	163	162	99.4
2024년 반납 (2023년 발생)	324	320	98.8
합 계	**504**	**498**	**98.8**

주: 출연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반영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65)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최근 결산내역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086.7%, 2160.0%로 나타나 당초 예산액이 상당히 과소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2021	-	13	13	-	100
2022	33	17	17	51.5	100
2023	15	163	163	1086.7	100
2024	15	324	324	2160.0	100
2025	64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같이 기타재산이자수입이 과소계상된 것은 최근의 출연금 증액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위원회의 예산액 산출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자수입 포함)의 경우, 과다 또는 과소 계상을 방지하고 예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의 수납실적(통상 3개년 평균)을 참고하여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보호위원회도 처음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편성한 2022년에는 준거기

관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그 이전의 평균 수납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예산편성시에는 2021년 수납실적과 2022년 예상 수납실적을, 2024년 예산편성시에는 2021년과 2022년 수납실적을 토대로 하였고, 2025년 예산편성시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납실적을 토대로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을 산출하였음.

<최근 보호위원회 출연금 예산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출연금 예산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 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1	19,003	-		13	13
2022	27,994	33	준거기관 대비 편성	17	17
2023	33,222	15	(2021년 수납실적, 2022년 예상 수납실적의 합)/2	163	163
2024	33,867	15	(2021년 및 2022년 수납실적의 합)/2	324	324
2025	33,311	64	(2021~2023년 수납실적의 합)/3	(200)	(2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2021년 약 190억원 수준이었던 출연금 규모가 2022년 약 28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액은 출연금의 실집행실적이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대체로 출연금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자발생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출연금 증가 부분을 고려하여 반납이자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

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술적으로 반납이자액을 산정하였음.

○ 특히, 2021년은 출연금 규모가 적어 반납이자액이 적었던 해인데, 2021년도 수납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포함하여 반납이자액을 산정하면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과소계상하게 된 것임.

○ 또한,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시에는 이미 2023년 예상 수납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폭증한 것이 예상됨에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 실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수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실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와 연계되어 있는 출연금 규모 등의 주요 변동 여부를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466]: 출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자문료 지급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8억 7,800만원 중 28억 5,200만원(99.1%)이 집행되고, 2,600만원(0.9%)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878	-	-	2,878	2,852	-	26	2,57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578	-	-	578	578	-	-	478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	500	-	-	500	485	-	15	500
-정책성과 공유	185	-	-	185	174	-	11	180
-개인정보보호 교육	835	-	-	935	835	-	-	635
-개인정보보호 정책운영 지원	780	-	-	780	780	-	-	78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사업’은

466)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내용을 보면, 1)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신기술 분야 보호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관련 연구용역 및 연구반을 운영하며, 2) 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과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국내외 입법현황 분석을 통해 신규제도를 발굴 및 설계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사업 예산편성내역>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 : 578백만원
 ㅇ 디지털 신기술 환경 이슈 연구 : 257백만원
  -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 1식x90백만원=90백만원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연구용역 및 연구반 : 1식x77백만원=77백만원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제도 정비 및 보호기준 마련 : 1식x90백만원=90백만원
 ㅇ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발굴 및 설계 : 321백만원
  - 개인정보 법제 개선 연구반 운영 : 220백만원
   · 연구용역 : 1식x50백만원=50백만원
   · 자문단 : 1식x95백만원=95백만원
   · 의견수렴 : 1식x75백만원=75백만원
  -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신규정책 및 입법 현황 조사 : 21백만원
   · 번역비(9백만원)+원고비(12백만원)=21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별 가이드라인 정비 : 80백만원
   · 가이드라인 : 2식x40백만원 =80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 동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연구 실시하거나 신규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 실제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규정’,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등의 자문을 받았음.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지출내역 중 법률안 등 관련 자문내역>

(단위: 원)

날 짜	사용 내역	금액
2024-2-2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인정보 보호법 간 정합성에 대한 자문비	300,000
2024-3-1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안 검토 자문료	300,000
2024-3-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 자문료	600,000
2024-4-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합성에 대한 자문비	600,000
2024-4-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 자문료	600,000
2024-6-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규정 관련 법률 자문비	300,000
2024-10-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회의 자문료	600,000
2024-11-27	디지털 헬스케어법 발의(안) 검토 자문료	900,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일회성 자문을 받는 것은 출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자문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사업”과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에서 각각 일관된 기준 없이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 보호위원회의 타 세부사업인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은 보호위원회의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을 지급하고, 고문변호사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호위원회의 각 부서는 이 사업을 통해 법률 해석 등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사되는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음.

-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사업”과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에서 각각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법무지원사업 지출내역 중 법률안 관련 자문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날짜	사용내역	금액
2024-12-16	법률 자문비용 지급 의뢰(CCTV영상을 경찰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적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등에 관한 건) 4건	1,200,000
2024-12-27	법률자문비 지급 (디지털 헬스케어법 법률 자문 건)	1,200,000
2024-12-27	법률 자문비 지급(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900,000
2024-12-27	법률자문비 지급 (주민등록 전산자료 법률자문 건)	900,000
2024-12-27	법률 자문비 지급(자료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	900,000
2024-12-30	법률 자문비용 지급 의뢰(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 검토 등에 관한 건)	52,8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은 동 사업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법 개정안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은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각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467]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468] 이른바 “마이데이터” 행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송체계 표준화 등 연계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76억 5,000만원 중 전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였고, 한국인터넷

---

467) 세부사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468)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출연받은 금액 중 10억 6,100만원을 이월, 7억 7,600만원을 불용하여 총 58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실집행률: 76%).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	-	7,650	7,650 (실집행: 5,813)	-	-	6,0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내역사업 2개로 구분되어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었는데,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은 데이터 표준화 연구,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중계인프라 실증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은 마이데이터 제도·정책 연구,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심사·지정 등을 위한 것으로 총 1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회계연도 내역사업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교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기관)			
			이월	불용	실집행	실집행률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1,061	260	4,649	77.9%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	516	1,164	69.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1) 하위법령 제·개정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부적정

□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69]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470] 또는 기타 기준을 충족한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법률 부칙은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요구)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으로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늦어도 공포 후 2년 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의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

469)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47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란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중계를 지원하거나(중계전문기관), 전송받은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일반·특수전문기관)를 의미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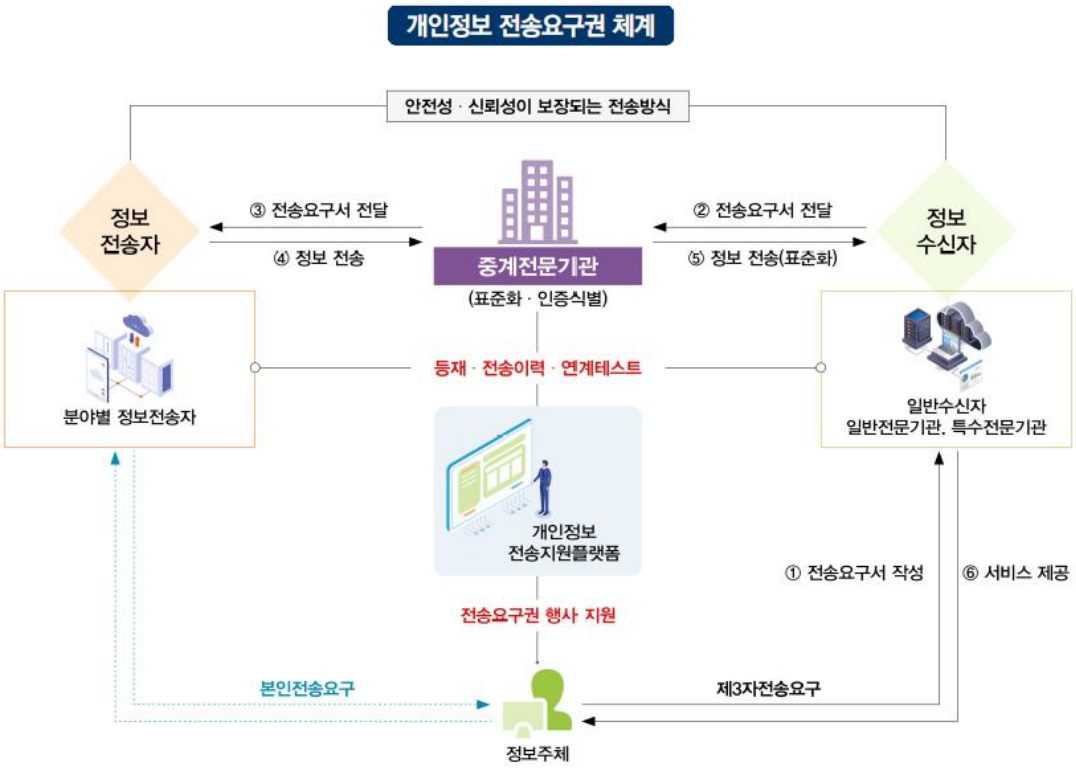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하는 등 사전 준비적 성격의 사업들이 미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음[471].

○ 이후 시행령 개정령[472]의 부칙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5년 3월 13일로 최종 결정되었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관련 조항의 시행일은 이에 앞선 2025년 2월 25일로 정해졌음[47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운영 체계>



(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4.)

---

4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2,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7, 제60조제5호, 제75조제2항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72)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473)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정한 전문기관 관련 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2024. 3. 13.)보다 지연된 것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유형>

구분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근거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3, 시행령 제42조의9[474]		
업무	근거	법 제3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	
	내용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정보전송자 전송 지원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 제외)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전송 대상 정보[475]		-	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47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7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 이에 보호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의 내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예산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지정, 정보수신자 안전조치·시설·기술 기준 확인 등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중 마이데이터 운영 관련 지정심사 안내서 마련 용역비 1억 560만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제도 운영 용역 선급금 3억 1,484만원 등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하였음.

<2024회계연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예산	교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기관)			
			이월	불용	실집행	실집행률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	516	1,164	69.3%
(마이데이터 제도·정책 연구)	700	700	-	-	679	97.0%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980	980	-	495	485	49.5%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 중 특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제도 운영’ 용역은 마이데이터 관련 전문기관 지정제도의 핵심으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통합전송(중계)·관리·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심사·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용역은 2024년 9월 30일 긴급공고 후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되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어 10월 30일 재공고되었으며, 11월 8일에야 수의계약 형태로 총 7억 1,7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2월 10일 선급금 3억 1,484만원만이 지급되었음[476].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제도 운영 용역 주요과업>

구분	과업 주요내용
지정 및 등록 심사지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세부 점검 항목에 따라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수행 지원
모의 심사 및 기능 적합성 심사 항목 개발 등	심사 희망 기업·기관 대상 모의 심사 운영, 안정적 서비스 및 사업계획에 따른 서비스 구현 등 확인을 위한 기능적합성 심사 항목 및 취약점 점검 방안 마련
심사위원 구성 및 교육·간담회 등	전문성(개인정보, 정보보호, 정보기술, 회계 등) 검증방안 수립 및 심사위원 풀 구성,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한 심사원 교육안 개발 및 운영,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심사제도 설명회 및 제도 홍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또는 일반수신자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제도 홍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자료: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 나아가 해당 용역계약의 주요과업 중 '지정 및 등록 심사지원'은 전문기관 심사업무를 수행하되 최종 심사실적[477]에 따라 계약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데, 2024년도 중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관련 지급액 4억 26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용역계약에 따른 심사목표 및 심사 소요일>

(단위: 원)

기관		심사목표	심사원	심사일	심사일수	심사 단가
중계전문기관		1개	7인	7일/기관	7일	72,270,639
일반·특수 전문기관	예비심사	5개	7인	1일/기관	5일	51,621,885
	본심사	5개	7인	5일/기관	25일	258,109,425

476) 2025년 3월 이월금액 10억 6,100만원(용역 잔금)이 지급되었음.
477) 심사일×심사원 기준

일반수신자	2개	7인	1일/기관	2일	20,648,754
합 계	**13개**	-	-	**39일**	**402,650,703**

(자료: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 2025년 8월 7일 기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 1개 업체가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8월 중 의료 분야 1개 업체가 추가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중계전문기관이 지정된 이후 일반·특수전문기관이 지정을 신청할 예정임[478].

□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정 과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 관련 근거조항이 부재하여 2024년도 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운영사업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임.

○ 보호위원회는 당초에 마이데이터 시행 분야로 의료, 통신, 유통의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4. 5. 1.~6. 10.)하면서 이 중 전문기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즉시[479] 시행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이후 기업, 협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유통 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480]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478) 2024년 5월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전문기관 지정 관련 수요조사 결과 총 21개 기업·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479) 다만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정한 전문기관 관련 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2024. 3. 13.)보다 지연된 것임.

48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정보전송자가 됨에 따라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 대상 분야 임의 선정의 불공정성, 전송 대상기업 및 비대상기업 간 형평성 문제,

유통 분야 제외 후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권고[481]됨에 따라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2024. 8. 28.)하여 재입법예고(2024. 12. 16.~12. 23.)한 결과 전문기관 지정 관련 시행령 조항의 시행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된 2025년 2월 25일로 결정되었다는 설명임.

□ 그러나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이 당초 2024년 3월 13일이었으므로, 설령 이해관계자의 이견 등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확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분야(의료, 통신)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율하는 하위 법령이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된 결과 제도 시행일(2025년 3월 13일)까지도 전문기관 지정 실적이 전무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도 보호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영세 중소상공인의 영업비밀 공개 우려

(온라인쇼핑협회) 정보전송자-정보수신자 중 일방 당사자에게만 전송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상력의 균형이 파괴될 우려, 오프라인 기업을 정보전송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온오프라인간 형평성 문제, 해외사업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내시장 및 기업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상 분야 임의 선정의 불공정성, 유통부문 중 정보전송자 범위를 온라인 쇼핑·대형마트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

481) 2024. 8. 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권고사항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분야로 의료, 기간통신 분야를 우선 시행하고 유통, 부가통신 분야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향후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이 법률의 시행시점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전준비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과기부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필요

□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의 내내역사업인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는 2024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5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추어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발굴·상용화를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표준을 실증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5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실제로는 2024년도 12월 선급금 13억 9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잔금 10억 6,100만원은 이월되었음(실집행률 52.4%).

○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2024년 8월말 사업계획이 조정[482]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예산	교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기관)			
			이월	불용	실집행	실집행률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1,061	260	4,649	77.9%
데이터 형식 표준화 연구	1,000	1,000	-	45	955	95.5%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1,000	1,000	-	83	917	91.7%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2,500	2,500	1,061	130	1,309	52.4%
마이데이터 전송인프라 실증사업	1,470	1,470	-	2	1,468	99.9%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482)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서비스 분야 역시 유통, 의료, 통신에서 유통을 제외한 의료, 통신으로 변경됨.

□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과 분야,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음[483].

○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사업이고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민간경성보조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주체가 상이하고, 전자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반면 후자는 개별 사업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사업과제의 대상분야 및 사업 추진방식의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임.

<보호위원회와 과기부 사업 간 비교>

구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보호위, 일반회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목적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시범서비스 개발 및 기술적 인프라 실증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실증을 위한 서비스 개발
법·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및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484]
서비스 과제 선정	• 마이데이터 중점 추진 부문 중 국민체감도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과제 선정	• 사업자 수요 중심으로 대상분야 및 과제 선정
데이터 표준	• 데이터 항목, 데이터 형식, 전송방식 표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 지원사업마다 개별 기업간 필요한 데이터 연계
사업결과 활용	• 검증된 표준API 공개 등 사업 결과물을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	• 실증사업 참여기업 간 활용
2025년 예산	• 20억원 - 선도서비스 4개 과제×5억원	• 38억원 - 실증서비스 4개 과제×8억원 - 컨설팅 0.3억원×20건=6억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483) 2024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 2024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참조.
48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

□ 먼저,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우선추진분야인 의료·통신 분야와 그 외 자율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건의 의료 분야 서비스, 1건의 통신 분야 서비스 및 1건의 자율 분야(여행) 서비스를 선정(총 5건)하였고,

2025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신규 서비스 및 그 외 분야 고도화 서비스 실증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5건의 의료·통신 분야 서비스를 선정하였음.

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관리와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2025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과제 선정현황〉

연도	분야	내용
2024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지원서비스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자율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 지원 서비스
2025	의료	보호자 열람 기반 고령자·미성년자 의료마이데이터 관리 및 위험행위 예방 서비스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AI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된 AI 홈닥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지표 기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의료·통신	의료·통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국민·소상공인 대상 정책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2024년도 의료·통신·자율 분야를 대상으로, 2025년도 의료·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선정된 과제 대부분이 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서비스 개발주체에 따른 전송대상정보의 범위, 세부기능 및 고도화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위험 예측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호위원회와 과기부의 사업 과제간 주요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과제 선정현황>

연도	분야	내용
2019	의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지갑서비스
		건강식단 정보제공 및 실손의료비 보험금 간편신청 서비스
	금융	빅데이터 기판 금융상품 추천
	에너지	에너지 수급 예측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통	소상공인 경영 개선 기능 제공
		소상공인 문서 자금 플랫폼
	학술	강연, 기고 등 필요한 기관과 매칭
2020	의료	의료 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 현황 확인 및 생활습관 관리 등 홈케어 서비스
	금융	금융현황 관리
		생활 데이터 연동 및 데이터 거래
	교통	공유차량/자전거/킥보드 대여 및 교통카드 연계 결제 등 원스톱 제공
		공공교통수단 안심이용
	생활	직장인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및 상가가치 통계 정보 제공
2021	의료	만성콩팥병 관련 맞춤형 서비스
		의료진 등에게 환자 데이터 제공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공공	병역정보 등 활용한 간편결제 및 맞춤 할인 제공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행정처리 간편 제공
	소비·금융·교통	소비자 맞춤형 상권분석, 가격변화추이, 포인트 제공
		소득정보 통합관리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2022	서비스 개발	수출입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이 중심이 되는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개발
		종이없는 비대면 원서접수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기반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보험정보 관리 서비스
	고도화 지원	개인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마이디 라이프로그 서비스
		정보주체 중심의 통합 의료데이터의 암호화 상태 안전 활용 시스템 개발
		MILIPASS 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 지원 서비스
2023	종합관리 플랫폼	배송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수집·활용 플랫폼
		의료 재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커뮤니티 기반 개인데이터 중계 서비스 플랫폼
	활용서비스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동형암호 마이데이터 기반 백신 부작용 알림 서비스
		원클릭 내차 종합 리포트 생성 및 유통지원 서비스
2024	생활 밀착형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
		건강부채 예측 및 식단, 운동 등 건강미션 제공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형	원채널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2025	커뮤니티	만성질환 커뮤니티 활용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커뮤니티 기반의 청소년 진로·진학 설계 지원 서비스
	일반	마이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AI 경영관리 서비스
		기업 마이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매칭 서비스
		동형암호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맞춤형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

주) 음영표시: 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과제와 주요기능이 유사한 과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다음으로, 과기부의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에서 공통의 데이터 표준 없이 실증사업마다 개별 기업간 필요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과 달리, 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중점추진 분야별로 다수의 법정 정보전송자[485]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경우 의료·통신 분야가 아닌 자율 분야 역시 공모대상 분야[486]로 정하고 있어 여행 관련 서비스[487]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여행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서비스 사업자가 법정 정보전송자로부터 데이터 표준이 적용된 정보를 일괄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

48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486) 과제 5건 중 의료, 통신, 자율 분야 각 1건씩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건은 분야와 무관하게 고득점순으로 선정

487)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 지원 서비스

○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분야를 유통, 의료, 통신 3개 분야로 전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유통 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유통 분야를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분야에서 제외하면서 사업계획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기부의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보호위원회 중점 추진분야의 육성에 집중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상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정보에 포함된 의료, 통신 분야로 제한하여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기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심사·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확대[488]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88) 참고로 2025년 8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에너지' 분야가 전송요구 대상으로 규정(시행일: 2026. 6. 1.)되었으나 하위 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보호위원회는 2026년에 전송요구 분야를 에너지·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4. 개인정보 침해방지[489]: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통합 발주시 비목별 집행실적 반영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 침해방지”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 등에 따른 사실조사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침해신고센터 운영,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94억 1,200만원 중 93억 5,300만원(99.4%)이 집행되고, 5,900만원(0.6%)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 침해방지	8,686	726	-	9,412	9,353	-	59	7,486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5,164	726	-	5,890	5,831	-	59	4,064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3,492	-	-	3,492	3,492	-	-	3,392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30	-	-	30	30	-	-	3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89) 세부사업: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2) 검토의견

□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 사건 발생에 따른 신고, 조사, 처분 등 사건처리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는 디지털 사건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차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 제1차 시스템 구축사업은 과업수행 단계에서 계약자의 귀책사유[490]로 인해 인해 기한 내(2023. 4. 5.~2023. 12. 31.)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도 이월액 7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5월 8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계약자에게는 사업지연에 대한 배상으로 지체상금(3억 3,500만원)이 부과되었음[491].

○ 2024년에는 1차 시스템 운영(관리용역비, 210-15목)과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일반연구비, 260-01목)이 추진되었으며, 두 사업은 통합 발주되어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보호위원회는 통합 추진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모두 2차 구축사업(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490) 과업 도중 계약자의 귀책으로 프로젝트매니저, 총괄 프로젝트 리더 등 주요 인력 8명에 대한 인력교체가 발생(2023. 6. 23.)하여 업무분석 및 설계에 상당한 추가시간이 소요되었고, 조달청 입찰을 통한 기술평가 결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경험부족 등에 따른 낮은 업무이해도로 인한 빈번한 시스템 오개발 및 재개발이 발생함.

491) 지체상금은 따로 납부받지 않고 계약대상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하여 “위약금(57-572)” 수입으로 반영하였음.

<2024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집행 내역>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관리용역비 (210-15)	300	300	1차 시스템 운영
일반연구비 (260-01)	(구축)954	935	2차 시스템구축사업
	(감리)132	106	2차 시스템구축사업 감리
자산취득비 (430-01)	389	376	
합 계	1,775	1,717	

주: 굵은선 부분은 통합 발주·계약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정보시스템 운영과 구축사업이 사실상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사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음.

○ 다만, 각 비목의 목적과 집행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통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각 비목별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임.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비목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특정 비목에 일괄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492].

492) 일반연구비와 관리용역비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한 특허청의 '전통지식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운영위탁사업'은 각 비목별로 나누어 집행실적을 반영하였음.

5. 위원회 법무지원[493]: 예산 소진 목적의 연말 예산 집행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가이드라인 해석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판례 등 해석자료 활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5억 1,5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위원회 법무지원	515	-	-	515	487	-	28	48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과태료·과징금 등 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국가송무수행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가이드라인 해석 등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고문변호사 인력풀 운영, 법률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판례 및 법률해석자료 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법률서비스이용지원’으로 구분됨.

493) 세부사업: 위원회 법무지원(7041-301)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내역사업 ‘국가송무수행지원’과 ‘법률서비스이용지원’으로 구분되는데,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당시 보호위원회 관련 법적 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역사업 ‘국가송무수행지원’의 예산이 2억 2,000만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4회계연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송 수행 관련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송무수행지원 사업 집행률은 확정예산 기준 79.5%에 불과하였고, 대신 다른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에서 초과집행이 이루어졌음.

<2024회계연도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내내역사업)	정부안	확정예산	불용	집행	집행률
위원회 법무지원	295	515 (국회증액 +220)	28	487	94.6%
① 국가송무수행지원	200	420 (국회증액 +220)	86	334	79.5%
② 법률서비스이용지원	95	95	(초과집행 +58)	153	161.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80	80	(초과집행 +13)	93	116.3%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15	15	(초과집행 +45)	60	4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은 법률 자문료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해당 예산을 광범위하게 국가 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볼 소지도 있겠으나, 현행 사업체계상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가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법률자문이나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증액 소요가 있었다면 국회 증액시 이를 해당 내역사업에 반영하여 의결하였어야 함.

<2024년도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예산편성근거>

내역사업	편성 근거
국가송무수행지원	○ 국가소송수행 : 420백만원 ① 세부산출 : 13건 x 32,307천원 = 420백만원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 95백만원 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 80백만원 · 세부산출 : 1건 x 400천원 x 3인 x 66회 = 80백만원 ②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 15백만원 · 세부산출 : 12개월 x 1,250천원 = 15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아가,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의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법률자문료 및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 지급이 12월에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도 법률자문료 집행현황>

구분	지출금액(원)	(비중)	자문건수(건)	(비중)
1월	-	0%	-	0%
2월	4,500,000	4.8%	15	10%
3월	3,300,000	3.5%	11	8%
4월	1,773,600	1.9%	6	4%
5월	926,400	1.0%	3	2%
6월	1,500,000	1.6%	5	3%
7월	1,200,000	1.3%	3	2%
8월	900,000	1.0%	3	2%
9월	2,973,600	3.2%	10	7%
10월	1,276,400	1.4%	4	3%
11월	4,500,000	4.8%	13	9%
12월	70,535,600	75.5%	73	50%
합계	**22,850,000**	**100%**	**146**	**1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024년도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 집행현황>

자금이체일	지출금액(원)	이용업체
2024-05-02	14,276,900	로○○
2024-12-13	2,000,000	엘○○
2024-12-13	2,000,000	엘○○
2024-12-13	2,000,000	엘○○
2024-12-13	3,000,000	엘○○
2024-12-13	3,000,000	엘○○
2024-12-13	3,000,000	엘○○
2024-12-13	1,000,000	엘○○
2024-12-17	4,000,000	엘○○
2024-12-20	5,060,000	렉○○○○○
2024-12-20	7,590,000	렉○○○○○
2024-12-20	5,060,000	렉○○○○○
2024-12-20	5,060,000	렉○○○○○
2024-12-20	2,530,000	렉○○○○○
합계	**59,576,9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호위원회의 법률자문 소요가 반드시 연말에 집중되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연간 총 지출금액의 75.5%를 집행한 것은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인 국가송무수행지원 사업 예산의 연말 기준 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위원회는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하여 연말에 법률자문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의 경우 예년에는 연간 1,300~1,400만원 규모의 이용계약 1건만 체결[494]하였던 것과 달리 2024년도에는 5월에 체결한 1,427만원 규모의 계약 1건 외에 12월에 다수의 추가적인 계약체결(4,530만원 규모)이 이루어진 바, 이 역시 동 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당초 2024년도 말에 예정된 구글·메타 과징금처분취소소송 등 주요 소송에 대비하여 법률자문 등의 집행시기 및 횟수 등을 조율하던 가운데, 주요 소송의 판결이 차년도로 미뤄짐[495]에 따라 그간 집행하지 못했던 법률자문 등을 연말 집행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494) 2022년도 4월 1건(1,320만원), 2023년도 7월 1건(1,386만원)
495) 구글·메타 관련 소송은 2025년 8월 현재 2심 진행중임.

대상이 확대[496]되는 등 향후 행정처분 관련 보호위원회의 소송 수행 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호위원회는 향후 소요 예산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9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9. 15. 시행)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액 기준 및 처분대상 확대
- (개정前)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정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